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대응한
2008년도 농림수산업 구조조정사업
시행내용보고서**

2008. 12.

대한민국정부

차 례

I. 농림수산업 구조조정사업의 기본방향	1
1. 목표 및 방향	3
가. 농수산물식품 부문	3
(1) 수산부문	5
나. 임업부문	7
2. 투융자 추진실적 및 성과	8
가. 농업·농촌 투융자 실적 및 성과	8
(1) 농업·농촌 투융자 실적	8
(2) 농업·농촌 투융자 성과	10
나. 임업부문	11
다. 수산업·어촌 투융자 지원	12
3. 2008년 농림수산물식품 예산편성 방향 및 규모	12
가. 2008년 농림식품분야 예산편성 방향 및 규모	12
나. 2008년 임업예산 편성방향 및 규모	15
다. 2008년 수산분야 예산편성 방향 및 규모	19
II. 구조개선을 위한 주요 농림수산업 제도개혁	21
1. 협동조합 개혁	23
가. 농업협동조합	23
1) 농협 경제사업 활성화 추진	23
2) 일선조합 구조조정 추진	25
3) 향후 계획	26
나. 산림조합	29

다. 수산업협동조합	32
2. 농림수산물 유통의 개혁	34
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34
(1) 수급 및 가격안정체계 구축	34
(2)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36
(3) 농산물 직거래를 통한 생산자와 소비자 이익 제고	36
(4) 농산물 종합유통센터 확충으로 유통경로 다원화 및 유통단계 축소	37
(5) 도매시장 유통시설 확충 및 거래제도의 다양화 등	38
(6) 물류표준화와 하역기계화로 농산물 물류비 절감	39
(7) 농산물 안전성 강화로 소비자의 안전 식생활 보장	40
나. 임산물 유통구조 개선	41
다.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45
3. 행정 추진조직 개편 및 규제개혁	47
가. 농림수산분야 행정추진 조직 개편	47
(1) 농수산업분야	47
(2) 산림분야	50
나. 농림수산분야 행정규제개혁 추진	51
(1) 농수산식품분야	51
(2) 산림분야	53
 Ⅲ. 농림수산업 구조조정 시책	 55
1. 경쟁력있는 경영체 육성	57
가. 영농규모화 촉진	57
나. 경영이양직불제 운영	58
다. 마케팅지향형 산지유통 주체 육성	59
라. 농업종합자금제 개선	62
마. 농업인력 육성시책 추진	64
(1)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64
(2) 농업경영체활성화 방안 추진	65

(3) 농업교육훈련	68
(4) 경영컨설팅 지원	70
(5) 농업벤처 육성	72
(6) 여성농어업인의 육성 및 지원	73
바. 농지은행제도	77
사. 독립가 등 임업인력 육성시책 추진	80
(1) 독립가 등 전문임업인 육성	80
(2) 기능인 영림단 육성	81
아. 어업인력 육성시책 추진	82
2. 생산기반 정비 및 농어업의 기계화·현대화	84
가. 농업생산기반 확충	84
(1)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84
(2) 받기반정비사업	84
(3)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85
(4) 수리시설 개보수	86
(5) 배수개선 사업 등 기타 기반정비사업	87
(6) 농촌용수 개발	88
(7) 새만금지구 등 대단위 농업종합개발사업 추진	88
나. 농업의 기계화	89
(1) 농업기계화 정책개선	89
(2) 농기계 구입자금지원	91
(3) 농기계 사후관리 강화	91
(4) 농기계 생산지원	92
(5) 농업용 면세유 공급	92
다. 농업시설의 현대화	93
(1) 미곡종합처리장의 건조·저장시설 설치 확대	93
(2) 원예·특용작물 시설현대화	94
(3) 축산시설 현대화	94
라. 수산업 생산기반 정비	95
3. 농림수산 관련 산업의 육성	96

가. 농산물 가공 및 식품산업의 육성	96
나. 종자산업의 육성	98
다. 종축산업의 육성	99
라. 사료산업의 육성	103
마. 동물보호·복지대책 추진	107
바. 수산식품 가공산업의 육성	111
4. 고부가가치 농림어업을 위한 기술개발과 정보인프라 구축	113
가. 농림기술개발사업 추진	113
나. 수산기술개발사업 추진	116
다. 농림어업정보화 촉진	118
(1) 농업분야	118
가)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118
나) 농업인 정보화 교육 확대 및 정보문화 확산	119
다) 농업인과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콘텐츠 확충	122
(2) 임업분야	125
(3) 수산분야	127
(가) 어업정보화 촉진	127
(나) 수산물 유통정보화 사업추진	128
5. 수출진흥 및 수입관리 대책	129
가. 수출진흥대책	129
(1) 농림분야 시책 개요	129
(2) 농림분야 세부 육성시책	130
(3) 수산물 수출진흥 대책	133
(4) 농산물가공품 생산의 활성화	135
나. 수입관리대책	135
(1) 농림분야	135
(2) 수산분야	138
(가) 수산보전제 도입 추진	140
6. 친환경농업의 육성	141
가. 농업환경오염 경감대책 추진	143

(1) 농약 사용량 감축을 위한 기술의 개발·보급	143
(2) 시설원예작물에 대한 천적방제 지원	144
(3) 화학비료 사용량 감축을 위한 비료 지원체제 개편 및 유기질비료 지원 확대	144
(4) 가축분뇨의 자원화	145
(5) 폐농기계, 농약빈병 등 폐영농자재 수집	147
나. 농업환경의 유지·개량	148
다.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육성사업 추진	148
(1) 친환경농업지구조성사업	148
(2)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149
(3) 친환경농업직접지불사업	149
(4) 친환경농산물 유통활성화 추진	150
7. 농어가소득안정 및 경영위험관리체계 구축	152
가. 농어가소득안정제도 확대방안	152
(1) 농림분야	152
(2) 수산분야	153
나. 농산어촌의 다양한 소득원 개발	155
(1) 도시와 농촌의 교류 활성화	155
(2) 향토자원 발굴 등 농촌자원의 산업화 추진	158
(3) 농공단지조성으로 농어촌지역의 고용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160
(4) 어촌관광 등 소득원 개발	161
다. 농어업의 경영위험관리 강화	163
(1) 농작물재해보험제도 개선	163
(2) 농가부채대책 추진	167
(3) 산림재해공제제도 도입 추진	171
(4) 수산부문	173
(가) 어가경영안정대책 추진	173
(나) 어업인 정책보험사업 운영	175
(다) 양식재해보험제도 도입 추진	175

8. 지역농업 클러스터 활성화	176
IV. 품목별 경쟁력 강화 시책	179
1. 쌀산업	181
가. 제도 개편	181
나. 수급여건 및 정책방향	182
다. 민간유통기능 강화	183
라. 고품질 쌀 생산·유통 및 경영개선 추진	185
마. 쌀 소비 촉진 전개	188
2. 채소·원예산업	189
가. 품목별 특성에 맞는 발전전략 수립	189
나. 품목별 주요 추진계획	190
(1) 채 소	190
(가) 노지채소	190
(나) 시설채소	191
3. 과수·화훼산업	192
가. 과수산업	192
나. 화훼산업	195
4. 축 산 업	197
가. 한우산업	197
나. 낙농산업	198
다. 양돈산업	201
라. 양계산업	203
마. 축산물 유통구조 선진화	204
바.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및 부존자원 활용 확대	206
사. 가축분뇨의 효율적 처리	206
아. 축산물 위생 및 가축방역체계의 강화	208
(1) 축산물 위생관리 강화를 통한 소비자 신뢰 확보	208
(2) 구제역 등 가축질병 방역 대책	210

(3) 축산물 등급판정 사업 확대 및 제도개선	213
자. 쇠고기 이력추적제 추진	214
차. 우수 축산물브랜드 육성	218
5. 임업	220
가. 아름답고 가치있는 산림 조성	220
(1) 산림용 우량 묘목생산을 위한 기반정비	220
(2) 산림의 다양한 기능 증진을 위한 조림	223
(3) 경제림 단지 육성	224
(4) 숲가꾸기로 산림의 경제적·환경적 가치증진	226
나. 산림재해방지와 건전한 산림생태계 보전 강화	232
(1) 산불예방 강화와 초동진화 체계 구축	232
(2) 산림병해충의 적극 방제로 산림자원 보호	234
(3) 산사태방지를 위한 사방사업 확대 및 제도개선	236
(4) 산림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생태계 관리강화	237
(5) 산림의 녹색댐 기능 제고	241
(6) 국유림 대부지 운영 및 사후관리 철저	242
(7) 백두대간의 체계적인 보호 관리	243
다. 산림사업의 경쟁력제고 대책 강구	247
(1) 환경친화적 녹색임도 구축 및 관리강화	247
(2) 임업기계화 촉진	249
(3) 숙련된 전문 임업노동력의 안정적 확보	252
(4) 다양한 단기소득원개발로 산림경영 장기성 보완	255
(5) 국산재 이용 및 폐목재 재활용 촉진기반 조성	258
라. 살기좋은 산촌 육성 및 산림휴양·문화공간 확충	261
(1) 산촌을 산림경영과 녹색관광 거점지역으로 육성	261
(2) 휴양공간 확충·서비스개선으로 휴양만족도 증진	265
(3) 다양한 산림교육 및 문화행사로 산림문화 진흥	268
(4) 등산인을 위한 서비스 기반 구축	270
(5) 자연친화적인 수목장 제도 조기 정착	273
(6) 도시 생태계의 건강성 증진	275

(가) 도시림·산림공원 조성	275
(나) 가로수 조성·관리	280
(다) 학교숲 조성	282
다. 국제적 여건변화에 따른 대응체제 구축	284
(1) WTO/DDA 협상에 적극 대응	284
(2) FTA 협상에 적극 대응	286
(3) 해외조림 확대	286
(4) 양자 협력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강화	288
6. 수산업	293
가. 연근해어업	293
(1) 연근해 어업구조조정사업 추진	293
(2) 수산자원의 조성 및 자원관리형 어업생산기반 구축	294
(3) 어선기관 및 장비 개량	295
나. 해면양식어업	296
다. 내수면양식어업	297
라. 원양어업	299
V. 농어촌 생활환경개선 및 복지증진 시책	301
1. 농어촌의 기초생활환경 개선	303
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추진	303
나. 농어촌생활환경 정비	306
(1) 2007년 이행실적	307
(2) 2008년 추진계획	307
(3) 어촌분야	308
다. 전원마을조성사업	309
라.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	311
마. 농어촌 상하수도 보급·확충	312
바. 읍지역을 경제·사회·문화적 거점기능을 갖춘 중추소도시 육성	313

사. 농어촌 노후·불량주택 개량 촉진	314
아. 환경친화형 농촌마을 조성	315
자. 하수처리 등 환경개선사업	316
(1)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사업 추진	316
(2) 농공단지폐수종말처리사업 추진	317
(3) 가축분뇨공공처리사업 추진	317
차.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318
카.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319
2. 교육여건 개선	320
가. 농어촌 고교생 대학특별전형 확대	320
나. 농업인자녀 교육비 부담경감	321
다.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321
라. 농어촌지역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322
3. 농어업인 연금제도 지원	322
가. 농어업인 등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제도 마련	322
나. 농어업인 연금제도 시행 성과	322
다. 농어업인 연금제도 내실화	323
4. 농어촌 의료여건 개선	324
가. 건강보험제도의 개선	324
(1) 농어촌지역 건강보험료 경감 확대	324
(가) 농어촌지역 건강보험료 경감율 확대	324
(나) 농어촌지역 범위 확대	325
(2) 농어촌지역 건강보험료 경감지원 제도개선 추진	325
나.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	326
(1) 농어촌 의료공급기반 확충	326
(2) 의료취약지역의 일차보건의료서비스 확대	326
(3) 공중보건 의사 농어촌 우선배치	326

• I. 농림수산업 구조조정사업
의
기본방향

1. 목표 및 방향	3
2. 투융자 추진실적 및 성과	8
3. 2008년 농림수산식품 예산편성 방향 및 규모	12

I. 농림수산업 구조조정사업의 기본방향

1. 목표 및 방향

가. 농수산물식품 부문

현재 우리나라 농어업과 농어촌은 대외적으로는 한미 FTA 타결 이후, DDA 협상, 캐나다, 인도, EU 등 거대 경제권과의 FTA 협상 등으로 개방이 확대되어 경쟁이 심화되는 한편, 국제곡물, 유류 가격의 급등으로 농어자재 가격이 상승하여 농어업 경영비가 증가하고 있다.

대내적으로는 국민소득 향상으로 농수산물식품에 대하여 철저한 안전 관리에 대한 국민적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이며, 농어촌인구 감소와 고령화 추세가 지속되는 상황에서 도·농간 소득, 주거, 교육, 복지, 문화 격차 축소에 대한 사회적 요구가 증가하고 있다. 한편 농어촌을 단순히 먹을거리를 생산하는 공간에서 산업, 정주, 휴양 등의 다양한 공간으로 자리매김 하려는 움직임이 커지고 있다.

정부는 이와 같은 대내외 농정여건의 변화에 적절히 대응하고 우리 농어업·농어촌을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4,800만 국민의 먹을거리를 책임지는 성장산업’을 비전으로, ‘돈 버는 농어업, 살 맛 나는 농어촌’을 정책목표로 설정하여 각종 시책을 추진하였다.

특히, 2008년도에는

첫째, 농식품의 유통혁신을 위해 정부는 지역생산물의 1/3이상을 처리할 수 있도록 매출액 1천억원 규모 이상의 시군 유통회사를 설립한다. 농어업인의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민·관이 합작으로 투자하고, 전문CEO를 영입하여 독립적이고 책임있는 경영을 통해 시장을 개척하고, 산지유통의 조직화, 규모화로 시

장교섭력을 확보하여 유통혁신의 기초를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품목별 대표조직이 주인이 되어 권한과 책임을 가지고 품목의 문제를 자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전국적인 대표조직을 생산액 3,000억원 이상 품목 중심으로 육성한다. 우선 조직화 정도가 높은 감귤, 양돈, 넙치를 대상으로 추진한다.

한편, 생산, 가공, 유통 및 연구시설 등이 결집된 농업 Complex 형태로 글로벌 수준의 경쟁력을 갖춘 대규모 농어업회사를 육성하여 농식품 수출의 전진 기지로 활용하게 된다. 우선 대규모 농업이 가능한 간척지에 간척지 장기 임대, 기반시설 등의 인프라 구축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향후 대상지역을 확대할 계획이다.

둘째, 농수산물식품 분야의 핵심인력 양성을 위해 정부는 타 산업분야 임원출신을 선발하여 시군 유통회사, 품목별 대표조직 등의 전문 CEO로 영입하게 된다. 이들의 축적된 마케팅, 경영 노하우를 농업 분야에 빠르게 접목시키기 위해 농수산업 현황, 농어가와의 갈등관리, 국내외 선진 농어업 현장 방문 등 농어업 CEO MBA 교육의 기회도 지원하게 된다.

또한, 농어업·농어촌의 성장을 주도할 30~40대의 젊은 인력을 유치하기 위해 농어촌 뉴타운 조성을 추진한다. 도시보다 쾌적한 주거환경과 양질의 자녀 교육 여건을 조성하고, 개인별 영농계획에 맞는 맞춤형 교육과 경영에 필요한 자금, 토지, 컨설팅 등을 종합 지원한다. 시군의 수요조사를 통해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하고, 공모를 통해 2009년부터 시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셋째, 식품산업 육성을 위해 정부는 농어업과 식품산업의 융·복합화로 고부가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식품제조업의 활성화, 외식산업 육성, 한식 세계화 및 쌀 가공식품 시장 확대를 추진한다.

전통·발효식품을 한국을 대표하는 세계 명품으로 육성하고, 식품안전시설 확충 및 식품 R&D 투자 확대 등을 통해 식품제조업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외 식품기업, 연구소, 연구기관 등으로 구성된 식품전문단지인 국가 식품 클러스터를 조성하여 식품산업 육성을 뒷받침하게 된다.

농수산물의 최대 소비자인 외식산업을 육성하기 위해 식재료 중개센터를 설치하여 식재료의 계약생산 및 산지 직접배송 확대를 통해 식재료의 원가 절감 및 농가의 안정적인 소득원 확보를 추진한다.

한식의 세계화를 위해 대표 한식 300종의 조리법과 명칭을 표준화하고, 국가별, 지역별 대표 상차림과 메뉴를 개발하여 대내외적으로 홍보 및 보급을 추진한다. 또한, 해외 한식당 실태조사를 하여 한식당 인증제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고, 해외 진출 한식업체에 대한 정보 및 금융 지원을 해 나간다.

넷째, 정부는 경제살리기 차원에서 농지와 산지에 대한 규제 완화를 적극 추진한다. 농지의 소유와 거래 규제를 완화하고, 자연녹지지역과 계획관리지역의 전용허가 권한을 지자체에 위임하게 된다. 또한, 농업진흥지역 관리제도 개선과 농업보호구역 조정을 하게 되고, 준보전산지 확대 및 산지전용 허가제도를 개선한다.

(농림수산식품부 기획재정담당관실 행정사무관 송남근)

(1) 수산부문

2008년 수산업 구조조정 사업의 기본방향은 고유가, 세계적인 금융위기 등 거시경제 악화 및 WTO/FTA 등 국내외의 환경변화에 적극 대응하여 수산업의 구조개편을 통해 수산업의 자생력을 확보하고 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수산자원회복, 자율관리어업 확산, 및 고품질의 안전한 수산물 공급 등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첫째, 고유가에 따른 경쟁력 분석을 통해 유류비 비중이 높은 업종에 대해서는 감척사업을 대폭적으로 확대하고, 유류절감장치 및 신재생에너지 등을 활용하여 연료 저소비형 수산업 구조로 전환시킴으로써 수산업의 체질을 강화하고 있다.

둘째, 품종별 양식어장의 시설규모 조정, 불법어장 및 상습재해어장의 정비 및 어장휴식제 도입 등을 통해 친환경 양식생산기반을 구축하고 통합 면허제도 도입, 양식어업권의 소유 및 이용제도 개선, 외해가두리 양식산업 육성 등을 통해 양식어업의 경쟁력 기반을 강화하는 한편 수산물 수급조절 기능을 강화하여 어업인의 소득안전을 도모하고 있다.

셋째, 수산업협동조합이 본연의 생산자 단체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중앙회의 지도·경제 통합, 중앙회장의 비상임 명예직화 등 지배구조 개편을 통해 전문경영체제를 도입하고, 부실이 심화되고 있는 일선수협에 대해서는 통폐합 등을 통해 구조조정을 추진함으로써 어업인 지원기능을 강화하였다.

넷째, 수산물 지리적 표시제 도입, 품질인증 대상 확대 등을 통해 우수수산물 브랜드화 추진, 노량진 수산시장의 현대화, 수산식품산업 클러스터 조성을 통해 수산식품산업의 고부가가치 창출을 도모하는 한편 유통단계 축소와 비용을 절감하여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만족시키는 직거래 활성화 등을 통해 수산물 유통구조 혁신을 추진하고 있다.

다섯째, 어종별 조업여건 등을 고려한 맞춤형 자원회복방안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어업인 중심의 자율관리어업 정착, 해역별 특성에 적합한 종묘방류, 바다목장, 소규모 바다목장 조성 등을 통해 지속가능한 어업생산기반을 구축하고 있다.

여섯째, 수산기술 개발과 성장동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수산정책자금의 지원 확대하고, 젊은 청장년의 인력양성을 통해 어촌인력구조를 개편하는 한편 어업

인이 자연재해로부터 스스로 위험관리 체제를 구축할 수 있도록 「어선원 및 어선 재해보험」 지원 확대 및 「양식재해보험」 도입하여 어업인 경영안정망 장치를 확충하였다.

일곱째, 품질좋은 수산물을 안전하게 공급하기 위해 수산용 의약품 안전사용 기반 구축 및 수산물 안전성 조사를 강화하는 한편 양식장 HACCP 확대, 수산물 생산 이력추적제 도입 등 수산물 생산관리체제를 강화하고 있다.

여덟째, 일본, 중국 등 주변국과의 수산협력을 강화하고, 원양어선의 조업구역 확보를 위한 대외 어업협력을 확대하고, 원양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업종별·지역별 클러스터를 구축하는 등 원양어업의 경영여건도 개선해 나아가고 있다

아홉째, WTO/DDA에서 주요 어업국과의 공조 강화를 통해 금지대상 보조금의 범위가 최소화 되고 유예기간 및 단계적 이행이 확보될 수 있도록 협상에 임하는 한편, 수산물관세는 수산물이 무세화(관세철폐) 대상에서 제외되고 민감품목에 대한 신축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협상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

마지막으로, WTO/DDA 및 FTA에 따른 시장개방 확대에 따라 우리 수산업이 연착륙할 수 있도록 주요 어종·업종별 경쟁력 실태분석을 통한 지원대책 마련, 직접지불제 도입 추진, 어업인 전업방안과 수산발전기금 재원 확충 등 국내대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정책과 사무관 임영훈)

나. 임업부문

임업분야에서는 녹화된 산림을 숲 가꾸기를 통해 생태·환경적으로 건강하고 경제적으로 가치 있는 경제림 육성, 산지의 난개발 방지 등 자연친화적인 산림관리체계 확립, 산불·병해충·산사태 등 산림재해 방지와 생물 다양성 보

전을 위하여 산림생태계 관리를 강화하고 있다.

최근 지구환경에 대한 세계적 관심이 증대되면서 탄소흡수원으로서 숲의 중요성이 날로 부각되고 있고, 21세기 선진 한국의 격에 걸맞은 국토의 모습을 갖추기 위하여 녹화된 숲을 지속적으로 육성하고 관리해야 할 시점에 와 있다. 이를 위해 ‘지속가능한 녹색복지국가 실현’을 목표로 국가계획인 제5차 산림기본계획(2008~2017)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산림의 다양한 기능이 최적 발휘되는 숲을 조성하고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또한 산주 및 임업인의 소득증대와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늘어나는 산림휴양수요에 대처하기 위하여 산림휴양 공간을 확충하며 산촌진흥에 노력하는 등 사람과 숲이 더불어 살아가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산림청 산림정책과 임업사무관 최영태)

2. 투융자 추진실적 및 성과

가. 농업·농촌 투융자 실적 및 성과

(1) 농업·농촌 투융자 실적

2007년은 농업·농촌종합대책 119조원 투융자 계획 시행 4년차로서 2007년 투융자규모를 11조 9,420억원으로 계획하여 집행은 91.2%인 10조 8,860억원이 집행되었으며, 지난 4년간(2004~2007) 「119조 투융자 계획」으로 집행한 금액은 37조 5,089억원으로 계획 41조 5,112억원 대비 90.4%가 집행되었다.

2007년 투융자 계획 및 집행실적

(단위 : 억원, %)

구 분	2007년 예산(A)	2007년 집행내역						집행율 (B/A)
		전년도 이월	이·전용	예산 현액	집행액 (B)	다음연도 이월	불용액	
합 계	119,420	2,238	708	122,366	108,860	2,339	11,167	91.2
[분야별]	119,420	2,238	708	122,366	108,860	2,339	11,167	91.2
농업경쟁력 강화	62,934	1,273	△9	64,198	61,568	720	1,910	97.8
경영 및 소득안전 강화	28,883	738	288	29,909	21,866	548	7,495	75.7
농식품 안전 및 유통혁신	11,224	146	270	11,640	10,447	668	525	93.1
농촌복지 및 지역개발	16,379	81	159	16,619	14,979	403	1,237	91.5
[품목별]	119,420	2,238	708	122,366	108,860	2,339	11,167	91.2
쌀	32,836	28	0	32,864	27,457	220	5,187	83.6
특작·원예	8,036	△144	△109	7,783	7,476	4	303	93.0
축 산	6,413	362	395	7,170	6,068	723	379	94.6
임 업	10,706	1,370	72	12,148	11,052	131	965	103.2
공 통	38,034	536	△11	38,559	35,813	835	1,911	94.2
기 타	23,395	86	361	23,842	20,994	426	2,422	89.7
[지원대상별]	119,420	2,238	708	122,366	108,860	2,339	11,167	91.2
농어업인 등 지원	63,095	931	639	64,665	53,329	1,248	10,088	84.5
SOC 사업	27,831	97	0	27,928	26,766	785	377	96.2
정부사업	28,494	1,210	69	29,773	28,765	306	702	101.0

분야별로는 집행중 10조 8,860억원 중 농업경쟁력 강화 6조 1,568억원 (56.6%), 경영 및 소득안전 강화 2조 1,866억원(20.1%), 농식품 안전 및 유통혁신 1조 447억원(9.6%), 농촌복지 및 지역개발 1조 4,979억원(13.8%)로 구분된다.

품목별로 구분할 경우 쌀에 투입되는 금액이 2조 7,457억원(25.2%)로 가장 높으며, 지원대상별로 구분하면 농어업인 등에 지원하는 사업이 5조 3,329억원 (49.0%)로 가장 높다.

2004. 5월 수립된 농업·농촌분야 119조 투융자 계획은 2007. 12월 FTA 확대 및 식품정책에 대한 국민관심 증대 등을 반영하여 기본계획이 보완·발표되었으며, 금액으로는 당초 119.3조원에서 123.2조원으로 증액되었다.

(2) 농업·농촌 투융자 성과

UR이후 추진된 농업부문에 대한 투융자는 1단계 42조원 농어촌구조개선대책(1992~1998), 2단계 45조원 농업농촌발전계획(1999~2003), 15조원 농특세사업, 119조원 투융자계획(2004~2013)에 따라 1992~2006년간 국고기준 약 108조원이 투융자 되었다. 그 성과에 대해서는 투융자 효율성 및 체감도가 낮고 사업집행과정에서 일부 부실사례가 발생했다는 비판도 있으나 농업 각 분야에서 상당한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 분야별 투융자 성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농업구조조정 추진에 따라 농업전반에 걸쳐 전업화·규모화 진전
 - 경지 3ha 이상 농가 : 2004년 82천호(6.6%) → 2007년 86천호(7.0%)
 - 양돈 1천두 이상 농가 : 2004년 2.7천호(20.3%) → 2007년 3.1천호(32.0%)
 - 한우 50두 이상 농가 : 2003년 5.0천호(2.7%) → 2006년 7.2천호(3.8%)
 - ※ 벼농사 기계화율 : 2004년 87.5% → 2007년 90.5%
- 유통구조가 개선되고 고품질 안전농산물 공급기반 구축
 - 공영도매시장 : 2003년 30개소 → 2007년 32개소
 - 친환경인증 농산물 : 2004년 461천톤 → 2007년 1,786천톤
 - 안전성기준 부적합률 : 2004년 1.27 → 2005년 1.14 → 2006년 1.13%
- 중·장기적인 농림예산 투자로 경쟁력 강화를 위한 생산기반 지속 확충

(단위 : %)

구 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발기반 정비율	53.3	57.9	62.3	66.3	70.4
수리답율	77.8	78.0	78.4	79.2	79.6
농로 포장율	39.7	43.1	46.7	50.1	53.0

(농림수산식품부 정책평가팀 농업사무관 방문진)

나. 임업부문

2007년도 산림투융자 지원실적은 국고기준으로 2006년도 9,953억원보다 2,087억원(21.0%) 증가한 12,040억원이다.

부문별로 보면 숲가꾸기·조림·산불피해지 복구 등 경제·환경적으로 가치 있는 산림자원 육성에 3,257억원을 투자하였고, 산불방지·헬기운영·산불취약지관리·산림병해충방제·사방 등 산림자원의 보호에 2,534억원, 산림작물생산기반조성·산림사업종합자금·임산물유통지원·목재이용가공지원·임업기술지도·임도시설·임업분야 R&D 사업 등 산림경영기반 구축에 2,091억원, 자연휴양림·수목원·박물관·백두대간보호·도시숲 조성관리·식물자원보전관리 등 휴양·녹색공간 및 산림생태관리에 1,682억원을 지원하는 등 투융자 부문별 내역은 아래와 같다.

투융자 부문별 내역

(단위 : 억원)

구 분	2006예산	2007예산	증 감	
				%
합 계	9,953	12,040	2,087	21.0
○ 산림 자원 육성	2,309	3,257	948	41.1
○ 산림 자원 보호	2,154	2,534	380	17.6
○ 산림경영기반구축	1,987	2,091	104	5.2
○ 휴양·녹색공간 조성	1,224	1,682	458	37.4
○ 국유재산관리 등 기타	2,279	2,476	197	8.6

투융자 사업의 향후 지원방향은 경제·환경적으로 건강하고 가치 있는 산림자원 육성과 기후변화협약 대응을 위한 탄소흡수원 확충 관련 숲가꾸기·조림사업 확대, 산림경영모델숲 등 경영림 확보, 대형 재해 대응역량 강화를 위한 산불방지대책 및 사방사업의 내실화, 소나무재선충병 등 산림병해충 예방 철

저, 주5일 근무제 시행에 따른 산림휴양·녹색공간의 확대, 산림생물자원 보전 관리 및 백두대간 보호 등 산림의 공익기능 증진 제고 등이다.

(산림청 기획재정담당관실 행정사무관 김영철)

다. 수산업·어촌 투융자 지원

2007년 수산업·어촌투융자 실적은 국고기준 8,676억원으로, 2006년에 비해 868억원(11.12%)이 증가하였다.

기능별로 보면 연근해 어업구조조정, 소형기저인망어선 정리, 바다목장 조성 등 수산자원관리 및 조성 2,765억원(31.9%), 수산물 유통 및 소비촉진, 수산물 안전관리 등에 646억원(7.4%), 국가 및 지방어항건설, 어촌·어항관광개발 등 어촌·어항 개발 2,635억원(30.4%), 어업인정책자금이자보전, 수협경영지원 등 수산경영 지원 1,085억원(20.8%), 해양수산연구 등이 825억원(9.5%)이다.

증가 비율이 가장 높은 부분은 해양수산연구 등 기타 사업을 제외하고 ‘수산물 유통 및 안전관리’ 부문으로 전년대비 35.1%(168억원 증액)가 증가한 반면, ‘수산경영지원’ 부문은 13.8%(290억원 감액)가 감소하였다.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정책과 서기관 장성식)

3. 2008년 농림수산식품 예산편성 방향 및 규모

가. 2008년 농림식품분야 예산편성 방향 및 규모

2008년도 농림예산은 한·미 FTA 협상 타결에 따른 직·간접적으로 예상되는 피해 최소화를 위해 한·미 FTA 보완대책(2007.11.6) 소요를 반영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아울러, 농업·농촌종합대책의 차질없는 추진, 삶의 질 향상을 위한 복지 및 지역개발, 친환경·고품질 농축산물 생산, 유통개선 촉진을 위한

지원도 확대 하였다.

또한, 금년부터 농림수산물식품부로 이관된 식품산업은 식품산업진흥법을 근거로 제도개선에 주력하고 광역식품산업 클러스터 조성(20억원) 등을 신규사업으로 반영하는 등 식품산업 인프라 구축을 적극 지원 하였다. 그리고, 생명공학을 활용한 고부가가치 기술농업 확산을 통한 신성장동력 확충에도 역점을 두었다.

농림분야 예산편성 내역의 주요특징을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농업인 소득보전과 경영안정을 위한 직불제 사업은 우선, 쌀소득보전 변동직불금의 규모가 쌀값 안정으로 크게 감액(9,501억원 → 5,330, 감 4,171)편성되었다. 경영이양직불제는 대상면적 확대, 지원단가 인상 등으로 전년보다 187억원이 증가한 300억원이 반영(113억원 → 300, 증 187) 되었고, 재난에 대비한 경영안정장치 강화를 위한 농작물재해보험은 지원규모가 확대(558억원 → 596, 증 38) 되었다.

둘째, 농업인 생활안정과 농촌 정주기반 조성 차원의 복지 및 지역개발 사업은 확대되었다. 먼저 농어민 건강 및 연금보험료의 지원을 확대(2,033억원 → 2,240)하고 농업인 자녀 영유아 양육비(268억원 → 411, 증 143) 지원도 증가하였다. 농촌마을 생활환경 정비, 소득기반 시설 등을 지원하여 쾌적한 농촌정주공간을 조성하기 위한 농촌마을 종합개발 사업 역시 사업권역(96개소 → 136)을 대폭 확대하였다.

셋째, 한·미 FTA 등 시장개방에 대비한 피해 최소화와 농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소득보전직불금(10억원 → 1,000, 증 990) 및 폐업지원(603억원 → 1,000, 증 397)은 확대 반영하였고, 과수·축산·원예 및 식량작물의 경쟁력 제고 지원 사업도 증액 지원하였다.

넷째, 친환경농업 확산 및 농산물 안전성 강화를 위한 지원체계도 강화하였다. 이를 위해 유기질비료 지원을 늘리고(473억원 → 724, 증 251), 경종과 축산을 연계한 광역친환경 농업단지 조성자금을 증액지원(165억원 → 210, 증 45)하였다. 농산물 생산에서 수확후 관리단계까지 위해요소를 중점관리하기 위해 우수농산물 관리제도, 농산물 안전성 조사 및 원산지 관리 사업(219억원 → 269, 증 50)도 확대 편성하였다.

다섯째, 농업 전문인력 육성과 지식·기술농업 확산을 위해 전문 농업 경영체가 필요로 하는 맞춤형 교육훈련 인프라 확충 예산을 확대(130억원 → 215억원)하고, 농림기술개발은 산업화·실용화 중심의 기술개발이 되도록 지원방식을 개편(448억원 → 759억원)하였다.

여섯째, 유통분야는 산지의 규모화·표준화 및 상품화 촉진을 위해 공동마케팅 조직을 중심으로 산지유통 활성화자금을 집중지원(5,500억원 → 5,950, 증 450)하고, 소비지 유통개선사업(1,478억원)은 친환경 농산물 직거래 매취자금 등의 지원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편성하였다.

일곱째, 생산기반조성사업은 선택과 집중에 의한 투자 내실화에 중점을 두고, 완공소요와 재해대비 시설개보수 중심으로 지원하였다.

2008년도 농림식품 분야 예산은 총 14조 3,934억원으로 2007년 보다 2.2%(3,118억원) 증가했다. 부문별 재정배분 주요내역은 다음과 같다.

농림식품 분야 재정 부문별 규모(2개 외청 포함)

(단위 : 억원)

구 분	2007 (A)	2008 (B)	증△감	
			(B-A)	%
◇ 농림부문 총지출	140,816	143,934	3,118	2.2
《농림부》	123,452	125,103	1,651	1.3
▶ 예산 일반지출	77,241	79,269	2,028	2.6
▶ 기금 일반지출	46,211	45,834	△377	△0.8
○ 농가소득·경영안정	36,882	32,167	△4,715	△12.8
○ 농촌개발복지증진	11,921	13,351	1,430	12.0
○ 농업체질강화	19,469	23,991	4,522	23.2
○ 양곡관리농산물수급	34,860	36,103	1,243	3.6
○ 농업생산기반조성	20,320	19,491	△829	△4.1
* 식품산업(별도통계)	(3,757)	(4,813)	(1,056)	(28.1)
《산림청》	12,235	13,322	1,087	8.9
《농진청》	5,129	5,509	380	7.4

(농림수산식품부 기획재정담당관실 행정사무관 조영선)

나. 2008년 임업예산 편성방향 및 규모

2008년도 산림예산은 산림의 역할 증진과 임업의 경쟁력 강화에 역점을 두고 재정사업 성과와 사업 우선순위에 따른 전략적으로 재원을 배분하는 등 기본방향에 따라 경제·환경적으로 가치있는 산림자원육성 지원 확대,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산림재해방지사업 지속 추진, 임업인 소득증대 및 임업의 경쟁력 강화를 뒷받침하며, 산림휴양·녹색공간 확대 및 다양한 산림서비스 제공에 중점을 두어 편성하였다.

2008년 산림예산은 총계 규모로 1조 6,435억원으로써 2007년 1조 5,046억원 대비 9.2% 증가하였다. 이중 일반회계에서 특별회계로의 전출금 등 3,248억원을 제외한 순계 예산규모는 1조 3,187억원으로써 전년대비 9.5% 증가하였으며, 이는 정부 예산의 0.6% 수준이다.

산림예산의 수준

(단위 : 억원)

구 분	1990	1995	2000	2005	2006	2007	2008
정부예산	32조4,078	75조4,897	127조4,415	167조9,332	175조3,882	200조9,519	219조9,405
산림예산	1,479	3,721	7,343	8,795	9,953	12,040	13,187
(%)	3.38	0.49	0.58	0.52	0.57	0.60	0.60

자료 : 산림청 기획조정관실

회계별로는 일반회계 5,680억원,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5,252억원 및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1,967억원, 책임운영기관 특별회계 288억원이다.

회계별 내역

(단위 : 억원)

구 분	2007예산	2008예산	증 감	%
합 계	12,040	13,187	1,147	9.5
○ 일반회계	5,164	5,680	516	10.0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	4,771	5,252	481	△10.1
○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	1,827	1,967	140	7.7
○ 책임운영기관특별회계	278	288	10	3.6

부문별로는 산림을 경제·환경적으로 가치있는 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3,839억원을,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산불·병해충·풍수해 등 산림재해 방지를 위하여 2,514억원, 임업인 소득지원 강화 및 산림경영기반 확충에 3,769억

원, 국민이 다양한 산림서비스를 누리고 이용할 수 있는 휴양·녹색공간 조성
에 1,695억원, 산림의 공익적 관리 및 정보화 등 산림행정의 효율적 수행을 위
하여 1,370억원을 편성하도록 하였다.

부문별 내역

(단위 : 억원)

구 분	2007예산	2008예산	증 감	
				%
합 계	12,040	13,187	1,147	9.5
○ 산림 자원 육성	3,257	3,839	582	17.9
○ 산림 자원 보호	2,534	2,514	△20	△0.8
○ 산림경영·소득 확충	3,477	3,769	292	8.4
○ 휴양·녹색공간 조성	1,471	1,695	224	15.2
○ 행정정보화 등 기타	1,301	1,370	69	5.3

첫째, 산림의 다양한 기능이 최적 발휘되고, 탄소흡수원 확충 관련 사업 지원
등 경제·환경적으로 가치 있는 자원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투자를 확대하였다.

숲가꾸기 5개년 계획(2004~2008)에 의해 100만ha의 숲가꾸기 사업을 추진
하고, 숲가꾸기의 정책품질향상을 위해 설계·감리 예산을 증액하였다. 또한
공공산림가꾸기와 숲가꾸기 산물 수집을 확대하여 산림분야 사회서비스 고용
증진 및 재해예방에 노력하였다.

경영림 확보를 위한 다양한 조림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경제수 조림 실시,
지역여건에 맞는 조림사업 추진, 생활권 주변 큰나무조림 및 산림서비스 경관
조림 등을 확대하고, 양양 산불피해지(낙산사 주변) 복구 3개년(2006~2008) 사
업을 계속 추진하였다.

둘째,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산불·병해충·풍수해 등 산림재해 방지에
총력을 경주하여 산림피해를 최소화하는데 노력하였다.

산불전문예방진화대 확대 운영, 산불무인감시 카메라 등 진화장비 보강, 산불진화지휘체계 구축 및 예방활동을 강화하였고, 산불의 신속진화를 위한 격납고의 확충 및 대형 헬기를 추가 도입하고, 공중진화대와 산악구조대 운영을 강화하였다.

또한, 최근 급속히 확산 추세에 있는 솔잎혹파리와 솔껍질각지벌레 방제물량을 확대하였으며, 산림재해 취약지를 중심으로 근원적인 수해방지를 위한 사방사업을 확대 추진하고, 해안방재림 조성 및 해안침식지 복구사업을 지속 지원하였다.

셋째, 임산물 생산·가공·유통사업의 경쟁력 확충, 경영여건 개선을 위한 지원 확대로 임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였다.

임업인의 소득기반조성 및 가공·유통산업 육성 등 임업경쟁력 강화에 필요한 지원을 확대하였다. 단기소득 산림작물 생산기반조성, 임산물산지종합유통센터의 조성 확대, 목재이용 가공시설 지원, 청정임산물의 수요 증가에 따른 생산이력제 지원 및 특화품목 전문지도원 양성 등 기술지도 지원을 강화하였다.

또한, 부실화된 산림조합 구조조정 및 경영개선에 필요한 지원을 새로 추진하고, 단기성 자금 이차보전(2년차) 예산을 확대 지원하여 임업인의 산림경영여건을 개선하는데 노력하였다.

환경친화적이고 견실한 임도시설을 위하여 기존의 임도에 대한 구조개량 및 보수 관련 예산을 확대하고, 국토보전과 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사유림 매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으며, 임업분야 연구개발(R&D) 투자를 강화하였다.

넷째, 국민에게 다양한 산림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하여 산림휴양·녹색문화공간 확대 및 산림생태계 보전·관리를 위한 지원을 확대하였다.

자연휴양림의 각종 편의시설 확충 및 노후시설을 보완하고, 도시생태계의 건강성과 경관향상을 위하여 도시숲을 확충하였으며, 늘어나는 등산 수요에 적극

대처하여 안전하고 쾌적한 등산환경 조성을 위해 훼손등산로 정비 물량과 지원을 확대하였다.

아울러, 백두대간 보호 및 산림생태계 식물자원 보전·관리 강화를 위하여 백두대간 훼손지 복원·복구를 추진하고, 국립수목원 보전관리 예산을 확대하고 지방수목원·지방산림박물관 건립을 지속 지원하였다.

다섯째, 산림행정의 정보화 촉진으로 업무 효율화와 고객만족도 향상에 기여하였으며, 범정부적 황사방지대책에 따라 몽골 그린벨트 조립 및 중국 생태환경 복원에 필요한 지원을 확대하는 등 국제산림협력 사업을 적극 추진하였다.

(산림청 기획재정담당관실 행정사무관 김영철)

다. 2008년 수산분야 예산편성 방향 및 규모

2008년 수산분야 예산은 2007년보다 763억원(8.8%)이 증가한 9,439억원으로서 수산 각 부문(프로그램)별로 모두 증가하였으며, ‘수산물유통 및 안전관리’ 부문이 전년대비 28.8% 증가하여 증가폭이 가장 높으며, 해양수산연구개발 등 기타 사업을 제외하고 ‘수산자원 관리 및 조성’ 부문이 전년대비 6%로 소폭 증가하였다.

첫째, 지속적인 어업생산을 위해 전년에 이어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사업에 투자를 확대하고, 여수·태안·울진·북제주 등 4개 지역 바다목장화 사업과 지역특성에 적합한 소규모 바다목장 조성사업에 지속적인 투자를 지원하고

둘째, 수산물 검사장비를 확충하여 수산물을 보다 안전하게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아울러, 소비촉진을 진작하기 위해 감천항 도매시장, 노량진 수산물 도매시장 건립을 지원(착공소요 반영)하는 등 수산물 유통 및 안전관리 사업에 투자를 대폭 확대하며,

셋째, 어촌관광 활성화를 통한 어업 외 소득증대를 위해 다기능 어항, 어촌·어항 복합공간 조성 등 관광기반조성에 중점지원토록 하고, 국가 및 지방 어항건설은 완공 위주로 투자하여 투자 효율성을 높일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넷째, 양식수산물 재해보험을 신규 반영하고, 어업인 경영자금 이차보전 등은 연차소요를 반영하는 등 수산경영지원을 통해 수산업 및 어업인의 경영활동이 원활히 유지될 수 있도록 하였다.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정책과 서기관 장성식)

수산분야 예산편성 방향 및 규모

(단위 : 억원)

프로그램	단위사업	'07예산	'08예산	증△감	%
	소 계	8,676	9,439	763	8.8
수 산 · 어 촌	▪ 수산자원관리 및 조성	2,765	2,932	167	6.0
	연근해어업 구조조정	1,294	1,339	45	3.5
	수산자원 회복	885	886	1	0.1
	어업질서 확립 등	586	707	121	20.6
	▪ 수산물 유통 및 안전관리	646	832	121	28.8
	수산물 유통 및 소비촉진	139	129	△10	△7.2
	수산물 유통 및 가공산업 지원	423	583	160	37.8
	안전한 수산물공급 관리	84	120	36	42.9
	▪ 어촌어항 개발	2,635	2,917	282	10.7
	어촌어항 관광기반 조성	896	948	52	5.8
어항기반시설 조성	1,739	1,969	230	13.2	
▪ 수산경영 지원	1,805	1,923	118	6.5	
어업인 정책보험 및 재해복구 지원	201	291	90	44.8	
어업경영자금이차보전	827	802	△25	△3.0	
수협경영 정상화 지원	663	662	△1	△0.2	
수산인력양성 및 복지 등	114	168	54	47.4	
▪ 해양수산연구 등		825	835	10	1.2

• II. 구조개선을 위한 주요
농림수산업 제도개혁

1. 협동조합 개혁 23
2. 농림수산물 유통의 개혁 34
3. 행정 추진조직 개편 및 규제개혁 47

II. 구조개선을 위한 주요 농림수산업 제도개혁

1. 협동조합 개혁

가. 농업협동조합

1) 농협 경제사업 활성화 추진

가) 추진배경 및 경과

1990년대에 들어서면서 농협이 신용사업에 치중한다는 비판과 함께 경제사업 활성화를 위해 농협중앙회의 신용 및 경제사업 분리 문제가 수면위로 부상하였고, 경제사업에 소홀하다는 농업인의 불만과 경제사업의 적자구조가 신용사업의 건전성에 악영향을 미친다는 우려를 동시에 해소하기 위해 농협중앙회의 신용·경제사업 분리 방안 마련을 추진하였다.

1999년 한국금융연구원의 신용·경제사업 분리 타당성 연구결과와 2003년 농협 내 『농협개혁위원회』의 건의사항을 토대로 2004년에 농협법을 개정하였고, 개정된 농협법(부칙 제12조)에 따라 농협중앙회는 신용 및 경제사업 분리 세부추진계획서를 2006년 6월말에 정부에 제출하였으며, 정부는 『농협중앙회 신·경분리위원회』를 구성하여 2006년 6월 농협안 제출 전까지 농협중앙회 경제사업 현황 분석 등 농협안에 대한 타당성 검토 방향 등을 집중 논의하였으며, 7월 이후에는 위원회를 확대·개편하여 농협중앙회 신·경분리 문제에 대하여 본격적으로 논의하였다.

2007년 1월 『농협중앙회 신·경분리위원회』에서는 2006년에 실시한 11차례 회의내용, 연구용역 결과 등을 종합하여 경제사업 활성화를 포함한 건의안을 마련하여 농림부 장관에게 건의하였고, 건의안에 대해 농업인, 지역농협, 전문가 등의 의견수렴, 관계부처 실무 협의 등을 거쳐 3.29일 『경제사업 활성화

와 신용사업 건전화를 위한 농협중앙회 사업 분리방안』을 확정·발표하였다.

주요내용으로는 『경제사업 활성화 방안』을 중심으로 교육·지원사업 효율화 방안과 신용사업 경쟁력 강화 방안이 포함되어 있는데, 주축이 되는 『경제사업 활성화 방안』은 산지-소비지를 연결하는 국산 농축산물 판매체계를 구축하여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농협이 책임지고 판매토록 하는 것을 목표로, 2015년까지 산지 농산물 유통량의 60%를 일선조합이 취급하고 소비지 농산물 유통량의 15%를 중앙회 및 도시조합이 처리하는 등 산지 및 소비지 유통망 구축에 향후 10년간 13조원(산지 7조원, 소비지 6조원)을 투입하여 농협 경제사업의 독자생존 기반을 만들겠다는 세부추진계획을 담고 있다.

나) 『경제사업활성화위원회』 구성·운영

농협 본연의 역할인 농업인을 위한 『판매중심 농협』을 실현하기 위해 마련한 38개의 세부추진과제는 ‘경제사업 부문’의 경제사업 역량강화 운동 추진, 산지 농산물의 농협 취급량 확대로 점유비 제고, 도·소매 유통사업 강화로 소비지 시장점유율 제고, 사업·조직간 전략적 제휴 추진, 경제사업 안정화 지원 및 평가시스템 구축 등이 주요 내용이고, 그 외 신용사업 경쟁력 강화, 교육·지원사업 부문 시스템 개선이 포함되어 7개의 중점과제로 구분되어 있는데, 동과제(38개)의 이행을 점검하고 추진결과를 평가·보완하기 위해 정부, 농민단체(3), 학계(3), 농협중앙회(5), 일선조합(3) 대표로 구성된 『경제사업활성화위원회』를 2007년 7월에 농협 내에 설치하여 매년 반기별 점검을 통하여 그 실효성을 담보하고 있다.

또한, 위원회의 효율적인 논의를 위해 경제사업 추진현황, 과제별 주요 쟁점 및 건의사항 등에 대해 위원회 개최 전·후에 정부(1), 농민단체(3), 농협(1)으로 구성된 실무협의회를 개최하고, 실무협의회에서 집중 검토된 의견은 위원회에 보고·논의 안건으로 상정하여 처리하였으며 2015년까지 투입할 계획인 산지 조합지원 자금 7조원, 소비지 중앙회 투자액 6조원 중 2007년에 지원된 경

제사업 활성화 투·융자 금액은 조합지원자금(융자) 34,470억원, 중앙회 투자액 1,551억원이며 연차별 추진계획에 따라 『경제사업 활성화 방안』을 차질 없이 추진 중이다.

(농림수산식품부 협동조합과 행정사무관 김일환)

2) 일선조합 구조조정 추진

일선조합의 부실발생을 사전에 예방하기 위하여 부실발생 사전예방시스템을 중앙회 내에 구축·운영하고, 농협자산관리회사에서 신용조사·신용조회·신용평가 등의 수입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업무범위를 추가하기 위하여 2007.8월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였다.

정부와 농협중앙회는 부실조합 조기 정리 및 조합의 부실 예방을 위해 제정된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6년에 이어 2007년에도 전년말 결산 및 경영상태평가결과 등을 기초로 9개 조합을 부실우려조합 등으로 신규 결정하고 경영개선조치 권고·요구·명령을 하는 등 일선조합의 구조조정을 지속 추진하였다.

2006년도의 적기시정조치에 따라 구조개선을 추진 중인 조합에 있어서도 합병이행기간은 종료되었으나 합병을 성사시키기 위하여 적극 노력하고 있는 조합에 대하여는 이행기간을 연장하여 합병이 원만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조치하였으며, 재무구조개선을 추진 중인 조합의 경영개선상황을 평가하여 이행상황이 미흡한 조합에 대하여는 추가 경영개선조치사항을 부과하거나 적기시정조치의 단계를 상향 조정하는 등 제재조치를 하여 구조개선 추진에 박차를 가하였다.

또한, 부실조합 등의 구조개선을 지원하기 위해 2007년에도 42개 조합에 총 880억원(출연 780억원, 대출 100억원)의 자금을 지원하였는바, 재무구조개선을

추진중인 7개의 조합에 출연 11억원과 100억원을 3년 무이자 대출로 지원하였고, 32개의 합병조합에 출연금 582억원을 지원하였으며, 퇴출대상조합의 계약을 인수한 3개 조합에 계약이전 손실금 보전을 위해 187억원을 출연하였다.

이와 같이 일선조합의 구조조정을 강도 높게 추진한 결과 2007년도에도 4개 조합이 합병으로 정리되었으며 2개 조합은 정리 중에 있다. 또한 30개 조합이 재무구조 개선을 통해 정상화되었다.

2007년도 결산결과 조합 경영수지는 조합의 경영여건 악화에도 불구하고 합병 등 구조개선의 노력으로 적자규모가 191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172억원 감소하였으며, 전체 조합의 당기순이익 또한 12,378억원으로 전년에 비해 2,238억원이 증가하였다. 또한, 적자조합은 전년에 비해 14개 조합이 줄어든 9개 조합이다.

경제·신용사업도 활발하게 추진되어 전체 경제사업실적은 30조 618억원으로 전년 대비 6.2% 성장하였으며, 예수금 평잔액은 143조 4,789억원으로 전년 대비 9.0% 성장하였고, 상호금융 대출도 101조 780억원으로 전년 대비 10.9% 성장하였다.

(농림수산식품부 협동조합과 행정사무관 이정길)

3) 향후 계획

농협이 농업인에게 진정으로 실익을 줄 수 있는 조직으로 거듭날 수 있도록 ‘농협중앙회 신용 및 경제사업 분리’ 및 ‘경제사업 활성화’를 차질 없이 추진하기 위해서는 매년 8,250억원의 자본금을 확보해야 하나, 최근 국제 금융여건의 악화 및 부동산시장 침체 등 불안 요인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2008년 상반기 농협의 당기순이익 규모가 3,065억원으로 전년 동기대비 7,556억원이 감소된 점 등을 고려할 때 당초 계획한 사업 분리를 위한 자본금 적립 등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예상되며, 농기계 임대사업, 비료·사료 값 지원 등 신정부 출범 후 새로이 추진되고 있는 과제들로 인해 경제사업 활성화 투융자 계획에 차질이 우려된다.

이에 정부는, 2007년 3월 마련하여 2년차 추진 중인 『농협 경제사업 활성화 방안』을 효율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연 2회 평가위원회 개최 및 3년단위 연구용역을 통한 종합 평가 등을 통해 38개 이행과제의 내용 및 투·융자 계획을 수정·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농업인이 생산한 농산물을 농협이 상품화하여 책임지고 처리(산지의 60%, 소비지의 15%)하는 것을 목표로, 「경제사업 활성화 방안」을 효율적으로 뒷받침하고, <조합원-일선조합-중앙회>의 유기적 연계·협력을 위한 상생모델이 마련될 수 있도록 농업협동조합법 개정을 추진할 예정이다.

조합원의 능동적인 조합활동을 유도하고, 조합을 참여자가 중심이 되어 경쟁하는 조직으로 전환하며, 중앙회에는 쌀, 한우 등과 같은 대표품목을 육성하고 일선조합의 경제사업을 지원·리드하는 시스템이 구축되도록 농협법 개정을 추진할 것이며, 앞으로 농협이 농협개혁위원회를 통해 자율적으로 마련하게 될 개혁과제 및 농업인단체 요구사항 등을 수렴하여 금년 9월까지 개정안을 마련하고 12월중으로 국회에 제출할 계획이다.

(농림수산식품부 협동조합과 행정사무관 김일환, 행정사무관 송태복)

일선조합을 건전하게 육성하기 위해서는 부실(우려)조합에 대한 구조조정과 함께 부실이 확산되는 것을 방지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정부는 2005년도 일선조합의 구조개선 추진목표를 조합의 부실정리 및 경영건전성 제고를 통한 조합원·예금자 보호역량 강화로 정하고, 경영부실 예방기능을 강화하기 위해 구조개선 관련 고시와 훈령을 개정하여 적기시정조치의 기준을 경영개선

요구 대상조합은 순자본비율 -7% 미만에서 0% 미만으로, 경영개선명령 대상 조합은 순자본비율 -20%미만에서 -7%미만으로 상향 조정하여 2004년 1월 1일부터 시행해 오고 있으며, 순자본비율 산정시 경제사업부문의 대손충당금과 부실채권을 포함되도록 하여 2005년 1월 1일부터 시행해오고 있을 뿐만 아니라 2006년부터는 적기시정조치 기준을 순자본비율 4%로 강화하여 시행하고 있다. 또한, 적기시정조치 대상조합이 편법으로 우선출자금을 조성하여 적기시정조치를 벗어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2005년 12월 농협구조개선업무감독 규정을 개정하여 시행하였다.

「농업협동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개정에 따라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현행제도의 일부 미비점을 보완하기 위해 동법 시행령 개정을 추진할 것이며, 앞으로도 적기시정조치 기준을 엄격하게 운용하고, 경영진단을 통해 조합의 경영상태를 실사한 후 그 결과를 반영하여 부실확대 등으로 퇴출이 불가피한 경우 부실이 건전조합에 전가되지 않도록 원칙적으로 계약이전·파산을 통해 정리하되, 합병실익이 있는 경우에는 합병기회를 부여하는 등 경영상황을 감안한 구조개선을 추진할 것이다. 또한 경영약체조합에 대해 사전부실예방조치를 강화하고, 경영정상화 가능조합에 대하여는 구조개선 지원을 강화하되, 경영개선계획을 불이행한 조합에 대하여는 임직원 징계요구, 임원 직무정지 등 체재조치를 강화하여 부실을 철저히 차단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이미 구조조정을 완료했거나 구조조정을 추진하고 있는 조합의 부실원인을 철저히 조사하여 부실에 책임이 있는 관련자에 대하여 조속히 부실책임을 추궁하기 위하여 농협중앙회의 구조개선 전담조직을 확대 개편하여 부실조사 대상조합에 대하여 대부분 조사를 완료하였으며, 조사결과 부실에 책임이 있는 관련자에 대하여 채권보전 및 손해배상 청구소송 등을 통해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에서 지원한 자금을 회수하고 조합 임원의 경영책임을 강화하는 분위기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한편, 조합의 부실발생 사전예방시스템 구축을 위해 농협중앙회로 하여금 연구용역을 수행토록 하고, 그 결과를 반영하여 부실발생을 예측할 수 있는 모형 개발 및 시스템구축, 운영을 위한 관련규정의 제·개정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농림수산식품부 협동조합과 행정사무관 이정길)

나. 산림조합

(1) 산림조합 설립과 운영

산림조합은 1962년 산림법이 제정되면서 과거 리·동 단위의 산림계를 포괄적으로 승계하여 특수법인으로 출범하게 되었으며, 1980년 산림조합법이 산림법에서 분리되어 특별법으로 제정되면서 독립적인 법체계를 가진 협동조합체로 등장하게 되었다. 1989년에는 임명제였던 산림조합장과 중앙회장을 조합원과 조합장이 선출하는 직선제로 전환하였으며, 1993년에는 임업협동조합으로 개편되었다가 2000년에는 정부의 협동조합 개혁방안에 따라 산림조합체제로 환원하였다.

산림조합은 산림소유자와 임업인이 조합원으로 가입하여 조직되며, 이들의 경제적·사회적 권익향상을 목표로 2008년 현재 전국에 145개 산림조합이 설립·운영 중이며, 이 중 보통 시·군단위로 조직되는 지역산림조합이 143개이며, 임산물전문조합으로 2개가 있다.

그동안 산림조합은 산림자원 조성 및 육성, 산사태 등 재해의 신속한 복구와 같은 국가 산림정책을 수행하여 험벗었던 국토를 녹화하는 데 큰 기여를 하였으며, 조합에 배치된 산림경영지도원(880명)을 통해 산림경영 기술지도, 임업기능인력 교육훈련 및 기계 보급, 임업정책자금 대출취급 등 국가사무를 충실히 대행하였다. 그러나 최근에는 산림정책의 패러다임 변화, 산림휴양 등 국민들의 산림수요 증가, 자율적인 시장경쟁제도의 도입, 산림사업법인의 증가, 저탄

소 녹색성장에 대한 새로운 요구 등으로 인해 산림조합에 대한 새로운 역할을 요구받고 있는 상황이다.

(2) 구조개선 추진배경과 기반마련

산림조합의 자립기반 마련과 산주와 임업인의 금융편의를 제공하기 위해 1994년 13개 조합에서 상호금융사업을 시작한 이후 2008년 현재 134개 조합이 신용사업을 실시하고 있으나 중앙회는 여건미흡으로 아직까지 실시하지 않고 있다.

다른 협동조합에 비해 신용사업을 뒤늦게 시작하였지만 양적인 부분에서 상당한 성장을 하였다. 그러나 신용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되지 않은 상태에서 IMF외환위기가 발생하여 고금리 조달구조의 지속, 부실채권의 증가, 유가증권 투자실패 등 일부조합에서 부실이 증가하였다. 이에 따라 2003년부터 감사원, 금융감독원, 국회 등에서 부실현황을 정확히 파악하고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할 것을 요구받았다.

이에 따라 산림청과 중앙회는 2005년도에 최초로 중앙회소속 144개 회원조합 전체에 대해 회계법인으로 하여금 경영진단을 실시하였다. 실사결과 2004년 말 기준으로 자산은 2조 3,165억원 부채는 2조 1,200억원 자본은 1,965억원으로 나타났으며, 고흥 등 28개 조합에서 274억원의 자본이 잠식된 것으로 분석되었다.

경영진단결과 경영진단위원회는 부실조합과 부실우려조합에 대한 효과적인 구조개선을 위해서 농·수협외 사례와 같이 특별법인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을 제정할 것을 건의하였으며, 산림청은 건의를 받아들여 2006년부터 정부안으로 법률제정을 추진하여 2007. 8. 3 법률을 제정하고 6개월 후인 2008. 2. 4부터 시행되도록 하였으며 아울러 하위법령인 시행령과 시행규칙도 법률시행일 이전인 올해 초 각각 제정을 마무리하였다. 또한, 2008년도에 신규로 산림조합 구조개선예산 5,562백만원을 확보하여 부실조합등의 구조개선 추진을 위한 제도적인 토대를 마련하였다.

(3) 부실조합 등 지정과 구조개선 추진

부실조합 등을 선정하기 위해 재무상태가 상대적으로 열악한 35개 조합을 대상으로 2008. 3~4월 회계법인이 2007년말 기준으로 재무실사를 실시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구조개선에 관한 주요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산림조합의 구조개선에 관한 법률」 제18조에 따라 설치된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 관리위원회”는 19개 조합을 부실조합 등으로 심의·의결하였다. 19개 조합 중에서 산림청은 순자본비율 기준으로 -15%미만인 6개 조합을 부실조합으로 지정하였고, 중앙회는 순자본비율 기준 -15%이상 2%미만인 10개 조합과 자산건전성 등이 취약한 3개 조합을 합쳐 모두 13개 조합을 부실우려조합으로 지정하였다.

부실조합 중 대구조합은 올해 안에 합병을 완료하도록 명령하였으며, 이에 따라 인근 달성조합과의 합병을 추진 중에 있으며 합병이 완료되면 인수조합에 부실액(약 3,923백만원)을 지원하여 동반부실을 방지할 계획이다. 또한, 울릉조합은 규모가 작고 섬이라는 특수성을 감안하여 자체회생계획을 수립 추진하도록 하였으며, 고흥조합은 내년에 다른 조합에 신용사업을 양도시킬 계획이며, 인천·김제조합은 올해에는 자체적인 경영개선조치를 추진하되 내년에 회생가능성을 검토하여 합병 등의 방안을 판단할 계획이다. 이와 별도로 부실이 심각한 전북표고산림조합은 더 이상의 추가부실 방지와 선의의 피해자 예방을 위해서 2008. 6월 사업 및 임원의 직무를 정지한 후 관리인을 파견하였으며, 7월에는 법원에 파산신청을 한 상태다.

부실우려 13개 조합에 대해서는 조합별 부실원인을 분석한 후 경영개선에 필요한 경비절감, 자기자본 증대, 이익배당 제한, 신용사업 활성화, 불용자산 처분과 같은 경영개선권고 또는 요구조치를 2008. 5월 해당조합에 각각 명령하였다. 이 중 순자본비율이 낮은 10개 조합은 5년 후인 2012년 정상조합 기준인 순자본비율 2%를 목표로 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10개 조합과 중앙회는 2008. 8월 경영개선이행약정(MOU)을 체결하고 경영개선자금으로 1,218백만원을 지

원하였다(국고 1,066백만원 중앙회자금 152백만원). 앞으로 경영개선대상 조합은 분기별로 경영개선 이행상황을 평가하여 미흡할 경우 보다 강도 높은 조치를 요구할 계획이다.

부실조합 등의 구조개선 추진은 조합원과 예금자를 보호하고, 궁극적으로는 임업과 산촌경제를 안정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관련법령을 제정하고 정부예산을 지원함으로써 가능하였다. 따라서 예산지원을 통해 자금지원을 받는 경우에는 조합이 부실해진 원인을 철저히 조사하여 책임이 있는 자에게는 손해배상 청구소송을 적극적으로 행사함으로써 산림조합에 책임경영체제를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산림청 산림경영지원과 행정사무관 정종근)

다. 수산업협동조합

강도 높은 자구노력과 함께 경영개선자금 지원을 통해 경영정상화를 추진함으로써 일선수협이 어업인 자조조직으로서 국민의 신뢰를 받는 조직으로 거듭 태어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정부에서는 2000년부터 1,305억원의 무이자 경영개선자금을 지원하였으나 자본잠식규모에 비해 지원액이 과소하여 경영개선 효과가 미흡하였다.

따라서, 일선수협의 부실원인 및 규모 등 근본적인 원인을 분석하여 종합적인 경영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2002년 9월부터 2003년 4월까지 경영진단을 추진하여 '부실조합 등'으로 지정하고 47개 조합에 대해 2010년까지 자본잠식액을 회복하는 목표하에 인원감축, 고정자산 매각 등 경영정상화이행약정(MOU)을 체결하면서 이의 이행을 전제로 2003년 8월부터 매년 483억원(무이자자금 환산 6,709억원) 및 2006년 1월부터 2010년까지 무수익고정자산 매각 손실에 대한 추가지원 자금 14억원(무이자자금 환산 194억원)의 자금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였고, 2006년 하반기에 사업기간 변경에 따라 조기확보된 자금

256억을 일선수협에 지원하였다. 또한 회생이 불투명한 부실조합에 대해서는 합병(2개 2004.5.31) 및 계약이전(1개, 2004.10.31)을 통해 2004년 총 922억원(합병 376억원, 계약이전 546억원)의 구조조정자금을 지원하여 2003년 △155억원 적자에서 2007년 93억원의 흑자를 실현하여 경영정상화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이와 더불어 지난 2000년부터 2002년까지 추진해왔던 구조조정을 2002년말 까지 조기 마무리하여 인력 985명(2000:6,275명 ⇒ 2002:5,290명), 점포 75개(493개 ⇒ 418개)축소, 부실채권 감축(10.5% ⇒ 3.9%), 고정자산매각(342억원) 등을 완료하였으며, 구조개선법 시행 후에는 적기시정조치 및 MOU를 통한 자구노력을 통하여 MOU를 해지한 5개조합을 제외한 42개조합의 인원감축 589명(2002: 2,495명 ⇒ 2007:1,906명), 부실점포 폐쇄 50개소(2002:425개 ⇒ 2007:375개), 고정자산매각 573억원(2003:114억원, 2004:83억원, 2005:115억원, 2006:178억원, 2007:83억원), 출자금증대 310억원(2002:948억원 ⇒ 2007:1,258억원)등을 완료함과 아울러 2007년 12월말 기준으로 회계법인과 공동으로 순자본비율 산출 등의 경영평가를 실시하여 순자본비율 및 상호금융업감독규정에 의한 경영상태평가결과를 감안하여 41개조합에 대해서는 부실우려조합(경영개선권고, 요구), 7개 조합에 대해서는 부실조합(경영개선명령)으로 지정하고 적기시정조치로써 상임이사제 도입 및 임직원 체재, 직무구조개선을 위한 자구노력 등을 시달하여 지속적인 구조조정 및 경영진의 책임경영체제가 확립 되도록 하였다.

아울러 수협 회원조합 부실의 책임이 있는 부실관련자에 대한 엄격한 책임 추궁을 통하여 책임경영체제를 확립하고 회원조합 손실보전과 예금자보호기금의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하여 2003년 11월 해양수산부장관의 합병명령조합(3개) 및 2003년말 기준 경영평가 결과 경영상태가 악화된 3개 조합 등 6개 조합을 시작으로 2004년도부터 2007년도 까지 총 50개 조합을 대상으로 부실조사를 실시하여 부실발생의 원인을 분석, 이 중 9개 조합 71명에 대해 14건 263억원의 손해배상청구 및 3건의 형사고발 조치를 요구하였다.

이러한 일선수협 경영정상화를 성공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고 판단되어 전문경영자로 하여금 책임경영체제 확립을 위한 상임이사제 의무도입, 조합장의 공명선거 확립, 감독기능의 강화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수협법을 개정하여 2005년 7월 1일부터 시행되고 있으며, 또한 조합의 부실을 사전 예방하고 부실수협의 구조조정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수협구조개선법”을 제정하여 2003년 10월 4일부터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일선수협의 예금고객에 대한 대외 신뢰도를 높이기 위하여 상호금융예금자보호기금을 0.12%에서 0.2%로 상향조정하여 2004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또한 2001년부터 부실화된 수협중앙회의 경영정상화를 위하여 강도 높은 자구노력과 강력한 독립사업부제 확행을 전제로 11,581억원의 공적자금을 지원하여 경영정상화를 추진하여 왔으며, 그 결과 2001년 275억원, 2002년 550억원, 2003년 711억원, 2004년 1,042억원, 2005년 1,247억원, 2006년 1,186억원, 2007년 879억원 등 흑자규모가 대폭 확대 추세에 있어 수협중앙회의 경영정상화에 새로운 전기를 마련하였다.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정책과 사무관 김평진)

2. 농림수산물 유통의 개혁

가.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1) 수급 및 가격안정체계 구축

생산계획 단계부터 사전적인 수급조절이 가능하도록 29개 주요 농축산물에 대한 관측정보(파종의향·작황·가격정보 등)를 제공하고 있다. 표본농가는 13,774호, 모니터 요원은 1,796명이며, 품목별 수급모형 및 단수예측 모델 개발 등을 통해 관측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높여 농가의 생산·출하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적시에 제공토록 하고 있다.

그 동안 계약재배를 통한 채소수급안정사업은 무, 배추, 고추, 마늘, 양파 등 노지채소 위주로 시행되어 왔다. 2001년부터는 사업 대상 품목을 오이, 호박, 가지 등 시설채소까지 확대하였으며, 사업주체를 일선 농협에서 가공업체, 대형유통업체까지 확대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였다. 현재 계약재배 물량은 채소 생산량의 약 10%를 차지하고 있으나, 2017년까지 24% 수준으로 사업 물량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과수농가의 경영 안정과 생산자단체의 시장 대응력 향상을 위해 2001년에 사과·배를 대상으로 과실 계약출하사업을 시작하였으며, 이후 단감(2002년)과 감귤(2003년)을 대상 품목으로 추가하였다. 2005년에는 사과, 배, 감귤 농가의 사업참여 기준 물량을 200톤에서 300톤으로 상향 조정하고, 사업 결과에 따른 손익 배분 및 보전 방법을 개선하여 사업의 규모화와 농가의 참여 확대를 도모하였다. 앞으로 계약물량을 확대하는 동시에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계약출하사업을 과실수급 안정을 위한 핵심제도로 정착시켜 나갈 예정이다.

생산자단체의 자율적 수급조절 능력을 강화하기 위해 2001년부터는 생산자단체가 자조금을 조성할 경우 정부가 같은 규모의 자금을 1:1 매칭펀드 형식으로 지원하고 있다. 2008년에는 시행 당시의 대상 품목(파프리카, 참다래)을 26개로 확대하였고,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고 자조금의 규모화를 유도하기 위해 당해연도에 적립된 자조금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향후 자조금 대상 품목을 확대하고 자조금단체의 역량을 강화하여 생산자단체 스스로 해당 품목의 수급조절, 소비촉진, 시장개척 등 마케팅 기능을 수행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농림수산식품부 유통정책팀 행정사무관 주원철)

(2) 농산물 유통구조 개선

농산물 유통개선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온 결과, 산지와 소비지의 유통시설 확충 및 농산물 표준규격출하율이 증가되었으며 선진적인 거래제도의 도입 시행으로 거래의 공정성과 투명성이 확보되는 등 유통개혁의 성과가 점차 가시화 되고 있다.

그러나, 소비자 유통여건의 변화에 대응하고 수확기 자율적인 수급조절에 적절하게 대처하기 위한 산지 조직화·규모화 등은 아직 미흡한 실정이며 유통 경로별로 운영의 효율성을 높혀 나아가야 할 부분이 여전히 남아있다.

특히, 대형할인점의 급속한 증가, 소비의 고급화·다양화, 농산물의 과잉 공급구조 등 농산물유통환경의 급격한 변화는 지금까지의 유통정책에 대한 재검토를 요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농업경쟁력을 향상시키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하기 위해 2008년에 소비자-산지 상생협력사업, 시군단위 유통회사 등 새로운 정책을 마련하여 추진중에 있다.

앞으로도 유통여건 변화 등에 적극 대응할 수 있는 유통개혁대책을 지속적으로 마련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농림수산식품부 유통정책과 사무관 주원철)

(3) 농산물 직거래를 통한 생산자와 소비자 이익 제고

생산자는 제값을 받고 판매하고 소비자는 저렴한 가격으로 구매할 수 있도록 유통구조개선대책의 일환으로 2000년 직거래를 추진하여 직거래장터 및 파머스마켓 등에 직거래 시설자금을 지원하여 왔으며, 2004년 소비자 중심 직거래를 제도적으로 정착시키기 위하여 소비자협동조합 등 소비자 단체에 친환경 농산물 직거래를 위한 시설자금을 지원하여 왔다. 향후 소비자 유통·식품·외식업체와 산지 조직간의 협력을 도모하고 직거래를 유도하기 위해 이들 업체에

대하여 직거래 매입자금을 지원할 계획이며, 직거래의 내실화를 위하여 생산자·소비자단체의 협력을 통한 자율적인 직거래 활동이 이루어 질 수 있도록 정부는 언론매체를 활용한 다양한 직거래 사업에 대한 홍보지원을 계속할 것이다. 또한 산지유통 활성화 정책과의 연계를 통해 산지 조직이 소비지 업체에 대응할 수 있는 능력을 키워 소비지 업체와 산지 조직이 대등한 위치에서 거래할 수 있도록 하겠으며, 대형 유통업체의 불공정 거래행위를 방지하는 다양한 정책을 추진할 것이다. 앞으로 소비지 유통업체와 산지 농업인간 상호교류 등을 통하여 산지생산자가 소비지 유통여건 변화에 대응하여 상품성 및 품질 경쟁력을 제고하게 되는 등 자율적인 직거래가 활성화되어 생산자와 소비자의 편익이 증대되어 나갈 것으로 기대된다.

(농림수산식품부 유통정책팀 행정사무관 김재형)

(4) 농산물 종합유통센터 확충으로 유통경로 다원화 및 유통단계 축소

기존의 도매시장과는 다른 예약 수의거래 방식에 따라 산지와 직거래하는 새로운 형태의 물류체계를 구축하여 유통경로를 다원화하고 농업인의 출하선택의 폭을 확대하고자 1995년부터 2006년까지 농산물 종합유통센터를 15개소를 개장하였으며, 2010년까지 2개소를 추가 개장할 계획이다. 종합유통센터는 유통단계축소 뿐만 아니라 파렛트 출하를 통한 하역기계화로 물류비를 절감하고, 산지에서부터 소비지까지 저온유통체계를 구축하여 고품질 신선농산물을 공급하는 등 종합유통센터를 새로운 선진유통모델로 정착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한, 운영중인 종합유통센터는 운영주체의 자율성과 경쟁력을 제고하여 2007년에는 3조 0,014억원의 매출액을 기록하는 등 농산물 도·소매 종합유통 시설로 정착되어 생산자 수취가격 제고 및 소비지 가격안정에 기여하고 있다.

산지 생산자조직을 종합유통센터 전속 출하조직으로 육성하고, 대형마트·백화점 등 대형유통업체와 민간슈퍼마켓에 대한 마케팅을 강화하여 안정적인 판매

기반을 구축하도록 매취자금을 지원하였으며, 산지 생산자조직과 소비자 가맹점과의 전자상거래(EDI)시스템을 구축하여 물류의 효율화를 도모해 나가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 유통정책팀 행정사무관 김병준)

(5) 도매시장 유통시설 확충 및 거래제도의 다양화 등

정부에서는 생산자와 소비자의 이익보호를 위하여 1985년 가락동 도매시장을 시작으로 2004년 강서도매시장까지 32개 공영도매시장 개설을 완료하고 도매시장법인 및 시장도매인을 통하여 운영을 하고 있으며, 2008년에는 부산시 국제수산물도매시장이 추가로 개장되었다.

지난 2000년 농안법 개정으로 경매제의 비효율성을 개선하기 위하여 시장도매인제 도입의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이를 근거로 서울 강서농산물도매시장에 시장도매인제 시장을 2004년 6월부터 개장, 운영 중에 있다.

이와 함께 2007년도 농안법 개정에서는 현행 경매제에 탄력성·효율성을 부여하고자 정가·수의매매의 범위를 확대, 유통주체간 거래규제완화, 도매시장 기능 복합화, 도매시장운영관련 제도 개선이 가능하도록 법령을 정비하였다.

도매시장 경쟁력 제고를 위해 도매시장법인·법인인 중도매인·시장도매인의 인수·합병을 통해 규모화가 가능하도록 제도를 개선하였으며, 도매시장 전자거래 활성화를 위해 정가·수의매매를 전자거래 방식으로 행하는 경우 농수산물의 도매시장 반입의무를 면제하는 등 도매시장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제도 개선을 추진하였다.

공정·신속한 경매를 위해 도매시장의 전자경매를 도입하여 2001년 32.8% 수준에서 2007년 76.3%까지 제고되어 도매시장의 경매방식이 수지경매에서 전자경매방식으로 탈바꿈 되었으며, 전자경매와 병행하여 추진하고 있는 경락가격의 실시간 제공 역시 경매절차의 신뢰도를 향상시키고 있어 출하자가 안심

하고, 소비자가 믿고 찾을 수 있는 도매시장 육성에 한 몫을 하고 있다.

한편 유통환경 변화와 소비자의 요구에 대응하는 한편 노후화된 도매시장의 시설현대화를 추진하기 지난해에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계획을 수립하고, 금년 1월 시설현대화가 필요한 11개 도매시장을 대상으로 수요조사를 실시한 결과 서울 가락시장 등 8개 도매시장이 시설현대화를 신청하였다.

도매시장시설현대화 선정을 위한 심사기준은 성장가능성, 시설의 노후와 정도 및 과부족전망, 지자체의 의지 및 계획의 적정성, 시설정비에 연계한 운영 개선 방안 등을 종합 평가하여 서울 가락시장, 광주각화시장, 대전오정시장을 2009년도 시설현대화 대상으로 선정 하였다. 내년부터 이를 대상으로 도매시장의 시설현대화를 우선 추진하고 앞으로도 추가로 매년 2~3개 도매시장을 선정하여 시설현대화를 추진 할 계획이다.

(농림수산식품부 유통정책팀 행정사무관 김병준)

(6) 물류표준화와 하역기계화로 농산물 물류비 절감

농산물 상품성 향상 및 물류효율화를 위해 표준규격으로 출하하는 생산자들에게 포장재비를 지원하고, 산지에서 농산물의 균질화·규모화를 통한 하역기계화를 촉진하기 위해 산지유통전문조직 및 공동마케팅 조직이 표준규격으로 농산물을 공동선별·공동출하·공동계산 물량에 대한 공동선별비 지원을 확대하고 있다. 특히 2006년도에 수도권 8개시장에서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배추 포장유통 사업을 2007년 1월부터 전국 32개 공영도매시장으로 확대하여 배추·무의 상품성 향상, 투명한 거래 정착, 도매시장 환경개선에 크게 기여하고 있으며, 출하자의 포장재비 부담 경감을 위해 2008년까지 포장재비를 집중 지원할 계획이다.

농산물 물류표준화 및 하역기계화를 통한 물류효율화를 위해 농산물 생산자

조직 등을 대상으로 지게차, 파렛트, 플라스틱 상자, 컨베이어, 광폭차량 등의 물류기기를 지원하고 있다. 특히 2007년부터 농산물 물류의 규모화를 위해 파렛트 2열 적재가 가능한 광폭차량(냉장·동, 윙바디, 탑차량 포함)을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생산자 조직이 저비용으로 파렛트, 플라스틱 상자를 임차하여 사용할 수 있도록 임차료의 일부를 지원하여 물류기기 이용물량 확대를 촉진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 채소특작팀 농업사무관 박윤식)

(7) 농산물 안전성 강화로 소비자의 안전 식생활 보장

소비자에게 신뢰받는 안전한 농산물의 생산 및 공급을 위해 생산기반을 조성하고 모니터링을 강화하여 부적합한 농산물이 시장에 유통되지 않도록 하고 있으며, 투명한 유통질서 확립을 위해 원산지 및 유전자변형농산물(GMO) 표시관리를 강화하고 소비자 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우선, 농가의 농약 안전사용 등 안전성에 대한 인식전환을 유도하여 생산자가 스스로 안전한 농산물을 생산하도록 생산자, 관계공무원, 농약판매상 등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였다. 생산부터 수확 후 포장단계까지 농약, 중금속, 미생물 등 농식품 위해요소를 관리하는 제도인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를 2003년부터 3년간의 시범사업을 거쳐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2008년 현재 GAP 인증대상품목은 105개 품목, 인증농가수는 20천 농가이며 재배면적은 2만5천ha이다. 2012년까지 대상품목을 200개품목으로 확대하고, 인증농가수는 10만 농가를 목표로 하고 있다.

또한, 농산물에 농약검출 등 농산물 안전성에 위해가 되는 사건이 발생할 경우 추적을 통하여 문제점을 신속하게 파악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하여 농산물의 생산부터 판매까지 각 단계별 정보를 기록·관리하는 농산물이력추적관리제도(Traceability)를 시범사업 및 실무교육 등을 거쳐 2006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2008년 현재 농산물 이력추적관리제도의 대상품목은

105개품목이며, 참여농가수는 4만농가이다. 2012년까지 대상품목을 전품목으로 확대하고 12만 농가의 참여를 목표로 하고 있다.

부적합 농산물의 시장유통을 방지하기 위해 주산단지, 도매시장 등에서 시료를 수거하여 안전성조사를 69천건 실시하였고, 그 결과 부적합 농산물은 폐기 및 출하연기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다. 또한, 농산물 안전성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지자체, 도매시장 등에 조사결과를 제공하고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조회할 수 있는 PDA시스템을 도입하여 운영중이다.

또한 수입농축산물이 국내산으로 둔갑, 판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원산지 단속을 전담하는 「원산지단속 112 기동대」를 운영하고, 실시간 관세청 통관자료 등을 분석하여 단속정보를 제공하는 조기경보시스템을 운영하고 있다. 2008년 7월부터 음식점 원산지표시제도를 확대 시행하고 있으며, 유전자변형농산물(GMO) 표시제가 조기에 정착될 수 있도록 과학적 정성·정량분석법을 개발하고 지도 및 단속을 철저히 수행하고 있다.

국내 농산물의 안전성에 대한 소비자의 신뢰 확보를 위해 소비자가 안전성 조사에 참여하는 농소정협의회를 수차례 운영하였고, 농·소·정협력사업을 통한 도시 소비자의 농업 현장체험 기회를 지속적으로 제공하는 한편, 소비자단체를 중심으로 농식품안전자문단을 2003년말 구성하여 소비자의 정책참여 기회를 확대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 소비안전팀 주무관 김병훈)

나. 임산물 유통구조 개선

WTO 체제 출범, FTA 협상진행 이후 시장개방 등 자유무역 확대로 목제품과 버섯, 잣, 대추, 호두, 산채류 등 값싼 외국 임산물의 수입확대가 진행됨에 따라 외국 임산물과 당당히 겨루어 나갈 수 있는 국내 임산물 생산자에 대한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산지와 소비지를 연결하는 직거래 유통체계를 강화하고, 이를 위해 유통기반시설 확충, 산지의 전문 생산자 조직 육성 및 지원 강화, 생산자의 시장 교섭력 제고를 위한 신속한 유통정보 제공 등의 대응전략을 수립하여 효과적인 유통구조 개선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임산물의 산지와 소비지가 가깝게 연결되는 직거래 판매의 활성화를 위해 현재 전국에 95개소의 산림조합 유통조직 직매장을 통해 단기임산물의 유통체인망을 구축하고, 목재유통센터 2개소, 목재 집하장 17개소를 조성하여 목재수집·운반·가공기능 확대로 산지별 목재유통의 중심지로 육성하고 있다.

또한 관상자원의 안정적인 생산유도 및 직거래판매 유도를 위하여 현재까지 전국 주요 생산지역에 조경수유통센터 4개소, 종묘전시판매장 1개소와 생산자단체가 생산한 청정 임산물의 직거래 유통을 위한 산채 등 단기임산물유통센터 7개소를 지원하여 유통경로의 다원화 및 유통단계 축소 등 유통구조개선 개선을 위한 지원을 지속하고 있다.

단기임산물 유통센터 조성현황

(단위 : 개소, 백만원)

구 분	계		2006까지		2007		2008	
	개 소	금 액	개 소	금 액	개 소	금 액	개 소	금 액
단기임산물 유통센터	30	17,428	13	9,000	7	3,428	10	5,000

한편 우리나라는 연간 3천만^m 내외의 목재자원을 이용하고 있으나 아직은 가꾸어 주어야 할 단계에 있는 어린나무가 59%로 목재자원이 부족하여 자급률은 낮은 실정에 있어 국산 소경재의 활용을 위하여 1997년에 여주목재유통센터를, 2004년도에는 동해사업소를 준공하여 국산재 이용촉진에 기여하고 있으며 또한, 1988년부터 현재까지 전국 17개소에 목재집하장을 조성하여 국산재 활용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임산물의 경우 경영규모의 영세성, 생산자조직의 미흡 등으로 전문적인 임산물 생산자조직의 유통참여가 어려웠던 바, 정부는 법인 경영체를 중심으로 규모화·단지화·전문화된 임산물의 유통구조 조성을 위해 산지유통전문조직을 집중 육성하여 생산에서 가공·유통단계까지 품질관리, 공동출하, 브랜드화 유통 및 산지와 시장의 출하 조절에 중심역할을 할 수 있도록 공동선별자금 등 표준출하자금(2008년 9억원) 및 밤, 표고 등 주요 임산물의 수매자금(2008년 440억원)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단기임산물의 수급불안과 소비지시장의 급격한 구매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체하기 위해서 매년 임산물 저장·건조 시설 74개소(2008년 41억원) 이다.

최근 농산물과 그 가공품에 대한 소비추세는 가격보다는 질 위주로 먹을거리의 안전성과 맛에 대한 소비자의 관심도가 높아지고 있다. 따라서 가격경쟁력보다는 지역별 차별화·표준화된 품질과 브랜드를 활용한 임산물의 부가가치 제고를 위해 표준출하규격 제정·운영하고 있으며, 임산물의 생산 및 유통의 흐름을 반영하여 유통의 효율성을 높이고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보호할 수 있도록 개정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지리적표시등록제도를 2005년도에 최초로 도입하여 2006년 3월에 양양송이를 제1호로 등록한 이후 현재까지 장흥 표고, 산청 꽃감, 정안 밤 등 16개 품목을 등록 완료하고 영암대봉감, 울진송이, 황성더덕, 천안호두 등 9개 품목에 대하여 지리적표시 등록을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지역별 명품 임산물 육성을 위한 지리적표시 등록수요는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임산물 지리적표시 등록현황

구 분	등 록 완 료			등 록 추진중
	2006년	2007년	2008년	
임 산 물 지 리 적 표시등록	제1호 양양 송이 제5호 울릉도 삼나무 제2호 장흥 표고버섯 제6호 울릉도 미역취 제3호 산청 꽃감 제7호 울릉도 참고비 제4호 정안 밤 제8호 울릉도 부지깥이	제9호 경산 대추 제10호 봉화 송이 제11호 청양 구기자 제12호 상주 꽃감 제13호 창선 고사리	제14호 영덕송이 제15호 구례산수유 제16호 광양백운산 고로쇠수액	영암대봉감, 울진송이, 악양대본감. 횡성더덕 등 9품목

2003년부터 밤에 대한 관측정보 제공을 시작하여 2006년도 부터 표고, 대추 품목을 추가하여 산지 생산현황, 시장가격, 수출 및 수입 등 해외 시장동향 등에 관한 종합적인 관측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생산자에게는 생산·출하시 의사 결정에 도움을 주고 소비자에게는 양질의 임산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게 되어, 생산계획 단계부터 수급조절이 가능하도록 임업관측사업을 지속적으로 실시(2008년 4억원)하고 있다.

임업인의 정보화 운영능력 향상에 의한 전자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2001년부터 임업인에게 홈페이지구축을 지원하여 2008년도 현재 692개 임가에 홈페이지를 완료하였다. 또한 생산자·소비자간의 정보교류를 위해 여주유통센터에 구축하여 운영 중인 임산물유통정보시스템(www.forestinfo.or.kr)을 통한 임산물 가격·유통·생산기술 정보의 전파로 직거래 활성화를 위해 주력하고 있다.

임업인 홈페이지구축 현황

(단위 : 임가, 백만원)

구 분	계		2006까지		2007		2008	
	임 가	금 액	임 가	금 액	임 가	금 액	임 가	금 액
임업인 홈페이지구축	692	1,110	512	840	90	135	90	135

한편 최근 청정 임산물에 대한 소비자 욕구가 증가하면서 소비자에게 신뢰 받는 안전한 임산물의 생산·공급을 위해 밤 등 주요임산물의 생산이력제 도입, 친환경 생산을 위한 장비지원, 유기질비료·목탄·목초액 등 친환경 자재 활용에 의한 토양개량사업 등 친환경임산물의 생산기반조성사업을 강화하고, 친환경임산물 인증 임가를 대상으로 정책자금 우선 지원 및 경영컨설팅 등 인센티브를 확대 지원하고 있다.

또한 중국산 장뇌 등 수입임산물을 국내산으로 속여 판매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원산지표시 단속을 강화하고, 생산자조직 중심으로 생산이력제도를 운영하고 있으며, 생산자단체의 자발적인 유통시장 정화활동 확대 및 모니터링을 강화하는 한편, 소비자의 신뢰 제고를 위하여 2004년부터 산림조합 계통 유통조직을 중심으로 임산물에 대한 리콜제를 실시하여 소비자의 신뢰 제고 및 안전성 강화에 주력하고 있다.

(산림청 목재소득과 임업사무관 박영환)

다. 수산물 유통구조 개선

수산물은 강한 변질성, 다양한 품목과 크기로 인해 근본적으로 유통상의 취약성을 갖고 있어 신선도 유지를 통한 가격 경쟁력 제고 및 생산에서 소비까지의 유통과정에서 발생하는 왜곡현상을 해소하기 위해 어획 후 최종 소비까지 효과적인 유통구조가 필요하며, 이에 따라 정부는 유통의 왜곡에 의한 자원의 낭비를 줄이기 위해 지속적인 노력을 하고 있다. 이러한 노력의 일환으로 수산물 유통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가 win-win 할수 있는 유통체계 구축을 위한 다각적인 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유통환경 변화와 이에 대한 대응 노력은 다음과 같다.

첫째, 대형 할인 매장의 확대, 생산자와 유통관계자 또는 소비자간 직거래 확대 등으로 시장을 둘러싼 대내외 환경이 급변하여 소비지 도매시장 및 산지 위판장의 기능이 축소되고 있어 2007년부터 도매시장 및 위판장 시설개선을 통하여 거래량을 확대할 계획에 있다.

도매시장의 기능강화를 위해 2001년 5월부터 가락, 노량진, 구리 등 수도권 3개 도매시장에서 패류 11개 품목에 대해 실질경매제를 정착시켰으며, 2003년 9월부터는 선어부류까지 확대하여 추진함으로써 거래의 공정성, 투명성이 제고되고 생산 어민의 직출하가 용이하게 되었으며, 대금결제가 신속하게 이루어지는 등 긍정적인 효과가 나타나고 있다.

산지수산물시장인 위판장을 위판업무의 보관, 포장, 가공 등을 통한 부가가치를 창출하고, 관광 등과 연계된 새로운 지역성장 동력의 중심지로 육성하기 위하여 2007년에 신규사업으로 목포 Sea-Food조성 사업의 기본계획 및 실시계획을 착수하였고, 2010년까지 해양수산물복합공간 조성사업 3개소 건립을 완료하여 먹거리, 볼거리, 즐길거리가 어우러진 수산물 유통시설을 운영할 계획이다.

둘째, 생산자 단체인 수협의 직거래 사업을 통해 유통비용을 절감하고, 생산자 및 소비자를 보호하기 위한 정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직거래 활성화 및 유통단계 축소를 위해 생산자와 소비자간 사이버거래를 통한 “인터넷 수산물시장” 및 “수산물 온라인도매시장”을 운영하는 등 유통체계를 다양화하여 경쟁을 통한 유통구조개선을 적극 유도해 나가고 있다

셋째, 물류표준화사업의 일환으로 2001년부터 표준규격 어상자 구입비를 지원하였으며, 2008년도에는 800백만원을 지원하였으나, 수도권 도매시장 경매제 정착에 따라 2009년부터 동 사업지원을 중단할 계획에 있다.

넷째, 수산물 물류기반 확보를 위해 1995~2008년중 2,090억원을 투입하여 부산국제수산물 도매시장을 건설 하였으며 노량진수산물도매시장을 2012년까

지 국제적인 수산명소로 탈바꿈시키기 위하여 2006년 예비타당성조사를 거쳐, 2007년 기본계획에 착수하여 2008년에 기본계획을 완료하고, 2009년부터 설계를 거쳐 일괄입찰방식(턴키)으로 공사가 착공될 예정에 있다.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정책과 사무관 최덕부, 사무관 김동욱)

3. 행정 추진조직 개편 및 규제개혁

가. 농림수산분야 행정추진 조직 개편

(1) 농수산업분야

(가) 농업분야 : 농촌개발, 대국민서비스 강화 및 국경검역인력 증원
농촌관광·복지 및 지역개발 분야 기능추진을 위한 인력과 신속한 대민서비스 강화 및 농축산물 국경검역 강화를 위한 실무인력 등 총 60명을 증원하였다.

- 본부 : 정주지원과, 축산자원순환과·소득지원팀 신설 및 실무인력 15명 (4급2, 4·5급1, 5급7, 6급5, 직급상향 5급1, 6급1)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맞춤형농정팀 신설 및 농산물품질관리·대민서비스 일선기관 5개 출장소와 실무인력 6명(4급1, 5급6, 9급△1, 직급상향 5급3)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 동물약품관리과 신설, 용인출장소의 중부지원으로 격상 및 실무인력 14명(4급2, 4·5급△1, 5급3, 6급4, 7급2, 별정7급2, 연구사2, 직급상향 5급3)
- 국립식물검역원 : 인천공항 화물터미널 CIQ인력 등 18명(5급1, 6급7, 7급6, 8급4, 직급상향 5급3)
- 국립종자원 : LMO 종자수출입 승인·유통관리 인력 7명(6급2, 7급3)

<농림부와그소속기관직제중개정령(대통령령 제19876호, 2007년 2월 8일, 대통령령 제20402호, 2007년 11월 30일), 농림부와그소속기관직제시행규칙(농림부령 제1548호, 2007년 2월 9일, 농림부령 제1574호, 2007년 11월 30일)>

(나) 수산분야 : 사업연구기능 강화 및 인력 증원

해양환경영향평가, 자원회복 및 바다목장사업 등의 기능을 강화하고, 연구인력 6명을 증원하였다.

- 국립수산과학원 : 정책홍보팀, 해양환경영향평가센터 신설, 바다목장사업 강화를 위한 연구인력 증원(연구관 2, 연구사 4)

<해양수산부와그소속기관직제(대통령령 제20405호, 2007년 11월 30일)>

(다) 주요 기능의 효율적 수행을 위한 농림수산조직 개편 추진

농촌 복합생활공간 조성 및 FTA 후속대책 등 담당 기능을 수행할 과 단위 기구 신설, 유사기능과 상호 연계추진 필요성이 큰 업무의 통합 및 국·과 명칭을 변경하는 등 조직개편을 단행하였다.

첫째, 도시민의 정주지원 공간 조성대책, FTA 확대에 따른 농가소득 향상, 가축분뇨 처리, 농산물 수출지원 대책 수립 기능 강화를 위한 기구 신설 : 정주지원과, 소득지원과, 축산자원순환과, 식품진흥과

둘째, 농정변화에 대응한 현행 조직의 명칭 변경

- 기관 명칭변경 : 국립식물검역소 → 국립식물검역원, 국립종자관리소 → 국립종자원
- 국 명칭변경 : 투융자평가통계관 → 정책평가통계관, 농업구조정책국 → 농업정책국, 농산물유통국 → 농산물유통식품산업국, 축산국 → 축산정책국

- 과(팀) 명칭변경 : 재정평가팀 → 정책평가팀, 구조정책과 → 농업정책과, 맞춤형농정팀 → 정책조정과, 소득정책과 → 소득총괄팀, 소득관리과 → 식량유통과, 농촌사회과 → 농촌산업과

셋째, FTA 후속대책 추진을 위해 농가소득안정추진단을 식량정책국에서 농업정책국으로 편제 조정

넷째, 자원회복정책 및 자원조성사업의 연계성 강화를 위한 자원회복과 신설, 내수면업무 확대 및 낚시관련 법률제정에 따라 유어내수면팀 신설 등 미래 수산행정 수요의 기반 구축

(라) 농림수산식품 조직 및 직제제정 추진

금년 2월 정부조직개편에 따라 농업과 수산업의 전략적 합병 및 식품산업 육성을 위한 농림수산식품부 직제 제정을 추진하였다.

첫째 농업통계 생산기능의 통계청 이관

둘째 해양수산부의 어업수산정책 기능 및 정원 일부를 농림수산식품부로 이관

셋째 보건복지부 식품산업진흥정책을 농림수산식품부로 이관하여 식품산업 본부를 설치하고 직제 제정 후 6월에 식품산업진흥정책의 법 시행에 따라 전담조직인 식품산업정책단을 식품산업본부 내에 신설하였다.

앞으로 관계부처간 협의 등을 통해 식품안전까지 포함한 식품행정 일원화를 추진 할 계획이며, 효율적인 인재관리와 농업과 수산의 융합, 일하는 방식 개선, 구성원의 자긍심 고양 및 신나는 일터 만들기 등을 통하여 농림수산식품부와 농림수산식품산업이 강한 부처, 강한 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하고, 국민에게 보다 향상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조직 신설 및 인력증원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마) 행정수요 변화에 대응한 수시직제 및 2009년도 농림수산식품부
소요정원 협의

미국산 쇠고기 수입 재개에 따른 수시직제로 음식점 원산지 단속인력과 대규모 시설장비 도입, 법정사항, 신규 국정과제 등을 중심으로 2008년도 소요정원을 작성, 행정안전부에 제출하였다.

- 본부 : 신규 국정과제 분야(새만금사업관리단 등 신설)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 수시직제(음식점 원산지 단속인력)
- 국립수의과학검역원 : 시설장비 도입 분야(인천공항CIQ), 주요 정책 분야(미국산 쇠고기 검역인력 및 현지검역관 파견인력, 조류인플루엔자 방역조직신설 및 인력 증원 등)
- 국립식물검역원 : 시설장비 도입 분야(우편식물검역, 인천공항CIQ 검역인력 등)
- 국립종자원 : 시설장비 도입 분야(강원지소 신설에 따른 보급종 생산·공급인력, 품종보호 제도운영 인력 등)
- 국립수산물품질검사원 : 법 제개정 분야(수산동물질병 검역 조직 및 인력, 수산물이력추적 인력 등)

(농림수산식품부 창의혁신담당관실 농업사무관 김철순)

(2) 산림분야

산림행정조직은 산림청(1관 3국 21과 1팀)과 11개 소속기관(1차)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소속기관으로 국립수목원, 산림인력개발원, 산림항공관리본부(7개 산림항공관리소), 5개 지방산림청(27개 국유림관리소), 국립산림품종관리센

터 및 책임운영기관인 국립산림과학원(4부, 3개 연구소)과 국립자연휴양림관리소(34개소 자연휴양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정원은 1,590명(산림청 229, 소속기관 1,361)이다.

2008년에는 2차례의 조직개편이 있었다. 제1차는 2008. 2. 29. 작지만 경쟁력 있는 정부를 구현하고 새로운 행정환경에 적합한 국정운영시스템을 마련하기 위하여 「정부조직법」이 개정됨에 따라 우리 청도 대국주의 체제로 조직 및 기능을 합리적으로 개편하기 위해 기존의 본부 및 팀제(4본부 1단 27팀) 조직체제에서 유사기능을 통·폐합하여 실·국 및 과체제(1관 3국 21과 1팀)로 조직과 기능을 재편하였으며, 정원 2명을 감축하였다.

제2차는 2008. 8. 7. 산림용 종자의 품종에 대한 심사·심판 기능과 산림유전자원의 안전한 보존·관리기능 등을 수행할 전담기관을 운영하기 위하여 책임운영기관인 국립산림과학원 소속의 「산림종자연구소」를 산림청 소속의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4급)」로 확대 개편하였으며 이에 소요되는 인력 33명은 별도 증원 없이 기존의 정원 내에서 전환배치 하였다.

(산림청 창의혁신담당관실 행정사무관 강대석)

나. 농림수산분야 행정규제개혁 추진

(1) 농수산식품분야

2008년도 현재 농림수산식품부 소관 규제는 416개이다. 2008년도 규제정비방향은 농어업 성장동력 확충과 농촌경제 활성화를 위한 규제 완화, 기업의 투자 활성화 및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토지이용규제 완화, 농림수산업의 부가가치 제고에 장애가 되는 타부처 규제 개선 유도에 중점을 두기로 하였다.

규제정비 과제발굴을 위하여 전경련 등 경제단체 및 지방자치단체의 의견을

수렴하고, 농지·축산위생·유통 및 수산분야 등의 유관단체 등을 대상으로 모니터링을 지속적으로 실시하며, 국민생활 및 기업 활동과 밀접한 소비자 및 현장의 목소리를 수렴하여 규제개혁의 질을 높이는 방향으로 규제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금년도에는 규제정비 대상과제로 97건을 선정하여 연말까지 이를 정비할 계획이며, 앞으로도 불합리한 규제들을 지속적으로 발굴하여 정비계획에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정비대상과제의 주요내용은 농업진흥지역 대체지정 획일적인 지정을 완화하고 농업진흥지역 해제절차를 간소화하는 농지법시행령을 개정하고, 비농업인에 대한 농지소유규제 완화 및 한계농지 소유 및 거래제한을 폐지하는 농지법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하는 등 농지이용규제를 대폭 완화하고, 농어촌지역의 생활환경 개선 및 마을구역 정비, 대규모 농업회사법인의 설립을 촉진하기 위해 간척지 등 임대기간을 30년 이상으로 개선하는 등의 농어촌정비법 관련법령을 개정하며, 축산물운반업체의 영업기준 완화 및 식육판매영업자의 식육용도 미표시시 부과하는 행정처분을 완화,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 적용 축산물가공장의 지정 신청서류를 간소화하는 등의 축산물가공처리법령을 개정하기로 하였으며, 비료 생산업 등록, 수입업 신고, 농약제조업·판매업 등록시 서류제출을 전자적 방법으로 대체하는 행정정보공동이용 부령을 제정하고, 사료제조업 등록시 필요한 생산시설규모의 하한선을 폐지하여 소규모업체의 시장진입 기회를 부여하도록 사료관리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아울러 양곡판매·가공업자에 가공방법, 시설개선 등의 명령을 폐지하고 양곡가공업 등록제를 신고제로 전환하는 양곡관리법령을 개정하며, 축산발전기금의 융자취급기관을 확대하고 축산물등급판정 확인서 발급규정을 완화하는 등의 축산법 관련법령의 개정도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어촌종합개발사업의 준공 확인제도를 개선하고, 품종별 양식어업 면허제도를 통합 면허제도로 전환하며, 축제식 양식장 낚시터 운영 허용, 어업허가

신청서류 간소화 및 연근해 채낚기어선의 집어등 최대전력기준을 재설정하는 등 수산 및 어업 관련법령의 개정도 추진할 예정이다.

금년도 규제정비과제는 정비대상과제를 정부입법계획에 모두 반영하여 사전에 정해진 추진일정에 따라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가며, 추진과정에서 자체규제 정비심의위원회에 정비 안건을 상정하여 심의를 받도록 함으로서 정비내용의 객관성 및 충실도를 강화하고, 입법지연 등으로 정비가 늦어질 경우에는 국무총리실 및 법제처 등과 협조하여 의원입법으로 대체 추진하는 방안을 함께 강구하는 등 정비계획을 차질 없이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규제개혁이 새 정부의 국정 최고과제로 추진되는 만큼, 규제개혁에 대한 추진상황을 농어업인·소비자 및 이해관계인들이 알기 쉽도록 규제개혁 홈페이지를 개설, 운영해 나갈 계획이며 규제개혁의 마인드 제고를 위해 규제업무 관련 법령실무자들을 중심으로 규제관련 전문실무교육을 실시하는 등 규제개혁에 대한 상시 업무체제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농림수산식품부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사무관 이호재)

(2) 산림분야

2008년도 현재 산림청 소관 규제는 13개 법률에 근거하여 67개의 규제가 있으며, 2008년도 산림분야 규제개혁의 방향은 규제개혁이 새 정부의 국정 최고의 아젠다로 관리됨에 따라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산림행정 규제개혁을 체계적으로 추진하여 국민경제에 도움을 주는 산림행정이 되도록 하였다.

우선 현장과 수요자 중심의 규제개혁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하여 전국경제인연합회, 대한상공회의소, 임업관련단체, 지자체 등이 참여하는 “산림규제개혁협의회”를 구성·운영하고, 각 지방산림청별로 “규제개혁단”을 운영하여 국민불편 해소 건의과제를 적극적으로 발굴하도록 하였다.

그동안 산림규제개혁협의회에서는 자체발굴(3월), 아이디어 공모(4월), 지역 규제개혁단 발굴(연중), 전경련 및 지자체 등에서 건의한 과제를 검토하여 국민이 체감할 수 있도록 규제개혁과제를 선정하여 신속한 법령정비를 추진하였다.

이에 따라 2008년도 산림분야 규제개혁은 현재까지 산지관리, 국유림관리, 입목벌채 등과 관련된 16건을 완료하였으며, 앞으로 새 정부의 중점 국정과제이자 산지분야 규제완화의 핵심인 산지 개발에 제한이 없는 준보전산지를 10만ha 확대하는 것을 금년 중으로 완료할 계획이다.

또한, 기존 규제의 완화와 함께 적극적인 규제관리를 통해 신설·강화되는 규제를 최대한 억제하여 「산림보호법안」(제정),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개정), 「산지관리법」 하위법령(개정),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개정) 등 법령 제·개정을 추진하면서 신설 또는 강화되는 규제는 없도록 하였다.

향후 산림분야의 규제개혁은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시키고 국가경제에 보탬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 적극적인 규제완화·폐지와 더불어 산림의 생태적·경관적 가치의 보전 시각도 균형 있게 검토하고 관련 법령의 정비와 함께 규제개혁에 대한 고객만족도 제고를 위해 규제준수 선택 범위의 확대, 시스템의 개선을 통한 다양한 국민편의 제고방안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산림청 규제개혁법무담당관실 행정사무관 김기현)

• Ⅲ. 농림수산업 구조조정 시 책

1. 경쟁력있는 경영체 육성	57
2. 생산기반 정비 및 농어업의 기계화·현대화	84
3. 농림수산 관련 산업의 육성	96
4. 고부가가치 농림어업을 위한 기술개발과 정보인프라 구축	113
5. 수출진흥 및 수입관리 대책	129
6. 친환경농업의 육성	141
7. 농어가소득안정 및 경영위험관리체계 구축 ..	152
8. 지역농업 클러스터 활성화	176

Ⅲ. 농림수산업 구조조정 시책

1. 경쟁력있는 경영체 육성

가. 영농규모화 촉진

영농의 규모화·집단화를 통하여 쌀 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쌀 전업농을 집중적으로 육성함으로써 주곡의 안정적 생산기반을 확보하기 위하여 「한국농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에 따라 영농규모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농림수산식품부에서 한국농촌공사를 통하여 비농가나, 전업 또는 은퇴하는 농업인들로부터 농지를 매입 또는 임차하여 이를 다시 젊고 유능한 쌀 전업농에게 장기저리의 이자(매매 : 연리 2%, 임대 : 무이자)로 매도하거나 임대하여 우리나라의 쌀 산업이 경쟁력을 갖출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2007년도 영농규모화사업의 지원규모는 총 7,855ha 3,400억원으로 이중 농지매매가 2,770ha 2,100억원, 농지임대차가 5,058ha 1,273억원, 농지교환·분합이 27ha 27억원을 집행하였다.

2007 영농규모화사업 계획 대 실적

(단위 : ha, 백만원)

구 분	2007 계획(A)		2007 실적(B)		집행율 (B/A)
	면적	금액	면적	금액	
계	8,392	340,000	7,855	340,000	100
농지매매	2,890	210,000	2,770	210,000	100
임대차	5,452	127,300	5,058	127,300	100
교환분합	50	2,700	27	2,700	99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정책국

(농림수산식품부 농지과 사무관 이영식)

나. 경영이양직불제 운영

농업경영을 이양하는 고령은퇴농가의 소득안정을 도모하고 쌀전업농등의 영농규모 확대를 촉진함으로써 쌀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에 따라 경영이양직접지불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이 사업은 영농규모화사업과 마찬가지로 한국농촌공사를 통하여 추진하는 사업으로 지급대상자 선정 신청일 이전 10년 이상 벼농사를 경작하고 최근 3년간 계속하여 벼농사를 경작한 농업인으로서 연령이 63세이상 69세이하인 농업인이 소유농지를 쌀 전업농등에게 매도하는 경우 연령에 따라 최단 2년, 최장 8년간 ha당 241천원(연 2,896천원)을 매월 분할 지급하며, 임대하는 경우는 ha당 2,977천원을 1회에 일시 지급해 주고 있다.

아울러 한·칠레 FTA 비준시 추가 지원 대책에 따라 70세 이상 72세 이하 고령농업인에 대해서도 2004년부터 2006년까지 한시적으로 매도·임대 공히 ha당 2,977천원을 일시금으로 지급한 바 있으며, 지급상한은 매도 및 임대 이양 각각 2ha까지로 되어 있다.

경영이양직접지불사업은 고령은퇴농가의 소득안정과 전업농의 영농규모 확대가 동시에 달성되도록 영농규모화 사업과 연계하여 추진하고 있다.

한편, 한-미 FTA 체결에 따른 국내 농업부분 보완대책으로 경영이양 직접지불제도를 확대·개편하기로 함에 따라 보조금 지급대상 농지를 논에서 밭과 과수원까지 확대하고, 지급기간을 75세까지 최장 10년으로 연장하며, 임대하는 경우에도 매도할 때와 마찬가지로 75세까지 분할지급하고 지급단가를 상향하는 등 「농산물의 생산자를 위한 직접지불제도 시행규정」 개정하여 2009년부터 본격 시행할 예정이다.

2007년도 경영이양직접지불사업의 지원규모는 총 2,345ha 11,263백만원으로

이 중 매매이양이 246ha 4,150백만원, 임대이양이 2,099ha 6,178백만원을 집행하였다. 1997년부터 2007년까지 75.8천명의 고령은퇴 농업인에게 1,476억원의 경영이양직불금을 지급하여 고령농업인 1인당 195만원의 소득을 지원하였으며, 쌀 전업농 52.1천명이 고령농업인의 경영이양농지 51.4천ha를 양수하여 쌀 전업농 1인당 1.0ha의 영농규모 확대에 기여 하였다.

2007 경영이양직접지불사업 계획 대 실적
(단위 : ha, 백만원)

구 분	2007 계획(A)		2007 실적(B)		집행율 (B/A)
	면 적	금 액	면 적	금 액	
사업비	2,000	11,263	2,345	11,263	100%
직불금	2,000	10,328	2,345	10,328	100%
운영비	-	935	-	935	100%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 행정사무관 홍만의)

다. 마케팅지향형 산지유통 주체 육성

최근 급성장하고 있는 대형 유통업체, 전자상거래 등 신유통 환경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산지유통 주체의 규모화, 전문화, 브랜드화가 절실하다.

그 동안 정부는 산지유통전문조직을 육성 지원하고 산지유통시설을 확충하는 등 마케팅의 규모화·전문화에 역점을 두어 2007년까지 산지유통전문조직 260개를 선정하였고 산지유통시설 APC 254개소를 지원함으로써 산지유통기반을 마련하였다. 그러나, 상당수가 지역조합단위 소규모 판매사업 수준에 머무르고 있고 경영면에서도 마케팅능력이 있는 전문가를 확보하지 못함으로써 상품화·브랜드화·고정거래처 확보 등에 한계를 드러내고 있다.

따라서 유통환경변화에 대응하고 농산물유통의 근본문제인 산지유통조직의 영세성을 극복할 수 있는 규모화된 조직을 육성하기 위해 시·군단위 이상 농

가를 조직화하고 공동브랜드를 사용하여 연간 100억원 이상 매출을 올리는 공동마케팅조직을 2005년부터 2013년까지 80개 조직을 육성할 계획이다.

2005년도에 최초로 9개 조직, 2006년도에 6개 조직을 선정하였으며 2007년의 경우 공모를 통해 신청한 조직(8개)에 대해 농가조직화, 사업규모, 브랜드 능력, 경영성과, 향후발전계획 등에 대한 현지심사와 평가를 실시한 후 관계전문가로 구성·운영되는 산지유통지원위원회 심의를 거쳐 4개 조직을 공동마케팅 조직으로 선정하였다.

조직유형별 공동마케팅선정조직

선정연도	합계	거점산지조직형(4)	사업연합형(9)	전문마케팅법인형(6)
2005	9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순천농협(합병조합) ▪ 대관령원예농협(전문조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안성(지역조합주도) ▪ 나주·합천(시군연합) ▪ 햇사레(도간연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맛젤영농조합법인 ▪ (주)논산수출물류센터 ▪ (주)농산무역
2006	6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상주원예농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도연합) ▪ 부여·여주(시군연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농업회사법인 통통 ▪ 풀빛 영농조합법인
2007	4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제주감귤농협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고창·진주(시군연합)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참후레쉬영농조합법인

공동마케팅조직은 기존 산지유통조직에 전문경영인에 의한 책임경영, 광역화된 사업권역, 회원제 생산·출하관리 등 차세대 기업형 마케팅조직으로 육성해 가고 산지유통전문조직은 매년 매출규모, 영업이익 등 경영성과를 분석, 농협군과 법인군으로 분리하고 상대평가하여 A~F등급(6개 그룹)으로 구분, 평가 결과에 따라 지원금리를 1~3% 차등화하고 우수조직은 무이자 인센티브자금을, 하위 10%의 부진조직은 자금회수 및 사업 참여제한 등 구조조정을 통해 투자효율성을 제고하고 선택과 집중의 지원체계를 강화하였다.

아울러, 2004년 농협법 개정을 통하여 조합공동사업법인 근거를 마련함으로써 공동마케팅조직으로 선정된 농협연합사업단에 법인화를 의무화 하고, 실질적인 경제사업에 전념하도록 함으로써 공동마케팅조직의 규모화·조직화가 더욱 촉진될 전망이다.

2007년도 선정된 4개 공동마케팅조직에 대해서는 3년간 용자 1%의 유통정책자금(62,750백만원), 1년간 무이자인센티브(19개조직 80,578백만원), 홍보 및 브랜드 개발지원(16개 조직 350백만원) 자금을 지원하였으며, 공동선별비 보조(40~50%), APC시설보완 사업자 우선선정, 공동마케팅조직 회원농가에 대한 농업종합자금 우대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부여하였다.

또한, 산지유통혁신을 위한 정보화 기반을 구축하고 전자상거래를 활성화하기 위해 마케팅 전문화를 주도할 유통인재 활용을 촉진하고 수확후 관리기술도 적극 개발하여 APC 등에 보급하였으며, 공동마케팅조직 및 산지유통전문조직에서 농산물 판매·유통·품질관리 등 경제사업에 종사하는 품질관리사에 인센티브를 지원(105명 13,500백만원)함으로써 농산물 품질·유통관리 인력에 대한 사기진작과 경제사업 활성화에 기여하였다. 유통인재 양성을 위한 「농산물 유통전문교육과정」을 지방대학과 농수산물유통공사 유통교육원 등에서 저온저장, 브랜드 개발, 안전성 관리, 물류개선, 수출마케팅 등 유통단계·분야별로 특화된 3~9개월 전문교육과정을 운영하는 한편, 품목별 수확후 관리기술 매뉴얼을 개발하여 사이버컨설팅도 지원하였다.

공동마케팅조직이 활성화되면 단순 공동판매에서 상품화를 통한 부가가치 창출, 산지-소비자간 네트워크 구축 등을 담당할 책임 있는 거래 주체로서 우리나라 농업경쟁력과 농가소득을 획기적으로 제고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 유통정책팀 서기관 김상근)

라. 농업종합자금제 개선

농업종합자금은 농업인들이 스스로 소정의 사업계획서와 관련서류를 제출하고 금융기관이 해당분야의 사업수행 능력과 사업타당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시설·개보수·운영자금 등을 지원하는 제도이다.

1999년 시범사업 이후 총 25개 사업을 통합운영하고 있으며, 2008년 종합자금은 지원규모 11,000억원(농특자금 1,650억원, 농협자금 9,350억원)을 운영하고 있다.

농업종합자금은 기존 농림사업자금의 일반적인 방식과는 달리, 지역별·품목별·용도별로 자금을 사전에 배분하지 않고 전국적으로 하나의 자금풀(pool) 방식으로 운영하고 있으며, 농업인의 수시 신청에 따라 연중 수시로 자금을 지원하도록 하여 자금공급의 신속성을 제고하고 있다.

농업종합자금 지원규모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3까지실적	2005실적	2006실적	2007실적	2008계획
합 계	1,493,753	823,228	956,658	1,026,100	1,100,000
농특자금	602,650	150,196	175,217	153,898	165,000
농협자금	891,103	673,142	781,441	872,202	935,000

2003년에는 3천만원이상 농기계구입자금, 관광농원 개발, 농촌민박마을 조성, 자가배합 사료제조 시설 지원사업을 종합자금으로 통합하였으며, 2004년에는 2천만원이상 농기계구입자금, 농기계생산지원자금, 산지일반가공육성, 전통식품 개발, 농촌가공산업육성자금, 후계농업인육성자금, 객토자금을 농업종합자금에 통합하였다. 2005년에는 고품질 우량종자개발사업, 1천만원이상 농기계구입자금을 통합, 2006년 농기계보관창고사업 통합 그리고 2008년에는 후계농업인육성자금을 제외하여 총 25개 농업분야 용자자금을 농업경영체의 사업계획을 심

사하여 지원하고 있다.

시중금리의 하락추세와 어려운 농업경영여건을 고려하여 2002년 7월 1일부터 대출금리를 5%에서 4%로 낮추어 지원하였고, 한·칠레자유무역협정 국회비준으로 농산물 시장개방이 확대됨에 따라 가격하락 등으로 농가의 경영상의 어려움을 감안하여 2004년 3월 1일부터는 대출금리를 4%에서 3%로 인하하여 농업인의 금융비용 부담이 경감되도록 하였다.

또한 농축산경영자금중 전업경영체 지원자금인 농기업경영자금과 축산전업경영자금을 농업종합자금으로 통합하여 운용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농업인에 대한 지원자금중 농업종합자금제로의 통합이 바람직한 사업을 검토하여 지속적으로 통합해 나갈 계획이다.

농업종합자금제는 정책자금을 시장원리에 따라 지원함으로써 부실화율을 낮추는 등 어느 정도의 성과를 거두고 있기는 하지만, 앞으로 개선해야할 점도 남아 있다.

그리고 능력있는 경영체를 선별지원할 수 있도록 전문심사인력을 육성하고 대출심사기법을 지속적으로 개선하면서, 경영실태조사결과의 자료화와 경영분석능력 제고를 통해 농가 부실화징후의 사전 감지, 농가에 경영진단자료 제공, 컨설팅사업과 연계 등 사업성공위주의 사후관리시스템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갈 것이다.

아울러 업종전망 및 동향분석 자료를 대출심사자와 경영체가 활용할 수 있도록 제공함으로써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컨설팅서비스체계의 구축을 위해 노력할 것이다.

(농림수산식품부 농업금융과 농업사무관 고경봉)

마. 농업인력 육성시책 추진

(1) 후계농업경영인 육성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은 농업인력의 고령화 추세에 대응하여 젊고 능력 있는 농업인을 확보하기 위해 1981년부터 시작하였으며, 일정기준에 적합한 청장년을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발하여 영농기반 확보에 필요한 자금 등을 지원하는 사업이다.

2008년 현재 후계농업경영인 육성사업은 35세 미만자를 지원하는 창업농 후계농업경영인 사업과 45세 미만자를 지원하는 신규 후계농업경영인 사업으로 구분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2007년에 창업농 1,034명, 신규후계농 473명을, 2008년에는 창업농 1,114명, 신규후계농업인 591명을 선정하여 지원하고 있다.

후계농업경영인 육성대상자는 시장·군수가 시·군 농정심의회 심의를 거쳐 선정하며, 선정된 자에게 사업계획에 따라 연리 3%에 5년 거치 10년 균분상환을 조건으로, 창업농 후계농업경영인에게는 1인당 2천만원~2억원, 신규 후계농업경영인에게는 2~5천만원의 사업비가 차등지원 된다.

아울러 후계농업경영인의 확보를 위하여 영농정착단계별로 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고 있는데, 영농정착전단계에서 잠재농업인력의 체험 프로그램인 농업인턴제와 창업농 멘토제(후견인제)가 있다.

농업인턴제란 44세 미만의 영농정착 희망자에 대해 선도농가에서의 실무연수를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선도농가에게 월 60만원 한도로 농업인턴에 지급하는 보수의 50%이내에 보조금을 지원하며, 2007년 100명, 2008년 203명을 선정 지원하였다.

창업농 멘토제는 창업농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되어 영농정착자금을 지원받는 사람이 후견을 통해 기술과 경영 등에 대한 조언, 교육, 지도를 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인데, 창업농을 후견하는 후견인에 대하여 창업농 1인당 월 50만원, 연간 500만원 한도로 지원된다. 2007년에는 121명, 2008년에는 100명을 선정 지원하였다.

그리고, 후계농업경영인으로 선정이 된지 5년 이상된 후계농업경영인을 대상으로 평가를 거쳐 발전가능성이 있는 사람인을 선정하여 영농규모 확대 및 경영개선 자금을 지원하는 우수농업경영인 추가지원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2008년에는 1,670명을 선정하여 1인당 8,000만원 한도로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 조건은 연리 3%, 5년 거치 10년 분할 상환이다.

(농림수산식품부 경영인력과 주무관 방도혁)

(2) 농업경영체활성화 방안 추진

1989년 영농규모화 사업 추진을 위해 도입된 농업법인 제도는 1994년 농업생산 외에 가공·유통 기능까지 그 역할과 기능을 확대하여 농업법인제도의 체계가 정립되었으며 1999년 농업·농촌기본법에 농업법인의 육성 근거가 도입되어 현재에 이르고 있다. 농업법인제도는 개별농가의 자본과 기술을 통합하여 규모의 이익을 창출하고, 고품질·기술농업의 실현을 통해 농산물의 부가가치를 높이는 등 농업경영의 전문화 촉진에 기여하였으며, 법인화를 통해 농업분야에 기업적 경영방식을 도입하는데 역할이 컸다.

이러한 농업법인이 DDA·FTA 등 개방확대에 대응하여 중추적 역할을 수행하도록 하기 위해 2004년 제1차 농업경영체활성화방안을 마련하여 총 17개 추진과제중 14개 과제를 완료하였으며 이어 2006년에는 제2차 농업경영체활성화방안을 마련하여 추진중에 있다. 1차 활성화방안에서는 농업소득세를 2008년도까지 면제하고 농업법인이 창업후 2년내 취득한 농업용 부동산의 취·등록세를 면제하는 등 농업법인의 창업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세제를 개선하고 농업회사법인에 외부자본과 경영 전문 인력의 참여를 촉진할 수 있도록 비농업인

의 출자지분을 확대(1/2→3/4)하였다. 이어 2차 활성화방안에서는 법인 양성 인프라 구축을 위해 농업창업보육센터를 권역별로 확충하도록 하였으며 투자 여건을 활성화하기 위해 농업전문투자펀드를 조성(2006년 100억원, 2007년 200억원)하고 농업법인세 면제 일몰시한을 2009년 12월까지 연장하는 등 농업법인의 사업원활화를 위한 지원체계를 마련하여 시행중이다.

농업경영체 활성화방안의 분야별 세부 추진과제는 다음과 같다.

(가) 농업법인경영체 양성을 위한 인프라 구축

농업법인이 세제혜택, 농지소유 허용 등 많은 정책 지원을 받고 있으나 실태 파악이 불가능하여 관리가 어려우므로 선량한 농업법인의 선의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편으로 시장·군수가 주기적으로 농업법인의 운영실태를 조사하고 장기 휴업 또는 휴면 법인은 해산을 유도하는 등의 제도를 도입할 계획이다.

또한 지방의 농업법인이 창업보육 혜택을 받는데 불편을 최소화하기 위해 농업특화창업보육센터를 권역별로 확충(2005, 2006 각 1개소, 2007 4개소)하였고, 중소기업청에서 운영하고 있는 혁신형 중소기업 「Inno-biz 인증」제도에 농업분야 평가지표를 신설(2007.2)하여 선도 농업법인이 인증 받고 정책지원우대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제도를 마련하였다.

(나) 농업법인 투자 유치 및 자금 지원 개선

농업법인의 담보 및 회계투명성 부족, 소극적 대출 경향으로 정책자금을 배정받아도 대출을 받기가 어려운 현실이므로 농업정책자금 취급기관을 농협위주에서 우리·전북·제주은행으로 확대하고(2008년부터 시행), 농업회계기준 정착과 농업법인 신용평가 모형 개발 등을 통하여 농업법인에 자금 공급이 원활히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특히, Inno-biz농업법인에 대해서는 농신보 보증한도를 확대(15억원→30)하였다.

또한, 농업법인에 농업전문투자펀드 등 투자방식 지원의 확대가 필요하나 BT등 고수익분야로 편중되거나 민간부문의 투자 참여가 미흡하므로 2011년까지 1천억원 규모로 농업전문투자펀드를 확대 조성한다는 계획하에 2006년에는 100억원 규모의 농업전문투자조합을 결성, 2007년에는 200억원 규모의 농업전문투자조합을 결성하여 운영중이며 2008년도에도 200억원 규모의 농업전문투자조합이 결성예정이다. 한편, 농업전문투자펀드의 투자대상을 농·축산업과 식품, 유통, 농촌지역개발 등을 포함한 농업분야와 기타 농업외분야로 나누어 농업분야에 투자가 더 많이 집중(60% 이상)될 수 있도록 제도를 개선하였다.

(다) 우수 인적 자원 양성 및 유입 촉진

농산물시장의 위험은 증가하고 있으나 농업법인 경영주의 경영역량은 부족하고 전문인력 확보에도 어려움이 있으므로 대기업 연수기관에 위탁하여 농가 조직화·문제해결 능력을 배양하는 다양한 교육방식을 도입하고, 우수 농업법인이 회계·경영·전산전문가를 채용할 경우 장려금을 지원하는 사업을 시범적으로 도입하여 2007년부터 시행하였으며, 농업분야 외국 인력 활용도 확대되도록 여건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타 산업분야의 전문경영인을 농업분야에 유입시켜 농기업의 전문경영인 시대를 열어가기 위하여 농업 CEO MBA 과정을 개설, 타산업분야 임원급 인력 60명을 선발하여 교육하였다.

(라) 농업법인의 경영·기술·정보화 기반 강화

농업법인에 대한 전문적인 경영컨설팅과 경영정보화 기반이 부족하고, 농업법인 성장에 신기술 및 신상품 개발이 중요한 요소이나 상품 개발 등 사업화 기술 지원을 받는데 애로가 많으므로 수요자 중심의 상시 컨설팅 체계를 구축하여 투자유치기법, 특허 등 컨설팅 서비스 범위를 확대하였다. (2007년 농업경영컨설팅지원사업)

또한, 농업법인의 연구개발 참여비율을 확대(2006: 총사업비의 6% → 2010 :

20%)하며, 과제선정 평가위원단에 농업법인 대표가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하고, 농림부와 농촌진흥청이 협력하여 농업법인의 특허자문도 실시할 계획이다.

(마) 농업법인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 및 세제 지원

농업법인 사업 활성화를 위해 신체조직 기능 증진 효과, 영양학적 유용성 등 표시·광고를 허용하도록 식품위생법시행규칙을 개정(2006.12월)하였다.

또한, 영농조합법인의 배당소득 소득세 감면시한을 2006년 12월말에서 3년 연장하고, 2009년 12월까지 농업회사법인의 농업소득은 비과세하되 농업외 소득은 14% 분리 과세되도록 관련 법령을 개정하였다.

아울러, 2006년 12월말 도래되는 농업법인 법인세 감면의 일몰시한을 2009년 12월말까지 연장하였으며, 조사료 생산용 비닐을 부가세 환급대상에 포함하고 화훼 종자류(종구·종묘)에 대한 부가가치세도 면제되도록 하였다.

특히, 1차 대책 수립 때부터 지속적으로 제기되어온 농업인 사업자등록제 도입 문제는 전문가 연구용역을 거쳐 농업계 의견을 수렴한 후 확정할 계획이다.

(농림수산식품부 경영인력과 주무관 이경미)

(3) 농업교육훈련

농촌인구의 감소·고령화 등 농업 인력의 양적·질적 저하가 심각하며, 시장 개방 확대 등 농업환경 변화가 급속히 진행되고 있고, 농업의 핵심역량이 노동, 토지, 자본 중심에서 지식, 정보, 창의성 및 문제해결 능력을 지닌 인적자원 중심으로 변화를 맞고 있는 상황에서 환경변화에 적극 대처할 수 있는 전문지식·기술 및 경영혁신 능력을 겸비한 경쟁력 있는 전문농업경영인 양성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이를 위해 민간단체, 지방자치단체, 농촌 지도기관, 농과계 대학, 농업관련 단체 등과 협력하여 농업인 교육훈련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맞춤형 농정과 연계하여 농업인 수준별 교육과정을 체계화하고, 품목별 신기술 보급, 농가 경영능력 제고, 농업인 조직화·브랜드화 등 교육목표를 구체화하여 농업소득 향상을 뒷받침할 수 있도록 교육의 품질 향상 및 돈 되는 전문 교육을 지속적으로 확대 추진하였다.

또한, 교육 전 수요조사를 통해 농업인이 필요로 하는 교육내용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고 반영하였으며, 수요자 중심 농업교육 추진체계를 정착시키기 위하여 농업인·지자체의 교육운영 역량을 확충하고, 지역농업교육협력체의 교육기관 및 생산자단체참여 확대 및 조정역할도 강화하였다.

농업교육정보시스템 확충 및 교육모니터링 평가 강화를 통해 교육정보 수집부터 평가까지 농업인의 참여를 강화하였다.

수요자 중심의 수준별 맞춤형 농업교육체계 정착을 위하여 경영수준별 선택이 가능한 교육지원 인프라를 구축·운용하고, 농업경영체별 수준별 전문농업경영인 교육프로그램을 시범·운영 하였다.

예비농업인력 양성 및 브랜드조직화 등 맞춤형교육도 강화하였다. 농대 영농정착교육과정 및 농고현장체험교육을 현장실습중심 교육으로 강화하고 도시민 귀농교육의 체계화를 위해 귀농실행 단계별 교육과정을 운영하였고,

브랜드 경영체 임직원·농가교육담당자 등에 대한 농가 기술·조직화교육 등을 강화하고, 수요기관에서 농업인 해외연수기관을 직접 선택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해외연수 전문기관을 7개 기관에서 13개 기관으로 확대·지정하였다.

또한, 농업인단체·지역특성화사업단 교육운영 역량 확충을 위해 교육프로그램 개발·운영, 가이드 북 제작·보급, 네트워킹 활동 등을 확대 지원할 계획이며, 에그리에듀넷 서비스 기능 최적화를 지원하고, 교육평가에 대한 평가체계를 전반적으로 개선하였으며, 이를 위하여 교육예산을 2007년 130억원에서 2008년 215억원으로 확대 편성하여 추진하였다.

(농림수산식품부 경영인력과 행정사무관 박영근)

(4) 경영컨설팅 지원

농업경영의 상업화·규모화·전문화로 인한 농업인의 다양한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는 농축산물 생산 중심의 지도사업에서 벗어나 변화하는 농업환경에 부합하고, 개별농가 특성에 맞는 경영개선의 지원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와 같은 농업인의 요구에 부응하고자 1999년부터 민간컨설팅 회사를 통한 농업분야 컨설팅제도를 도입하였다. 컨설팅사업은 우리부의 대규모 기업농 대상 민간컨설팅, 민간컨설팅 대상에서 제외되는 일반농가를 중심으로 지도기관의 공적컨설팅, 농협 등의 농업인단체 컨설팅 등 다양한 계층의 농업인에게 제도적 지원 체계를 구축함으로써 경영능력을 향상시켜 농가의 자력성장을 뒷받침하고 있다.

경영컨설팅사업비 지원현황

구 분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사업량(개소)	220	441	553	759	847	870	1,000	1,009	1,080	1,206
사업비(백만원)	1,710	3,388	4,427	5,586	5,696	6,550	8,000	8,640	8,640	9,600
국 고	671	1,227	1,499	1,676	1,709	1,965	4,000	4,400	4,400	4,800

2008년에는 2007년도에 제도개선한 사항에 추가하여 사업대상자를 친환경농업 경영체까지 확대하고, 꿀벌 사육농가도 포함하는 등 대상자를 확대하였다.

* 친환경농업육성법 제17조에 따라 인증기관에서 무농약·유기재배로 인증 받은 농가와 꿀벌 200군 이상 사육농가까지 신청자격 부여

선정우선 1순위에 고품질교육과정을 이수한 여성농업인을 포함하여 여성농업인을 컨설팅대상자로 우대하였다. 이와함께 여성농업인이 25% 이상 선정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 대상과정 : 여성농업인 비즈니스 아카데미과정, 농업경영인 MBA과정

2008년부터 컨설팅 참가 농가 중 10%를 선정하여 컨설팅 전후 소득증가율을 조사하고, 지자체의 컨설팅사업에 대한 평가를 통하여 관리실적이 우수한 지자체에 사업비를 우대하도록 하여 지자체간 경쟁을 유도한다.

컨설팅업체에 대한 관리강화를 위하여 업체관계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인증받지 아니한 업체에 대한 하청금지, 외부 컨설턴트 추가등록시 우리부의 승인을 받도록 하고, 컨설팅결과를 보고서로 작성하여 농가에 제출하도록 하였다.

농가 및 컨설팅업체의 책임의식 제고와 예산 집행의 투명성 확보를 위해 2007년에 시범사업으로 추진한 바우처 쿠폰제를 2008년에는 전면적으로 시행하고, 쿠폰제 실시와 함께 지자체의 컨설팅업체에 대한 인감증명서 등 과도한 증거서류의 제출을 자제하도록 하였다.

* 시·군에서 대상자로 선정된 농가에 쿠폰을 지급하고, 농가는 컨설팅 서비스 희망업체를 선택한 후 쿠폰과 자부담(계약금)을 업체에게 지급

* 업체는 농가로부터 받은 쿠폰(계약금, 중도금, 잔금)으로 시·군에 컨설팅 서비스 대가를 요구

또한, 컨설팅업체의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2006년에 인증받은 업체에 대하여 2년간의 실적을 평가하여 재인증을 실시하고, 새로운 업체의 진입을 유도하기 위하여 2008년도 컨설팅업체 인증을 실시하여 2006년 인증업체 37개 업체 중 5개 업체를 탈락시키고 신규로 2개 업체를 인증하여 2007년 인증업체 포함 40개 업체가 컨설팅을 실시할 수 있도록 조치하였다.

(농림수산식품부 경영인력과 행정사무관 박영근)

(5) 농업벤처 육성

농업벤처는 농림업, 농업 전후방연관산업 및 농촌과 관련된 분야에서 농업생명 공학기술 등 새로운 기술과 아이디어를 활용한 고위험-고수익의 중소형 모험기업으로서 2001년부터 농업벤처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농업전문펀드 조성, 농업벤처창업보육센터 지원, 농업벤처창업경연대회 지원 등 관련 시책을 추진 중에 있다.

2001년(100억원, 1호 조합)과 2002년(80억원, 2호 조합)에 조합을 결성 운영하여 청산완료하였고, 2006년 농업전문투자조합 3호(100억원) 및 2007년도 4호(200억원)를 결성하여 운용중이다. 특히 2호 조합은 우수한 기술력을 가진 농업벤처에 투자하여 코스닥에 상장시키면서 농업벤처펀드 최초로 147% (117억원)의 이익을 회수하여 농업부문도 성장발전 산업으로 도약할 수 있다는 가능성을 보여 주었다.

2008년 농안기금 예산으로 확보한 100억원으로 민자를 유치하여 200억원 규모의 농업전문투자조합(5호 조합)을 결성, 농업분야벤처기업에 투자해 나갈 계획이며, 농업분야 우수아이템에 대한 창업경연대회와 농업벤처투자박람회도 개최하여 농업벤처를 우리 농업의 새로운 활로 개척을 위한 신성장동력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2005년까지 선정된 4개 농업전문창업보육센터는 경쟁을 유도하기 위해 운영비를 운영성과 평가를 통해 차등 지원하였으며, 2006년에 전남대학교에 이어 2007년에도 강원, 충청, 제주지역에 총 4개소의 농업전문창업보육센터를 신설하여 농업창업보육센터를 권역별로 확충하였다

(농림수산식품부 경영인력과 주무관 이경미)

(6) 여성농어업인의 육성 및 지원

(가) 여성농어업인의 농업경영능력 및 리더십 향상

품목단체별로 시행하는 품목별 전문교육에 여성농업인이 20%이상 참여할 수 있도록 추진해 나가고, 지역발전의 혁신주체로서 소수정예 여성농업인 CEO를 육성하기 위하여 2006년도부터 추진한 ‘여성농업인 혁신인재 비즈니스 아카데미’ 교육을 민간 전문기관에 위탁하여 2008년에는 ‘제3기 여성농업인 혁신인재 비즈니스 아카데미’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여성농업인의 정보 활용능력 제고를 위해 농업인정보화교육에 여성농업인을 40%이상 참여토록 하여 전문화·차별화된 맞춤형 정보화교육을 추진하고, 도 농업기술원 및 시·군 농업기술센터에 농촌여성평생학습센터를운영하며, 선도 여성농어업인으로 체험단을 구성하여 품목 또는 분야별로 여성농어업인의 특성에 맞는 연수과정을 농어업인 교육훈련계획에 반영하여 시행할 예정이다.

농업연수원에서는 여성농업인의 리더십 향상을 목표로 전문강사 요원을 양성하기 위해 ‘여성농업인 리더십 아카데미’과정의 심화과정을 신설하여 여성농업인 리더십 아카데미 과정의 수료생을 대상으로 기획력 및 리더십의 재학습을 통해 관련역량을 더욱 강화할 것이다.

(나) 후계 여성농어업인력 육성기반 확충

정부는 ‘농업·농촌 종합대책’의 후속 조치로 ‘정예농업 인력육성 종합대책(2005. 1)을 마련하고, 20만호의 정예인력 육성방안을 구체화 한 바 있으며, 여성농업인에 대해서도 농업구조의 선진화와 농촌경제의 활성화를 견인하는 주요 인력으로 육성하고자 여러 가지 정책을 펼 계획이다.

우선 후계농 지원사업, 농업인턴제, 창업농 후견인제, 대학생 창업연수제 등의 후계인력 육성사업 시행 시 20% 범위 내에서 여성농업인을 우선 선정토록 함으로써 젊고 유능한 여성농업인을 집중 육성할 계획이다.

쌀 전업농 선정 시에도 일정요건을 갖춘 여성농업인에게 부여한 우선순위 및 가산점을 부여하며, 부부가 후계농업경영인 지원자금 신청시 주 사업 품목이 다를 경우 각각 지원 가능토록 사업시행지침을 개선하여, 부부창업농·부부 후계농 우선 선발 및 우대지원제도에 대하여도 검토할 계획이다.

(다) 여성농업인 노동생산성 향상과 노동부담의 완화

최근 영농형태가 벼농사 위주에서 원예·화훼 등 밭작물의 비중이 커지면서 여성농업인의 영농활동 참여도가 점차 증가되고 있으나, 현재 보급되고 있는 농기계는 대부분 남성의 체형에 맞춰 개발되어 여성이 운전·조작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는 실정이다.

이에 따라 우선 여성농업인의 참여도가 높은 농작업에 대한 기계장치 개발을 강화하고, 여성농업인이 취급하기 쉬운 작고 가벼운 농기계를 개발함으로써 여성농업인의 노동부담을 경감하고 노동생산성을 향상시켜 나갈 계획이다.

(라) 여성농어업인 창업활동 지원

여성 특유의 보유기술 및 지역의 부존자원을 이용한 일감 발굴, 창업지원을 통해 농가소득을 증대시켜 나갈 것이다. 이를 위해 여성 기술보유자를 중심으로 작업장 설치 및 시설 설치, 생산원료의 확보, 포장지 디자인 등에 대하여 지원하고, 경쟁력 제고가 우선적으로 필요한 품목부터 우선 육성하고 연차적으로 다양화 해 나갈 것이다.

(마) 농촌개발 리더로서의 여성농어업인 전문화

농어촌지역개발 및 농어촌관광 분야는 여성의 참여 없이는 활성화되기 어렵기 때문에 여성농어업인의 역량강화가 무엇보다도 중요한 영역이라 할 수 있다. 농어촌지역개발 리더 교육과정에 여성인력 참가 희망자를 우선 선발하고 교육과정에 '농어촌 지역개발 여성리더' 과정을 운영하여 여성농촌체험교사 및 어촌관광가이드 등을 양성하여 여성농어업인의 전문성을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

(바) 농어가 인력지원 확충

여성농어업인의 출산에 따른 산전·산후 건강 및 모성을 보호하고, 농업인의 사고발생시 영농대행을 통해 지속 영농 및 안정적인 농어가소득 제고를 위하여 현재 지자체단위로 지원하고 있는 출산농어가 도우미 지원을 확충하도록 유도할 것이며, 69세이하·농지소유 5ha미만의 사고·질병농가에 대한 영농인력을 지원하고 65세이상 농촌 고령 및 취약농가에 대하여 가사도우미를 파견하여 지원함으로써 안정적 농촌생활의 유지를 도모하고 여성농어업인의 육아부담을 덜어 줌으로써 농어가소득 제고에 기여해 나갈 계획이다.

(사) 여성농업인센터 운영 확충 및 내실화 유도

출산농어가도우미 지원사업과 마찬가지로 2005년부터 지방사업으로 이양된 여성농업인센터 운영지원 사업에 대하여도 해당 지역에서 연착륙될 수 자치단체를 유도해 나갈 것이며, 사업내용 측면에서도 지역실정에 맞는 특화사업을 적극 발굴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와 협조하고, 여성농어업인센터 기능개편을 위한 표준지침안을 마련하는 등 여성농어업인센터운영의 내실화를 기하여 나갈 것이다.

(아) 여성농어업인의 육아부담 경감 추진

농업인 영유아 양육비 지원사업은 농촌의 고령화·과소화 추세에 대응하여 농업인의 영유아 보육에 대한 지원을 통해 농가 소득안정에 기여하고 젊은층의 농촌거주 유도 및 농어촌지역사회 활력유지를 위해 2004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해당 농업인의 신청에 의해 자격(조건)확인 후 농업인 계좌에 직접 지급하는 일종의 직불형태의 지원사업이다.

2008년도에는 사업지침을 개정하여 지원대상을 호적상 부모가 없는 조손가정에서 부모중 1인이 없는 조손가정까지 확대하여 지원이 가능하도록 하였으며, 2007년까지 시설미이용 아동에게 별도로 지원되던 ‘여성일손돕기지원사업’이 2008년부터 ‘농어업인 영유아양육비지원사업’으로 통합되어 지방비를 포함하여

총 822억원의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다.

사업지원대상은 농어촌 또는 준농어촌지역에 거주하면서 5ha미만 전업농어업인의 자녀에 대하여 지원하며, 보육시설을 이용하는 아동에 대하여는 아동별로 법정 저소득층에 대한 정부 보육료 지원단가의 70%, 시설을 이용하지 않는 아동에 대하여는 정부 보육료 지원단가의 35%을 연령별로 차등 지원할 계획이다.

그 밖에 농어촌지역 국공립 보육시설 확충 및 시간연장형 보육시설 지정 및 지원확대 등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한 농어촌지역의 보육여건 개선을 위해서도 관계부처와 적극 협의할 계획이다.

(자) 여성농어업인정책 2008년 시행계획 수립

여성농어업인육성법에 근거하여 5년마다 ‘여성농어업인육성 기본계획’을 수립하여야 하며 기본계획에 따라 연도별 시행계획을 수립·시행하고 그 이행상황을 점검하여야 한다. 이에 2006년도에 수립한 ‘제2차 여성농어업인정책 기본계획’을 바탕으로 ‘여성농어업인정책 2008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시행중에 있다.

‘여성농어업인정책 2008년 시행계획’에는 기본계획에 따른 2007년도의 추진계획을 총괄적으로 평가하였고, 2008년 여성농어업인정책의 주요정책과제를 로드맵으로 담아 추진하고 있다. 특히, 2008년 시행계획부터는 정부조직개편에 따른 수산분야의 여성어업인 정책도 포함하여 추진하고 있다.

(차) 정책의 성별영향평가 제도 확산

여성발전기본법에 의거 정책의 수립·시행과정에서 여성의 권익과 사회참여 등에 미칠 영향을 미리 분석·평가하는 정책의 성별영향평가 제도는 2004년 농업인력육성정책, 2005년 농업종합자금지원제도에 대하여 평가를 완료한데 이어 2006년부터는 모든 농림사업을 잠정적인 평가대상사업으로 정하고 주요 관심영역, 정책의 사회적 파급효과 및 재정여건 등을 고려하여 단계적으로 실시할 계획을 세웠다.

2006년은 농업정보서비스 지원사업을 포함한 13개의 사업을 대상으로 평가를 하였고, 2007년에는 농업경영 컨설팅 지원사업을 포함한 5개의 사업을 자체 평가 사업으로 지정하여 평가하였으며, 2008년에는 2007년까지 평가를 완료한 사업과 평가의 실익이 없다고 판단된 사업을 제외하고 대상 후보사업을 선별하여, 담당부서에서 평가추진의 타당성을 검토한 후 자체평가대상을 수산분야의 창업어가후견인제·수산업인턴제의 2개사업으로 결정하여 평가할 계획이다. 성별영향평가제도는 사업의 평가에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를 해당 사업부서에 통보하여 양성평등 관점이 지속적으로 반영되도록 농림사업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각종 농수산업정책 추진시 여성농어업인관련자료 통계를 생산하여 활용할 수 있도록 성인지적 통계생산과 활용을 유도할 것이며, 2008년에는 여성농어업 인정책에 필요한 여성농어업인의 실태에 대한 객관적이고 신뢰할 만한 기초자료를 생산(여성농어업인육성법에 의거 매5년마다 실시)하여, 대·내외 환경변화에 따른 여성농어업인 현황 및 실태를 객관적으로 파악하고 현장감있는 정책을 추진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할 것이다.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사회여성팀 행정사무관 김일상)

바. 농지은행제도

쌀 소비감소, 시장개방 확대 등 여건변화에 따른 농지시장 불안을 사전 대비하고, 효율적인 농지관리를 통한 농업구조개선을 촉진하기 위해 농지은행제도를 도입하였다.

농지은행의 주요기능으로는 농지임대수탁관리, 경영회생지원농지매입사업 등이 있으며, 시장 여건에 따라 단계적으로 시행하고 있다.

① 농지임대수탁사업 : 농지소유자가 자경이 어려워 소유농지를 농지은행에

위탁하는 경우 이를 수탁하여 전업농 등에 임대하여 규모화를 촉진하는 “농지임대수탁사업”은 2005.10.1일부터 시행하고 있다. 동 사업은 정부, 농지소유자, 임차인 모두에게 이득이 되는 1석 3조의 효과가 있다. 정부는 별도 예산 없이 정책을 추진할 수 있고, 농지소유자는 자경하지 않는 농지의 합법적 소유 및 잦은 임차인 물색의 번거로움 해소와 안정적인 임대료 수입 등이 가능하며, 임차인은 안정적 영농과 낮은 임차료로 경영비 절감이 가능하다.

동 사업은 일정규모 이하의 농지나 개발 예정지역안의 농지 등은 수탁대상에서 제외하여 투기목적 농지취득을 차단하고, 임차인의 영농안정을 위해 5년 이상의 수탁기간 설정과 계약 기간 내 해지시 계약 잔여기간 총 임차료의 20% 수준을 위약금으로 징수토록 하고 있다.

2007년도에는 2005~2006년 사업 경험을 토대로 4,000ha의 수탁 실적을 목표로 하면서 임대수탁사업 조기 정착을 위해 적극적인 홍보 등을 실시하여 목표를 초과 달성한 4,274ha를 수탁 계약하였다.

2008년도에는 4,600ha의 수탁 실적을 목표로 하면서 제도 정착 및 활성화를 위해 8년이상 농지은행에 임대위탁한 농지에 대해서는 양도소득세를 감면하는 등 사업 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 ②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 자연 재해 등으로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가의 농지를 농지은행이 매입하여 당해 농업인에게 장기 임대하고, 농업인은 매각대금으로 부채를 상환한 다음 환매권도 보장하고, 경영회생을 유도하는 사업으로 2006년 5월 1일부터 시행하여 파산직전에 있는 농가의 회생을 돕는 데 결정적 기여를 하였다.

2007년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은 보다 많은 농업인이 혜택을 받을 수

있도록 연체 5천만원에서 부채액 5천만원으로 지원기준을 개선하는 등 지원대상을 확대하고, 지원대상자 선정도 농지은행 본부에서 도본부로 이관하여 절차를 간소화하는 등 농업인의 불편을 최소화하였다

아울러, 당초 예산 566억원의 3배 수준인 1,714억원이 신청되는 등 사업 호응도가 높아 보다 많은 경영위기 농가의 회생 지원을 위해 추가로 387억원을 확보하여 444농가에 953억원(629ha)을 지원하였다.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자금 지원으로 경영위기농가들이 부채를 갚도록 하는 것은 물론, 경매시 정상가액의 60-70% 수준 낙찰에 따른 농가자산 감소를 방지하고, 높은 연체이자(16%) 대신 낮은 임차료(1%) 지급으로 농가부담을 감소하게 하여 불가피하게 파산해야했던 농가들이 재기하는 데 결정적 도움을 제공하였다.

2007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 계획 대 실적
(단위 : ha, 백만원)

구 분	2007 계획(A)	2007 실적(B)	집행율 (B/A)
	금 액	금 액	
농지매입사업	56,600	95,300	168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정책국

2008년 경영회생지원 농지매입사업은 당초 1,000억원의 예산을 편성하였으나 지원신청 실적에 따라 추가로 예산을 확보하는 등 경영위기 농가의 경영회생을 적극 지원할 계획이다.

(농림수산식품부 농지과 사무관 이영식)

사. 독립가 등 임업인력 육성시책 추진

독립가·임업후계자·신지식임업인 등에 대한 임업기술·정보의 보급과 교육 및 육성자금 확대지원, 금융 및 세제지원의 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임업기능인 영림단을 확대해 나가면서 기 조성된 임업기능인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으로 숙련된 기능인력을 양성함으로써 안정적인 임업노동력의 확보 대책을 강구해 나가고 있다.

(1) 독립가 등 전문임업인 육성

우리나라 전체산림 6,389천ha 중 69%해당하는 4,403천ha가 사유림으로서 소유 규모가 1인당 2.2ha로서 매우 영세하고, 임업의 장기성, 저수익성 등으로 인하여 산림경영에 대한 투자를 기피하고 있는 실정이므로 사유림 경영을 촉진하기 위해 독립가, 임업후계자를 선발하고 지역사회의 임업을 선도하는 사유림경영의 핵심주체로 육성하고 있다.

독립가, 임업후계자 및 신지식임업인에게 지역사회 임업을 선도하는 산림경영주체로 육성하기 위해 임업경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해 오고 있으며, 주요 지원대상 사업으로는 목재생산을 목적으로 하는 장기수의 조림·풀베기, 비료주기, 어린나무 가꾸기, 천연림보육, 간벌, 병해충방제 등 산림사업비와, 임도시설 등 산림경영기반 시설 사업비, 자연휴양림조성사업비, 장기수의 조림 및 육림을 위한 임야 매입비, 기타 산림경영에 필요한 제반사업에 소요되는 사업비에 대하여 장기·저리로 융자함으로써 경영여건을 개선하고 소득을 창출하는 전문임업인으로 육성하고 있다.

독립가 등 전문임업인 선발은 2006년도에는 본인사망 또는 경영포기 등으로 독립가 7명 및 임업후계자 18명을 취소하고, 독립가 23명 및 임업후계자 259명을 선정(선발)하였으며, 신지식임업인 5명을 추가 선정으로 독립가 387명, 임업후계자 1,805명, 신지식임업인 50명을 합하여 총 2,242명으로 확대(262명)하

였으며, 2007년도에도 지속적으로 선발을 추진하기 위하여 150명 이상 확대하여 2,400명이 넘을 것이다.

또한 독립가, 임업후계자 등이 임업경영 여건 개선에 필요한 사업비를 지원하기 위해 2006도에는 60억원을 연리 1.5%~4%의 저리로 15~35년에 걸쳐 장기로 융자지원 한 바 있으며, 2007년도에는 같은 조건으로 80억원의 예산을 확보하여 지원해 주고 있다.

아울러 이들에 대한 임업경영 능력향상과 의욕고취를 위하여 임업경영에 대한 교육과 선진임업국 해외연수 등을 실시하고 있다.

2007년도에 임업후계자 118명에 대하여 산림인력개발원에 위탁교육을 실시하였으며, 독립가, 임업후계자, 신지식임업인 20명을 선발하여 일본임업에 대한 현장 교육을 실시한바 있다.

(산림청 산림경영지원과 임업사무관 김시준)

(2) 기능인 영림단 육성

우리나라의 산림은 수령 30년 미만의 나무가 전체의 59%를 차지하는 어린 나무 위주의 숲으로서 산림의 경제적·환경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숲 가꾸기에 많은 투자가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산업경제의 발전과 인구의 고령화로 농·산촌 인력이 계속 감소함에 따라 산림사업에 필요한 양질의 노동력을 확보하는 데에도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

따라서 산림사업에 필요한 임업노동력을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기능인 영림단을 조직하고 교육을 통한 기술능력을 배양하여 산림사업을 수행하도록 함으로써 적기에 기술적인 산림사업 실행을 도모하고 있다.

임업노동력 양성을 위해 2007년도에는 98개 영림단(1,085명)을 신설하여 총 757개 영림단(국유림관리소 146개단, 산림조합 376개단, 산림사업법인 235개단)

에 7,286명의 임업인력을 운영하였으며, 2008년에는 신규로 32개단 384명을 조직하여 운영할 계획으로 추진하고 있다. 또한 영림단원들의 기술능력 증진을 위하여 영림단의 구성원 중 60%이상을 산림조합중앙회 소속 3개 임업훈련원에서 훈련을 이수하도록 함으로써 우수한 임업인력으로 육성하고 있다. 2007년도에 979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하였으며, 2008년도에는 1,010명에 대하여 교육을 실시할 계획이다.

(산림청 산림고용팀 녹지사무관 이희경)

아. 어업인력 육성시책 추진

(1) 어업인후계자 육성지원

지난 1981년부터 어촌인구의 감소 및 노령화 추세에 대응하여 어업인 후계자 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07년까지 총 14,848명의 어업인후계자를 선정하여 2,755억원의 사업자금을 지원 하였으며, 2008년에는 350명을 선정하여 1인당 40백만원 범위내에서 총 118억원을 개인별 영어사업계획에 따라 차등 지원하였다.

(2) 전업경영인 육성지원

우리나라 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이끌어 나갈 전문화·규모화·현대화된 가족단위 전업경영인을 확보할 목적으로 1992년부터 전문경영인 육성사업을 지원하고 있다. 2007년까지 2,492명의 전업경영인을 선정하여 1,293억원을 지원하였으며, 2008년에는 69명에 35억원을 지원하여 대외경쟁력을 높일 수 있는 전문 어업경영체로 육성하였다.

(3) 선도경영인 육성 지원

경영규모, 시설장비, 경영능력 등에서 가장 앞서가는 어업경영체를 선정하여 일반어가, 수산계 학생, 어업인후계자에 대한 현장교육의 장으로 활용할 계획으로 2007년까지 총 62개소를 선정하여 52억원을 지원하였으며, 2008에도 5명에 5억원을 지원하여 어업인들의 리더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어업인후계자 지원실적 및 계획

(단위 : 명, 백만원)

구 분	합 계		1981~2007		2008	
	인 원	금 액	인 원	금 액	인 원	금 액
합 계	17,826	425,800	17,402	410,100	424	15,700
일반후계자	15,198	287,284	14,848	275,534	350	11,750
전업경영인	2,561	132,781	2,492	129,331	69	3,450
선도경영인	67	5,735	62	5,235	5	500

(4) 영어조합법인 경영체의 육성지원

수산업법 및 동법 시행령 개정을 통하여 1996년말 도입된 영어조합법인의 경우 2007년말 현재 1,411개의 법인이 설립되었으며, 현재 증가 추세에 있는바, 법인의 건전한 육성을 위해 정부보조를 받을 수 있는 법인의 자격요건을 설정하고 매년 정기적인 경영실태조사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향후 영어조합법인 활성화를 위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농림수산식품부 어선인력과 지도관 민병주)

2. 생산기반 정비 및 농어업의 기계화·현대화

가. 농업생산기반 확충

(1)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과거에 경지정리를 하였으나 필지규모가 작거나 용·배수로, 농로 등 기반시설이 미흡한 지역 151천ha를 대상으로 대구획경지정리사업을 추진하여 2007년까지 104천ha에 대해 대구획경지정리를 시행하였고, 2008년에는 국고 799억원과 지방비 196억원 등 총 995억원의 재원을 지원하여 2007년 가을에 착수한 4,4천ha를 영농기 이전 완료하고 새로이 3.8천ha를 착수하였다. 앞으로도 대형농기계를 이용한 영농으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한 대구획경지정리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연차별 대구획 경지정리사업 추진계획

(단위 : 천ha)

구 분	목 표	2007까지	2008계획	2009이후
사 업 량	151	104.4	4	43

주 : 봄마무리 기준. 목표면적 조정(2008.2) : 164천ha → 151천ha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림수산식품부 시설안전과 시설사무관 박재수)

(2) 밭기반정비사업

밭작물 상습가뭄지역을 해소하고 기계화영농기반을 구축하며, 밭작물의 생산성 향상과 품질개선으로 농가소득을 증대하기 위하여 전체 밭면적 712천ha 중 채소류 주산단지 및 집단화된 밭 110천ha(15.4%)를 1단계 정비목표(총목표 180천ha)로 용수개발, 농로정비 등 밭기반정비사업을 1994년부터 추진중에 있다.

1994~2007년까지 17,997억원(국고 14,194억원, 지방비 3,803억원)을 투입하여

77.4천ha를 정비하였으며, 이는 전체 밭면적 712천ha의 10.9%, 1단계 목표면적의 70.4%수준이다. 2008년에는 1,016억원(국고 816억원, 지방비 200억원)을 투자하여 4.0천ha를 정비하였다.

밭기반정비사업 추진실적 및 계획

(단위 : 천ha, 억원)

구 분	목 표	2007까지	2008계획	2009이후
사 업 량	110	77.4	4.0	28.6
사 업 비	25,794	17,997	1,016	6,781

자료 : 농림수산물부 농촌정책국

(농림수산물부 시설안전과 기술서기관 전경구)

(3)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경지정리 지구내 주요농로와 농산물의 생산지, 가공, 유통시설간 미포장 농로 35천km를 대상으로 기계화경작로확포장사업을 추진하여 2007년까지 18.8천km를 확장 또는 포장을 하였고, 2008년에는 국비 1055억원, 지방비 264억원 등 총 1,319억원의 재원을 지원하여 비포장 농로 1.3천km를 정비하였으며, 농업경쟁력 향상에 기여할 수 있도록 연차적으로 예산을 지원하여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다양한 농기계 보급으로 영농작업의 기계화율이 높아지고 있고 농산물의 품질 제고를 위한 운반·포장 등의 기법이 발달하고 있으나, 영농작업의 근간인 경작도로가 포장이 되지 않아 불편함에 따라 1995년부터 사업을 시행한 결과 영농시간 단축, 농산물 운반용이, 농촌 생활환경개선, 영농작업 기계화 촉진 등 사업효과가 높아 농업인들이 선호하는 사업중 하나로 평가받고 있다.

기계화경작로 확·포장사업 추진계획

(단위 : 천km, 억원)

구 분	총 계 획	2007까지	2008계획	2009이후
사 업 량	35	18.8	1.3	14.9
사 업 비	37,071	19,337	1,319	16,415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정책국

(농림수산식품부 시설안전과 시설사무관 박재수)

(4) 수리시설 개보수

한국농촌공사가 관리하고 있는 13,056개소의 수리시설 중 30년 이상된 시설이 6,968개소로 53%에 달하고 특히, 농업용 저수지의 경우 3,319개소 중 86%인 2,861개소가 30년 이상 경과되는 등 노후 정도가 심각한 수준이다. 용·배수로의 경우도 간지선 47천km중 53%인 22천km가 흠수로로 되어 있어 누수손실이 많고 유지관리가 어려워 시설의 현대화 등 개보수가 시급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노후·파손으로 기능이 저하되고 재해에 취약한 저수지, 양·배수장, 취입보 및 용수로 등 8,769지구를 대상으로 연차적으로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2007년까지 수리시설 개보수사업은 한국농촌공사 관리 수리시설 5,728지구에 총 40,478억원을 투자하였으며, 2008년에는 수리시설 80지구에 대한 개보수를 완료할 계획이다.

수리시설 개보수사업 추진계획

(단위 : 개소, 억원)

구 분	개보수 대상		2007까지		2008계획		2009이후	
	대 상	%	까지	%	계획	%	이후	%
○ 사 업 량	8,769	100	5,728	65.3	80	0.9	2,961	33.8
○ 사 업 비	110,518	100	40,478	36.6	3,800	3.4	66,240	60.0

(농림수산식품부 시설안전과 시설사무관 김동권)

(5) 배수개선 사업 등 기타 기반정비사업

배수개선사업은 농경지 침수방지로 안정영농을 도모하고, 농지이용률을 높이는 한편, 영농기계화를 촉진하여 노동력 절감, 단위 생산량 증가로 인한 소득 증대 등에서 효과가 크다. 앞으로 상습침수 농경지 188천ha에 대한 방재시설을 완비할 계획이며, 2008년에는 국고 2,085억원을 지원하여 119지구(31천ha)에 대한 배수개선을 추진하였고 이중 18지구(3.1천ha)를 준공할 계획이다.

농업용수관리자동화사업은 농경지의 용수공급 및 배수를 위하여 유지관리인 또는 수로감시원이 직접 현장에 가서 수리시설물을 조작하던 것을 용수절약, 유지관리비 절감, 재해 등에 신속히 대처하는 등 효율적인 물관리를 위하여 중앙관리소에서 광대한 지역에 산재된 다수의 수리시설물상태 및 용수수급상황 등을 실시간 측정·감시·분석할 수 있도록 시설자동화 및 원격조정장치 등을 설치하는 사업으로 2001년부터 신규로 사업을 추진하게 되었으며, 2008년에는 국고 66억원을 투입하여 9개소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여 1지구를 완료하였다.

방조제 개보수사업은 국가관리방조제 206개소, 지방관리방조제 3,284개소 등 전국 3,490개소의 방조제·배수갑문 등 시설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그동안 꾸준한 투자로 많은 노후시설을 개량하여 재해에 대비하고 있으나 오래된 시설은 외측보호 사석의 유실, 배수갑문 콘크리트 구체 및 철재 문짝의 부식 등이 심각한 상황이었다. 이에 해일 발생시 시설붕괴 및 해수유입에 의한 농작물의 염해피해 등 재해예방을 위한 개보수 사업의 확대 지원이 시급한 실정이었으며 2008년에 979억원을 투입하여 153개소를 시행, 그중 67개소의 방조제에 대한 개보수를 완료하였다.

(농림수산식품부 시설안전과 시설사무관 김동권, 기술서기관 전경구)

(6) 농촌용수 개발

농촌용수 개발사업은 모든 농사에 기본이 되는 물을 확보·공급하는 사업으로 저수지, 양수장, 용수로 등 수리시설을 설치하여 영농에 필요한 농촌용수를 원활하게 공급하는 것이다.

2007년까지 총논면적 1,070천ha중 848천ha가 수리시설의 혜택을 받는 수리답으로 조성되었으나, 수리답이라도 웬만한 가뭄(10년빈도)에 견딜 수 있는 논면적은 487ha(총논면적대비 45.5%)에 불과한 실정이다. 2013년까지 전체논 목표면적 1,100천ha중 900천ha 82%를 수리답으로 조성하고자 추진중이다.

2007년에는 농촌용수개발사업 6.6천ha를 준공하였으며, 2008년에는 4.2천ha를 준공하여 용수부족지역 영농급수에 기여할 계획이다. 앞으로 신규착수를 억제하고 시행중 지구의 조기마무리 위주로 집중 투자하는 등 농촌용수 개발사업의 투자규모는 점진적으로 축소해 나갈 계획이다.

농촌용수개발사업 추진계획

총논면적	개발대상면적	2006까지	2007실적	2008계획	2009이후
1,070천ha	1,100	859	6.6	4.2	230.2

자료 : 2008농업생산기반정비사업통계연보, 농림수산식품부

(농림수산식품부 용수자원과 기술서기관 이성홍)

(7) 새만금지구 등 대단위 농업종합개발사업 추진

대단위 농업종합개발사업은 하천 등 대규모 수계를 중심으로 한 대단위 권역에 대하여 농촌용수 공급, 경지정리, 배수개선, 간척농지조성 등 생산기반을 종합적으로 정비함으로써 규모화·집단화된 우량농지를 창출함과 아울러, 육상

운송거리 단축에 의한 교통환경개선·종합관광권 형성 등 지역경제기반 확충에도 기여하는 사업이다. 현재 시행중인 지구는 새만금을 비롯한 7개지구, 122천ha로 2007년까지 69%(40,232억원)의 투자율을 보이고 있다. 2008년에는 3,361억원(국고 1,100억원, 농지관리기금 2,261억원)을 투자하여 투자율을 75%로 제고할 계획이다.

대단위 농업종합개발사업 추진계획

지 구 별	개발면적 (ha)	총사업비 (억원)	연도별 사업비			사업기간
			2007년까지	2008년계획	2009년이후	
계(7지구)	121,560	58,490	40,232	3,361	14,897	
금 강 (Ⅱ)	43,000	7,277	4,779	470	2,028	1989~2010
미 호 천 (Ⅱ)	4,430	2,975	2,490	130	355	1989~2010
홍 보	8,100	4,136	3,035	230	871	1991~2010
영산강 (Ⅲ-1)	13,160	4,706	3,540	191	975	1995~2010
영산강 (Ⅲ-2)	7,840	3,794	2,072	270	1,452	1997~2010
영 산 강 (Ⅳ)	16,730	7,520	1,030	270	6,220	2001~2010
새만금(방조제)	28,300	28,082	23,286	1,800	2,996	1991~2009

(농림수산식품부 용수자원과 서기관 김길영)

나. 농업의 기계화

(1) 농업기계화 정책개선

(가) 추진배경

농업기계화는 1970년대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한 농업기계화 촉진시책에 따라 부족한 농업노동력 문제해소, 영농규모 확대를 통한 농업생산성의 증대 및

농가소득증대 등 농업구조개선 촉진과 농업경쟁력 강화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하였다.

그러나, 이와 같은 성과에도 불구하고 농기계 가격·유통 등 공급문제, 농기계산업구조의 경쟁력 약화, 농기계 사후관리 체계의 구조적인 취약성 등 기계화사업 추진과정에서 여러 가지 개선해야 할 점이 많이 나타남에 따라 농정여건에 걸맞게 농업기계화정책의 중장기계획의 기본 틀을 새로이 하고 시장 지향적으로 개편해야 한다는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2007년부터 향후 5년간 추진할 농업기계화기본계획을 수립하고, 농업여건 변화에 대응하는 한편 농업경쟁력을 높이는데 주력하기로 했다.

그동안의 농업기계화사업은 벼농사 일관 기계화, 구입자금 지원제도 개선 및 사후관리 강화 분야에서는 어느 정도 진전을 이루었으나, 농기계 이용비용 절감, 밭작물용 농기계 개발보급 촉진 및 안전관리 분야는 미흡하다는 평가에 따라 향후 추진할 기본계획의 주요목표를 효율적인 농기계 이용·관리로 비용절감, 농업인의 편의성 및 안전성 향상 및 인프라 구축, 지자체 기계화사업 지원으로 정하고 농기계 임대사업 활성화, 현장맞춤형 농기계 개발보급 촉진, 농기계 시험평가 제도 개선, 공급제도 개선 및 생산자금 확대 등을 적극 추진키로 하였다.

(나) 농업기계화정책 제도개선

정책자금의 효율성제고와 농업인의 적정한 농기계구입을 유도하기 위하여, 2005년부터 1,000만원이상의 농기계는 농업종합자금에서 지원하고 1,000만원미만의 농기계는 2006년부터 정책자금 이차보전자금으로 지원토록 하였으며, 행정구역 중심의 5단계로 되어 있는 농기계 사후봉사사업소를 A/S능력 중심의 대·중·소형 3등급으로 조정하여 A/S능력 향상을 유도하였다.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비 부담경감을 위하여, 2003년부터 농기계 구입이 어려운 농업인 중심으로 농기계임대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량을 2007년에는

20개소였으나 2008년도에는 40개소로 확대하고, 사업단가도 2007년도 5억 원에서 2008년에는 8억 원으로 인상하여 임대사업이 보다 활성화되도록 하였다.

(농림수산식품부 농생명산업팀 기술서기관 박상민)

(2) 농기계 구입자금지원

벼 농사의 규모화와 고품질 쌀의 생산을 촉진하고, 기계화가 미흡한 밭작물 분야의 기계화를 촉진하기 위해 쌀전업농과 고품질벼 생산농가가 구입하는 농기계뿐 아니라 밭작물용 및 축산용 농기계에 대하여는 기준금액의 90%까지 우대 지원하고 있다.

농업인에 대한 농기계 구입자금 융자지원은 2007년도에는 38.2천대를 대상으로 5,139억 원이었으나 2008년도에는 40.3천대를 대상으로 5,430억 원으로 확대하여 농업인의 농기계 구입부담을 줄이도록 하였다.

(농림수산식품부 농생명산업팀 기술서기관 박상민)

(3) 농기계 사후관리 강화

2008년에는 2007년도와 같이 농기계대리점등을 대상으로 168억 원의 수리용 부품 확보 자금을 지원하여 고장난 농기계를 신속히 수리하도록 하여 영농에 차질이 없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농기계 사용시 발생하는 고장으로 인한 불편을 덜어주기 위하여 B/S(사전서비스)실시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으며, 한국농기계공업협동조합 주관으로 연 2회(3~4월, 8~9월) 전국농기계순회수리봉사를 실시하고 시장·군수 주관하에 지역순회수리봉사반을 편성, 오지마을 등을 중심으로 순회하면서 수리봉사도 실시토록 하고 있다.

아울러, 2008년에는 농업인의 농기계 수리능력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620명의 기계화영농사를 양성할 계획이다.

(농림수산식품부 농생명산업팀 기술서기관 박상민)

(4) 농기계 생산지원

농기계 가격안정을 도모하고, 농업시설 기자재의 자동화, 첨단화를 유도하기 위하여 농기계 생산에 필요한 원자재구입 비축과 시설기자재의 자동화 및 첨단화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지원 규모는 2007년에 400억원 이었으며, 2008년에도 40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농기계 원자재구입 비축 자금은 연리 3%, 융자일로 부터 1년 이내에 상환토록하고, 시설기자재 생산지원은 연리 3%, 3년거치 10년 동안 균분상환 토록 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 농생명산업팀 기술서기관 박상민)

(5) 농업용 면세유 공급

2007년에는 기획재정부로부터 농업기계용 면세석유류를 총 2,480천kl 배정받아 지역조합별로 배정·한도 범위 내에서 농업인에게 공급하였고, 2008년에는 2,632천kl의 면세석유류를 공급할 계획이다. 2007년 면세액은 1조 4,180억원이며, 2008년 면세 추정액은 1조 6,000억원에 이른다. 세부적인 면세내역은 교통세는 리터당 휘발유 462원, 경유 328원, 개별소비세가 등유 90원, 중유 17원, 특별소비세가 LPG 20원이고, 교육세는 휘발유 및 경유의 경우 교통세의 15%이며, 등유는 특별소비세의 15%이다. 주행세는 휘발유 및 경유의 경우 교통세의 30%이며, 부가가치세는 유종에 관계없이 판매대금의 10%를 적용한다.

또한, 면세유류 공급기한이 2012년 12월 31일까지 5년간 연장되어 농업인이 안정적으로 영농활동을 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농림수산식품부 농생명산업팀 농업사무관 백영현)

다. 농업시설의 현대화

(1) 미곡종합처리장의 건조·저장시설 설치 확대

정부는 1991년부터 쌀 주산지에서 벼를 일관처리(수집·건조·저장·가공·판매 과정)함으로써 수확후 관리비용을 절감하고 쌀 품위향상 및 산지 유통기반 구축을 통해 쌀 산업의 경쟁력을 제고하기 위해 미곡종합처리장(RICE : Rice Processing Complex)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991년 2개소 설치를 시작으로 추진된 RPC사업은 꾸준히 확대되어 2001년까지 328개소(농협200, 민간128)가 설치한후 2002년부터 쌀 가공시설 과잉문제가 대두되어 신규설치 지원은 중단되었다.

한편, RPC의 수확기 농가벼 산물처리능력이 큰 폭으로 증가되어 건조·저장시설 부족 문제가 대두되면서 1995년부터는 건조·저장시설(DSC : Drying Storage Center)을 설치 지원하기 시작하여 2007년까지 전국에 909개소를 지원하였다.

2008년에도 건조·저장시설 110개소를 설치·지원할 계획이며, 국고 253억을 투자할 계획이다. 특히, 규모화된 통합 RPC 시설지원(13개소, 60억원) 및 부족한 건조저장시설 확충을 위해 위성·증설시설(67개소, 147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2008년도에는 고품질쌀 생산기반 확충을 위해 저온저장시설을 2007년 10개소에서 2008년 30개소(45억원)로 대폭 확대하였다.

연도별 건조·저장시설 지원현황

(단위 : 개소, 억원)

구 분	1995	1996	1997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계
- 사업량	22	25	64	81	90	85	76	81	44	71	50	110	110	909
- 국고보조	38	36	87	118	164	190	145	157	79	126	93	249	253	1,735

(농림수산식품부 농산경영팀 농업사무관 장대수)

(2) 원예·특용작물 시설현대화

채소·과수·화훼 등 원예·특용작물은 기상여건 등의 영향에 따라 풍·흉작의 차이가 심하게 나타나는 등 수급불안 요인이 상존하고 있어 안정생산을 위한 받기반 정비, 관수시설의 확보, 비가림 시설, 공동육묘장 설치 등 생산기반 조성사업에 역점을 두고 있다.

산업구조의 변화와 도시화에 따른 농촌인구의 감소로 노동력 부족 현상이 심화되고 있어 농작업의 생력화와 생산비 절감과 시설의 현대화를 통한 기계화·자동화 등을 통한 경쟁력 제고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고품질의 안전농산물 생산 및 선진농업 기반을 조기에 구축하기 위하여 기존시설의 개보수를 확대하고 있다.

2007년에는 원예특작시설 내재해시설 기준제도를 도입하여 지역별 내재해설계기준 지정과 함께 KS D 3760 비닐하우스 구조용 강관 규격지정, 강도 강화, 허용오차 축소 등을 통한 자재 규격을 개정하였으며, 2008년까지는 내재해형 시설규격 도면 45종을 개발 보급을 통한 재해경감기반 구축을 위한 기초를 마련하였고, 동절기 수급안정사업 추진을 통해 기존 비닐하우스의 구조를 보강 사업을 추진하였다.

첨단 재배기술 개발·보급을 통한 시설원예의 생산성 향상을 기하기 위하여 양액재배, 자동화기술 등을 농림기술개발과제로 선정하고 생력화 기술을 개발하여 파종·수확 등 전작업 기계화를 추진하고 있으며, 인삼계열화 사업 등을 통해 산업의 활성화 기반 구축과 함께 인삼을 수출전략품목으로 육성하여 농가소득을 증대를 도모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 채소특작팀 사무관 박봉수)

(3) 축산시설 현대화

노동력 절감 및 생산성 향상을 위해 축산농가에게 시설 및 자동화기계 등의 설치자금을 지원하여 자동화·현대화된 사육기반을 구축하였으며, 사료공급기

반 확대를 위해 전업농가·영농조합법인 등 생산자단체에 섬유질 및 자가배합 사료 제조시설을 지원하고 있다.

2000년부터는 축산부문에 “농업경영종합자금제도”를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하고 있으며, 시설자동화 자금과 병행하여 운영자금도 지원함으로써 축산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해 나가고 있다.

아울러, 생산·도축·가공·판매기능을 종합적으로 수행할 수 있는 축산물종합처리장(Livestock Processing Center, LPC)을 1994~2001년까지 전국에 총 7개소를 건설·운영하였다. 이를 통해 도축장에서 지육으로 유통되는 낙후된 유통체계를 냉장육·부분육·브랜드육 유통체계로 전환되었고, 유통단계 축소를 통한 비용절감이 실현되었다. 또한, HACCP 제도 운용으로 도축장 등 축산물 생산시설의 위생수준이 크게 향상되어 국내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인식이 제고되었다.

※ LPC 건설비 : 총 156,550백만원(용자 89,612, 자부담 등 66,938)

※ 축산물 생산시설(도축장·축산물가공업체 등) 시설자금 예산 :

(2006) 24,450백만원 → (2007) 18,450 → (2008) 31,041

(농림수산식품부 축산물위생팀 수의사무관 김대균)

라. 수산업 생산기반 정비

(1) 어업생산기반시설 확충

어업생산기반 시설사업은 전국 연안 자연부락 단위인 어촌에 산재되어 있는 항포구에 선착장, 방파제, 물양장 등을 시설하여 어촌 지역의 교통, 상권, 물류, 관광 등의 종합적인 기능 활성화와 어업인들의 가장 큰 재산인 어선을 태풍 등 자연재해로부터 피해를 방지하는 중요한 시설사업이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전국을 232개 권역으로 설정한 후 낙후된 어촌지역의 생산기반시설 확충 등을 통하여 어업의 생산성 향상과 더불어 잘사는 어촌을 건설하고자 1994년부터 2008년까지 6,009억원을 투자,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어촌종합개발사업으로 지원하는 주요사업에 선착장·물량장 등 어선계류시설과 공동작업장, 간이위판장 등 소득기반시설을 포함하고 있으며, 2007년까지 전국 176개 어촌종합개발사업 권역내에 5,621억원을 지원하였고 2008년에는 20개 권역내에 388억원을 투입·사업추진 중에 있다.

향후 2009년부터 잔여 2단계 72개 권역을 지속적으로 지원하여 낙후어촌의 정주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도시민의 어촌정주지원방안도 함께 계획을 수립해 나갈 방침이다.

어촌종합개발사업 지원실적 및 계획

(단위 : 개소, 백만원)

사 업 별			2006까지	2007	2008	2009 이후
어촌종합 개발사업	사업량	완 료	152	-	8	72
		계 속	-	24	12	-
	사 업 비		526,531	35,531	38,789	278,680

(농림수산식품부 어항과 사무관 전성래)

3. 농림수산 관련 산업의 육성

가. 농산물 가공 및 식품산업의 육성

최근 식품소비구조는 다양화·고급화되고 있고, 여성의 고학력화와 사회생활 참여도의 확대 및 핵가족화 심화 등으로 편의성을 갖춘 가공식품에 대한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건강식품의 소비가 증가하고 외식산업이 급속히 발전하는 추세에 있다.

식품산업은 농어업 후방 관련 산업으로서 농수산물 수요를 증대시키고 농수산물의 가공 및 외식을 통해 부가가치를 창출함으로써 농어가소득 증대를 도모하는 한편, 농수산물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에 중요한 기능을 한다. 이에 새 정부에서는 농업과 수산업의 전략적 합병 및 식품산업육성을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를 출범시켰다.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기존의 산지가공산업과 전통식품에 대한 농산물가공산업육성법을 대체하고 농어업과 식품산업의 연계 발전을 도모하고자 식품산업 육성 근거법인 식품산업진흥법을 제정·공포(2007.12.27)하고 이 법의 시행(2008.6.28)에 발맞춰 식품산업발전 종합대책을 발표(2008.11.13)하였다

녹색성장을 견인하는 세계 일류의 식품산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2006년 기준 100조원인 식품산업시장을 150조원으로 확대, 38억불 수준인 농수산식품 수출을 100억불로 증가, 우리 한식의 세계 5대 음식화하는 것을 성과지표로 삼고 있다.

이러한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추진하는 전략으로는 첫째 국내·외 소비자가 모두 신뢰할 수 있도록 안전한 농수산식품을 공급하고, 둘째 세계화되고 있는 식품시장에 대응할 수 있도록 식품산업을 수출산업으로 강화하며, 셋째 농어업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도록 식재료 산업 등 푸드시스템 전반에 대한 경쟁력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한 전략으로 ① 안전한 농수산식품 생산·공급 강화 ② 식품 R&D 투자 확대 ③ 전통·발효식품의 과학화·세계화 ④ 농수산식품 수출 확대지원 ⑤ 규제혁신·인센티브 제공 ⑥ 식재료 산업 활성화 ⑦ 농어업·식품산업 연계 등 7가지 핵심과제를 두고 있다

앞으로 농림수산식품부에서는 동 대책을 토대로 분야별 추진과제에 대한 세부추진 계획을 연말까지 수립하고 체계적으로 식품산업을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정책팀 사무관 전한영)

나. 종자산업의 육성

1997년 이후 다국적기업의 국내 진출과 21세기 주요산업으로 생물산업의 부상 등 종자산업의 대내외적 변화에 대응하여 종자수급의 안정도모와 신품종육성 등의 경쟁력 강화를 골자로 하는 종자산업육성대책을 수립(2006. 9)하여 추진하고 있다.

채소부문의 종자업체는 2008년말 현재 150여 업체이며, 일부 업체를 제외하고는 품종육종기술 수준이 낮고 경영규모 등이 영세한 편이므로 이들 종자업체의 경쟁력 향상을 위하여 업체별로 품종육성자금을 지원하는 고품질 우량종자개발사업을 중점 추진하였고, 2007년부터 보다 유리한 지원조건(금리 4% → 3%)인 ‘종자산업육성지원사업’으로 전환하여 민간기업의 규모화와 시설현대화 등으로 지원범위를 확대하여 지원하고 있다.

우량종자개발 자금지원 실적 및 계획

(단위 : 백만원)

	1995~2001년	2002년	2003년	2004년	2005년	2006년	2007년 이후
지원금액	20,402	2,280	1,935	1,983	870	400	6,000 (종자산업육성지원)

무, 배추, 고추 등의 세계적인 품종육종 기술을 활용하고 협소한 국내 종자시장에서의 과다 경쟁을 피하기 위해 종자 수출확대를 적극 추진하여 2007년 수출실적은 22,400천불로 1997년 대비 87.9%증가하였다.

새로 개발된 품종에 대한 지적재산권 보호를 통하여 품종육성자의 신품종육성의욕을 고취하고자 품종보호제도를 1998년부터 시행중이며, 품종보호제도 시행 당시 27개 품종보호대상작물을 2008년 현재 223개 작물로 확대 지정하였으며 2009년까지 모든 작물로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우리나라는 국제식물신품종보호연맹(UPOV) 회원국으로 가입(2002.1)하였으며, 앞으로 국내 신품종의 국외 보호와 품종육성자에게 외국의 품종 육성관련 정보제공 등을 강화할 계획이다.

생명공학의 발달과 지적재산권 보호강화 추세에 따라 세계 각국은 신품종육성의 소재가 되는 유전자원 확보·활용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 농촌진흥청을 중심으로 국내외 유전자원에 대한 수집·보존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국내 농업유전자원에 대한 체계적 관리와 효율적 활용을 위하여 농업유전자원의 보존,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을 제정(2007.8)하였으며, 보존유전자원에 대한 정보화를 위해 농업유전자원 종합정보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 농생명산업팀 농업사무관 송지숙)

다. 종축산업의 육성

가축개량은 유전적으로 우수한 개체를 찾고 그 개체의 능력을 널리 활용하여 가축의 생산성 향상을 통해 축산업의 경쟁력을 높이는 데 있다. 이러한 가축개량의 방법은 능력검정, 유전평가, 종축선발 및 계획교배의 연쇄적 반복과정을 거쳐 이루어진다.

중장기(5년, 10년) 가축개량 목표를 설정하여 체계적으로 개량시책을 추진해 온 결과, 지난 10년간 가축개량 추세를 살펴보면 가축의 생산성 및 품질 향상에 기여해 온 것을 알 수 있다.

2007년에 주요 가축 중심으로 추진한 가축개량 시책을 살펴보면, 한우개량 시책은 첫째, 한우개량의 핵심 역할을 담당하는 육종농가 제도의 도입이다. 한우 육종농가는 일정수준 이상 혈통등록(혈통·고등등록우)된 암소 50두 내외(목표 100두 이상)를 사육하는 번식농가 중에서 2005년부터 2008년까지 매년 10호씩 총 40호를 선발하고, 이들 농가에서 발육성적과 육질 등 유전 능력이 뛰어난 암소 4,000두를 선정, 보증씨수소와 교배시켜 우량 씨수송아지를 생산하여 검정한다. 이 검정 성적을 바탕으로 유전능력을 평가하여 가장 우수한 한우 보증씨수소를 연간 20두씩 선발하여 인공수정용 한우 정액을 생산하여 한우 농가에 공급할 목적으로 추진하는 핵심 사업이다. 육종농가는 2005년 12개

소(농가 10, 도센터 2), 2006년 12개소(농가11, 도센터 1), 2007년 10개소(농가 10)로 총 34개 육종농가를 선정 추진하였다.

주요 가축개량 추세

구 분	1998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 한 우											
-18개월체중(kg, ↑)	505.0	507.3	509.6	512.0	522.1	532.2	542.2	564.5	571	567	
-1등급출현율(%)	15.3	18.8	24.8	29.8	35.2	33.3	35.9	47.9	44.5	50.3	
○ 젖 소											
산유량 (kg/ 305일)	일반농가	5,972	6,135	6,539	6,749	7,017	7,117	7,286	7,417	7,584	7,711
	검정농가 (초산우)	7,252 (6,694)	7,629 (7,032)	8,086 (7,445)	8,364 (7,688)	8,761 (7,962)	8,899 (8,032)	8,935 (8,019)	9,014 (8,142)	9,271 (8,362)	9,556 (8,554)
○ 돼 지(요크셔, ↑)											
-일당증체량(g)	608	649	664	647	654	648	642	637	645	649	
○ 닭											
-산란계 산란지수 (개/년)	281	299	279	285	297	307	320	320	312	318	
-육용계 체중 (6주,g)	1,948	2,195	2,300	2,127	2,285	2,431	2,544	2,650	2,530	2,644	

둘째, 현재 한우 개량농가가 관리하고 있는 혈통등록우는 우량 송아지 생산을 위한 번식기반으로 활용한다. 2007년도 한우개량농가육성사업에 실제 참여한 농가수는 전년보다 줄어든 13,139호이며, 이들 농가들이 사육하는 관리대상 등록우 중 기록관리가 되는 74,845두와 이 등록우에 생산된 송아지 69,669두에 대하여 4,736백만원을 지원하였다.

그밖에 2007년에는 가축인공수정용 정액 생산·공급을 위하여 한우 당대 및 후대 검정을 통해 유전능력 평가를 거쳐 한우 후보씨수소 44두와 보증씨수소

20두를 새로이 선발하였으며, 이렇게 선발을 통해 확보된 보증씨수소 총 55두에서 생산한 우량 한우 정액 1,990천두분을 번식농가에 공급함으로써 한우능력향상에 기여하였다.

젓소개량은 검정을 받는 낙농가 3,811호에서 사육하는 암소 200,264두를 대상으로 유우군능력검정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이들중 검정성적이 정상적으로 관리되는 200,264두에 대한 검정비 총 2,123백만원을 검정농가에 지원하였다. 가축인공수정용 정액 생산에 필요한 젓소 보증씨수소는 2두 선발한 것을 포함하여 보증씨수소 총 19두를 확보하여 국내산 젓소 정액 369천두분을 생산하여 낙농가에 공급하였다. 젓소개량은 검정농가의 경우 검정 참여기간이 길수록, 검정 참여율이 높을수록 평균 산유량이 높다. 2007년도에 유우군 검정농가의 두당 평균 산유량이 일반 낙농가 보다 1,845kg 증가하여 두당 23.9%나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돼지개량의 성과를 보면 요크셔 수퇘지의 경우 검정소 검정에 의한 일당증체량은 1998년 929g에서 2007년 960g으로 3.3%나 증가하였다. 돼지의 사료요구율은 1998년 2.34에서 2006년 2.33로 0.4% 개선된 것으로 나타났다.

닭 개량은 산란계의 경우 산란지수가 2007년 318로 11.9% 향상되었으며, 육용계의 경우 평균체중(6주 기준)이 1997년 2,416g 대비 2007년 2,643g 으로 9.3% 늘어났다.

돼지와 닭 개량은 민간업체에서 자율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아직도 돼지와 닭 개량은 민간업체에서 종축을 수입하여 확대 생산하여 실수요자에게 공급하는 체계를 벗어나지 못하고 있다. 종돈의 능력검정을 위해 종돈검정소 검정과 농장검정을 병행하여 추진한 결과, 종돈 40천두에 대한 능력검정사업을 하여 돼지개량을 촉진하였다.

닭 개량을 위해 종계 40천수에 대한 능력검정을 실시하고 소요 검정비를 축

산발전기금에서 지원하였다. 또한 검정성적은 양계농가들에게 제공하여 양계농가들이 유전능력이 우수한 계종을 선택하여 구입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07년부터는 저비용·고효율의 가축개량을 지향하기 위해 중장기 가축개량 목표를 보완하고 혈통등록과 능력검정을 점차 확대하는 한편, 이를 토대로 가축의 유전 평가 신뢰도를 높여 능력이 우수한 개체를 선발, 계획 교배를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갈 것이며, 축종별 가축개량 시책을 다음과 같이 추진할 계획이다.

한우개량은 고급육을 선호하는 추세에 맞추어 육질 중심의 개량체계로 보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지금까지 인공수정용 보증씨수소 선발과정에서 수소 위주로만 유전능력을 평가하고 암소 유전능력은 제대로 반영하지 못해 왔으나 앞으로는 암소의 유전능력에 대한 평가 결과를 적극 반영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2단계 브랜드 발전대책으로 브랜드경영체 중심의 고능력 암소 보급 및 확보와 브랜드경영체에 맞는 보증종모우 공급체계가 구축될 수 있도록 한우개량 사업을 보완할 계획이다.

젓소개량은 산유능력 향상에 중점을 두고 있으나 유우균 능력검정 참여율을 2010년까지 연차별 계획하에 60%로 높여 나가되, 검정비용의 보조율은 종전과 같은 수준으로 유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2007년 1월 종축산업발전대책을 마련하여 장기적으로 규모화된 우수 검정농가를 육종농가로 선정하여 암소와 수소의 동시 검정을 통해 유전형질이 우수한 보증씨수소를 선발 보급할 계획을 마련하였다.

돼지개량의 경우 현재 종돈검정소(경기 이천)의 검정시설이 재래식이고 노후화되어 효율적인 검정 및 가축방역을 위해 현대화시설로 검정소를 신축(지원액 13억원, 완공일 2007년 6월) 하였다. 또한 우량 종돈을 선발·이용하기 위해 2008년부터 돼지개량 Network 구축사업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종돈 수출을 위해 국제 박람회 참가, 현지 세미나 개최 및 바이어 초청을 통해 해외 시장을 본격적으로 개척한 결과 태국으로 79두의 종돈을 수출(2008.8)하였다.

닭 개량은 종계 대부분을 외국의 대규모 종계회사로부터 수입하여 생산하는 실정으로 국산 종계 개발과 능력검정에 대한 투자가 매우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국가 차원에서 우선적으로 닭의 경제능력검정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양계농가에 우량 종계를 선택할 수 있도록 해 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종축시설 개선을 통한 가축폐사 감소와 생산성 향상을 위해 2008년부터 종축시설 현대화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며, 이 사업은 종돈·종계·종오리업 농가를 대상으로 지원된다.

(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팀 농업사무관 서재호)

라. 사료산업의 육성

(1) 2007년도 실적

(가) 사료 수급

2007년 가축용 사료의 총 수급량은 22,797천톤으로 전년(21,271천톤)보다 7.2%가 증가하였으며, 이중 농후사료(농가자급사료 포함)가 18,180천톤, 조사료가 4,617천톤을 차지하였다. 농후사료 중 배합사료의 생산은 16,363천톤으로 전년(15,693천톤)보다 4.3% 증가하였다.

축종별로는 한육우용 8.6%, 양돈용 4.5%, 양계용 3.2%씩 증가한 반면, 젓소용은 5.8% 감소하였다. 지난해에 비하여 한육우, 돼지 사육두수가 증가하여 젓소의 사육두수 감소에도 불구하고 2007년도 전체 배합사료 생산량이 전년대비 4.3% 증가되었다. 특히, 말·오리 사육마리수의 증가로 기타가축용 배합사료 생산량이 7.4% 증가하였다.

사료 수급 추이

(단위 : 천톤, %)

구 분	1990	1995	2000	2005	2006 (A)	2007 (B)	증감율 (B/A)
합 계	17,116	23,302	19,289	20,283	21,271	22,797	7.2
농 후 사 료	11,173	15,700	15,897	16,152	17,049	18,180	6.6
- 배 합 사 료	10,529	14,856	15,105	15,278	15,693	16,363	4.3
- 농가자급사료	644	844	792	874	1,356	1,817	34.0
조 사 료	6,003	7,763	3,392	4,131	4,222	4,617	9.4
- 사료작물 및 목초류	2,832	2,498	992	1,298	1,326	1,490	12.4
- 산야초, 볏짚등	3,171	5,265	2,400	2,833	2,896	3,127	8.0

주 : 조사료는 건물(乾物) 상태 기준임.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단

옥수수 등 사료용 원료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우리나라 축산업은 해외곡물가격, 해상운임 및 환율변동에 따라 국내 사료가격이 크게 영향을 받고 있으며, 사료곡물의 국제가격 변동에 따른 가격인상 압력을 흡수할 수 있는 국내기반이 취약하다는 구조적 문제점을 안고 있다.

배합사료 용도별 생산량

(단위 : 천톤, %)

구 분	1990	1995	2000	2003	2005	2006 (A)	2007 (B)	증감율 (B/A)
합 계	10,529	14,856	15,105	15,436	15,278	15,693	16,363	4.3
양 계 용	3,274	3,766	3,867	3,907	4,203	4,267	4,403	3.2
양 돈 용	3,551	4,725	5,215	5,663	5,170	5,175	5,409	4.5
젖 소 용	1,790	2,905	1,891	1,774	1,587	1,539	1,449	△5.8
한육우용	1,667	3,681	3,340	2,926	3,293	3,574	3,880	8.6
기 타	247	589	792	1,179	881	1,138	1,222	7.4

자료 : 농림수산식품부 축산정책단

2006년말 이후 옥수수, 대두박 등 국제곡물가격의 상승과 해상운임(Ocean Freight)의 폭등으로 인하여 배합사료가격은 2007년 이후 약 50% 이상 큰 폭으로 인상되었다.

이러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 국내 사료자원 개발을 통한 사료자급도 향상방안을 모색 중으로, 산지 초지개발과 청예 및 답리작 사료작물의 재배를 적극 권장하고 있으며, 2007년에 신규로 25ha의 초지를 조성한 바 있다.

(나) 사료 산업 지원

사료의 품질·안전성 및 수급·가격 안정을 위해 정부는 2007년 용자 520억원을 사료제조업체 등에 지원하였으며, 사료 관련 공무원, 생산자단체, 사료업체 종사자 등에게 사료의 안전성 향상을 위한 관리방안 등 정책·제도 관련 교육을 2차례 실시하였다.

한편, 2005년부터 사료의 위생·안전성 강화를 위해 사료공장 HACCP제도를 도입하여 2005년 35개소, 2006년 56개소를 인증하였으며, 2007년도에는 68개소로 HACCP작업장 지정이 확대되었다. 이는 전체 인증대상 배합사료공장 94개소의 72% 수준이다.

국내 사료공장 종사자들은 사료공장 HACCP 인증 및 사후관리에 대한 의욕이 높은 것으로 보이며, 정부 정책자금(용자) 지원시 HACCP 인증 사료공장을 우대하는 점도 보다 원활한 추진을 가능케 한 요인으로 평가된다.

(2) 2008년도 계획

(가) 사료 수급

가축용 사료 수요량은 국내 가축의 사육동향과 밀접한 상관관계를 유지하는 바, 젖소는 사육두수가 감소추세에 있는 반면 다른 가축 사육두수는 소폭 증가 또는 보합세를 나타내고 있어 사료 생산량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된다.

2006년 하반기 이후 바이오 연료용 사료곡물 수요량 급증 및 환율 상승 등의 영향으로 국제 사료곡물가격이 상승세를 이어 갈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사료 원료의 수급 및 국내 배합사료 가격 안정에 역점을 두는 정책 추진이 필요한 실정이다.

따라서, 사료원료의 수급 안정 도모를 위해 사료원료 구매에 필요한 용자 규모를 확충하고 상환기간 연장을 추진하는 한편, 상승폭이 높은 수입원료에 대한 할당관세 적용세율 인하와 대상 범위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국내 사료업계에서는 사료원료 구매방식을 개선하여 공동구매를 활성화하고, 수입 원료의 종류 및 수입국을 다변화하며, 가능한 장기 공급계약을 통해 필요한 원료를 보다 저렴하게 공급받을 수 있도록 함으로써 국내 사료가격 인상을 최소화 하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조사료 생산을 연차적으로 대폭 확대함으로써 국제 곡물가격 급등에 따른 사료가격 인상이 축산농가의 경영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해 나갈 계획이다.

(나) 사료 산업 지원

2008년에는 사료관리법 개정을 통해 사료산업 관련 규제를 완화 또는 구체화하여 행정절차의 투명성을 제고하되, 안전성 관련 제도는 보완함으로써 사료산업이 지속적으로 발전해 나갈 수 있도록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사료의 품질·안전성 및 수급·가격 안정을 위해 정부는 용자 지원, 사료원료 할당관세 적용, 사료의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을 지속하는 한편, 사료의 안전성 향상을 위한 교육도 지속적으로 실시하고 있다.

사료공장 HACCP 인증 업체수도 2007년 68개소에서 2008년 77개소로 증가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으며, 동 인증제도의 사후관리를 철저히 함으로써 사료의 안전성 향상에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도록 추진하고자 한다. 아울러, 인

증대상을 현행 배합사료공장에서 섬유질사료 가공 공장까지 확대·적용되도록 인증 매뉴얼 개발도 병행하여 추진할 계획이다.

(농림수산식품부 자원순환팀 농업사무관 안규정)

마. 동물보호·복지대책 추진

(1) 개정 동물보호법 시행

개정 동물보호법이 2008.1.27부터 시행되었다. 종전에는 동물보호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을 제정하지 않고 시행되어 선언적인 법이었으나 시행령 및 시행규칙이 제정되어 시행됨에 따라 동물보호법을 실행함에 있어 내실을 기하게 되었다.

강화된 주요내용으로는 동물학대를 방지하도록 하기위하여 동물학대행위를 구체적으로 정하였고, 처벌도 종전 벌금 20만원 이하에서 500만원 이하로 정하였다. 그리고 새로이 도입된 제도는 다음과 같다.

- 동물등록제, 동물판매업 및 동물장묘업 등록제
 - 등록대상동물: 가정에서 반려목적으로 기르는 개 (이하 “개” 라고 한다)
- 개 소유자 의무사항
 - 개와 동반외출에 따른 인식표부착, 목줄 등 안전장치, 배설물수거 등
- 유기동물 보호시설 지원 근거 마련
- 동물보호감시관·명예감시관 제도
- 동물실험윤리위원회 설치 및 실험동물 윤리적사용 등
- 동물학대 방지를 위한 출입·검사·시정명령 제도 도입
- 동물운송규정(고시) 등 산업·농장동물 보호

그리고 동물보호법령시행에 필요한 후속조치로 고시 등을 제정한 내용은 다음과 같다.

- 지방자치단체이 주관하는 민속 소싸움에 관한 고시 (2008.3.7)
 - 동물학대예외 사항으로 청도군 등 11개 지방자치단체가 주관한 민속 소싸움
- 동물판매업자 및 동물장묘업자 등의 교육 세부실시요령 고시 (2008.3.7)
- 동물보호명예감시관 교육 및 운영규정고시 (2008.3.6)
- 동물등록코드 관리체계 운영요령고시 (2008.6.3)
- 동물운송 세부규정 고시 (2008.8.4)

(2) 동물보호·복지 종합대책 수립·시행

동물보호법 및 하위법령의 시행을 뒷받침하기위하여 2009부터 2013까지 추진하여야 할 동물보호·복지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시·도에 시달하여 지방자치단체의 동물보호의 보호·관리를 위한 대책을 수립·시행하도록 하였다.

주요내용으로는 동물학대 감시시스템구축, 반려동물판매업 등록제운용, 동물등록제 운용 등 반려동물 보호·복지정책과 실험동물 산업육성을 위한 생산·공급·관리대책 마련 등 실험동물 보호·복지정책, OIE 기준과 부합하는 운송·도축·살처분 관련제정 등 농장동물 보호·복지정책 등을 포함하고 있다. 5개년동안의 동물보호·복지 추진지표는 다음과 같다.

구 분	2009	2010	2011	2012	2013	비 고
동물판매업등록율	40%	50	60	70	80	등록대상업자 대비
동물등록율	5%	10	15	20	30	실시지역의 등록율
동물보호명예감시관	250	300	350	500	750	전국

- 소요예산 : 703억원(국고342,지방362)

(3) 동물보호·복지정책 실현을 위한 교육·홍보 추진

2008년도는 동물보호·복지정책 실현을 위한 제도마련 및 새로운 제도정착을 위한 대국민 홍보는 정책 홍보대상(타겟)에 맞는 홍보차별화를 하여 홍보 성과를 높이도록 추진하였다. 주요홍보내용은 다음과 같다.

- 금년도에 달라지는 업무 등 보도자료 배포(2007.12.24, 12개TV, 일간지 등)
- 농림부 홈페이지 홍보 배너 설치 및 홍보자료게시 (2007.12.30)
 - 함께하는 세상 행복을 나누어요
 - 개정 동물보호법 홍보플래시 게시(2007.12.30)
 - 김대리 성공기/동물보호 게시(2007.12.26)
- 개정 동물보호법 홍보배너(8분, 1분)제작 배포(2008.1.9, 1,000부, 각 부처, 시·도, 등)
 - 각 기관에 홈페이지에 배너 설치 협조
- 동물보호법 홍보 리플렛 제작. 배포(2008.1.23, 5만부, 각 시·도, 등)
- 중앙정부청사 홍보전광판 게시(2008.2.1~2.28)
 - 새롭게 바뀐 동물보호법을 설명하는 플래시(1분)
- 동물판매업(장묘업)에 대한 홍보 리후렛배포(5만부, 5.7, 시·도 등)
- 동물보호법령 및 종합대책 배포(8.17, 시·도 등 천부)
- 2008 동물보호 사랑축제 개최(2008.10.18~19) 등

동물판매업자, 동물보호명예감시관, 동물보호감시관 등에 대하여 동물보호 관련 법령, 동물보호정책 등에 대한 이해를 높이도록 하고, 업무추진의 능력을 향상하도록 교육을 다음과 같이 실시하였다.

- 동물보호단체육성을 위한 워크숍 개최(8.5, 동물보호단체등 40여명)

- 동물판매업자(장묘업)에 대한 교육 (8.24~28, 10.24~31, 600여명)
- 동물보호감시관 교육 (9.4~5, 시.도 등 200여명)
- 동물보호명예감시관 교육(10.25~11, 250여명)
- 유기동물보호소 관리자 및 동물보호감시관 교육(11월중, 500여명)

(4) 유기동물 처리현황

- 2007년도 유기동물 포획 및 처리현황
 - 2007년도 유기동물은 77천두로 2006년(69천두)보다 12% 증가하였다.
 - 증가사유 : 들 고양이 유기 증가

구 분	포획두수	처 리 방 법(마리수)						
		계	인 도	입 양	안락사	기 증	폐 사	기 타
개	53,827	53,827	7,647	9,892	22,963	4,357	7,567	1,401
고양이	23,256	23,256	1,740	1,705	7,672	407	3,674	8,058
계	77,083	77,083	9,387	11,597	30,635	4,764	11,241	9,459

※ 기타 동물 256마리 포함하여 77,339마리 포획

□ 2008년도 보호시설 및 2008년도 예산확보 계획(지자체예산)

보호시설 확보(개소)			'08확보	'08 소요예산 확보(백만원)		
계	위탁시설	자체시설		계	시설비	관리비
267	245	22	89	7,862	389	7,473

□ 년도별 유기동물 관리실적

○ 2007두당처리비용(96천원)은 2006(85천원)에 비하여 11천원 증가하였다.

	'06			'07			'08(P)		
	계	개	고양이	계	개	고양이	계	개	고양이
관리두수(천두)	69	51	18	77	54	23	74	52	22
소요예산(백만원)	5,865			7,399			7,862		
두당 평균비용(천원)	85			96			106		

○ 유기동물보호소에 대한 2009년도 예산 380백만원 확보로 유기동물보호소를 광역화하여 유기동물의 보호·관리에 만전을 기하도록 할 예정이다.

바. 수산식품 가공산업의 육성

수산물은 일시 다확성이고 부패, 변질되기 쉬운 특성을 지니고 있고 수산물 가공제품의 생산 증대와 산지 특산물의 고부가가치 창출 및 가공업체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정부에서는 가공공장 시설자금을 지원하고 있으며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고 우량제품의 공급을 위한 가공기반 시설을 확충 및 지역 특산물 등 새로운 수요 개발과 부가가치 창출, 수산식품의 기준강화, 품질 향상을 주요 정책방향으로 설정,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특히, 국민 생활수준의 향상 및 음식문화의 국제화 추세 등으로 가공품에 대한 소비 기간이 짧아짐에 따라, 수산물가공품 생산에 있어서도 소비자 요구 및 소비추세를 반영하여 편리화·다양화·고급화 전략과 함께 국민보건 위생에 적합한 가공품 생산을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2008년도는 가공산업 및 어촌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지역특산물의 산지가공시설 지원사업을 내실화하고 특히 부가가치가 큰 지역특산품 중심으로 산지

가공시설 선별 지원(41개소 124억 원), 수산물처리·저장시설(9개소 84억 원), 젓갈타운조성(3개소 12억 원), 굴 패각제거업 시설 현대화(11개소 5억 원), 전북 진주산업센터(1개소 7억 원)를 중점 추진할 계획이며, 싱싱회 가공시설 활성화 및 소비문화 정착을 위해 신규사업으로 판매장(5개소 3억 원)을 개설하여 싱싱회 가공공장의 판매 활성화를 도모하는 등 싱싱회 공급체제를 구축하여 싱싱회 가공산업을 지속적으로 육성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우수수산물 확대보급을 위한 수산물 품질인증제 활성화를 위해 대상품목에 건제품, 냉동품, 횡감용 등에서 활어 등을 추가, 인증품목 수를 136개 품목으로 확대하였으며, 경제발전과 식생활 향상으로 위생적이고 안전한 수산물에 대한 소비자 욕구가 증대되고 있어 수산물 양식 과정에서 친환경적인 생산을 체계적으로 지원, 육성하거나 안전기준에 의해 생산된 친환경수산물을 일반 수산물과 구별하여 인증할 수 있는 친환경수산물인증 제도를 마련하여 시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국에서 명성이 높고 지리적 특성을 가진 우수한 수산물 및 수산가공품의 품질 향상과 함께 이를 지역 특화사업으로 육성하는 한편, 생산자와 소비자를 동시에 만족하고 보호하기 위한 수산물지리적표시 등록 제도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그리고, 수산물 가공산업을 수산업의 신성장 동력으로 육성하여 고소득 창출과 어촌 활성화에 기여토록 하기 위해 안전한 수산물 생산·공급체계 구축 및 소비자 요구에 부응하는 수요개발, 우수브랜드 육성·지원으로 경쟁력 제고 등 안전한 수산물생산 및 공급체계를 지속적으로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정책과 사무관 윤영호)

4. 고부가가치 농림어업을 위한 기술개발과 정보인프라 구축

가. 농림기술개발사업 추진

(1) 개요

현재 세계적으로 농림업 분야는 기술경쟁 체제로 빠르게 전환되고 있다. 특히, 농림업은 기후나 토양 등 자연환경의 제한을 많이 받아 기술이전이나 모방이 어려울 뿐 아니라, 선진국들은 농식품업 관련 유용물질이나 첨단기술의 이전을 엄격하게 제한하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국내 소비자의 기호가 고품질·안전농산물을 선호하는 방향으로 변화함에 따라 이를 충족시킬 수 있는 농림업의 기술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아울러 최근 FTA 확대, 세계 곡물가 변화 등 글로벌 농업 트렌드 변화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선 경쟁국보다 한발 빠른 기술 개발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으며 농림업을 IT·NT·ET 등 첨단 과학기술과의 융·복합기술 개발을 통해 고부가가치를 창출하는 2·3차 산업으로의 육성이 절실한 시기이다.

전세계적으로 저탄소 녹색성장이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주목을 받고 있으며 녹색성장을 이루기 위해 저탄소농업, 자원순환형 친환경 농업, 바이오에너지, 에너지 절감 기술 등 농림업의 녹색기술개발 중요성이 크게 부각되고 있다.

정부는 농림업 선진국 진입을 목표로 1994년부터 농림기술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사업체계를 기술수요자 중심형 기술개발, 연구기획 강화 및 성과활용 촉진을 위해 공모유형에 따라 기획과제(정부 지정공모형)와 일반과제(민간 자유응모형)로 구분하는 방식으로 개편하여 2007년부터 연구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2008년부터는 한·미 FTA 대책의 일환으로 해외시장 개척이 유망한 농산품의 수출전략적 기술개발로 우리 농산품의 대외 경쟁력 제고 및 수출 증대에 기여할 수는 “농산품수출연구사업단” 프로젝트를 추진하고 있다.

추진 유형	기획과제(지정공모형)		일반과제(자유응모형)
		농산품수출연구사업단	
개발대상 분야	<ul style="list-style-type: none"> ○ BT 등 주요 핵심기술 * BT실용화, 식품가공, 식품 안전성확보, 품질고급화 등 ○ 농림기술로드맵(ATRM)을 통해 도출된 중요도가 높은 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개방화시대에 대응하여 우리 농산품의 경쟁력 제고와 해외시장 개척이 유망한 농산품의 전략적 수출기술 	<ul style="list-style-type: none"> ○ 산업화 가능성이 인정되고 기술적·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산업화기술 * 부가가치 제고 첨단신기술, 신품종 육성기술 등

(2) 연구개발 추진현황

2007년말까지 총 4,027연구과제를 선정하여 연구개발을 지원하였으며, 연구가 완료된 과제는 3,320개 과제로 이중 647개 과제는 산업체 및 농가에 이전되었고, 1,182개 과제는 성과활용 추진 중에 있으며, 1,491개 과제는 교육지도 및 정책자료로 활용하여 64.4%의 활용율을 보이고 있다. 또한 산업재산권 출원 2,017건, 국내외 논문발표 7,581편 게재, 유상기술이전 197건을 실시하는 등 과제의 연구성과가 조기에 농업인과 산업체에 널리 보급될 수 있도록 성과관리 및 확산을 적극 추진해 왔다.

완료과제 연구성과 활용현황

(단위 : 건)

구분	기술이전		교육·지도	정책자료	활용추진중	합계
	산업체	농가				
기획과제	16	-	36	12	23	87
일반과제	226	405	1,271	172	1,159	3,233
합계	242	405	1,307	184	1,182	3,320

※ 2007. 12. 31. 기준

연구개발 기술·산업적 성과

특허(건)		논문게재(건)				기술실시계약건수	
출원	등록	'94~'05		'06~'07		유상이전	무상이전
		국외	국내	SCI	비SCI		
2,017 (149)	1,438 (158)	1,303	5,211	281 (154)	786 (353)	197 (29)	97 (25)

※ ()는 2007년도에 발생한 성과임

특히 기술개발이 완료된 과제 중 기업체와 기술이전 및 기술료 징수계약을 체결한 최근 우수 기술개발 주요과제내역은 다음과 같다.

기업체 기술이전 우수과제 내역

(단위 : 백만원)

연구성과 (제품 및 기술명)	제품 설명 (또는 과제명)	연구기관 (생산업체)	연구비 (기술료)	경제적효과
희토비료	희토광물(Rare Earth) 이용 농용 신소재 개발	전북대학교 (유)동성엔씨티	270 (32)	○ 2007년까지 60억 매출
바이오타이트 V	왕암게르마늄흑운모를 이용한 천연항생제 대체재 사료첨가제 개발	(주)서봉바이오베스텍	162 (34)	○ 2007년 37억원 매출
이유자돈 전용 사료 단백질 개발	미생물발효에 의한 대두박 제품 생산기술 개발	(주)진바이오텍	170 (23.8)	○ 2006년까지 26억원 매출 ○ 2007년 20억원 매출
건조 꽃송이버섯	꽃송이버섯의 면역물질 개발 및 대량생산 체계 확립	(주)하나바이오텍	160 (36)	○ 2006년까지 6억원 매출 ○ 2007년 12억원 매출
천년약속	버섯균사체가 분비하는 알코올의 생산과 이를 이용한 기능성 주류 개발	(주)천년약속	280 (30)	○ 2004년 4억 ○ 2005년 50억 매출 ○ 2006년 450억 매출 ○ 2007년 100억 매출

(농림수산식품부 기술정책과 농업사무관 서정아)

나. 수산기술개발사업 추진

(1) 개 요

수산특정연구개발사업은 수산업을 21세기 종합해양 과학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일반회계(1990년) 및 농특세(1994년)를 재원으로 1990년부터 실시하고 있다.

수산특정연구개발사업은 수산정책연구개발사업과 수산기술개발사업으로 구분하며, 수산기술개발사업은 현장애로기술개발사업, 첨단기술개발사업으로 구분하여 추진하고 있는 사업으로 동 사업은 국·공립연구기관, 학계, 산업계 등이 공동으로 참여하여 수산업발전 및 어업인 소득증대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2007년에는 학계·연구기관·산업계·행정기관 등에서 수요 조사한 과제를 대상으로, 전문기관(한국해양수산기술진흥원)에서 평가·선정한 지정과제와 함께 자유공모과제를 모집하여, 실용성이 있고 산업화가 가능하며 수산기술개발중장기 발전계획에 부합되는 우수한 과제를 선정하는데 역점을 두고 추진하고 있다.

(2) 과제현황

2007년 수산기술개발사업은 “해파리류의 독성영향평가 및 자원으로의 활용 방안연구”등 총 63개 과제(신규사업 28과제, 계속사업 35과제)를 선정하여 5,273백만원의 연구비를 지원하였다.

이러한 수산특정연구개발사업은 2007년말까지 총 482개 과제에 대하여 72,729백만원의 연구비를 지원하였는데, 이 가운데 409개 과제는 종료되었고, 73개 과제를 수행 중에 있으며 연구가 완료된 409개 과제 중 39개 과제가 산업체와 기술실시협약을 체결하여 기술이전이 되었고, 국제특허 11건, 국내특허 149건을 등록하는 등 연구 성과가 어업인과 산업체에 널리 보급될 수 있도록 적극 추진하고 있다.

수산특정연구개발 추진실적

□ 수행과제 및 사업비 지원 현황(2007.12.31기준)

(단위 : 건/백만원)

구 분		합 계		종 료		수 행 중	
		과제수	사업비	과제수	사업비	과제수	사업비
합 계		508	78,379	443	72,729	65	5,650
농특회계	수산기술개발	401	67,263	336	61,613	65	5,650
일반회계	수산정책연구	107	11,116	107	11,116	-	-

※ 수산정책연구는 2006년부터 출연금(303목)에서 용역비(206목)으로 전환하여 해당 부서에서 수행

□ 성과현황(2007.12.31기준)

(단위 : 건/천원)

구 분	기술실시협약		특허등록		논 문	
	건 수	협약액	국 외	국 내	SCI	일 반
계	43	2,295,957	11	165	109	987
수산기술개발	35	1,823,202	11	151	107	839
수산정책연구	8	472,755	-	14	2	148

(농림수산식품 어선인력과 서기관 박신철)

다. 농림어업정보화 촉진

1) 농업분야

가)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 구축·운영

(1) 2007년 이행실적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AgriX)은 농림사업의 신청·집행·사후관리를 온라인에서 처리하여 업무 효율화 및 자금집행의 투명성을 확보하고자 추진하는 정보시스템 구축사업이다. 2007년까지 3차에 걸쳐 30여개의 농림사업에 대해 정보시스템을 구축·운영중에 있으며 국무조정실에서 주관한 “정보시스템 구축·활용 효과에 관한 조사”결과 투자대비 5배의 수익효과를 발생한 것으로 조사(ROI=528%)되는 등 성과를 인정받고 있다.

2007년에는 원예·농촌개발 사업을 중심으로 11개 농림사업에 대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보건복지가족부, 한국농촌공사 등에서 운영중인 DB를 연계하여 농림사업간 정책자금의 중복 지원(영농규모화 : 경영이양직불제, 과원규모화 : 과원폐원지원)을 차단할 수 있는 틀을 마련하는 한편, 농업인과 공무원의 AgriX 활용도 제고를 위해 수차례에 걸쳐 다양한 홍보 및 교육을 실시하였다.

(2) 2008년 추진계획

2008년에는 맞춤형농정 추진을 뒷받침하기 위해 농업경영체등록제를 비롯한 식량·농촌관련분야 12개 시스템을 구축한다. 특히, 고객관리 및 정보시스템 기반구조 등에 대한 국제표준화기구의 품질인증(ISO9001)을 추진하여 대내외 인지도와 신뢰도를 제고하고, 비상시 재해에 대비한 재해복구시스템(DRS)을 구축하여 시스템의 안전성도 한층 강화한다.

또한, 국토해양부의 지적정보, 농림수산정보센터의 농업인 교육이력 등과 연계하는 등 관련정보의 공동 활용에 따른 공무원의 행정업무 생산성을 제고시키는 한편, 모바일기기(휴대폰, PDA 등)를 통해 정책정보 및 쇠고기 이력, 반려동물 관리정보 등을 서비스하여 민원업무의 편의성을 제고하고, 농가기본DB를 활용하여 과거 자금집행실적, 교육이력 등을 파악할 수 있도록 구축하는 등 농가유형별 맞춤형농정 추진에 크게 일조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 정보화지원팀 전산사무관 최재웅)

나) 농업인 정보화 교육 확대 및 정보문화 확산

(1) 2007년 이행실적

정보화에 무관심한 농업인에 대해 적극적인 홍보로 정보화교육의 참여를 유도하고 기초 수준의 농업인을 위해 전국 312명의 정보화선도자, 22개 농업계대학 119서비스 요원이 농가를 직접 방문하여 정보화 교육을 실시하였다. 또한, 이동버스 교육과 기초·중급·전문 수준의 집합교육을 보완하기 위해 상시 반복 학습이 가능한 온라인교육 및 원격지원서비스 등의 교육도 실시하였다. 이러한 방문교육, 집합교육 및 온라인교육 등을 상호 보완적으로 운영하여 농업인의 편의를 도모하였다. 방문교육은 영농생활 등 바쁜 일정으로 집합 교육장소에 나가기 어렵거나 교육 이수 후 활용이 제대로 안 되는 농업인들의 요청이 있을 때 직접 농가를 찾아가 실시하는 교육이다.

그리고 전자상거래 등 실효성 있는 차별화된 교육을 위해 전문교육기관을 공모·선정하여 교육을 실시하고, 교육교재를 언제 어디서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북(Digital Book)을 제작·제공함으로써 우리 농업인 정보화교육을 한 단계 업그레이드 시켰다.

재택학습과 반복학습 지원을 위해 실시하고 있는 온라인교육은 지속적으로 콘텐츠를 개발하여 70개 교육과정(기초과정 30개, 중급과정 11개, 고급과정 29개)을 운영하였다.

또한, 2008년 농업인 정보화교육을 위해 농업인의 정보활용 수준과 이용 목적에 따라 표준교육과정(생활밀착형과정 1개, 영농밀착형과정 5개)을 개발하고, 표준교재를 교육시행기관에 제작·배부하였다. 생활밀착형과정은 농촌생활 업그레이드과정이며, 영농밀착형과정은 영농정보관리, 웹농가 경영장부, 농산물 생산이력관리, 홈페이지제작, 전자상거래 마스터과정으로 구성되어 있다.

농업인 정보화 교육실적은 다음과 같다.

농업인 정보화교육 현황 (1998~2007)

(단위 : 명)

분류	1998~2004	2005	2006	2007	합계
합 계	390,447	67,381	63,724	66,252	587,804
기초교육	138,167	7,144	7,047	5,289	157,647
중급교육	54,537	6,607	4,008	4,019	69,171
중기교육	-	1,766	2,139	2,591	6,496
공모과정	-	-	-	312	312
전문교육	16,111	1,056	359	292	17,818
119서비스	69,388	12,074	10,044	10,044	101,550
정보화선도자	27,563	23,944	29,858	32,608	113,973
공공근로사업	32,760	-	-	-	32,760
이동버스교육	8,708	570	512	542	10,332
자체교육	38,597	8,069	2,915	2,741	52,322
온라인교육	4,616	6,151	6,842	7,814	25,423

자료 : 농림수산물부 정보화지원팀

(2) 2008년 추진계획

농촌 지식정보사회를 이끌어갈 디지털 농업인을 육성하기 위해 농가소득창출로 연결 가능한 교과목 위주의 전문교육을 확대하고, 교육대상자에 대한 분석·관리기능 등을 강화할 계획으로 있다. 이를 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인터넷 활용능력이 있는 농업인을 대상으로 영농밀착형 교육과정을 지속적으로 확대하는 동시에 농업인이 교육을 통해 소득창출로 연결될 수 있도록 교육과정을 개발하여 신규과정으로 도입할 계획이다. 아울러 정보화 무관심층에게는 인터넷뱅킹, 온라인쇼핑, 휴대폰·디지털카메라 사용법, 전자 민원서비스 등 정보화시대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생활 밀착형 내용도 교육할 것이다.

둘째, 농업인 정보화교육 사업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교육시행기관을 개편하고, 교육기관 간 정보교류를 활성화하여 정보화교육 성과를 높일 계획이다.

셋째, 일손부족 등으로 집합교육 참여가 어렵거나 심화·반복학습이 필요한 농업인을 위하여 실시하고 있는 온라인교육 내실화를 위해 에듀아피스(www.eduaffis.net)를 통해 서비스 중인 일부 강좌에 대해 전담강사제(e-Tutor)를 시범 도입하여 헬프데스크, 원격지원서비스 등을 통해 최적의 온라인 학습 분위기를 조성할 계획이다.

넷째, 표준교재를 사례 중심의 실용적 내용으로 알기 쉽게 구성하여 배포하고, 농업인의 강사 만족도가 높은 강사의 교육내용을 선정하여 동영상으로 제작·서비스할 계획이다.

다섯째, 농촌 지역의 여론 주도 계층인 이장 등에 대한 교육 참여를 독려하고, 신규 교육과정 수요가 있는 기관에 대한 다각적인 실태조사와 정보화 교육을 적극 홍보하여 농업인 정보화 교육 대상의 범위를 확대할 계획이다.

끝으로 농업인 정보화 교육이 1998년에 시작된 사업임을 감안하여 외부전문

기관에 연구용역을 의뢰하고, 다각적인 기초분석을 통해 중·장기적인 전략계획을 수립하고 실행계획도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교육생이 교육교재를 언제 어디서나 쉽게 활용할 수 있도록 디지털 북(Digital Book)을 제작·제공하고, 교육생별 정보화수준 자가진단(ICT)을 바탕으로 교육수강 추천의 사이클을 고도화·지능화 할 계획이다.

교육시행기관별 교육과정에 따른 교육계획 횟수 및 인원
(단위 : 명)

교육기관	교육과정 및 내용	교육시간	교육인원
합 계			55,130
농업기술센터	생활밀착형과정	18	300회, 4,500
	영농밀착형과정	30	85회, 1,275
지역농협	생활밀착형과정	18	110회, 1,650
	영농밀착형과정	30	20회, 300
농업계대학	영농밀착형과정	30	80회, 1,200
	농업정보119방문교육	2	11,000
공모기관	영농밀착형과정(공모)	30	25회, 375
	농업경영정보화 전문과정(공모)	60	12과정, 290
한국농림수산정보센터	이동버스 정보화교육	18	20회, 240
지방자치단체(시·군)	정보화선도자 활용교육	2	34,300

(농림수산식품부 정보화지원팀 사무관 강신복)

다) 농업인과 소비자에게 도움이 되는 정보콘텐츠 확충

1) 2007년 이행실적

농림수산식품부는 99년부터 도·농간 정보격차해소를 위해 농림수산 정보망(아피스넷, www.affis.net)을 구축·운영해 왔다.

48개 농림 유관기관의 정보와 32개 공영도매시장의 가격유통정보 및 유통

전문가들의 시황·전망정보를 일괄적으로 수집하여 농업인의 눈높이에 맞게 제공하는 아피스넷은 도·농간 정보격차해소에 상당 부분 기여하였다.

아피스넷은 농업인들 뿐만 아니라 일반 네티즌들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우리 농업·농촌 대표 웹사이트(웹분석사이트인 랭키닷컴 www.rankey.com, 농학분야 1위)이며 초등학교 교과서(5학년 2학기 사회과 탐구, 68쪽)에도 농업정보 제공 웹사이트의 우수사례로 소개되고 있다.

아피스넷은 2007년말 현재, 238천명의 회원을 보유하고 있으며, 일평균 이용자수는 18천명에 이른다. 이러한 아피스넷에는 357개의 동호회가 활동하고 있는데, 이 동호회를 통하여 회원간, 동호회간 상호 정보교류도 하고 다양한 커뮤니티를 제공함으로써 농업정보화 향상에 크게 기여하였다.

또한, 26명의 주부 명예기자단은 도시 소비자들이 농산물 구매의사 결정에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대형마트, 할인매장 등의 농산물 가격정보를 수집·제공하였다. 지난해에 아피스넷을 통하여 12,500여건의 정보를 등록 하였으며, 농림 관련 언론사들과의 적극적 제휴를 통해 33,000여건의 기사도 수집·게시하였다.

아피스넷과 더불어 농림유관기관의 정보를 일괄적으로 수집하여 제공하는 농림지식검색 시스템(그린넷, green.daum.net)은 44개 농림 유관기관 154개 사이트의 정보 등을 알기 쉽게 가공·제공함으로써 농업인의 정보 탐색 비용 절감에 기여하였다.

농업정보 제공 뿐 아니라 농업경영 효율화를 위해 16개 경영체를 대상으로 정보화 컨설팅을 실시하고, 10개 경영체를 대상으로는 정보시스템 구축을 지원하였다.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정보시스템을 구축한 경영체를 대상으로 업무효율성 증대여부를 조사한 결과, 29.2%가 업무단축, 비용감소 등 경영효율성 향상에

기여한 것으로 나타났다.

제7회 농업인 홈페이지 경진대회를 개최하여 농업인에게 전자상거래에 대한 참여의지를 고취시키고, 우수 홈페이지에 대한 벤치마킹 기회를 부여함으로써 전자상거래 이해의 폭을 넓히는데 기여하였다. 또한 소비자에게 우수 농업인 홈페이지를 홍보하여 전자상거래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고, 농식품 상거래 활성화에도 공헌하였다.

2) 2008년 추진계획

농업인 소득향상, 농업인 정보이용 활성화, 도·농 정보교류 확산을 위해 아피스넷을 통하여 가격유통 정보, 농업종합 뉴스, 커뮤니티 서비스 등을 지속적으로 제공하고 있으며, 좀더 전문적인 지식제공을 위해 농업계 전문가 그룹을 섭외하여 회계/경영 등에 대한 컨설팅 서비스도 강화할 계획으로 있다. One-stop, Single-window서비스를 지향하는 농림지식검색시스템(그린넷, green.daum.net)은 기구 개편으로 통합된 국립수산물과학원 등 13개 기관, 21개 사이트를 신규로 연계시켜 수산정보를 포함한 모든 농어업 관련 정보를 하나의 검색창에서 이용자들이 보다 쉽게 이용할 수 있도록 개선하여, 정보활용 수준이 떨어지는 농어업인들에게 정보탐색의 기회비용 및 시간을 줄이는데 지속적으로 기여할 계획이다.

또한, 아피스넷이 보유하고 있는 정보의 확산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기존에 구축되어 있는 가격유통 및 농업농촌 체험, 건강정보 등 동영상 정보들을 휴대폰, IPTV(LG데이콤), TV(티브로드) 등을 통해 제공하여 유비쿼터스 농업·농촌 실현에 기여하고, 이용자들이 동영상을 쉽게 인터넷에서 편집·등록/배포할 수 있는 솔루션을 구축하여 농업인의 질적 정보활용 능력 향상에도 도움을 주고자 한다.

2013년 디지털 방송전환에 따른 정보격차 해소를 위해 금년부터 다양한 대

응방안을 마련할 계획으로 있다. 앞으로 TV를 기반으로 농업정보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연구사업을 통해 아피스넷의 중장기 발전전략을 마련중에 있으며, IPTV, 디지털케이블TV 사업자들과 적극적인 연계를 통해 언제, 어디서나 농업인들이 정보를 습득할 수 있는 다양한 창구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체험 관광, 농산물 샘플체험 등도·농교류 행사를 더욱 강화하여 농업인 소득 향상을 위한 채널 확대에도 주력할 계획이다.

또한, 농업경영체 경영효율화를 위해 S/W 및 시스템의 확산에도 노력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05년부터 개별 경영체를 대상으로 실시해온 정보화컨설팅 및 정보시스템 구축지원을 2008년부터는 중앙에서 관리할 수 있는 ASP(Application Service Provider)형태의 IT솔루션을 개발하여 농업인, 작목반, 농업법인, 홈페이지농가 등 다양한 경영체가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매년 전자상거래 활성화 및 확대를 위해 실시하였던 홈페이지 경진대회를 금년부터는 한국전자거래진흥원의 eTrust 인증평가 항목을 적용하고, 온라인 평가시스템 도입으로 신청이나 자료제출 방법 등을 간소화하여 많은 홈페이지 농가가 참여할 수 있도록 조치할 계획이다. 우수 홈페이지로 선정된 농가에 대해서는 우수사레집 발간 및 홍보지원을 실시할 계획이다.

(농림수산식품부 정보화지원팀 사무관 강신복)

(2) 임업분야

우리나라 식물자원의 체계적 보전을 위한 정보화로 지속적인 보전관리와 자원활용을 지원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목표로 1998년부터 국가식물자원정보관리시스템을 구축하여 왔으며, 동 시스템을 확대한 국가생물종지식정보화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국가생물종지식사업에 대한 연차별 사업실적은 1단계(1998)는 기반구축단계로서 C/S환경의 관리시스템 및 국립수목원 홈페이지를 개발하였고, 2단계(1999)는 활용단계로서 웹환경의 인트라넷 정보망 개발 및 보전기관, 식물분류체계, 식물목록, 식물도감 DB를 구축하였다.

3단계(2000~2001)는 DATA 구축단계로 국립수목원 등 식물보유기관(10개소)의 보유식물 정보화와 대학 등 식물표본관(15개소)별 표본정보의 DB를 구축하였고, 식물 식재위치를 GIS와 연계하여 식물식재지에 대한 결과분석이 가능하도록 GIS응용시스템에 대한 시범사업을 실시하였다.

4단계(2002~2003)는 국가생물종지식DB 구축단계로 12개 대학 및 3개 기관에서 보유한 곤충표본정보 DB를 구축하였고, 동기간에 국내에 자생하는 식물에 대한 “국가표준식물목록시스템” 구축을 통하여 식물종 목록에 대한 표준화를 실시하였으며, 표준화된 식물종은 국제생물다양성협약에 의거 우리나라의 식물주권을 보장받을 수 있다.

5단계(2004)는 기존에 구축한 식물·곤충 종정보 및 표본정보의 DB 표준화와 각 시스템의 연계를 통하여 국가생물종지식정보시스템의 통합구축을 완성하는 단계로서, 미비된 곤충종 정보와 자연생태동영상 등 생물정보 DB를 추가 구축하고 도감정보를 재정비하였다.

6단계(2005)는 국가생물종지식DB 구축을 13개 대학 및 2개 기관에서 보유한 식물표본 및 균류도감 정보를 확대 구축하고, 기구축된 지식정보화 사업 중 수목원 보유식물의 종 정보 및 이미지 정보의 보완과 식물명을 국가표준식물목록을 적용하여 표준화함으로써 명실상부한 국가생물종지식정보시스템을 구축하였다.

7단계(2006)는 기 구축된 생물자원 표본의 활용도와 가치를 높이고 지속적인 종합생물자원 정보포털의 기반을 마련하기 위해서 더욱 다양하고 많은 양의

표본에 대한 DB구축 확대를 위하여 16개 대학 및 3개 기관에서 보유한 식물 및 곤충표본 등을 확대 구축하였으며, 국가생물종지식정보시스템의 DB 영문화와 영문웹사이트를 개설하여 905천점의 데이터를 세계생물다양성정보기구(GBIF) 네트워크와 연계하였다.

8단계(2007)에는 기 구축된 국가생물종지식정보시스템의 고도화를 꾀하고자 수목원 및 식물원 보유식물정보시스템과 종자정보시스템 등의 응용시스템을 설계 구축하고 식물도감정보, 수목원 및 식물원 보유식물정보, 종자정보 등의 DB를 확대 구축하였다.

9단계(2008)는 국가생물종지식정보시스템 개선을 위하여 국가자연사연구 종합정보시스템의 자료를 국가생물종지식정보시스템에 가져와서 활용 가능하도록 개선하고 있으며, 표본 및 도감이미지 뷰어 기능 강화로 대용량의 이미지를 사용자가 확대 및 축소하여 보다 정확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기능을 한층 강화하고 있다.

국가생물자원정보 사업을 통하여 기초과학분야인 식물, 곤충에 대한 분류체계의 정착과 생물종정보에 대한 활용가치를 확산, 국립수목원의 정보화를 통한 정보인프라를 구축하여 상대적으로 정보화에 열악한 전국 수목원, 식물원, 대학간의 정보교류를 촉진할 수 있도록 하였다.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 행정사무관 강변석)

(3) 수산분야

(가) 어업정보화 촉진

어업인들이 ‘21세기 지식정보화시대’에 부응하는 동시에 어촌지역의 정보격차를 해소하고 생업에 정보화를 활용할 수 있도록 2007년까지 91,000명에 대하여 정보화교육 실시, 어촌지역의 정보화 촉진을 위해 매년 「전국 어업인 정보

화능력 경진대회」를 개최하 등 어업인의 정보화마인드 확산에 노력하였으며, 어업인들이 컴퓨터를 상시 활용할 수 있도록 어촌지역 493개소에 “어촌정보사랑방”과 어업인들이 원격으로 수산기술상담 및 정보화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전국 31개소 수산사무소에서 「원격영상교육시스템」을 운영하여 어촌지역 정보화 수준이 5년 전보다 어촌지역 컴퓨터 보급률은 22%, 인터넷 이용률은 17% 등 20% 향상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도 어업인 정보화교육의 질적 향상과 어업인들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생활밀착형 콘텐츠 개발과 찾아가는 교육서비스로 어업인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어촌정보화에 기여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농림수산식품부 어선인력과 사무관 송경호)

(나) 수산물 유통정보화 사업추진

수산물은 복잡다기한 유통절차를 거쳐 소비되고 있어 이러한 일련의 과정에 대한 수산물 유통정보 제공기반의 구축으로 신속한 정보를 제공하여 수산물 유통단계를 축소하고 수산물 유통의 합리화를 도모함은 물론 유통주체간의 정보를 공유하여 거래의 투명성 제고와 원활한 수산물 수급조절에 기여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유통종사자와 소비자들이 쉽게 수산물 유통정보를 이용할 수 있도록 1999년부터 수산물 유통정보화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

이를 위해 2001년까지 정부예산, 정보화촉진기금 및 유통주체 부담금 등 5,300백만원을 활용하여 ‘수산물 유통정보’ 인터넷홈페이지 개설, 산지수협 등 73개소에 대한 위판정보 및 조합업무전산화를 하였으며, 11개 수산부류도매시장에 대한 경락정보 DB화, 3개 도매시장에 대한 무선응찰방식 전자경매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수협중앙회에 대한 전자상거래시스템을 구축하였다.

한편, 2003년에는 97개 일선수협 중 수산물 유통정보시스템에 편입되지 못한 25개 조합의 유통정보화를 추진하여 동 5개년 사업의 마무리를 하였으며, 생산자-소비자간 직거래 확대를 위해 인터넷 수산시장 개설을 추진하여 2004년 4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며, 2008년에는 총 520여개 어가를 입점시켜 어업인들의 실질적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2009년에는 “u-IT를 활용한 수산물 유통정보포털시스템”을 구축함으로써 생산자와 소비자가 편리하게 이용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산물 수출입통계DB를 구축하여 수산물유통정보를 유통종사자, 어업인 및 소비자 등이 활용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정부가 역점적으로 추진하고 있는 정보화 사회 구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정책과 김동욱)

5. 수출진흥 및 수입관리 대책

가. 수출진흥대책

(1) 농림분야 시책 개요

농식품수출은 개방화 시대에 능동적으로 대응하여 우리 농업의 활로를 개척할 수 있는 대안임과 동시에 WTO체제하에서 그동안 정부가 역점을 두어 추진해온 구조개선사업의 성과를 간접적으로 평가받는 지표가 되며, 우리농산물의 품질향상과 규격표준화 등 유통시스템개선을 촉진시킨다는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농정시책이라 하겠다.

또한, 우리의 바로 이웃에는 세계최대의 농산물 수출시장인 일본과 거대 시장으로 등장한 중국이 위치하고 있어 우리의 대응 여하에 따라서는 수출증대

를 통하여 농가소득 증대는 물론 국내의 과잉생산에 따른 가격불안을 해소하는데 크게 기여할 수 있다는 점에서도 그 의의가 크다고 볼 수 있다.

최근의 농식품 수출동향을 보면 고유가 및 환율하락, 안전성 비용 증가 등 어려운 여건에서도 점진적으로 수출회복이 되고 있는데, 이 같은 경향은 품질 및 안전성 관리 강화 등 수출농업인의 수출마인드 향상과 적극적인 해외시장 개척의 성과라고 평가되며 중장기적인 수출농업의 발전방향과 관련하여 매우 바람직한 현상이라 하겠다.

최근년도의 수출동향

(단위 : 백만불, %)

	1997	2005	2006	2007	증감률(%)
(전체 농림축산물)	1,759.2	2,221.5	2,304.4	2,531.8	9.9
○ 신선 농림축산물	615.7	608.2	535.5	597.1	11.5
- 김	39.7	93.0	70.3	75.3	7.1
- 돼지고기	242.3	34.3	23.9	25.6	7.1
- 채소	38.4	138.5	133.6	121.1	△9.4
- 화훼	5.3	52.1	40.4	58.1	43.8
○ 가공 농림축산물	1,143.5	1,613.3	1,768.9	1,934.7	9.4

(2) 농림분야 세부 육성시책

그동안 정부가 추진해온 수출농업의 육성시책을 대별하면 고품질 수출농산물생산 및 공급기반구축과 다양하고 지속적인 해외시장개척활동을 들 수 있다.

국내의 안정적인 생산공급기반 구축을 위해 중점적으로 추진해온 사업으로는

첫째, 원예전문생산단지를 1997년의 28개 단지에서 2008년 현재 195개 단지로 확대 지정하여 고품질 농산물의 안정적인 공급기지를 확보하였으며,

둘째, 수출컨설팅도 2004년 93회에서 2007년 166회로 확대하여 실시함으로써 생산 및 수출과정에서 발생하는 각종 애로요인을 현장에서 해결하도록 노력하였다.

셋째, WTO에서 지원이 허용되는 수출물류비의 지원을 2004년 256억원에서 2008년에는 327억원으로 확대하고, 수출자금융자도 2008년에는 3,230억원을 지원함으로써 수출관련 경영체의 자금부담을 크게 완화토록 하였다.

넷째, 국내외 수출관련정보의 신속한 제공을 위해 8개국 11개 해외 aT센터와 22개국 36명의 모니터로부터 입수되는 수출관련정보를 인터넷정보망인 KATI와 FAX신문 등을 통하여 실수요자에게 적시에 제공하는 한편, 다양한 해외시장 개척활동도 꾸준히 전개해오고 있다.

국제식품박람회 참가 규모를 확대하여 직접적인 수출계약과 동시에 신규바이어의 발굴, 현지소비자의 선호도에 맞는 제품개발 등의 기회로 활용해오고 있다.

한국산 농산물의 세계브랜드화를 위해 수출농산물공동대표브랜드(Whimori) 사업을 추진하고 종래의 라디오와 빌보드 위주의 단편적인 홍보에서 현지TV와 인터넷 등 정보화시대에 걸맞는 다양하고 효과적인 홍보활동을 전개하고 있다.

일본의 JUSCO등 해외의 대형유통업체와의 특관전을 적극적으로 추진하여 우리 농식품의 홍보 등의 기회로 적극 활용하고 있다.

최근의 농산물 수출은 수출 상대국의 식품안전 규제 및 수입검역 강화, 중국의 WTO가입에 따른 일본, 동남아 시장에서의 시장경쟁 심화 등 수출애로에도 불구하고 세계적인 경기 회복, 2002년 한·일 월드컵 및 한류열풍에 힘입어 우리나라 인지도 제고, 건강식품으로의 김치에 대한 관심 증가, 농산물해외시장개척사업의 적극 추진으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수출지원 예산추이

(단위 : 백만원)

구 분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계	35,300	36,164	35,415	39,655	41,617	41,630	42,618	51,330
□ 농산물해외시장개척	9,345	9,559	9,994	10,773	12,735	12,748	13,736	18,646
○ 국제농산물박람회	3,108	3,542	4,098	3,953	4,105	4,105	4,213	5,350
○ 농산물수출활성화사업	1,025	879	1,100	1,045	1,300	2,961	1,745	4,800
○ 현지유통업체직수출	697	947	1,000	1,430	1,200	1,433	2,470	2,020
○ 수출홍보사업	3,458	3,250	2,755	3,195	4,780	2,858	3,837	5,130
○ 해외시장정보사업	1,057	941	1,041	1,150	1,350	1,391	1,471	1,346
□ 농축산물 판매촉진	25,955	26,605	25,421	28,882	28,882	28,882	28,882	32,684
(수출자금융자)	(2,133억원)	(4,691억원)	(4,765억원)	(4,226억원)	(3,324억원)	(3,353억원)	(3,370억원)	(3,230억원)

* 2005년 이후의 수출자금 융자는 수산물이 제외된 수치임.

2008년 9월까지 수출은 전년 동기대비 15.1% 증가한 2,050백만불을 기록하였으며, 과실·화훼·김치 등의 신선농산물 등은 증가하였으나 산림부산물은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연도별 농식품 수출동향

(단위 : 백만\$, %)

구 분	2001	2003	2004	2005	2006(A)	2007(B)	증감률 (B/A)
농림축산물합계	1,579.9	1,859.8	2,085.0	2,221.5	2,304.4	2,531.8	9.9
○ 신선농림축산물	521.0	507.5	549.7	608.2	535.5	597.1	11.5
○ 가공농림축산물	1,058.9	1,352.3	1,535.3	1,613.3	1,768.9	1,934.7	9.4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진흥과 사무관 변상문)

(3) 수산물 수출진흥 대책

우리나라 수산물 수출은 1988년 약 20억달러의 수출실적을 기록하여 국가 전체수출 금액의 3%를 차지하는 국가 중요 수출 품목이었다. 그러나 1988년을 점점으로 감소를 시작해 2000년 까지 15억달러 전·후의 수출로 국가 전체수출 금액의 0.9%를 유지해 왔으나, 국가경제규모의 확대에 따른 국가 수출증대와 중국, 태국 등 신흥 수산물 수출국가의 출현과 어업생산기반 약화 등 국내외 수출환경 악화로 2001년도에 12억달러대로 감소한 이래 매년 11억\$~12억\$ 내외의 정체를 보이고 있으며 총 수출액에서 차지하는 수산물 수출 비율도 2006년 이후 0.3%로 매년 감소하고 있는 추세이다.

그러나, 2008년 9월까지의 수출실적은 1,014백만달러로 2007년도 동기의 865백만달러에 비해 20%나 증가하여 2000년 이후 최고 실적을 기록하고 있다. 이렇게 수산물 수출이 크게 늘어난 이유는 연근해 및 원양 수산물의 안정적 생산과 국제수산물박람회 등을 통하여 우리 수산물의 우수성을 홍보하고 수산물 수출시장의 다변화를 추진해온 결과와 함께 2008년에 들어 엔화 및 달러 강세의 지속으로 우리나라의 유망 수출 품목인 참치, 김, 굴, 넙치 및 오징어가 주요 수출 시장인 일본, 중국, 태국, 미국으로의 수출이 크게 증가한데 기인한다.

2008년 수산물 수출의 특징은 작년에 이어 포클랜드 수역에서 조업하고 있는 오징어 채낚기 어업의 생산 호조로 중국으로의 수출이 증가하였고, 연근해 어업에서 삼치의 어획량 증가와 수출단가 상승으로 9월까지의 수출이 34,989백만달러로(6,113톤)으로 전년도 수출액 15,119백만달러를 초과하는 등 전 수산물 수출이 증가하고 있는데 있다.

수산업 수출은 WTO협상의 진전과 함께 각국과의 FTA협정 체결 등 국제 무역환경의 급격한 변화와 함께 수출용 원자재의 부족, 수산인력의 감소 및 인건비 상승, 국내수산물 소비의 증가 등 국내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고 있고, 최근에는 유가 강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중국 및 동남아국가와 일본의 강력한

수출드라이브 정책으로 우리의 수산물 수출에 많은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전망 되는 가운데 2008년도 수산물 수출 진흥을 위하여 다음과 같이 추진하였다.

첫째, 수산물 수출의 대내외적인 어려운 여건을 극복하고 WTO 및 FTA 협정 등 국제무역질서의 재편을 기회로 삼아 수산물 수출 진흥을 통한 잘사는 수산업·어촌을 실현하고 2012년까지 수산물 수출 25억\$ 달성을 목표로 하는 수산물 활성화 대책을 수립하여 2008년부터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둘째, 일본의 수산물 수입할당(IQ, Import Quota) 제도에 대하여 한·일 무역실무회의를 개최하고 수요자 할당 김에 대한 수입대행사 제도와 보증금 폐지, 다시마 조제품의 쿼터량 소진을 위한 제도 개선을 요청하는 등 수산물 수출확대를 위한 통상협력을 강화해 나가고 있다.

셋째, 수산물 수출시장 확대를 위한 기반을 구축하고자 국제식품박람회 참가 및 우리 수산물 우수성과 식문화를 널리 알리기 위해 로드쇼를 개최하였으며, 우리나라에서 생산되고 있는 최대 수출품인 김의 위생관리와 품질향상을 통한 수출 증대를 위하여 김 이물질 선별기 및 해조류 금속탐지기 지원을 확대하였으며 수입 바이어를 초청하여 수출촉진방안에 대하여 간담회를 개최하는 등 수산물 수출확대를 위해 각종 지원활동을 강화하였다.

넷째, 주요 타깃시장의 바이어 및 소비자들에게 우리의 우수 수산물을 널리 알리기 위하여 수출상품 카탈로그(KOREA EXPORT SEAFOOD)를 제작·배부하는 한편, 다양한 홍보매체(신문, 공항광고, 기내잡지, 박람회 가이드북 등)를 활용한 직간접 광고를 실시하였다.

다섯째, 체계적으로 수산물 해외시장 동향 등을 수집하여 정책고객 및 수출업체 등에게 매월 제공하였고, 상호 정보교환을 위한 수출 주력품목 및 유망품목을 중심으로 상호 수출정보 교환 및 수출정책 의견 수렴을 위한 품목별 수출정책 협의체를 구성·운영하였다.

(농림수산식품부 원양산업과 사무관 박형구)

(4) 농산물가공품 생산의 활성화

2007년말 현재 농산물가공업체 348개소가 운영중이며 가공업체의 전체 매출액은 2005년에 6,118억원을 기록하여 IMF직후인 1998년의 5,723억원에 비해 큰 신장세를 보이고 있다.

앞으로 가공산업분야에 대해서는 신규지원보다는 기존에 운영중인 업체에 대한 운영 및 시설 현대화 등 자금 지원을 내실화하면서 영세성과 경영능력 한계를 극복할수 있도록 경영지도, 포장디자인 개발, 마케팅 활동 등 소프트웨어 분야의 지원에 중점을 두어나갈 예정이다.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진흥팀 행정사무관 지일구)

나. 수입관리대책

(1) 농림분야

(가) 시장접근물량의 수입관리

UR 농업협상 결과에 따라 그동안 수입을 제한해왔던 농축산물을 연차적으로 관세화 개방하면서 국내시장질서의 유지와 국내 농업인을 보호할 필요가 있는 63개 품목에 대하여는 국내외 가격차에 해당하는 고율관세를 부과하였으며 물가 및 수급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일정물량에 대해서는 저율관세로 시장접근물량을 설정하였다.

저율관세가 부과되는 시장접근물량은 별도 수입 관리의 필요성이 있기 때문에 품목별로 지정기관배정방식, 수입권공매방식, 실수요자배정방식 등으로 관리방식을 구분하여 수입관리를 하고 있다.

그러므로, 국내외 가격차가 크거나 가격등락이 심한 참깨, 고추, 마늘, 양파 등 17개 품목그룹에 대하여는 국가에서 지정한 기관에서 직접 수입하여 판매

토록 하는 지정기관배정방식을 채택하고 있으며, 밤, 대추 등 6개 품목그룹에 대하여는 누구나 공개경쟁을 통하여 수입권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수입권 공매방식을 채택하고 있고, 옥수수, 대두 등 40개 품목그룹은 국내 수요자가 과거의 수입실적 등에 따라 수입권을 배정받아 직접 수입할 수 있도록 하는 실수요자배정방식을 채택하고 있다.

그리고 지정기관배정방식 운용과정에서 생긴 판매이익금과 수입권공매방식 운용과정에서 발생하는 공매납입금은 농업에 대한 재투자 재원으로 활용토록 함으로써 국내농업 보호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UR협상과정에서 합의된 시장접근물량은 1988~1990년 국내 평균소비량을 기준으로 하여 산정하였으나, 그 후 국내여건 변화로 국내생산이 부족한 품목은 저율관세 적용물량을 증량하여 국내 농축산물의 수급불균형을 해소할 수 있도록 하였다. 2008년도 증량품목은 사료용 원료인 옥수수, 보조사료, 사료용근채류 등과 국민 식생활 안정을 위한 원료농산물인 대두, 팥 등 14개 품목이다.

(나) 관련법상의 관세제도를 활용한 수입관리

(i) 할당관세

국내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농업용 원자재, 사료용 곡물 등 특정 품목의 관세를 인하하는 할당관세를 운용하고 있다. 2008년 할당관세 적용품목은 사료용 옥수수, 밀, 근채류 등으로 39개 품목에 할당관세를 적용하고있다.

(ii) 조정관세

수입이 급증하여 국내산업에 피해를 주는 품목에 대하여는 조정관세를 적용하여 양허세율 범위 내에서 관세를 인상, 국내산업을 보호하였다.

2008년 조정관세 적용품목은 당면, 찌쌀, 메주 등 6개 품목이며, 당면(45% → 40), 표고버섯(45% → 42)은 축소 적용하였다.

(iii) 특별긴급관세제도(Special Safeguard)

UR 협정상 관세화로 개방된 품목 중 수입물량이 급증하거나 수입가격이 하락한 품목에 대하여 특별긴급관세제도를 발동하여 추가관세를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 있어 관세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특별긴급관세부과에 관한 규칙(기획재정부령)을 개정하여 특별긴급관세 부과대상품목(물량기준 13개, 가격기준 25개)을 지정하고 2008년 9월말 현재 녹두, 팥, 인삼 등 5개 품목에 대하여 부과하였다.

(iv) 산업피해구제제도(Safeguard)

수입개방에 따라 특정물품의 수입 급증으로 관련 국내산업이 심각한 피해를 받았거나 받을 우려가 있는 경우에도 국내산업을 보호하기 위하여 산업피해구제제도를 운영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또한, 대중국 한시적 세이프가드조치(TSG) 및 자유무역협정 체결 등에 따른 예외적인 세이프가드조치도 발동할 수 있다.

(다) 농축산물 밀수근절대책 추진

국내가격 보다 현저히 낮은 중국산 농산물이 국내에 밀반입 되고 있어 이를 근절하기 위하여 관세청과 협조 아래 경찰청, 해양경찰청 등 관계기관이 합동으로 매년 단속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농산물의 저가신고를 방지하기 위하여 참깨, 콩나물콩 등 20개 주요품목을 대상으로 사전에 관세청과 협조하여 기준신고가격을 정하고 이 보다 낮게 신고되는 품목에 대하여는 정밀조사를 실시·단속하고 있다. 또한, 수입품이 국산으로 둔갑 판매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림수산식품부 산하 농산물품질관리원의 단속요원(1,100명)에게 사법경찰권을 부여하여 원산지단속을 강화하고 있다.

한편, 중국산 농산물의 휴대품 과다반입을 억제하기 위하여 휴대농산물의 면

세 한도량을 지속적으로 축소하였으며(80kg → 50), 2002년 1월부터 품목별 반입한도량 5kg(젓 1kg, 한약재 3kg 등)을 엄격하게 적용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 다자협상과 서기관 정종용)

(2) 수산분야

1997년 수산물 수입자유화 이후 저가의 외국산 수산물 특히 중국산 수산물 수입이 급증함에 따라 국내 생산어업인 보호 및 수산업기반의 유지·강화를 위하여

첫째, 2007년에는 냉동민어, 활농어 등 9개 품목에 대하여 조정관세를 부과하고 있으며, 저가 수산물의 수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새우젓, 활돔, 활뱀장어 등 3개 품목에 대해서는 증가·종량세(선택세) 방식을 적용하고 있다. WTO/DDA 및 FTA협상 등에서 무세화 또는 관세의 대폭적 인하가 논의 중이고 미국, 중국 등 주요 교역국에서 조정관세 철폐, 인하를 주장하고 있는 등 조정관세 유지에 어려움이 있으나 국내 수산업보호와 경쟁력 확보를 위해 통상마찰을 야기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관계부처와 협의·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둘째, 동남아시아국가연합(ASEAN) 회원국 정부와의 상품무역협정 체결을 통해 일정한 수입량까지는 저세율을 적용하고 일정범위를 넘는 수입물량에 대해서는 고율관세를 부과하는 관세율할당(TRQ) 제도를 2007년 6월부터 도입·시행하였다. 이와 함께 TRQ 적용 물량에 대한 법정부담금을 징수하여 수산발전기금의 재원으로 활용할 계획이다.

셋째, 중국산 수입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해 2001년 4월 「한·중 수출입 수산물 위생관리에 관한 약정」을 체결한 이후, 2004년 12월 「한·중 활어위생 약정」을 체결, 중국으로부터 수입되는 활어는 등록된 양식장에서 생산되고, 위생안전성을 보증하는 위생증명서가 첨부된 활어에 대해서만 수입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인도네시아 및 태국으로부터 수입되는 수산물의 위생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한·인니 수출입수산물 위생관리에 관한 약정」(2005.9.15 체결) 및 「한·태 수출입수산물 위생관리에 관한 약정」(2006.6.27 체결)을 체결하여 수입되는 수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였다.

넷째, 어류질병 감염으로부터 국내 생태계를 보호하고, 어업인 피해 방지를 위하여 붕어, 잉어 등 낚시터에 방류하는 어종에 대하여도 수산동식물 이식승인 대상품목에 포함시켜 통관전에 질병감염 여부에 대한 검역을 받아야 국내에 수입될 수 있도록 하였다. 또한, 안전한 수산물 공급 및 수산동물전염병을 체계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수산동물질병관리법률을 제정하였으며, 2008년부터는 식용으로 수입되는 모든 수산동물 질병검사를 도입할 계획이다.

다섯째, 수입수산물의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새로운 위해물질에 대한 모니터링 검사를 강화하여 기준규격을 설정함은 물론 안전성에 문제가 있는 품목에 대해서는 정밀검사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여섯째, 수입수산물 안전성 확보를 위하여 부적합 이력이 있는 해당국가·해당품목에 대하여는 특별관리 대상품목으로 지정하여 검사를 강화하고 신종 유해물질에 대한 정밀검사를 확대하고 있다.

일곱째, 2005년부터 수산물의 이력정보를 기록·관리하여 소비자에게 수산식품을 안심하고 선택할 수 있도록 하는 수산물이력추적제를 도입하여 김(조미김), 넙치(싱싱회), 굴(생굴) 등 10개 품목을 운영해오고 있으며, 2007년부터는 시장 확대를 추진 중이다.

여덟째, 수산물지리적표시제도를 도입하여 수입수산물과 차별화로 국내 수산물의 경쟁력 및 브랜드가치 상승으로 소비자의 수산식품위생안전 등 만족도를 제고할 계획이다.

(농림수산식품부 원양산업과 사무관 배은정)

(가) 수산보전제 도입 추진

WTO/DDA 협상과 동시다발적인 FTA 체결 등으로 대외시장 개방이 확대 추세에 있고, 고유가 등에 따른 어업경비 증가 등으로 수산업을 둘러싼 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국내 어업여건은 날로 어려워 지고 있다.

특히, 2001년부터 시작된 WTO/FTA 수산보조금 협상 결과가 우리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수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정부는 이러한 환경변화 속에서 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수산업을 유지하기 위해 수산업 구조조정, 자원관리 및 유지, 어장환경개선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수산보전제 형태의 보조금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수산보전제의 원활한 시행을 통한 어업인 경영 안정과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견인하기 위해 2007년도에는 자원보전형, 환경친화형, 공익기능 유지형 수산보전제 사업 7개를 발굴하였고, 시행과정상의 문제점 등을 파악하기 위해 우선시행 가능한 “조건불리 지역 보전제”와 “친환경기자재(부표)사용 지원 보전제”의 도상연습을 실시하였다.

또한 2008년 상반기에는 어업조건불리지역 보전제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는 조건불리지역 보전제 세부 실시계획 수립을 위한 D/B 구축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연말에 용역이 완료될 경우 한미 FTA 체결에 따른 국내대책과 연계된 소득보전직불 및 폐업지원을 위한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 사업시행지침을 수립할 계획이다.

2008년 수산분야 보전제 관련 예산은 2007년 예산인 307억원 대비 69%, 212억원이 증액된 519억원으로 수산분야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7% 수준이다. 2008년 수산분야 보전제 예산이 전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급증한 것은 2007년 4월 한미 FTA 체결을 계기로 직접적 피해지원을 위한 소득보전직불

및 폐업지원사업 등이 신규로 도입된 데 기인한다.

2009년부터는 친환경 기자재(부표) 사용 보전제, 조건불리 지역 보전제를 우선 도입할 수 있도록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는 한편, 시범사업을 통해 본 사업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한, 고유가에 따른 어업인 지원대책과 연계하여 유류 의존도가 높은 근해 어업에 대해 금어기가 아닌 소형어 출현시기에 일시 조업중지 어선에 대한 자원보호형 휴어보전제(어린고기 보호 직불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현재 추진중인 해양폐기물 정화사업(폐어구 수거), 친환경 배합사료 지원사업, 생분해성 어구지원 등 소득 보전적 성격의 사업은 장기적으로 수전보전제도로 통합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농림수산식품부 수산통상과 사무관 최창석)

6. 친환경농업의 육성

소비자들의 식품안전 및 건강에 대한 관심 증대로 유기농산물을 비롯한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늘어나고 있다. 또한 그간 증산위주의 농업정책 추진과정에서 화학비료와 농약의 과다사용, 축산분뇨 발생증가 등으로 인해 농경지와 농업용수가 오염되는 등 농업환경이 악화되어 지속가능한 농업생산이 위협받고 있다. 이에 우리 농산물의 품질경쟁력을 높이고, 우리 농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친환경농업을 적극적으로 육성하고 있다.

우리농업을 지속가능한 농업으로 육성 발전시키기 위하여 1996년 7월 「21세기를 향한 농림환경정책」을 수립하였으며, 또한 친환경농업정책을 제도적으로 뒷받침하기 위하여 1997년에 환경농업육성법을 제정하고 2001년 1월에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계획(2001~2005), 2006년 2월에 친환경농업육성 5개년계

획(2006~2010)을 수립하여 친환경농업실천기반조성, 친환경농업육성지원, 산림환경개선 등에 대한 중장기적인 비전을 제시하였다.

2004년 4월에는 그간의 친환경농업 추진성과를 바탕으로 「친환경농업육성과 농산물안전성 확보대책」을 수립하였다. 이 대책에서는 2013년까지 친환경인증 농산물 생산비중을 10%(저농약제외) 수준까지 올리고, 2013년까지 화학비료와 합성농약 사용량을 현재의 60% 수준으로 감축한다는 목표와 그 실천계획을 수립하였다.

2005년 2월에는 친환경농자재 중 사용량이 많은 키토산·목초액·천적에 대해 부가가치세 영세율을 적용토록 관련제도를 개선하여 실천농가의 자재구입 부담을 완화하였다. 또한 친환경농산물 소비량증가 등의 여건변화에 맞게 제도적으로 뒷받침 할 수 있도록 2006년 9월 친환경농업육성법을 개정·공포하여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인증종류 축소(4종류→3종류), 인증기관에 대한 유효기간 신설(5년)등 친환경농산물 인증사후관리 시스템을 개선하였다.

2006년부터는 경종과 축산을 연계한 대규모 친환경농업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시군단위로 1,000ha의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06년에 3개소(완주, 순천, 울진)를 선정하였고, 2007년에는 6개소(양구, 옥천, 익산, 장흥, 성주, 산청)를 추가 선정하였다.

2007년에는 친환경농산물 생산량 증가에 따른 소비촉진을 위해 친환경농산물 자조금을 16억원으로 확대 조성하였다. 또한 초등학생용 학습교재를 제작하여 서울 등 대도시 초등학생(14만명)들에게 보급하였다.

2008년에는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자매장 활성화를 위해 소비자-생산자 연계단체에 소비지매장 설치자금 지원사업(10개소, 24억원)을 시범도입 하였으며,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 우수사례 및 식단매뉴얼을 3만부 제작하여 보급하였다. 또한, 학교급식 활성화를 위해 500여명의 대도시 학교장 등을 대상으로 친환경농업 현장체험을 실시하였다.

이와 함께 경종과 축산이 연계하는 자연순환농업을 확산시키기 위해 2005년 9월에 “자연순환농업팀”을 구성하였으며, 2006년 6월에 자연순환농업 추진대책을 마련하였다. 이후 2008년 4월에 ‘자원순환팀’으로 개편되었다.

(농림수산식품부 친환경농업팀 서기관 조백희)

가. 농업환경오염 경감대책 추진

농업환경은 농약과 화학비료의 과다사용, 축산분뇨 및 농약빈병·폐비닐·폐농기계와 같은 폐영농자재로 인하여 오염되고 있는데, 농사 중 발생하는 오염원별 대책은 다음과 같다.

(1) 농약 사용량 감축을 위한 기술의 개발·보급

우리나라 전체사용량은 1991년 27천톤으로 정점을 이룬 후 점차 감소하고 있으며, 2007년에는 24천톤을 사용하였다. 그러나 모든 농약은 독성이 있기 때문에 잘못 사용할 경우에 사람을 중독시키고 농작물과 토양 및 수질을 오염시키는 등 환경오염을 유발시키고 있어 사용량을 최대한 줄여나가면서 안전사용 기준을 잘 지켜나가도록 지도하고 있다.

정부는 농약사용량 감축을 위해 병해충종합관리(IPM)기술개발·보급을 중점 추진하고 있다. 병해충 정밀예찰을 통한 적기방제, 농약절감형 재배 기술지도, 천적이용 기술 등의 보급과 함께 생물농약 등 독성이 낮은 농약을 개발·보급 중이다.

작물별로 농약사용량 추세를 보면 벼농사는 농약 사용량이 많이 줄고 있으나 시설원예 작물의 경우 농약사용량이 감소되지 않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 친환경농업팀 농업사무관 윤승우)

(2) 시설원예작물에 대한 천적방제 지원

합성농약 사용량이 많은 원예작물 재배에 천적방제를 정착시켜 친환경·안전농산물생산 체제를 구축하고 실천농가의 소득증대는 물론 농약살포 노동력 절감 및 농약피해 방지 등을 통한 우리농산물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2005년에 시설원예작물에 대한 천적방제지원사업을 도입하였다.

천적방제는 2013년까지 시설원예작물 전체 재배면적의 20%수준인 20천ha를 지원하고 정책과급효과를 통한 농가자체방제를 포함하여 50%수준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2005년에는 원예작물 중 딸기, 토마토, 파프리카, 고추 등 4개품목 639ha에 대하여 총사업비 22억원을 투자하였으며, 2006년에는 대상품목을 7개 품목으로 늘리고 지원면적도 1,000ha로 늘려 국고보조금 38억을 지원하였다.

2007년에는 1,000ha 면적을 대상으로 천적해충방제비 38억원을 국고로 지원하였으며 향후 2008년에는 천적방제 대상 작목에 참외와 수박을 추가하고 방제면적도 2,000ha, 국고 45억원으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앞으로 천적방제 체제가 정착될 경우 그동안 수출과정에서 농약잔류기준 초과로 반품되는 사례가 현저히 감소되고, 우리농산물에 대한 신뢰도가 높아지는 등 수출활성화에도 크게 기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농림수산식품부 친환경농업팀 농업사무관 윤승우)

(3) 화학비료 사용량 감축을 위한 비료 지원체제 개편 및 유기질비료 지원 확대

1999년 화학비료 사용량은 성분량기준 약 84만톤으로 농촌진흥청이 추정한 적정시비량 62만톤보다 약 30%가 더 사용되고 있어 농경지 토양에 염류가 과다 집적되고 있다. 비료를 과다 사용할 경우 농작물에 흡수되지 않은 잉여 비료성분이 지표수에 유입되어 하천과 호소의 부영양화를 초래하는 등 환경오염을 일으키게 된다.

이에 따라 2013년까지 비료 사용량을 40% 절감하고 소비자가 원하는 고품질친환경농산물을 공급하기 위해 1991년부터 추진해온 화학비료 판매가격에 대한 정부 보조를 2003년부터 단계적으로 감축하여 오다가 2005년 7월 1일부터 완전 폐지하였으며, 대신 유기질비료 지원을 2006년도 120만톤 420억원, 2007년 135만톤 473억원으로 연차적으로 확대하였다.

아울러 토양정밀검정에 의한 시비처방, 작물별 적정시비 기준설정, 주문형 배합비료, 축분퇴비 등 환경친화형 비료를 확대 공급함으로써 비료사용량 감축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유기질비료 지원 확대 등의 노력으로 화학비료 총사용량(성분량 기준)은 화학비료 정부보조 폐지 당시인 2005년에 722천톤이었으나 2007년에는 친환경농업 확대 등으로 인해 사용량이 631천톤으로 감소하였다.

(농림수산식품부 친환경농업팀 농업사무관 조정래)

(4) 가축분뇨의 자원화

가축분뇨는 적절하게 관리하여 자원화(퇴비·액비)하면 유기물을 다량 함유한 비료로 유익하게 이용할 수 있다. 가축분뇨를 활용한 퇴·액비는 친환경농산물 생산과 토양의 물리적 성질 개량 등에 기여하며 작물의 증수와 품질향상에 효과가 있고, 화학비료 사용을 대체함으로써 환경을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축산농가에서는 가축분뇨를 자원화하고 경종농가에서는 가축분뇨 퇴·액비를 토양에 환원하는 체계가 구축되어야 한다.

이를 위해, 가축분뇨의 자원화를 위한 시설자금을 지원하되 축사구조와 지역 여건에 적합한 처리공법의 시설 설치를 유도하고 있다. 또한, 경종농가가 이용할 수 있는 품질이 검증된 퇴·액비 생산을 위해 농가컨설팅을 실시하고 있다. 또한, 농가 스스로 농장관리, 환경개선제 사용, 분뇨분리 등 악취저감 조치를

실시토록 유도하고 농촌진흥청, 생산자단체 등을 통해 지도체제를 구축해 나가고 있다.

액비의 원활한 유통을 위하여 액비유통센터(63개소, 2007년)를 지정하여 액비 수거·운반·살포장비 등의 구입을 지원하고, 경종농가가 편리하게 액비를 이용할 수 있도록 액비저장조 설치를 지원(2007, 716개소 → 2008계획, 800개소) 하였다.

또한, 2005년 9월 자연순환농업팀을 구성하여 2006년 6월 ‘가축분뇨를 활용한 자연순환농업추진대책’을 수립하여, 가축분뇨의 체계적인 관리 방안을 마련하고 관련 기관별 세부추진과제를 분류하여 축산농가·경종농가의 퇴·액비 생산·이용에 대한 인식 전환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아울러, 2006년 9월 환경부와 함께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과, 2007년 11월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 규칙’을 제정하여 가축분뇨의 이용 촉진 및 관리강화의 계기를 마련하였다. 동 법령에는 가축분뇨에 친환경개념을 도입하여 퇴·액비 등으로 자원화하도록 제도적으로 뒷받침하는 한편, 지속가능한 축산업 및 자원순환형 농업 발전과 환경보전을 실현하기 위한 내용을 반영하였다.

그리고 2006년 3월 폐기물 배출에 의한 해양오염 방지에 관한 ‘국제협약(런던협약 72)’이 발효됨에 따라 2007년 7월에 가축분뇨 해양배출량을 연간 50만 톤 이상 감축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가축분뇨 해양배출 감축대책’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다.

그동안 전문가의 평가 및 검증없이 가축분뇨처리시설을 시공함에 따라 가동 중단, 불량퇴비 생산 등의 시행착오가 일부 발생함에 따라, 2006년부터 가축분뇨자원화 시스템 평가를 실시(2006. 23개소, 2007. 16개소)하여 공법에 대한 효율성과 투명성을 증진시켰고, 농가 사후관리 강화 및 지속적인 기술개발 의욕 고취 등을 위한 기반 여건을 마련하였다.

(농림수산식품부 자원순환팀 농업사무관 하옥원)

(5) 폐농기계, 농약빈병 등 폐영농자재 수집

농기계 보유대수는 2006년말 현재 2,505천대로서 이 중 약 0.5%인 12천대정도가 폐농기계인 것으로 추정되며, 그 중 30%를 수거처리 하였으며, 나머지는 농가에서 부품으로 사용하기 위해 보유 중이다. 2007년에도 2006년도 규모로 폐농기계를 지속적으로 수거할 계획이다.

봄·가을 영농기 이전에 농업인의 적기 영농실현 및 농기계 수리불편 해소를 위해 전국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농기계순회수리봉사시 시장·군수 책임하에 무단방치된 폐농기계를 집중 수거토록 하고 있으며, 시장·군수가 마련한 장소 이외에 폐농기계를 방치할 경우 폐기물관리법에 의거 1백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징수토록 하는 등 수거체계를 개선하였다.

농약빈병과 폐비닐은 2005년의 경우 각각 54백만개, 265천여톤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 되는데 환경부 산하 환경자원공사를 통하여 수거해오고 있으나, 수거실적이 각각 76%, 66%수준이며, 폐비닐수거율이 낮아 이로인해 농촌환경이 오염되는 요인이 되고 있다.

이에 따라 3월과 11월을 중점 수집기간으로 정하여 일제수집을 실시하는 등 지속적인 수집캠페인을 전개해 나가고 있으며, 2004년부터 폐비닐 수거비 지원 사업을 추진하여 2004년 85천톤, 2005년 85천톤 수거에 대해 각각 26억원을 지원하였다. 또한 2006년도 100천톤과 2007년도 100천톤 수거에 대해 각각 30억원을 지원하였다.

(농림수산식품부 친환경농업팀 농업사무관 윤승우)

나. 농업환경의 유지·개량

(1) 토양개량사업

산성토양이나 유효규산함량이 낮은 농경지를 대상으로 석회와 규산을 주기적으로 공급하여 토양개량을 추진하고 있다. 1996년까지 보조 50%, 자담 50%로 토양개량제를 공급하였으나, 1997년부터는 전액 보조사업(국고 80%, 지방비 20%)으로 전환하였다.

1999년부터는 규산 5년, 석회 6년 1주기, 2001년부터는 공급물량을 늘려 규산 4년, 석회 5년 1주기로 공급하였으며, 2004년부터 규산, 석회 모두 4년 1주기로 공급토록 개선하여 토양개량효과를 높여나가고 있다.

2005년에는 국고 397억원으로 637천톤을 공급하였고, 2006년에는 국고 422억원으로 644천톤을 공급하였으며, 2007년에는 국고 401억원으로 547천톤을 공급하였고, 2008년에는 국고 404억원으로 491천톤의 토양개량제를 공급하였다.

특히, 농가의 살포편의를 위하여 가루형태의 분상제를 알갱이형태의 입상개량제로 전환을 추진하여 2006년 300천톤 47%에서 2007년 337천톤 62%로 2008년에는 440천톤 90%로 입상공급을 확대하였다.

(농림수산식품부 친환경농업팀 농업사무관 조정래)

다. 친환경농업 실천농가 육성사업 추진

(1) 친환경농업지구구성사업

상수원보호구역 또는 상수원 주변의 친환경농업실천이 가능한 지역에서 10농가 10ha이상의 집단화된 단지를 중심으로 토착미생물 배양·증식 및 유기자원 생산에 필요한 시설·장비, 퇴비제조시설, 환경친화형 비닐하우스 시설 등

을 지원하고 있다.

친환경농업지구는 2007년 말까지 879개소가 조성되었으며, 2008년에는 총사업비 300억원을 투입하여 69개의 지구를 추가 조성하고 있다. 친환경농업지구는 장기적으로 2013년까지 읍·면당 1개소를 목표로 총 1,500개소를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농림수산식품부 친환경농업팀 농업사무관 윤승우)

(2) 광역친환경농업단지 조성사업

효율적인 친환경농업 추진과 농업환경개선을 위해서는 보다 광역화된 단위로 추진할 필요가 있어 시·군단위 환경민감지역 등을 대상으로 축산과 경종이 연계하는 광역단위 자연순환형 친환경농업단지 조성을 2005년부터 추진하고 있다.

광역친환경농업단지는 2013년까지 시·군당 1,000ha정도의 단지를 총 50개 조성할 계획이며 2006년에 3개지역, 2007년에 6개지역에 대해 총사업비 900억 원을 투자하여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2009년 9개소 조성을 시작으로 본사업을 본격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농림수산식품부 친환경농업팀 농업사무관 윤승우)

(3) 친환경농업직접지불사업

농촌환경을 개선하고 농업을 지속적으로 발전시켜 나가기 위해 화학비료와 농약 사용을 억제하기 위한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를 1999년부터 도입하여 실시하고 있다.

친환경농업직접지불제는 그 동안 상수원보호구역 등 환경규제지역내의 농경

지를 대상으로 친환경농업 실천기준을 이행하는 농업인에게 지원하였으나 2002년부터는 수준 높은 친환경농업으로 육성·발전시켜 나가기 위하여 전국의 저농약이상 친환경농산물 인증 농가를 대상으로 친환경농업 실천에 따른 소득감소분의 일부를 지원하고 있다.

1999년부터 2001년까지는 10천ha을 대상으로 매년 57억원을 지원하였으며, 2002년에는 5천ha에 30억원을 지원하였고, 2003년에는 10천ha을 대상으로 30억원, 2004년에는 13천ha에 45억원을 지원하였으며, 2005년에는 21천ha을 대상으로 82억원을 지원하였으며, 2006년에는 35천ha을 대상으로 141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였으며, 2007년에는 45천ha을 대상으로 175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하였으며, 2008년에는 76천ha을 대상으로 263억원의 보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특히, 논·밭의 경우에는 밭과는 달리 2005년까지는 논농업직접지불금에서 일정액의 인센티브를 지원하는 수준으로 지원하여 왔으나 2006년부터는 논과 밭으로 분리된 직불사업을 친환경농업직접지불사업으로 통합하고 논에 지급하는 단가도 인상하였다. 즉, 논 저농약의 경우 ha당 217천원을 신규 지급하고, 논 무농약은 150천원에서 307천원으로 지급액을 인상하며, 논 유기의 경우에는 270천원에서 392천원으로 지급단가를 인상하였다.

(농림수산식품부 친환경농업팀 농업사무관 이상집)

(4) 친환경농산물 유통활성화 추진

친환경농산물의 확산으로 유기재배 농산물 등 친환경농산물의 생산량이 늘어남에 따라 친환경농산물의 신뢰도제고 및 안정적인 판로확보를 위해서 소비촉진 홍보, 구매자금 지원, 품질관리강화 등 판매지원대책의 추진을 강화하고 있다.

친환경농산물의 소비촉진 및 신뢰제고를 위해 친환경농산물 자조금을 2006년 8억원을 신규로 조성하였고 2007년에는 16억원으로 확대조성하여 각종 대

중매체 홍보, 판촉행사, 학교급식확대 등을 추진 중이며, 2008년에는 초등학교 교장단·영양사 및 학부모들을 대상으로 친환경농업 현장체험 및 교육을 실시하고 있다.

친환경농산물에 대한 신뢰도 향상을 위해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과 농협이 중심이 되어 주기적인 유통실태 및 품질관리 점검을 실시하여 친환경농산물의 신뢰성을 높여나가고 있다.

친환경농산물의 연중 안정적인 공급을 위해 친환경농산물 직거래자금을 1999년부터 지원하였고, 2007년도에는 산지유통활성화자금 50억원을 신규로 추가 지원하여 총 250억원을 계약, 수매 등의 용도로 활용하고 있으며, 앞으로 더욱 확대해 나아갈 계획이다.

또한,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확대를 위해 친환경농산물 학교급식이 지자체에서 활발히 이루어져 2007년에는 103개시·군에서 698억원을 지원(5,650여개 학교)하였고, 2008년에는 126개시·군에서 786억원을 지원(6,991여 학교)하여 꾸준히 확대하여 나갈 계획이다.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 농협, 친환경농업단체 및 소비자단체와 연계한 학교급식 등 대량수요처 발굴, 소비자의 현장체험 확대, 수매자금지원 확대 등을 적극 추진하고 친환경농산물의 우수성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 및 품질관리를 강화함으로써 친환경농산물의 유통활성화를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농림수산식품부 친환경농업팀 농업사무관 김수일)

7. 농어가소득안정 및 경영위험관리체계 구축

가. 농어가소득안정제도 확대방안

(1) 농림분야

직접지불제는 WTO체제 출범이후 가격지지정책보다 소득보전효과가 크고 시장왜곡효과가 작은 것으로 평가되어 전 세계적으로 농업을 보호하기 위한 방안으로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는 1997년 경영이양직불제를 도입한 이후 1999년 친환경농업직불제, 2003년 쌀 생산조정제(시범사업), 2004년 폐업지원, FTA 피해보전 직불제, 친환경축산 직불제(시범사업), 조건불리지역 직불제, 2005년 쌀 소득보전 직불제를 연차적으로 도입하여 시행하고 있다. 2008년 직불제 관련 예산은 19,475억원으로 농업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22.4%수준으로 2007년도에 비해 다소 감소하였다.

최근 유류비 증가 등 생산비 변동으로 경영 불안정성이 커지고 있고 FTA/DDA 등 농산물 시장개방 가속화에 따른 농산물 가격하락 전망으로 농업소득 불안정성이 증폭되어 직불제 확대 등 소득 안정화 대책에 대한 농업인의 요구가 날로 증가하고 있다.

이를 위해 환경·생태 보호 등 농어업·농어촌의 다원적 기능을 강화하는 한편, 농어가 소득안정화 위주로 직불제를 개편·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 WTO의 허용보조유형을 최대한 활용하여 조건불리지역직불제, 친환경직불제 등 공익형 직불제 확대를 추진하고 전업농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경쟁력 제고를 위해 「농가단위 소득안정제」를 도입하여 농가 경영안정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다.

또한, 한-미 FTA 등 농산물 시장 개방으로 피해를 입을 우려가 있는 농업인을 지원하기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 계획이다. 대상품목 확대(시설포도, 키위 → 피해받은 전품목), 피해보전비율 상향 조정 (80% → 85%) 등 지원조건을 개선하여 현행 FTA 피해보전직불제를 보완하고, 고령농의 생활안정 및

전업농 중심의 규모화 촉진을 위해 대상농지 확대(진흥지역내 논 → 진흥지역내 논·밭·과수원), 지급연령 확대(63~70세 → 65~75세) 등 경영이양직불제를 실효성있게 확대 개편한다.

아울러, 국민연금보험료, 영유아 양육비, 취약농가인력 지원 등 고령 농업인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시책 강화 추진 등 농촌 사회안전망도 확충할 계획이다.

(농림수산식품부 농가소득안정추진단 행정사무관 이용직)

(2) 수산분야

(가) 수산보전제 도입 추진

WTO/DDA 협상과 동시다발적인 FTA 체결 등으로 대외시장 개방이 확대 추세에 있고, 고유가 등에 따른 어업경비 증가 등으로 수산업을 둘러싼 환경이 급변하는 가운데 국내 어업여건은 날로 어려워 지고 있다.

특히, 2001년부터 시작된 WTO/FTA 수산보조금 협상 결과가 우리 수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므로 수산업의 안정적 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정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정부는 이러한 환경변화 속에서 수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지속적인 수산업을 유지하기 위해 수산업 구조조정, 자원관리 및 유지, 어장환경개선과 관련된 사업을 수행하는 수산보전제 형태의 보조금 사업을 발굴하여 추진할 예정이다.

수산보전제의 원활한 시행을 통한 어업인 경영 안정과 수산업 경쟁력 강화를 견인하기 위해 2007년도에는 자원보전형, 환경친화형, 공익기능 유지형 수산보전제 사업 7개를 발굴하였고, 시행과정상의 문제점 등을 파악하기 위해 우선시행 가능한 “조건불리 지역 보전제”와 “친환경기자재(부표)사용 지원 보전제”의 도상연습을 실시하였다.

또한 2008년 상반기에는 어업조건불리지역 보전제 도입을 위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였고, 하반기에는 조건불리지역 보전제 세부 실시계획 수립을 위한 D/B 구축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며, 연말에 용역이 완료될 경우 한미 FTA 체결에 따른 국내대책과 연계된 소득보전직불 및 폐업지원을 위한 지급기준, 지급방법 등 사업시행지침을 수립할 계획이다.

2008년 수산분야 보전제 관련 예산은 2007년 예산인 307억원 대비 69%, 212억원이 증액된 519억원으로 수산분야 전체 예산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3.7% 수준이다. 2008년 수산분야 보전제 예산이 전년에 비해 상대적으로 급증한 것은 2007년 4월 한미 FTA 체결을 계기로 직접적 피해지원을 위한 소득보전직불 및 폐업지원사업 등이 신규로 도입된 데 기인한다.

2009년부터는 친환경 기자재(부표) 사용 보전제, 조건불리 지역 보전제를 우선 도입할 수 있도록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하는 한편, 시범사업을 통해 본 사업으로 확대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또한, 고유가에 따른 어업인 지원대책과 연계하여 유류 의존도가 높은 근해 어업에 대해 금어기가 아닌 소형어 출현시기에 일시 조업중지 어선에 대한 자원보호형 휴어보전제(어린고기 보호 직불제)를 도입할 계획이다.

현재 추진중인 해양폐기물 정화사업(폐어구 수거), 친환경 배합사료 지원사업, 생분해성 어구지원 등 소득 보전적 성격의 사업은 장기적으로 수전보전제도로 통합하여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농림수산식품부 수산통상과)

나. 농산어촌의 다양한 소득원 개발

(1) 도시와 농촌의 교류 활성화

① 2007년 이행실적

주5일 근무제 실시, 교통망 확충, 노령연금의 정착 등으로 농촌관광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함에 따라 국민들이 농업·농촌의 다원적 기능을 인식하기 시작했으며, 농촌체험 관광의 수요가 증가하고 그 형태도 유명 관광지 위주의 대중관광에서 가족중심의 체험 관광같은 대안관광 형태로 변화하고 있다. 이러한 여건변화를 이용하여 농업의 부가가치 증진 및 농가소득 향상을 도모하기 위한 다양한 형태의 농촌관광 및 도농교류 시책을 추진하였다.

농촌관광 및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시책의 기본방향은 농촌을 도시민이 찾아와서 보고, 쉬고, 체험하고, 즐기고, 농산물직거래로 활력이 넘치는 체험·휴양 공간으로 조성하고, 친환경농업, 자연경관 등을 활용한 농산어촌 체험관광 활성화를 통한 농업 부가가치 증진 및 농가소득 향상, 도농교류 및 농촌체험행사를 통한 농업·농촌 가치홍보 등으로 설정하였다.

도시민의 수요에 부응하는 농촌체험 휴양기반을 마련하기 위해 녹색농촌체험마을을 2002~2007년까지 274개 마을을 조성하였으며 2008년도에는 90개 마을을 신규조성 하였다.

농촌체험마을이 내실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해 2007년에 50개 마을을 대상으로 1인1촌 전문가 컨설팅을 지원하고 농촌체험 활동 중 사고발생에 대비한 보험가입을 지원(65개마을) 하였다. 또한, 농산어촌체험마을의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2007년에 150개 마을을 대상으로 마을사무장을 채용하는 비용 일부를 지원하여 체험 프로그램 개발, 운영 등 농산어촌체험관련 업무를 담당하게 하였다. 또한 관련부처에서 추진중에 있는 농산어촌체험마을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 관계 부처간 협의체를 운영하는 등 긴밀한 협조

체계를 유지하고 있다.

상향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농촌관광 및 지역개발사업의 주체 역량 강화를 위해 ‘중장기 농촌지역개발 인력육성대책’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다. 2007년도에는 지역주민, 공무원, 도시민 등을 대상으로 농촌지역개발 리더십육성, 농촌마을·녹색농촌체험마을 동기화과정, 사업주제별 특화과정, 전원생활체험과정, 농촌마을종합개발 집체·순회교육 등 6개 과정 25개 학습분야에 7,618명에게 교육을 실시하였다.

아울러 농촌주민 스스로 아름답게 가꾼 마을을 평가하는 마을가꾸기 경진대회를 개최하였으며, 도시민과 출향인사 등을 대상으로 ‘내고향 잠재 자원 개발 콘테스트’를 실시하는 등 농촌마을 홍보를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농촌관광 및 도농교류를 활성화하기 위해 지속적인 제도개선도 추진하고 있다. 도시민의 농촌에 대한 투자를 촉진하기 위해 33m²이하의 주말주택 및 마을공동 농촌체험시설에 대하여는 농지보전부담금 감면대상에 포함되도록 농지법시행령을 개정하였다. 또한, 도농교류의 체계적 지원을 위해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을 마련(2007.12.21 국회통과)하였다.

도농교류 및 농촌체험·휴양에 대한 국민적 관심 및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1사1촌운동, 농산어촌체험박람회, 여름휴가 농산어촌에서 보내기 캠페인, 농촌문화 체험기 공모, 도농생활체험캠프, 도농교류유공자 정부포상 등 다양한 홍보 및 마케팅 활동을 전개하였다.

1사1촌 운동은 농협과 전경련 등 민간주도로 기업·단체와 농촌마을간 자매결연을 맺고 상호교류를 통하여 상생을 도모하는 범국민운동이다. 2007년 12월 말 현재 8,114건의 1사1촌 자매결연 체결로 농산물직거래 333억원, 일손돕기 82억원, 농촌체험 및 기증 138억원 등 총 553억원 수준의 교류활동이 이루어져 도·농간 교류활성화에 큰 성과가 있었던 것으로 조사되었다.

② 2008년 향후 계획

농촌체험관광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될 것으로 전망됨에 따라 농가소득증대 등 농촌지역 활력 증진을 도모하기 위해 다양한 형태의 도농교류 활성화 시책을 보다 더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도시민의 여가수요 증가에 부응하는 농촌체험·휴양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농촌체험관광 등 농촌지역개발을 주도할 지역의 역량 강화를 위해 중장기 인력육성대책에 따라 전문교육 등을 추진하며, 농촌체험관광 등 도농교류에 대한 국민적 관심 제고 및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다양한 홍보활동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도시민의 수요에 부응하는 농촌체험 휴양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기 위해 녹색농촌체험마을을 2008년 90개 마을(총 364), 2009년에는 78개 마을(총 442)을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농산어촌체험마을사업을 추진하는 관계부처간 긴밀한 협조체제를 유지하여 사업간 연계를 통한 효율성을 극대화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도시민의 방문여건 개선을 위해 농촌체험활동 중 발생할 수 있는 안전사고에 대비한 보험가입을 지원하고, 농촌체험관광 우수마을을 발굴·홍보하기 위한 농촌마을가꾸기 경진대회를 개최할 계획이다.

상향식으로 추진되고 있는 농촌체험관광사업 등 농촌지역개발을 주도할 지역의 역량 강화를 위해 다양한 맞춤형 교육을 확대 실시(2008년 4,323명 계획)하는 한편, 관련 지원시스템을 체계적으로 구축해 나갈 계획이며 상향식 농촌체험관광 등 농촌지역개발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지식 확산을 위한 관련 교재를 개발하여 농촌마을 등에 보급할 것이다.

또한, 농촌체험관광 활성화 촉진을 위해 마을에서 농촌체험관광 사업추진과정에서 전문가로부터 수시로 자문을 받을 수 있는 '1인1촌 전문가 지원시스템'

운영과 농촌체험관광 관련 업무를 담당하는 마을사무장 운영에 대한 지원을 계속 해 나갈 계획이다.

농촌체험관광 등 도농교류에 대한 국민적 관심 및 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1사1촌운동, 농산어촌에서 휴가보내기 캠페인 전개, 농촌문화체험기 공모, 마을가꾸기경진대회, 도농교류 정부포상, 그린포럼 등 다양한 홍보 및 마케팅 활동을 전개해 나갈 계획이다.

1사1촌 운동·농촌체험관광 등 도농교류 활성화에 크게 기여한 사람들에게 자긍심을 고취하고, 도농교류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동기를 유발하기 위해 정부포상을 실시할 계획이다.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계획으로, 농촌체험관광 등 도농교류에 대한 체계적인 지원근거로 「도시와 농어촌간의 교류 촉진에 관한 법률」 시행령·시행규칙을 제정하여 시행(2008. 6) 중이다.

(농림수산식품부 도농교류과 행정사무관 김왕근, 행정사무관 김홍철, 사무관 전영미)

(2) 향토자원 발굴 등 농촌자원의 산업화 추진

정부는 FTA 등 시장개방 확대에 의한 농어업위축 → 일자리축소 → 농어촌활력 저하의 악순환을 끊기 위해 향토자원 발굴·육성 등 농어촌자원의 산업화를 통한 일자리 창출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 이는 그동안의 농외소득 증대 차원을 넘어 다양한 농촌자원의 산업화 정책 추진으로 농업분야 구조조정에 따른 손실을 보완하는 데도 어느 정도 역할을 할 것으로 본다.

정부는 2007년 시범사업을 시작으로 2013년까지 200개의 향토자원 발굴·육성을 목표로 농어촌지역의 사업역량 강화 제고 및 지속가능한 사업체계를 구

축해 나가고 있다. 또한, 향토산업이 지역 핵심전략 사업으로 육성될 수 있도록 향토자원 개발을 위한 시설·장비 등 H/W분야와 함께 지적재산 권리화, 연구용역·컨설팅, 디자인·브랜드 개발, 네트워크 구축 등 S/W분야에 걸쳐 포괄 지원하는 방식으로 사업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향토자원육성 발굴계획

구 분	추진목표(13년)	2007까지	2008계획	2009이후
사업량(개)	200	19	30	151

* (2007년) 19개, 국고지원 43억원 → (2008) 30, 90 → 매년 30개 → (2013) 200

한편, 농어촌지역에서는 정부정책 사업이 다양하게 추진되고 있으나, 사업간에 상호 연계성이 부족하고 지역의 역량 및 자율성 강화를 위한 체계적인 접근도 미흡한 상황이다. 이러한 상황을 반영하여 정부는 관계부처 합의(2006. 8)를 거쳐 행정자치부에서 추진하던 낙후지역 신활력지역지원사업을 농림부로 이관(2007. 1)하고 2008년 신활력지역지원사업과 유사한 향토산업·특화품목육성사업을 포괄하는 시군단위 「농어촌활력증진계획」(2008~10년)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다.

농어촌활력증진사업 지원 계획(2008~2010)

사업년도	사 업 비(억원)			
	계	국 비	지방비	민자 등
2008~2010	19986	10,678	4,012	5,296
2008	7,365	3,420	1,772	2,173
2009	6,550	3,816	1,160	1,574
2010	6,071	3,442	1,080	1,549

「농어촌활력증진사업」은 제1기 신활력지역 지원사업을 통해 구축된 지역 사업추진체계와 역량을 바탕으로 성과실현에 중점을 둔 목표관리 방식의 사업으로 142개 시·군이 참여, 지역산업 발전에 필요한 인재양성, 산·학·연 네트워크, 선도산업 마케팅, H/W 보완투자 등을 추진하고 정부는 3년간 국고 1조원 규모를 지원할 계획이다.

앞으로, 「농어촌활력증진사업」내에 농림수산물부 및 관련부처의 유사·중복 사업을 통합하여 「농어촌산업발전계획」으로 확대·체계화하고 농어촌지역의 향토·특화자원 개발, 지역문화·관광개발 등 1·2·3차 산업의 융·복합을 통하여 농어촌지역에 경제적 활력을 불어 넣을 계획이다.

(농림수산물부 농촌산업과 행정사무관 허훈, 김연백, 최호중)

(3) 농공단지조성으로 농어촌지역의 고용 및 지역경제 활성화 도모

농공단지조성 사업은 탈농인구의 재촌 흡수, 농어촌지역에 경제활성화 및 농외소득증대를 목적으로 도입된 제도로 최근 도로망 확충 등 입지여건의 개선, 수도권내 입지부족, 지자체의 기업투자유치 강화 등으로 농공단지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추세에 있다. 2008년에는 47개소에 428억원(국고)을 투자하여 10개소를 조성 완료하고, 시군별 지정면적 확대, 단지조성비 지원단가 상향조정, 입지 규제완화 등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특히, 농어촌지역의 향토자원, 특산물 가공 등 지역부존자원과 연계된 지역특화단지 조성을 적극 유도하고 현지인 고용기회 창출 및 지역과의 연계를 강화하여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할 계획이다.

농공단지조성 추진현황

구 분	추진목표	2007까지	2008년	2009년	2009이후
사업량(개소)	400	324	10	10	56
사업비(국고, 억원)	10,961	6,935	428	598	3,000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산업과 행정사무관 허훈)

(4) 어촌관광 등 소득원 개발

증가하는 도시민의 관광·레저수요를 자연경관이 수려하고 부존자원의 개발 효과가 기대되는 어촌지역으로 유치하여 환경친화적 생태관광을 통한 국민정서의 함양은 물론 어촌 유희노동력의 고용기회 창출과 어업외소득원 개발, 어촌지역개발을 도모하고자, 1990~1996년까지 67개소에 35억원을 지원하였으며,

1998년부터는 안정적인 사업의 유도를 위하여 개소당 30억원씩 2개년사업으로 투자하는 어촌휴양단지조성사업으로 전환하여 2001년까지 전남 보성군, 신안군 등 2개소에 60억원을 투자하였다.

또한, 1998년부터는 전국연안 어촌지역의 사라져 가는 전통민속문화를 발굴·보존·전시하여 어촌주민의 정신적·문화적 혜택 제공과 지역간 균등발전을 도모하고, 어업의 발달사를 한 눈에 볼 수 있는 친수산, 친해양 교육의 산실을 마련코자 2005년까지 7개 지역에 개소당 60억원씩 3개년 사업으로 어촌민속전시관건립 사업을 추진하여 자연환경과 문화공간을 연계함으로써 관광객 유치 및 어민 소득증대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외에도 2005년에는 다양한 해양생태와 문화, 수산자원 등을 갖추어 발전 잠재력이 있는 풍부한 어촌·어항을 체계적으로 개발하기 위해 어촌·어항법

(법률 제7571호·5.31) 및 동법 시행령(대통령령 제19162호, 12.1)을 제정하여 어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였으며, 2009년까지 추진하는 전국 24개소 어촌관광 거점지역 개발을 위한 기본설계(23개소/49억원)를 완료함으로써 관광 인프라 구축의 사업 착수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최근 어업여건의 변화로 어려움 속에 있는 어촌경제를 활성화하고 새로운 소득원 개발 차원에서 어업활동의 장(場)인 어촌을 어업체험, 양식체험, 갯벌체험, 바다낚시 등 체험 중심의 21세기형 관광어촌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어촌체험마을 조성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어촌체험관광마을은 어촌이 보유하고 있는 자연환경, 인문자원, 산업생산과 연계하여 도시인에게 새로운 경험을 체험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토착문화적, 환경친화적 관광마을로 조성하는 것으로서 2001년부터 2013년까지 112개 마을을 선정·육성할 계획이며, 2007년까지 87개마을에 578억원을 지원하고 2008년에는 인천 중구 무의동 포내마을 등 8개소에 30억원을 투자하여 관광안내소, 진입도로, 주차장 등 관광기반시설 조성을 지원하고, 지방자치단체와 어업인 주도로 운영하게 하여 새로운 소득이 창출되는 활기 있는 선진 관광어촌으로 탈바꿈 시켜 나갈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2005년을 어촌사랑의 원년으로 정하고 100사 100촌 자매결연 행사를 계기로 2007년까지 553사 553촌 자매결연을 맺고, 2008년까지 653사 653촌 자매결연을 목표로 추진하고 있으며, 목표달성을 위하여 수협에 도시어촌교류지원단 직제의 신설, 자매결연 홈페이지 구축, 우수 추진사례 발굴, 자매결연 활성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개발 보급하고, 자매결연 업·단체를 국가기관, 공기업, 대기업, 아파트 부녀회, 학교 등으로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농림수산식품부 어항과 사무관 전성래)

다. 농어업의 경영위험관리 강화

(1) 농작물재해보험제도 개선

(가) 2007년 이행실적

농작물재해보험은 보험원리를 이용,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인의 경영불안요소를 해소하여 안정적인 재생산활동을 뒷받침하고자 2001년부터 도입한 제도로써 그간 태풍 “루사(2002)” 및 “매미(2003)” 등으로 약 3만 9천여 농가에 2,060억원의 보험금을 지급하는 등 자연재해로 인한 농업인의 경영안정에 크게 기여하였다.

2001년 사과·배 2개 품목으로 시작한 농작물재해보험은 지속적으로 대상품목을 확대하여 2007년 현재 “사과·배·복숭아·포도·단감·감귤·뽕은감·밤·참다래·자두” 등 10개 품목에 대해 보험실시 중에 있으며, 매년 제도개선을 통해 대상재해를 확대하고 보상기준을 완화하고 있다.

2007년도에는 집중호우특약 보상기준을 “기상청에서 호우에 대한 기상특보(호우주의보, 호우경보)를 발령한 경우”에도 재해로 인정하도록 개선하였고, 감귤의 낙엽을 피해 인정기간을 “수확전까지”에서 “수확기까지”로 연장하였다. 또한, 태풍 피해시 사과·배·복숭아의 낙과감수량 보상기준을 “낙과수량의 105%”로 확대하는 등 많은 부분에 걸쳐 농업인 편익 증대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하였다.

또한 농업인의 보험료 부담경감을 위해 보험료의 50%(특별지원 5.6% 별도), 운영비의 100%를 지속 지원하고, 보험요율을 2006년 대비 1.63%p 감소한 6.58%로 인하하였다.

이에 2007년도에는 전년대비 6.4% 증가한 29,174농가가 재해보험에 가입하였으며, 가입면적도 2006년 21,466ha에서 23,661ha로 늘어 가입률 26.5%를 달성하였다.

농작물재해보험사업 성장추이

(단위: 백만원)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대상품목 ¹⁾		6 (사과·배·복 숭아·포도·단 감·감귤)	6	6	7 (뽕은감 추가)	7 (밤·참다래· 자두 추가)
가입실적	가입농가(호)	16,481	23,926	26,335	27,419	29,174
	가입면적(ha)	11,001	17,546	20,301	21,466	23,661
	가입률(%)	15.2	18.2	23.4	24.5	26.5
지원규모	순보험료(%)	50	50	61.2	58.4	55.6
	운영비(%)	80	90	100	100	100
	국고지원액	16,224	37,803	49,371	50,783	49,280
지급 보험금	지급농가(호)	10,134	3,177	5,877	5,171	7,274
	보험금	50,018	13,599	23,871	21,112	61,464
	손해율(%)	290.8	42.3	43.5	26.6	110.4

* 주1) 본사업 시작년도 : 사과·배(2003), 복숭아·포도·단감·감귤(2004)

(나) 2008년 추진계획

① 농작물재해보험 상품의 지속 개선

농작물재해보험사업은 자연재해시 농업인의 실질적인 보험혜택 확대를 위해 매년 제도의 문제점 및 개선·보완사항을 파악하여 보험상품을 지속 개선 해 오고 있다. 2008년에도 2007년 사업운영 과정에서 나타난 개선사항 및 농업인의 의견 등을 수렴하여 아래와 같이 보험상품을 개선할 계획이다.

* 2008년 주요 개선사항

- 집중호우 및 나무보상 특약 적용품목을 사과·배에서 전 품목으로 확대
 - 집중호우로 인하여 발생하는 포도의 열과(裂果)피해, 복숭아 낙과피해 등 보상
 - * 농작물재해보험법 시행령 개정(2007.7.27.)을 통해 복숭아·포도·단감·감귤·뽕은감의 보상재해 범위에 집중호우 등 추가에 따른 후속조치
- 감귤의 태풍에 의한 풍상과(風傷果)피해 보상 추가
 - * (현행) 간접보상(낙엽률 조사) → (개선) 직접보상
- 봄동상해 특약 보장금액을 주계약 보장금액의 50%에서 100%로 확대
 - 다만, 당해 착과량이 해당 과수원의 평년착과량보다 감소한 경우에만 피해 인정
- 어린 과실의 우박피해 발생시 감수량 인정범위 확대
 - * 감수량 인정범위 : (현행) 유과 타박율 70% 이상 → (개선) 전범위
- 우박피해 과실의 평가등급을 세분화하여 보상범위 현실화
 - 피해증상이 경미하나 상품성이 떨어지는 과실에 대해 50% 피해 보상
 - * (현행) 피해과(100%)·조정과(80%)·정상과(무피해) → (개선) 피해과(100%)·중조정과(80%)·조정과(50%)·정상과(무피해)

정부는 이러한 제도개선을 통해 그간 가입율이 저조하였던 감귤, 포도 등 품목에 대한 보험가입률을 지속 향상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농업인의 보험료 부담경감을 위해 보험료 50%(특별지원 2.8%별도), 운영비의 100%를 지속 지원하고, 보험요율을 2007년 대비 0.45%p 낮은 6.13%로 인하하여 보험가입률을 2007년 대비 2.0%p 증가한 28.5%로 높일 계획에 있다.

② 대상품목 및 대상재해 확대

근래 이상기후 현상으로 태풍, 호우 등 자연재해가 빈번하게 발생하고 이로 인한 농작물의 피해가 증가함에 따라 농가 경영안정장치로서 농작물재해보험의 필요성이 크게 부각되면서 보험품목 및 대상재해 확대에 대한 농업인들의 요구가 급증하고 있다.

이러한 농업인의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정부는 2011년까지 30개 주요 농작물로 보험대상을 확대할 계획이며, 대상재해도 현행 태풍·우박 등 특정한 재해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보상가능한 대다수 자연재해로 대폭 확대할 계획이다.

2008년에는 품목개발추진단 등에서 연구·검토한 농작물 중 농업인의 보험 수요 및 전업화 정도, 생산액 수준 등에서 다른 품목에 비해 보험화 가능성이 높게 나타난 “감자·콩·양파·고추·수박”등 5개 품목에 대해 시범사업을 실시할 계획이다.

또한, 2006년부터 2년간 주산지 5개 시·군(광양, 상주, 영암, 청도, 하동)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한 뽕은감 품목의 경우, 시범사업실시 결과 보험수요가 안정적이고 보험상품에 대한 농업인의 선호도가 양호하게 나타남에 따라 2008년부터는 사업대상지역을 전국으로 확대 시행하고, 2006년부터 3년차 도상 연습 실시하고 있는 벼 품목의 경우 사업물량을 종전 200농가에서 600농가로 대폭 확대하여 2009년 시범사업시 나타날 수 있는 문제점을 집중적으로 사전 점검할 예정이다.

아울러, 보험상품 개발시 농업인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상품설계를 위해 공청회 및 상품설명회 등으로 농업인·전문가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계획에 있다.

③ 농업관련 재해보험제도 일원화

농업관련 정책보험(공제)으로는 현재 농작물재해보험, 가축공제, 양식수산물 재해보험, 풍수해보험(소방방재청) 등이 있으나, 이들 정책보험들은 각 소관부

처별·소관과별로 분산 운용되고 있어 업무의 효율성 및 시너지 효과가 미흡한 수준이다.

이에 정부는 농작물재해보험을 농어업재해보험으로 확대 개편하여 농작물, 가축, 양식수산물, 농어업시설 등 농어업전반의 자연재해 위험을 관리하는 종합적 위험관리 시스템으로 발전시켜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2008년도에는 농작물재해보험법, 양식수산물재해보험법을 통합하는 농작물재해보험법개정법률안을 마련하여 2008년 12월 국회에 제출할 계획에 있다.

(농림수산식품부 농업금융과 사무관 서준한)

(2) 농가부채대책 추진

(가) 2007년 농가부채 경감대책

2007년에 추진된 농가부채경감대책의 주요 내용은 2001년 이후 추진된 농가부채경감대책에 따라 장기 저리로 지원된 자금에 대해 금융기관의 손실을 보전해 주는 부채대책 이차보전사업과 2005.12.29일 개정 공포된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추진된 2001 상호금융 대체 자금 상환연장 등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 볼 수 있다.

2001년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이하 “부채경감법”이라 한다) 제정 이후 2007년까지 5차례에 걸쳐 총 37.8조원에 대하여 상환기간 연장 및 금리인하 등 농업인의 금융부담 경감을 지원하였고, 저리지원에 따른 금융기관의 손실을 정부에서 지원하고 있다. 2007년 중 이차보전대상 자금은 2001·2004 정책자금 상환연기, 2001·2004·2006 상호금융자금 저리대체지원 및 농업경영개선자금 등 2007말 대출잔액 9조 7,417억 원 중 금융기관의 자금으로 지원된 8조 7,503억원에 대하여 3,281억원을 이차보전 해줌으로써 결과적으로

농가당 평균 약 267천원의 이자부담을 덜어주는 효과가 발생하였으며, 부채 없는 농가(전체 농가 수의 24.2%)를 감안할 때 실제 지원받은 농가의 금융부담 경감효과는 더 클 것으로 판단된다.

둘째로, 2005.12.29일 개정·공포된 부채경감법에 따라 2001년 같은 법 제4조의 규정에 따라 지원받은 상호금융대체자금의 법 시행일 현재 대출 잔액에 대하여 상환기일을 연장해 주는 조치를 하였다. 동 자금의 지원조건은 2001년 지원받은 상호금융대체자금의 원금 10% 이상을 상환기일 이내에 상환하는 경우 연리 3%로 5년간 분할상환토록 하고, 원금의 10% 이상을 상환하지 않는 경우 연리 5%로 3년간 분할 상환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동 대책에 의한 신청기간은 2006년 상환기간 도래분에 대하여는 2006.6.30일까지, 2007년 상환기간 도래분은 2007.1.1~2007.6.30일까지로 정하여 시행함으로써 2007년중에는 주로 2007년중 상환기간이 도래되는 자금에 대하여 상환기간 연장 등 부채경감대책을 추진하였다. 2006년~2007년까지 부채경감대책을 추진한 결과, 2001상호금융 대체자금으로서 2005말 대출 잔액 5조 6,338억원 중 3조 7,463억원(66.5%)이 신청되었으며, 이 중 3조 5,412억원(신청액 대비 94.5%)을 지원하였다. 동 대책에서는 본인 또는 배우자가 공무원, 교사, 협동조합 임·직원(비 상임은 제외) 등 안정적인 직업을 가지고 있거나, 부채상환능력이 충분하다고 부채심사위원회에서 인정된 자는 지원을 제외함으로써 도덕적 해이 및 소득분배 왜곡 등의 문제가 최소화 하도록 하였다. 또한, 원금의 10%이상을 상환할 경우 상환기간과 금리를 우대하는 등 인센티브를 제공함으로써 지원자금 중 85%가 원금의 10%이상을 상환하였다. 이는 성실히 상환한 농가를 선별하여 차등 지원함으로써 농업인의 부채 상환의욕을 고취한 것으로 평가된다.

(나)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

재해·가축질병 또는 농산물 가격의 급락 등으로 인해 일시적으로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농업법인 포함)의 조속한 경영회생을 돕기 위해 2003년 시범사

업 이후, 2004년부터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지원근거를 마련하는 등 상시적인 경영회생지원시스템을 구축하였으며, 이에 따라 일시적인 경영위기에 처한 농업인의 경영안정을 위해 농업경영회생자금을 3년 거치 7년 분할상환(금리 3%)조건으로 지원하고 있다.

2007년에는 농업경영회생자금 예산 1,100억원을 반영하여 지원토록 하였으나, 167억원이 집행되는 등 2003~2007까지 총 4,751농가에게 3,518억원이 지원되었다. 특히, 2006년 이후 집행실적이 매우 부진한 이유는 그동안 농신보 보증심사를 강화하였고, 대출신청 및 취급절차가 복잡하여 일선조합에서 취급을 기피하고 있으며, 2006년부터 부채보유 농가의 농지매입 지원으로 부채를 상환하도록 하는 농지은행제도가 도입·시행되어 수요가 이동하였고, 최근 거대 재해가 발생하지 않는 등 복합적 요인에 의거 집행실적이 부진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에 따라, 집행실적을 향상시키기 위해 2007.6월 농업경영회생자금에 대한 리모델링을 실시하여 시행지침을 개정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였다. 주요 내용을 살펴보면, 일선조합의 경영평가위원회 폐지 등 심사의 전문성·객관성 제고를 위한 경영평가시스템을 개선하였고, 평가기준 단순화 및 대출신청 절차 간소화와 더불어 비농업용 부동산 소유자는 지원대상에서 제외하는 등 농업인의 도덕적 해이를 사전에 차단토록 하였다.

(다) 2007년말 농가부채실태 분석·평가

2007년 말 현재 농가부채는 가구당 29,946천원으로 전년에 비해 6.4% 증가하였으나, 주로 비농업용 부채의 증가(11.1%)에 기인하고 있으며, 농가의 절반 이상(50.3%)은 부채 규모가 1,000만원 미만으로 안정적으로 영농에 종사하고 있고 특히, 부채가 전혀 없는 농가가 24.2%를 차지하고 있다.

또한, 농가부채 증가에 상응하게 자산도 증가하여 평균적인 부채상환능력(부채/자산 비율)은 점차 개선되고 있으며, 2007년 기준 농가의 부채/자산비율은

7.6%로 매우 양호한 수준이다. 또한, 전가구 중 근로자가구(15.9%)에 비해서도 크게 낮은 것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는 그동안 농가부채 경감대책 및 소득안정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로 평가된다.

(다) 2008년 계획

최근 농업이 규모화 하면서 시설투자 등으로 부채가 증가하고 있으나, 그에 상응하게 자산도 늘어나고 있어 전반적인 부채상환능력(부채/자산비율)은 점차 개선되고 있다. 그러나, FTA진전·농자재가격 상승 등으로 농가경제가 어려운 상황에 직면하고 있으며, 일부 농가의 경우 자력으로는 금융기관으로부터 대출 받은 자금을 정상적으로 상환하기 어려운 부채구조에 처해 있다. 또한 2009년에는 2004년 상호금융저리대체자금(2조원) 등 약 3조원의 부채대책자금의 상환 기일이 집중 도래하고 있어 일시적으로 채무상환에 어려움이 예상된다.

따라서, 성실하게 영농에 종사하다가 재해·가격하락 등으로 부채상환이 어려운 농가 중에서 선별하여 지원하는 방안의 검토가 필요하다. 주된 지원방식은 농업인의 자산을 매입하여 줌으로써 부채를 상환토록 하는 등 자구노력을 전제로 지원하되, 모든 농가에 대한 일률적 부채대책은 막대한 예산이 소요되고, 성실히 상환한 농가와 의 형평성 및 도덕적 해이 등 문제가 있으므로 지양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아울러, 금년에는 그동안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으로 추진된 금리인하 및 상환기간 연장 등에 따른 이차차액을 보전해 주기 위해 2,852억원의 부채대책 이차보전 예산을 반영하여 저리자금 지원에 따른 금융기관의 손실을 보전해 주고 있다.

또한 2008년에는 집행실적이 부진한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사업’과 관련된 대내외적 문제점을 분석, 동 제도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 등 검토가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그동안 일선조합 및 농업인(농업법인)을 대상으로 현장의

건을 수렴하였고, 이를 토대로 동 자금의 집행 부진사유 분석 및 제도개선 방안을 마련하였으며, 향후 부내 심의과정 등을 거쳐 동 자금의 활성화를 위한 제도개선을 추진함과 동시에 농업경영회생자금 지원규모도 지원실적과 연동하여 탄력적으로 조정해 나갈 계획이다.

(농림수산식품부 농업금융과 행정사무관 이낙휘)

(3) 산림재해공제제도 도입 추진

1998년 이후 대형 산불의 빈번한 발생으로 산림피해 규모가 대형화되어 임업인의 경영 불안의 주 요인으로 대두됨에 따라 이러한 경영불안 요소를 해소하여 임업인의 소득안정을 기하고자 임업분야에 산림재해공제 도입을 위해 보험개발원 등을 통하여 정책보험으로서의 산림재해공제의 제도화 가능성 분석 및 구체적 시행방안에 대하여 연구용역을 실시하였다.

또한 2002년도에는 제도의 안정적 도입과 차질 없는 준비를 위하여 산림청 차장을 위원장으로 산림조합·학계·임업계 및 보험업계 등을 망라하는 「산림재해공제도 도입 준비위원회」를 구성·운영하였다.

그러나 2003년도 시범사업 시행을 위한 도입준비위원회의 검토과정에서 보험성립의 필수요건인 피해율 및 입목 표준금액 산정 등에 있어 몇 가지 문제점이 발견되어 추가 보완용역을 실시하고 산림재해공제를 중장기 과제로 검토하고 있다.

한편, 제5차 산림기본계획과 연계하여 산림의 공익가치 환원 측면에서 대기정화와 지구온난화에 대비해 숲가꾸기 등으로 증가되는 탄소흡수가치를 평가하여 산주에게 상당가치 지원하는 산림환경서비스 지불제 도입을 검토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농림수산식품부에서 시행하는 농작물재해보험과 관련하여 농림수산식

품부의 보험품목 확대 계획과 적극적인 의지로 2006년 「농작물재해보험법」을 개정하여 임산물중에서는 최초로 뽕은 감이 재해보험 대상품목에 포함되었다. 2006년과 2007년에는 주산단지 5개 시·군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으로 추진하였으며, 2008년에는 본사업으로 전환하여 보험대상지역을 전국으로 확대하였다.

이와 함께 산림청에서는 임산물중 소득비중이 높고 보험필요성이 높은 밤을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에 포함하기 위하여 한국농촌경제연구원으로 하여금 2004년부터 2006년까지 3년간 표준수확량과 손해평가방법에 관한 연구를 실시하도록 하였다. 동 연구는 밤 주산단지 중 3개 지역에 대해 관련 자료를 축적하는 연구를 진행하였다. 2007년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농작물재해보험법」 및 동법 시행령을 개정하여 밤을 농작물재해보험 대상품목에 포함하였으며, 2007년에 이어 2008년에도 주산지 3개 시·군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연도별 재해보험 가입실적

(단위 : 임가, ha, 백만원)

구 분	2006			2007			2008		
	임가수	면적	보험료	임가수	면적	보험료	임가수	면적	보험료
뽕은 감	389	210	265	446	242	286	830	481	589
밤	-	-	-	173	644	86	126	451	70

임산물에 대한 농작물 재해보험 대상품목 확대를 위하여 2008년에는 한국농촌경제연구원에 의뢰하여 “대추의 농작물 재해보험 도입을 위한 조사연구”를 추진하고 있으며, 앞으로 농림수산식품부의 농작물 재해보험 품목확대 정책과 연계하여 대추 등 임업분야의 품목을 확대해 나가도록 할 계획이다.

(산림청 산림경영지원과 행정사무관 심상택)

(4) 수산부문

(가) 어가경영안정대책 추진

WTO-DDA협상, FTA 체결 확산 등에 따라 수산물의 수입이 증가하는 한편, 국제 유류가의 급등으로 어업용 유류가격도 상승하여 어업 경영비용이 크게 늘어나는 등 우리나라 수산업의 경영여건은 어느 때 보다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다.

이와 같은 어려움을 겪고 있는 어업인들이 보다 안정적으로 어업을 경영할 수 있도록 영어자금을 공급하고, 어가부채경감대책자금 등 저리의 수산정책자금 지원을 통해 어업인의 금융부담을 완화해 나가고 있다.

2008년도 영어자금은 대 정부 상환분 580억원을 신규로 투입하여 2007년과 같은 규모인 1조 5,050억원으로 운용하고 있으며, 이 중 연근해어업 분야에 1조 4,250억원, 원양어업 분야에 800억원을 공급할 계획이다. 전체 공급자금 중 500억원은 어선조난·흉어·재해·기타 특수한 상황 발생시에 지원할 수 있도록 특별영어자금으로 운용하고 있다.

한편, 2008년도 영어자금 공급 재원별로는 정부의 재정자금에서 5,636억원, 수협중앙회 신용자금에서 4,433억원, 수협 상호금융자금에서 4,981억원을 공급하며, 영어자금의 안정적 공급과 더불어 대출된 자금의 연체감소 등을 통해 자금운용에 있어서도 내실화를 기해 나갈 계획이다.

영어자금 공급 실적 및 계획

(단위 : 억원)

구 분	2004	2005	2006	2007	2008(계획)	
소 계	14,050	14,050	15,050	15,050	15,050	
공급 규모	재정자금	5,814	5,636	5,636	5,636	5,636
	수협자금	3,844	3,933	4,433	4,433	4,433
	상호금융	4,392	4,481	4,981	4,981	4,981

이러한 안정적인 영어자금 공급 이외에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 「재난 및 안전관리기본법」, 「자연재해대책법」 및 「농어업재해대책법」 등에 의한 각종 수산정책자금을 어업인에게 저리로 공급하고, 기존의 대출금에 대해 금리인하, 상환기간 연장 및 이자면제를 위해 2008년에는 약 756억원에 달하는 이차보전금을 지원하여 어가의 금융비용 및 부채상환에 대한 부담을 완화할 계획이다.

이차보전금을 종류별로 구분하면, 어업인에게 연리 3%로 대출하는 영어자금 공급액에 대한 이차보전금이 530억원, 「농어업인 부채경감에 관한 특별조치법」에 따라 연리 1.5~5%로 지원하는 어가부채경감대책자금에 대한 이차보전금이 185억원, 각종 재해발생시 피해복구용으로 어업인에게 대출된 자금 등에 대한 이차보전금이 42억원에 이르며, 이들 이차보전금은 대출취급기관인 수협을 통해서 어업인의 금융부담을 경감해 가고 있다.

2008년 어업경영자금이자보전 예산 현황

(단위 : 백만원, %)

구 분	2007예산 (A)	2008예산 (B)	증감액 (C=B-A)	증감비율 (C/A)
어업경영자금이자보전	82,722	75,604	-7,118	-8.6
· 영어자금이자보전	52,500	52,970	470	0.9
· 피해복구이자보전	2,045	4,171	2,126	103.9
· 어가부채경감이차보전	28,177	18,463	-9,714	-34.5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정책과)

(농림수산식품부 수산정책과 행정사무관 김학조)

(나) 어업인 정책보험사업 운영

어선원 및 어선재해에 대한 체계적인 사회보장제도를 확립하기 위하여 수협 중앙회에서 운영하던 선원 및 어선공제를 어업인정책보험으로 전환하여 2004년부터 운영해 오고 있다. 보험도입 초기에는 보험제도의 조기정착을 위하여 어업인에 대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보험료에 대한 부담강화를 위하여 순보험료 및 운영사업비에 대한 국고보조율을 확대하였다.

2007년에는 보험사고 증가 등에 따른 보험재정 건전화를 위하여 기획예산처 주관으로 재정심층평가단을 구성 “재정사업 심층평가”를 실시하여 그동안 누적된 결손금(439억원)의 국고출연 근거를 마련함과 아울러 양질의 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운영인력 확충 등에 대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어선원보험료 징수율 제고를 위한 체납처분과 재보험가입을 통한 재정위험분산장치도 마련하였다.

(농림수산식품부 어선인력과 서기관 박신철)

(다) 양식재해보험제도 도입 추진

양식수산물은 1990년대 이후 양식기술의 안정화 및 양식어가의 대형화로 사회적·경제적 비중이 점차 높아져 가는 추세이며, 정부에서는 태풍과 적조 등의 어업재해가 발생시에는 “재난및안전관리기본법” 및 “농어업재해대책법”에 의거 복구비를 지원하고 있으나 현행 법령상 수산생물에 대한 복구비는 종묘대금 등으로 지원됨에 따라 원상회복에 한계가 있다. 또한 양식수산물은 천재지변에 의한 자연적 위험에 그대로 노출되고 피해예측이 곤란함에 따라 시장경제하에서의 보험도입에 어려움이 있으므로 정책보험제도 도입이 필요한 실정이다. 이에 따라, 정부에서는 국가가 관여하는 양식재해보험제도 도입을 위하여 2002년 3월부터 2004년 7월까지 2개년에 걸쳐 「양식재해제도의 도입 및

운영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실시하였으며, 2006년에는 양식재해보험의 위험
를 검증 및 도입활성화 방안에 대한 연구용역을 추가로 실시하고, 2007.12월에
「양식수산물재해보험법」을 제정하여 자연재해 피해에 대한 실질적 수준의
보상체제를 마련하였으며, 국가재보험제도의 실행에 필요한 “양식수산물 재해
채(Re)보험기금”도 신설하였다.

2008.7월에는 양식수산물재해보험 초기단계로 보험성립이 상대적으로 용이한
“넙치(육상 수조식)”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향후 보험대상
품목을 확대해 나갈 계획에 있다.

(농림수산식품부 어선인력과 서기관 박신철)

8. 지역농업 클러스터¹⁾ 활성화

FTA/DDA 등 시장개방 가속화에 따른 농업의 글로벌 경쟁력 제고와 농업
경영체 및 지역농산업의 잠재력, 내생적 역량을 강화하기 위하여 2005년부터
2007년까지 지자체 및 민간클러스터사업단 20개소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추
진하였고 2008년부터는 22개 사업단²⁾을 선정하여 본 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지역농업클러스터 사업을 통해 과거 생산 위주의 농정을 1·2·3차 산업이
융·복합화된 「농산업」으로 전환하고, 지역특성에 맞는 유기적 농정시스템을
가동하여, 창조적 발전을 유도할 수 있는 신성장 동력을 창출하고자 한다.

1) 개념 : 일정지역의 특화된 농산업과 관련된 주체를 중심으로 산·학·연·관이 유기적인 네트워크를 형성
하고 가용자원의 최적 이용을 통해 지역농업을 혁신하는 농산업 결집체

2) 22개 사업단 : 화성 웰빙떡, 강원 영동 한우령, 홍천 늘푸름 한우, 충북 친환경 축산, 서산 생강, 논산 예스
민 딸기, 홍성 백년대계 한우, 진안 친환경한방, 무주 반딧불 산머루, 남원 친환경 흑돈, 완주 감, 영암 무화
과, 곡성 멜론, 신안 시금치, 구례 산수유, 무안 황토고구마, 경산 종묘, 상주 고랭지포도, 영천 와인, 남해
보물섬 시금치, 경남 서북부 한우, 제주 마(馬)산업

동 사업은 국가균형발전과 동시에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과 책임성을 바탕으로 클러스터사업의 자립도를 완성시키는 패키지형 지원을 원칙으로 하며, 지원분야는 ①산·학·연·관 혁신체계 구축 및 네트워킹, ②생산기반조성, ③산업화 및 마케팅 활성화로 구분하여 지원중에 있다.

시범사업 3년동안 총 549억원의 국비를 지원하였고 시행주체의 교육활동 및 네트워킹을 통한 산업협력 문화기반 조성, 농산업화 및 복합화 단계 진입, 수요자 중심의 농림사업 패키지화, 지방농정과 농산업체간의 대화채널 구축 및 정보공유 등의 정책적 성과를 거두었다.

2008년부터는 시범사업의 성과분석과 평가를 통해 나타난 문제점인 클러스터 개념 이해 부족과 추진체계 구축 미흡, 책임성·일관성 있는 사업추진을 위한 시스템 부족 등을 보완중에 있으며, 22개 사업단에 총 230억원을 지원·시행중에 있다.

향후에는 농림수산식품부 출범에 따라 식품부문도로 육성·추진할 계획이며, 현장 중심의 모니터링 및 지도·점검 등 정책 Feed-back 시스템 강화와 지역 농산업육성 및 균형발전이라는 정책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효율성 제고에도 초점을 맞추어 나갈 계획이다.

지역농업클러스터 육성 3단계 모델

	<1단계> 클러스터前단계	<2단계> 클러스터구축단계	<3단계> 클러스터산업화단계
발전단계	<p>지역농업</p>	<p>클러스터 구축</p>	<p>클러스터 發顯</p>
발전목표	지역농업자원 발굴과 차별화 요소의 극대화	지역농업주체간 네트워킹 및 지역협력체계 구축	지역농업클러스터의 산업화 달성과 성과 도출
핵심활동	<ul style="list-style-type: none"> -특성화 전략 선택 -생산, 특화품목, 마케팅, 농촌 관광 등 농산업전반에서 특화요소의 전략적 선택 	<ul style="list-style-type: none"> -주체간 역할분담 -지역농업 코어(Core)구축, 핵주체 구축 -핵심 인재(人才)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농산업 확장 (1차+2차+3차+@) -본격적인 지역농업 마케팅 실천 -신사업(新事業)도입
지원사업	<ul style="list-style-type: none"> -품목육성 정책 -마케팅조직육성 정책 -생산유통기반 구축 	<ul style="list-style-type: none"> -클러스터 구축지원 -지역특성화교육 -브랜드육성 	<ul style="list-style-type: none"> -R&D추가 지원 -패키지(Package)지원 (생산→마케팅)
지원체계			

(농림수산식품부 식품산업진흥팀 사무관 류승규)

•IV. 품목별 경쟁력 강화 시책

1. 쌀산업	181
2. 채소·원예산업	189
3. 과수·화훼산업	192
4. 축산업	197
5. 임업	220
6. 수산업	293

IV. 품목별 경쟁력 강화 시책

1. 쌀산업

가. 제도 개편

WTO출범이전에는 국내생산량의 30% 수준에 달했던 정부수매량이 WTO농업협정의 국내보조감축 이행계획에 따라 크게 줄었으며, DDA농업협상 이후에도 보조금 감축에 따른 정부수매물량은 지속적으로 줄어들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다.

DDA·쌀협상으로 식량정책의 여건 변화에 유연하게 대처할 수 있도록 『양곡관리법』을 개정(2005.7.1시행)하여 50년간 지속되어 오던 추곡수매제(국회동의제)를 폐지하고 공공비축제를 도입하는 등 국내외적 여건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하여 시장상황에 맞는 정책으로 제도를 전환하였다.

한편 기존의 쌀관련 직접지불제와 추곡수매제로는 쌀값하락에 따른 농가소득안정에 한계가 있어 『쌀소득등의보전에관한법률』을 전면개정(2005.7.1 시행)하여 목표가격을 설정하고, 쌀값이 하락할 경우 목표가격과 당년 쌀값과의 차이의 85%를 보전하는 쌀소득보전직불제를 시행하여 쌀값 하락시에도 쌀농가의 소득 안정을 유지하게 되었다.

또한 고품질쌀에 대한 소비자들의 욕구가 늘고 있으나 소비자들의 고품질쌀 판별능력이 부족한 점과 밥쌀용 소비자 시판 등을 감안, 양곡표시제도 강화 등 고품질 쌀이 제값을 받을 수 있는 시장여건을 조성하였다.

(농림수산식품부 식량정책팀 행정사무관 박선우)

나. 수급여건 및 정책방향

2007년 양곡연도 쌀 공급량은 576만톤이며, 수요량은 506만톤 수준으로 양곡연도말 재고량은 70만톤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2007년의 경우, 대북지원, 가공용·주정용 공급확대 등으로 양곡연도말 재고량이 2006년보다 13만톤 줄어들었다. 한편, 2004년 쌀협상에 따라 의무수입물량(TRQ)은 2005년 225천톤에서 2014년 408천톤까지 증량되고, 그 중 소비자시판은 2005년 TRQ의 10%에서 2010년까지 30%로 증가되는 등 외국쌀의 국내 유통물량은 더욱 확대될 전망이다.

2005년도가 양정제도 개편 첫해임을 감안하여 정부는 농업인의 수확기 벼 판매가 원활히 되도록 하기 위하여 수확기 시장안정대책을 추진하였다. 그 주요내용을 보면, ① 공공비축 매입물량을 기존 계획보다 144천톤 많은 576천톤으로 확대하고 비축물량의 144천톤 추가매입·격리조치, ② 2006년 정부 일반공매 지양 공표, ③ 2004년산 지역농협 재고(92천톤)를 시장으로부터 격리 ④ 공공비축 물량 중 산물벼를 농가 희망에 따라 포대벼로 전환하여 매입할 수 있도록 허용하였다.

2006년에는 공공비축제의 연착륙을 위해 2005년에 나타난 문제점을 보완하는 등 조기 정착에 노력하였다. 산물벼 매입방식을 포대벼와 같은 방식으로 매입·정산토록 하였고, 제도의 일관성을 위해 매입가격을 수확기 전국평균가격으로 적용하였다. 또한 RPC의 산물벼 인수부담을 해소하기 위하여 단계적으로 인수하되 포기시 정부 인수방안을 도입하였다. 또한 농업인, 농업인단체, 전문가, 유통업체 등이 참여하는 합동수급점검회의를 주기적으로 개최하여 수급상황을 알려주는 한편 공공비축제 시행방안의 조기 확정발표 및 홍보로 농업인들이 수확기 시장상황에 탄력적 대응이 가능하도록 하였다.

2007년에는 공공비축 매입물량 축소(2006. 504천톤 → 2007. 432천톤)를 감안하여 산물벼 매입물량을 축소하였으며, 노동력 부족 해소를 위해 톤백 매입사업을 시범 실시(전국 8개소)하고, 출하비 샘플검사를 도입, 검사 대기시간을 감

축하여 농업인의 편의를 도모하는 제도 개선을 추진하였다.

2008년에는 향후 3년간 적정 공공비축 물량을 재검토하고, 이를 감안하여 연간 매입량을 결정한다. 또한 산물벼 매입량을 축소하는 대신에 톤백 매입량은 지속적으로 늘려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정부는 관세화를 유예 받은 10년 동안 우리 쌀산업이 경쟁력을 가질 수 있도록 젊고 유능한 전업농을 중심으로 경영규모화를 계속 추진해 나가는 한편, 우리쌀이 외국쌀과 당당히 경쟁할 수 있도록 소비자 단체와 함께 품질고급화를 추진하고, 미곡종합처리장(RPC)의 경영개선을 통해 민간유통 활성화를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농림수산식품부 식량정책팀 행정사무관 박선우)

다. 민간유통기능 강화

벼의 수집·건조·저장·가공 및 포장과정을 자동화시설로 일관처리 함으로써 처리비용 절감과 미질 향상 등 쌀산업의 경쟁력을 강화시키기 위하여 1991년부터 미곡종합처리장(RPC : Rice Processing Complex) 사업을 시작한 후 2007년말까지 총 4,627억원을 투자하여 쌀 주산지에 RPC 328개소, 건조·저장 시설(DSC : Drying Storage Center) 909개소를 설치하였다.

미곡종합처리장 사업은 관리비용·노동력 절감 및 지역별 특색에 맞는 쌀 브랜드화 촉진, 민간유통기능 활성화를 통한 수확기 쌀시장 안정 등 긍정적 효과를 나타내고 있으나, RPC간 과당경쟁·원료곡의 고가매입 및 경영효율화 노력 부족 등으로 적자 RPC가 증가하는 문제도 함께 제기되고 있어 2002년부터 신규 RPC에 대한 지원을 중단하고, 부족한 건조저장시설(DSC)을 중심으로 지원하고 있으며, 민간사업자의 DSC 지원조건을 2004년부터 융자지원에서 보조지원으로 전환하여 생산자단체와의 형평성을 제고하고 민간의 참여를 유도하고 있다.

2006년도에는 RPC 건조·저장시설 증설사업을 균특회계에서 농특회계로 전환하고 사업량을 2005년에 50개소에서 2006년도는 110개소로 대폭 확대함과 동시에 지원단가도 4.5억원에서 5.5억원으로, 민간사업자에 대한 보조율도 30%에서 40%로 변경하는 등 지원조건을 상향 조정하였다.

또한, RPC 부실 경영이 지속될 경우, RPC의 벼 매입능력 저하로 인한 수확기 가격하락 및 농가의 벼 판매 어려움 등 쌀산업 전반의 경쟁력 약화가 예상됨에 따라 정부에서는 미곡종합처리장 경영혁신 계획을 수립하여 적극 추진 중에 있다.

2004년부터 RPC에 대한 정부지원을 선 평가, 후 지원체제로 개편하여 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객관적인 평가지표를 개발하여 정부지원을 원하는 모든 RPC에 대한 경영평가를 실시하고 그 결과에 따라 경영우수 RPC 및 구조조정 RPC를 우선적으로 지원해 오고 있다.

2007년부터는 경영부실 RPC는 자율적인 통·폐합을 유도하여 규모화 및 책임경영 체제 확립을 통한 RPC 경영의 효율성을 제고하는 한편, 통합RPC에는 정부지원을 집중하여 조기 경영안정을 유도하고 있으며, 2006년도에는 RPC 경영개선 종합대책을 수립하여 RPC 경쟁체제 강화, 벼수탁판매제 시범실시, 시설확충, 고품질 쌀 브랜드 육성대책 등을 추진해 나가고 있다.

특히 2006~2007년까지 쌀 수탁판매 시범사업을 실시하여 수확기 쌀 농가의 판매방식 다양화를 통한 민간 시장기능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으며, 쌀 시장개방 확대와 대형 유통업체 등 유통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하여 2007년부터 신규로 고품질 쌀 브랜드 육성사업을 추진하여 8개소를 육성한 바 있으며, 2013년까지 소비자가 만족하고 신뢰하는 시·군단위 대표브랜드 쌀 100개를 육성할 계획이다.

(농림수산식품부 농산경영팀 농업사무관 장대수)

라. 고품질 쌀 생산·유통 및 경영개선 추진

1990년대 후반부터 쌀 소비량 감소는 지속되는 반면, 소비자의 고품질·안전 농산물에 대한 선호도가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라 우리 쌀의 완전미율 향상, 단백질 함량 저하 등 품질 향상 노력을 지속하고 있다. 그러나 정부보급종 공급비율이 35% 수준으로 낮은 점이나 수확후 건조·저장·도정 및 유통관리가 미흡한 점 등에 있어서는 정부와 농업인들의 더 많은 노력들이 요구되고 있다. 이러한 여건에 따라 쌀 산업을 안정적으로 유지하기 위해 2002년부터 고품질 쌀 생산·유통대책을 추진하여 왔다.

2007년도에는 고품질 브랜드쌀 생산·유통대책의 기본방향은 농업인의 생산 의욕 고취와 소비자 신뢰 확립을 통한 “맛있고, 안전하고, 잘 팔리는 고품질 브랜드쌀 생산·유통 체계구축”이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목표 달성을 위해 분야별 중점 추진과제를 선정하여 추진하고 있다.

첫째로 논토양의 지력증진을 위해서 화학비료 사용을 억제하고 토양 유기물의 함량을 증대시켜 토양을 개량하는 방안을 추진하였다. 화학비료 사용을 억제하고 유기질비료 사용을 활성화하기 위해 2005년 7월부터 화학비료 차손보전을 폐지하였으며, 대신 유기질 비료에 대한 보조를 120만톤에서 2007년에는 135만톤으로 확대하였다. 또한, 유효 규산 함량이 낮은 논을 대상으로 공급하는 규산질 비료는 시용 편의 및 토양 개량효과 제고를 위하여 입상(알갱이 모양)공급(80%)을 추진하였다.

둘째로 쌀 품질 고급화를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품질 좋은 쌀 품종 개발이 선행되어야 한다. 품종 육성방향은 외관이 우수하고 밥맛이 좋으며 가공특성이 우수한 품종으로 병해충 및 재해저항성이 강하여 소비(小肥)재배에도 수량이 떨어지지 않는 친환경 재배적성 품종을 목표로 5개 품종을 개발하였다. 일반적 고품질 품종 이외에도 가공용 및 기능성 쌀 품종을 개발(25개 품종)하여 특성화된 쌀을 생산할 수 있는 기반을 조성하였다.

셋째로 전체 벼 재배면적의 25%에 해당하는 면적에 파종할 수 있는 종자의 양을 기준으로 매년 정부 보급종을 농가에 공급하고 있고, 2007년 벼 종자 갱신율은 42%이며, 종자 갱신율을 끌어올리기 위해 정선공장을 신설하고 기존 시설을 개보수하는 등 시설을 확충하고 있다.

넷째로 적기이앙, 적정 포기수 확보, 적정 물 관리, 질소질 비료 시용량 감축, 병해충 최소 방제, 적기 수확 등 6가지로 대표되는 고품질 쌀 생산을 위한 핵심 재배기술을 농가에서 준수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지도·홍보를 하였다.

다섯째로 농가와 RPC(미곡종합처리장)간의 계약재배를 전국 벼 재배면적의 38%로 확대 추진하였다. RPC가 필요로 하는 수준의 균일한 원료 곡을 확보하기 위해 농가와 계약을 체결하고 품종 및 재배법을 표준화하여 지도하도록 하는 등 고품질 쌀 생산의 적극적인 주체로 나서도록 유도하였으나 다소 미흡한 수준이다.

여섯째로 우리 쌀에 대한 소비자 신뢰 구축을 위하여 원산지 부정유통 단속을 강화하여 2007년에는 24건(171톤)을 적발하였고, 집중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해 나가고 있다. 또한 2,000명의 명예감시위원을 위촉하고 부정유통 신고자에 대하여 포상금을 지급하는 등 민간 감시기능도 강화해 나가고 있다. 한편 소비자의 편의를 도모하기 위하여 소포장 유통을 확대하고 우수 브랜드 쌀 평가 및 브랜드 통합을 유도하여 소비자가 우수한 품질의 쌀을 기호에 맞추어 쉽게 선택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 나가고 있다.

2008년부터는 지금까지 중앙정부 단위 평균적 개념의 고품질 쌀 생산·유통 정책에서 지역·들녘·품종별 특성을 고려한 지역단위 차별화된 고품질 쌀 생산·유통 및 경영개선정책으로 전환하여 쌀 전업농 중심의 조직화, 규모화를 통한 경영비 절감 및 경영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지역·들녘·품종별 차별화·정예화된 고품질 쌀 생산·유통체계 구축으로 쌀 품

질 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첫째, 녹비작물 재배 확대(135천ha), 입상 규산질비료 공급 확대(100%) 등 생산기반 조성을 확대하고, 둘째, 수요자 중심의 최고 품질 품종(7개)을 육성하고, 셋째, 고품질 우량종자 공급 확대를 위해 정부 보급종 공급량을 50%까지 확대하고, 넷째, 적기이앙, 질소질 비료 사용량 감축, 병해충 최소 방제, 적기 수확 등 6대 고품질 쌀 생산·재배기술을 조기정착하며, 다섯째, RPC 수확후 관리시스템을 개선 및 확충하고, 여섯째, 고품질 쌀 유통체계 구축을 위해 시·군 단위 대표브랜드 8개를 육성 추진 및 쌀 품질 표시방법 개선, 시중 유통 브랜드쌀 평가로 소비자 신뢰를 확보할 계획이다.

쌀 전업농 중심의 조직화·규모화를 통한 경영개선 기반조성을 위해 시·군단위 경영개선 시범단지를 14개소를 조성하고, 시범단지 조성을 위한 시·군단위 협의체를 운영하며, 고품질 쌀 최적 경영체 개발을 위한 연구용역을 통해 50~100ha내외의 면적으로 규모화·조직화하는 고품질 쌀 최적 경영체 육성사업을 2009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기 위해 예산 확보를 추진 중에 있다.

들녘별 추진전략



(농림수산식품부 농산경영팀 농업사무관 장영국)

마. 쌀 소비 촉진 전개

쌀 소비촉진 홍보사업은 2001년까지 연이은 풍작으로 쌀 재고량이 증가하는 반면, 식생활의 서구화로 쌀 소비량이 급격히 감소함에 따라 미래의 쌀 소비 기반을 구축하고 쌀 시장개방에 따른 농가소득 감소 충격 완화와 국민건강관리 차원에서 쌀 중심 전통식단을 권장하기 위하여 2002년부터 전개하게 되었다.

쌀 소비촉진 홍보는 쌀 소비 잠재력이 높은 어린이와 청소년 그리고 20~30대 젊은 주부를 주대상으로 하여 쌀의 이미지제고를 위한 공익적인 광고와 쌀 소비 촉진 캠페인을 중심으로 하는 단기성 홍보사업으로 추진하였다.

쌀과 밥에 대한 인식변화 유도를 위해 젊은층을 대상으로 2002년부터 2003년까지 유명축구선수와 방송 아나운서, 문화계의 대표적인 장인 등을 러브미 홍보대사로 위촉하여 TV-CF 공익광고 등을 방영하였다.

2002년부터 2003년까지 지속적·집중적으로 실시한 러브미광고로 젊은층과 주부들에게 우리쌀에 대한 긍정적인 이미지가 형성되었고, 러브미로고가 국가 브랜드로서 자리매김을 하게 되었다. 러브미 홍보는 2002년 정부업무평가 우수 사례로 선정되었고 2003년에는 대한민국 광고윤리대상 우수상, 일간스포츠 광고대상 최우수상 등을 수상하였다.

러브미 공익광고와는 별개로 시중유통 브랜드 쌀 평가, 농촌체험캠프 실시 등 쌀 소비촉진 홍보 캠페인을 다양하게 전개하였다.

2008년에는 밥 중심의 쌀 소비의 감소에 따라 식문화변화에 따른 신규 수요 창출이 필요하여 「2008 우수 쌀 가공제품 Top10」 선정하고 생산자에게는 신제품 개발을 유도하고, 소비자에게는 구매기회를 확대 제공함으로써 쌀 소비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우수 쌀 가공 제품 Top10을 선정하였다

또한 쌀 소비 감소에 대응하는 실질적인 소비촉진 캠페인이 필요하여 온라인 프로모션을 통해 우리 쌀에 대한 지속적인 인식변화 및 소비행동 변화 유

도하기 위해 40대 이하 젊은층의 접근성이 높은 온라인 매체를 활용한 프로모션 전개하고 쌀 소비 촉진 100인 서명운동 참가자 DB를 활용한 지속적인 우리 쌀 소비촉진 홍보 시스템 구축하고 있으며

그동안 TV 등 방송 매체와 오프라인 홍보에 치중하였으나, 온라인 시장에 대한 홍보는 수많은 인터넷 세대와 전파성을 고려할 때 매우 효율적인 홍보 수단이라 생각하면서 국내 전자상거래 1위 기업인 G마켓과의 쌀 소비 촉진 공동 캠페인 업무협력 MOU를 체결(08.10.17)하여 우리 농산물 소비촉진의 새로운 전기를 마련할 것이다

소비자단체 주관으로 실시한 시중유통 브랜드 쌀 평가로 우리 쌀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확대하고 브랜드 쌀의 품질향상을 위한 12월초 시상 할 계획이다.

11월 11일이 청소년들에게 ‘빼빼로 day’로 알려져 초코렛이 우리 정서와 식생활 문화가 점진적으로 변화하고 있어 금년에는 가래떡day가 찰떡궁합이라는 문화코드 형성에 중점 쌀 소비촉진을 진행하였다.

(농림수산식품부 농산경영팀 행정사무관 이주영)

2. 채소·원예산업

가. 품목별 특성에 맞는 발전전략 수립

지역별 생산기술이나 경영능력이 높은 우수농가를 발굴, 자료를 축적하여 일반 농가들이 쉽게 벤치마킹 할 수 있도록 하여 경쟁력을 갖추도록 지원하고, 배·시설채소·꽃 등은 수출전략산업으로 육성하며, 감귤은 생산자 조직을 통한 생산조정 및 유통구조를 개선하고 고추·마늘·양파 등은 품목별 생산자조직을 육성하여 생산비 절감 및 자율적 수급조절을 유도해 나가고 있다.

나. 품목별 주요 추진계획

(1) 채 소

(가) 노지채소

노지채소의 수급 및 가격안정을 위하여 1995년부터 추진하고 있는 채소수급 안정사업을 시행 초 무·배추 품목에서 고추, 마늘, 양파, 당근 등으로 품목을 확대하였으며, 현재 전체 채소생산량 10% 수준의 계약재배 사업물량을 원활한 수급 및 가격 안정을 추진하기 위하여 사업농협 등에 자금 지원을 확대해 향후 2017년까지 24% 수준으로 계약재배 물량을 늘려나갈 계획이다.

노지채소 계약재배 물량에 대하여 계약재배사업 주체를 사업농협중심에서 가공업체, 대형유통업체 등으로 확대하는 등 제도개선을 추진하였다.

그리고 생산계획 단계부터 수급조절이 가능하도록 주요 농축산물 29개 품목에 대한 관측정보를 제공하고, 관측결과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표본농가 13,774호 및 모니터 요원을 1,796명을 운영하고 있으며, 품목별 수급모형 및 단수예측 모델 개발 등 과학적 선진 관측기법을 도입하여 운영함으로써 농가의 생산·출하 의사결정에 기여할 수 있는 정보를 적기에 제공토록 하고 있다.

또한 2000년부터는 생산자단체의 자율적 수급조절 능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조금을 조성하는 품목별 생산자단체에게는 정부가 일정률(1:1 매칭펀드)의 자조금을 지원하고 있다. 시행 초년도 2개품목이었던 것을 2008년도에는 26개 품목으로 확대하고, 사업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자조금 규모화를 유도하기 위해 당해 연도 적립한 자조금을 다음연도로 이월하여 사용가능하도록 자조금 제도를 개선하였다. 향후 지속적으로 자조금 품목 및 단체수를 늘려 정부 주도의 수급조절 제도에서 생산자단체가 주도적으로 농산물 판로 확대와 수급조절 등을 할 수 있도록 지원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농림수산식품부 채소특작팀 농업사무관 박윤식)

(나) 시설채소

1990년대 초반부터 시설현대화 사업을 중점 추진하여 생산시설의 현대화를 통한 고품질 시설원예 작물의 생산기반을 구축하는 한편, 시설채소를 수출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해 노력한 결과 1997년 38백만불에 불과하던 채소류 수출이 2007년 121백만불로 증가하였다.

기 지원된 시설원예 경영체들의 경영안정을 위하여 농촌진흥청, 지방자치단체, 농협 등의 전문가를 통한 시설원예 작물재배 및 관리 기술·경영 정보 제공과 더불어 현지순회 지도 등을 통해 시설원예 경영체의 기술 및 경영능력을 제고시켜 나가는 등 종합지원체계를 구축해가고 있다.

또한, 다양한 지역별 기후 및 작물생육에 적합한 45종의 내재해형 원예특작 시설 및 버섯재배사 표준설계도(비닐하우스 33, 인삼재배시설 10, 버섯재배사 2)를 개발·보급하고 산·학·관·연 합동으로 현장위주의 실용적인 기술을 개발하고 있다.

파프리카, 딸기, 토마토 등 수출유망 품목에 대해 일본을 수출전략 시장으로 중점 개척하며 원예전문생산단지 및 수출선도조직을 평가하여 수출물류비 및 인센티브, 조직 운영비 지원과 함께 수출 농식품 안전성관리 종합대책(2008. 9)을 마련하는 등의 안정적인 수출 확대기반을 구축하고 있고, 농수산물유통공사를 통해서 적극적인 시장개척과 해외 시장 정보를 수집하고 있다.

시설채소류의 생산과잉 기조가 지속됨에 따라 2001년부터 오이, 호박, 가지 등 시설 채소에 대해서도 수급안정제도를 도입한 후 2002년에는 토마토, 풋고추를 추가하는 등 연차적으로 대상품목과 사업규모를 확대하였으며, 2008년 시설채소 자금조성규모는 2,222억원이다.

(농림수산식품부 채소특작팀 사무관 박봉수)

3. 과수·화훼산업

가. 과수산업

과실류는 1990년대 후반까지 총생산액이 지속적으로 증가하는 등 성장세를 보여 왔으나, 최근 과잉생산, 소비감소 등으로 정체상태이며, 과수농가 200천호 중 전업농 수준인 1.5ha이상 농가는 22.5천호인 11.2%이며, 대부분이 겸업농으로 호당 평균 0.7ha의 영세한 영농규모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또한, 과수는 타작물에 비해 상대적으로 소득이 높은 편이고 농가간 재배기술 수준의 편차가 커서 품질에 따른 가격 양극화가 심화됨에 따라 농가간 소득격차도 확대되고 있는 실정이며, 국산과실의 소비는 과채류 등과의 소비대체로 정체상태인 반면 과실 수입은 증가하고 있어 공급과잉 기조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이다.

과수산업 경쟁력제고를 위해 1994~1999년까지 과실생산·유통지원 사업을 통하여 동일 과종 재배면적 20ha이상인 생산자조직 및 회원농가에 관배수 시설, 고성능 방제기, 비가림시설, 품종갱신, 키낮은 밀식사과원조성 등 생산시설 현대화와 저온저장고, 집하장, 선과장 등 산지유통시설 기반확충을 지원하여 노동력 및 생산비 절감과 품질향상을 도모하였으며, 2000년부터는 그동안 품목별 또는 기능별로 분산지원 되던 원예특작분야 사업을 통합하여 농업경영체 스스로의 필요와 판단에 의한 사업계획에 따라 지원하는 농업경영종합자금 지원사업으로 전환하여 농업 경영체의 자율성과 책임경영을 유도하는 방식으로 사업체계를 개선하였다.

2004년부터 한·칠레 FTA체결 등 수입개방에 대응하고 과수산업이 지속가능한 산업으로 자리매김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2010년까지 7년간 조성될 FTA기금 1조2천억원을 경쟁력 확보가 가능한 과수농가 및 조직에 집중 지원하고, 고품질생산과 유통을 주도할 핵심 생산자조직을 육성하는데 지원을 집중해 나가고 있으며, 2007년 주요 이행실적은 다음과 같다.

고품질 안전과실 생산과 생산비 절감, 생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고품질 생산시설 현대화사업비 367억원(2,939ha)을 지원하였으며, 과수의 주산지를 대상으로 용수공급, 배수로 및 경작로 등 생산기반을 구축하기 위해 과수 생산기반 정비사업비 83억원(780ha)을 지원하였다. 이와 병행하여 과실생산의 근간인 묘목을 병해충(바이러스, 바이로이드 등)을 제거하여 생산성이 높은 묘목으로 농업인에게 공급함으로써 생산성 향상, 고품질과실 생산을 촉진하기 위한 과수 우량묘목 생산 지원사업비 65억원(10개소)을 지원하였다.

또한, 생산과 유통을 주도할 품목조직을 육성하고, 산지유통체계를 개선하기 위해 과수 주산지에 규모화·현대화된 산지유통시설(APC)을 지원함으로써 소규모 유통시설 계열화의 중심축(HUB)으로 육성하여 산지의 마케팅 경쟁력 및 교섭력을 높이고, 선별·저장·포장시설 등 상품화 시설 및 위생시설을 일괄 지원함으로써 상품성 향상과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해 권역별 산지 유통센터 4개소(303억원) 설치를 지원하였다.

한·칠레 자유무역협정으로 인하여 과수재배업을 계속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하는 품목으로서 재배농가가 폐업을 하는 경우에는 폐업지원금을 지원하여 폐업농가의 경영안정과 과수산업을 구조조정을 도모하고 있으며, 2004년부터 2007년까지 시설포도, 키위, 복숭아 5,049ha에 대해 폐업지원금 2,010억원을 지원하였고, 이외에도 개방에 대비하여 경쟁력이 낮은 과원을 폐원하고자하는 경우 나무제거비 등을 지원하는 과수원정비지원사업비 40억원을 지원하였다.

2008년도에는 한-미 FTA 체결 및 DDA 등 개방에 대비하여 FTA기금 및 농업농촌 발전대책 투융자계획과 및 과수산업 발전대책을 보완하고, 그동안 추진해 온 경쟁력제고 대책과 유통개선 및 소득안정 대책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과수산업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해 추진중인 고품질생산시설 현대화사업비 624억원을 지원하여 3,222ha에 상당하는 과원의 생산비 절감 및 고품질 과실

의 생산을 유도하고, 과수생산기반정비사업비 83억원을 지원하여 용수공급, 배수로 및 경작로 등 생산기반을 구축토록 하는 한편, 바이러스 등 병해충에 감염되지 않는 우량묘목 공급을 통해 고품질의 과실을 생산하기 위해 과수우량묘목 지원사업비 45억원(12개소, 123ha)을 지원해 나가고자 한다.

또한, 산지의 마케팅 능력과 교섭력을 높이기 위해 지난해에 이어 2008년도 권역별 거점산지유통센터 4개소 설치를 지원할 계획이며 이를 위해 149억 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2004년부터 지원해 온 과원폐업지원 사업은 해당품목에 대한 농업인의 신청이 있을 경우 적격자에 대해 지원을 해나가되, 관련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2008년말에 동 사업을 종료할 계획이다. 다만, 수입개방 등에 효과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경쟁력이 낮은 과원에 대한 정비가 필요한 점을 감안하여 과수원 정비지원사업에 35억원을 투입하여 1,584ha를 정비할 계획이다.

경쟁력 제고 및 유통개선 대책과 병행하여 생산에서 유통까지 일관된 품질관리를 통한 브랜드화로 경쟁력을 강화하기 위해 2013년까지 과실브랜드 경영체 24개소를 육성해 나가고, 과실류에 대한 관측을 강화하여 적정생산을 유도하는 한편, 수급이 불안한 경우 수매지원 및 유통협약 등을 통해 출하를 조절함으로써 가격불안을 최소화하고, 수급불안이 심화될 경우에는 유통명령을 발령하여 과잉물량의 시장격리등을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생산자의 자율적인 마케팅 능력을 배양하고 자발적인 수급조절과 시장 대응 능력을 배양하기 위해 요건을 갖춘 단체가 자조금을 조성하여 수급안정 사업을 추진하는 경우 조성된 금액에 상응하는 수준의 보조금을 지원하는 자조금사업비 27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농림수산식품부 과수화훼팀 사무관 안형덕)

나. 화훼산업

우리나라가 선진국에 진입하여 국민소득이 증가할수록 화훼소비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정부에서는 화훼산업을 미래 고부가가치 성장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한 정책을 추진 중이다.

이를 위해 국내산 신품종 개발·보급을 확대하고 낙후된 생산시설을 현대화 하며, 유통환경의 변화에 대응한 선진 유통체계 도입 및 물류의 효율성을 제고할 수 있는 유통인프라를 확대할 계획이다.

또한, 꽃 생활화를 위한 홍보활동을 강화하고 소비자 기호에 부응한 화훼 신상품 개발을 지원하며 화훼생산수출단지 사후관리 강화 및 수출시장 다변화와 수출유망품목 발굴 등을 중장기적 전략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 생산 분야

우선, 화훼 경영체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 생산자단체, 유통업체, 수출업체 중심으로 농가 조직화와 전문화를 추진하여 파워브랜드 육성의 기반을 마련할 것이다.

아울러, 정부는 화훼산업 발전에 필수적인 국내품종 개발 보급확대를 위해서 국가·민간분야에 다양한 투자를 하고 있는데, 농진청에 품목별 품종개발 보급 사업단을 두어 현재 운영중이며 2015년까지 291억원을 투입하여 장미보급률을 현재 1%에서 30%로 국화는 20%로 확대해 나갈 계획도 세워놓고 있다.

○ 유통 분야

좀더 투명하고 효율적인 유통체계 구축을 위해 장기적으로 영세하고 난립된 도매시장을 통합하여 전국 3대 권역(수도권, 영남권, 호남권)에 최신 화훼종합유통센터를 조성할 계획이며 영남권, 호남권은 수도권 화훼종합유통센터 조성 에 따른 결과 분석평가 후 조성여부·시기 등 결정할 예정이다.

또한, 유통공사 자체 예산을 투입하여 2007. 8월부터 시범적으로 장미 절화에 대해 습식유통 시스템을 도입하여 실시 중이며, 이를 평가·보완하여 2009년부터는 습식유통 시스템 정착을 위해 정부지원을 추진 할 예정이다.

○ 소비 분야

우선, 소비자들이 직접 참여할 수 있는 원예 체험 등 찾아가는 생활프로그램을 확대 추진하고 꽃 기능성에 대한 과학적 검증 및 홍보확대 및 소형신상품 개발 등을 통해 소비촉진의 기반을 구축해야 할 것이다.

또한, 전시홍보, 생활 플라워 콘테스트 등 각종 행사 지원 등과 함께 초·중·고등 청소년 대상 꽃 체험교실 확대 등으로 미래 꽃 소비자에 대한 홍보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꽃 기능성 등 홍보 강화를 통한 소비확대 추진을 위해서는 케이블 TV, 라디오, 지하철 PDP, 인터넷 등 동영상 광고를 지속 추진할 계획이다.

수출·입 분야 등

수출 경쟁력의 지속적 확보를 위해서는 수출 전략 품목의 브랜드 경영체 육성으로 재배 단지와 농가를 계열화하고, 수확 후 공동 선별·포장·수송 등 물류 통합을 통한 연중 공급체계 및 물류비 절감으로 수출경쟁력 확보해 나갈 것이다.

유통공사의 시장개척사업비를 더욱 확대해 해외 바이어 초청을 통한 재배시설 견학 등 상품 우수성 홍보 및 해외 각종 전시·박람회 참가지원을 통해 해외시장 개척에 필요한 사업을 계속 지원할 예정이다.

(농림수산식품부 과수화훼팀 기술서기관 김대경)

4. 축 산 업

가. 한우산업

UR협상 등 쇠고기 시장 개방에 대응하여 한우산업의 경쟁력 확보 및 농가 경영안정을 위해 품질고급화 및 송아지생산안정사업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고, 한우자조금을 활용하여 한우의 우수성 홍보와 소비촉진을 추진하였다.

(1) 한우번식기반 유지·강화

2001년 생우 및 쇠고기 수입개방에 따른 충격을 완화하고, 소값 안정 및 한우번식기반을 유지하기 위하여 2000년부터 전국적으로 확대 실시한 송아지생산안정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였다. 2008년 현재 143천농가, 1,015천두가 가입하여, 2008년도 6월 현재 가임암소 사육두수 대비 약 99.6%가 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2) 한우고기 품질고급화

혈통등록, 도체정보수집 등 한우 개량자원 확대, 효율적인 개량정보의 수집·활동체계 구축, “초음파 단층촬영 기술”, “유전자 분석기술” 등 첨단기술의 현장 적용으로 한우고기의 품질고급화를 촉진하고 있다.

아울러, 2000년부터 거세우에 대해 지급하던 거세장려금제도를 2004년 7월부터 품질고급화장려금으로 전환하여 1등급 이상 거세우에 장려금을 지급하였으나, 최근 한우 1등급 출현율이 지속적으로 상승(2006 : 44.5%→ 2007 : 50.9%)하고 있고, 등급에 따른 가격 차별화가 정착되어 감에 따라 2006년까지만 지급하고 중단되었다.

또한, 규모화·전문화된 생산조직을 중점적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농·축협 조합, 영농조합법인 등 전문 경영체를 브랜드축산물 생산·유통사업 대상으로

지정하였다. 소규모 사육농가는 브랜드 경영체를 중심으로 조직화하여 체계적인 가축개량과 통일된 사양관리로 품질이 높고 균일한 한우고기를 생산하도록 유도함과 아울러, 유통업체 등과의 연계를 강화함으로써 경영안정 도모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명품한우를 만들어 세계 속에서 경쟁력을 갖도록 강한 한우산업을 만들기 위해 2008. 8월에 “한우산업대책 T/F팀”을 구성하여 중장기 전망, 조직화를 통한 규모화, 생산성·품질향상, 사료비 절감, 직거래 활성화 등 유통개선, 질병방역 대책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있다.

(3) 소비홍보 및 산지소값 안정대책

한우고기의 소비를 촉진하고, 한우농가에 대한 정보 제공 등 권익을 보호하고자 한우 자조금을 의무화하고, 거출된 한우자조금을 활용하여 TV광고 제작·방영, 통화연결음 활용 광고, 소비촉진 이벤트행사 실시, 유통감시단 설치, 한우농가 계도·교육 등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여 한우산업의 경쟁력 향상을 도모하였다.

한편, 미국산 쇠고기 수입재개에 따라 산지 소값의 안정화를 위하여 조기출하 및 송아지 입식자제 등 홍보와 교육을 병행 추진하였다.

(축산경영과 농업사무관 박홍식)

나. 낙농산업

우유 수급안정을 위하여 원유 생산 쿼터제를 정착시키고 소비촉진 활동에 역점을 두어 추진하고 있다.

(1) 사육여건 및 사양기술 향상 등으로 생산성 증가

생산비가 2006년 479원/kg에서 2007년 494원/kg으로 3.2% 증가되었으나, 사

양관리 개선과 젓소개량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한 결과, 2007년 두당 산유량은 8,508kg으로 전년에 비해 2.9% 증가하였다.

앞으로도 젓소 산유능력 검정 참여율 확대 등 젓소 개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생산성 향상을 도모해 나갈 계획이다.

(2) 우유수급안정 추진

원유 생산량 정체에도 불구하고, ‘마시는 우유’의 소비감소로 인해 공급 과잉구조 상태에 있으나, 원유 생산 쿼터제가 정착됨에 따라 원유 수급은 안정화 추세를 보이고 있다.

2007년은 전국적으로 2,188천톤의 원유가 생산되어 1,875천톤은 원유로 직접 사용(백색시유 1,382, 가공시유 200, 유제품 293)하고 나머지 313천톤은 분유로 가공한 후 타제품의 원료로 사용하였다.

한편, 원유 유통단계의 수유·검사방식을 개선하고, 낙농가에 유질개선을 지도하여 공장 도착시까지 고품질 원유가 신선하게 유지되도록 공급체계를 구축하여 유제품의 품질향상 및 경쟁력을 확보하였다.

위생 성적 및 유질 향상 측면에서 체세포수 1등급의 비율은 58.0%로 2006년도에 비해 7.7% 증가하였고, 세균수 1등급 비율은 97.7%로 전년 대비 0.3% 상승하였으며, 유지방 비율은 4.01%로 전년에 비해 0.03% 증가하였다

소비자 기호 변화, 미국·EU 등 낙농 선진국과의 FTA 추진으로 인한 개방 가속화 등 대내외적인 여건변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원유 생산·공급체제 구축, 유통비용의 절감, 사료 자급기반 확충, 낙농경영의 체질 강화, 위생·안전성 확보 등 낙농시스템에 대한 근본적인 개혁이 필요하다.

따라서 정부는 우유 수급관리제를 근본적으로 바꿔 생산자 자율에 의한 계획생산체제를 구축하여 낙농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하고, 경쟁원리가 작동하는

거래원칙을 확립하여 유통을 합리화하고, 낙농가와 유업체가 협력할 수 있는 기반을 확충하기 위해 낙농산업발전종합대책(시안)을 마련(2005.7월)하였다. 동 대책에 대한 의견수렴을 위해 각계 전문가로 구성(15인)된 ‘낙농산업발전대책 협의회’를 개최하였으며, 세미나·심포지움·간담회·워크샵 등을 개최하여 쟁점간 이견 폭을 줄여 생산자·유업체·정부 3자간의 합의안을 도출하는데 주력하였다.

낙농자조금 사업으로 TV·라디오 공익광고를 실시하였으며, 국민의 식생활에서 우유의 중요성을 인식시키기 위해 세계 우유의 날(World Milk Day) 기념식을 개최한 바 있다.

특히 올해부터는 낙농체험관광사업을 실시하여 전국에 체험목장을 조성함으로써 도시민에게 우유와 낙농업에 대한 국민들의 부정적인 인식을 개선시키는 노력을 함께 추진하고 있다. 또한, 낙농체험목장을 학생들의 우유급식 교육현장으로 적극 활용하여 학생들에게 살아있는 체험을 통해 우유음용의 필요성을 느끼게 하고 있다.

이밖에 학교우유급식 지원사업을 통해 영양불균형이 심각한 저소득층 학생들에게 우유급식을 지원함으로써 소득수준에 따른 영양 양극화를 해소하고, 무상급식 지원을 통해 우유급식 학교 수를 확대하여 청소년기의 우유음용 습관 형성에 주력하고 있다.

또한, 학교우유급식 업무의 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해 표준 매뉴얼을 개발하여 보급하였으며, 전국 우유급식 담당 공무원 연찬회를 개최하여 우유급식에 관한 교육현장의 의견을 수렴하여 제도개선에 활용하고 있다.

앞으로도 우유수급관리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전국적인 우유수급조절이 가능하도록 전국쿼터관리제 단계적 시행, 전국적인 우유수급을 조절할 수 있는 관리기구(낙농위원회) 설치, 우유의 특성상 계절적 수급편차에 따라 불가피하게

발생되는 잉여원유에 대하여 가공원료유 지원방안 도입, 낙농진흥회 직결전환에 따른 유업체 경영안정자금 지원, 소비자 기호변화에 따른 우유가격산정체계 개선 등을 중점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우유수급관리제도 개편이 성공하기 위해서는 생산자, 유업체 등 각 이해주체가 서로 공감하고 동참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므로 각계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여 합의를 도출해 나갈 계획이다.

낙농산업의 안정성장을 위해서는 우유 소비기반 확대가 무엇보다 중요함에 따라 2006년도부터 의무화된 낙농자조금을 활용하여 우유 소비·홍보활동을 체계적으로 추진해 나가는 한편, 학교우유 급식사업 대상과 급식인원을 확대하고, 우유의 우수성에 대한 교육자료를 개발·활용하여 우유소비 저변이 확대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생산자 자율에 의한 ‘깨끗한 목장 가꾸기 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고, 집유장·유가공공장에 대한 위생관리 강화로 원유의 품질 및 위생수준을 향상시켜 국산원유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확보해 나가면서 젖소 산유능력 검정 참여율 확대 등 젖소 개량을 지속적으로 추진하여 생산성 향상을 도모해 나갈 것이다.

(농림수산식품부 축산경영팀 행정사무관 이성주)

다. 양돈산업

FTA 등 대외개방 확대, 국제 곡물가격 상승에 따른 사료가격 인상, 유류비 상승, 분뇨처리비용 증가 등으로 경영여건이 어려워지고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해 양돈 의무자조금 정착, 농협 등 생산자단체의 민간 자율적인 수급조절 기능 강화, 돼지고기 수출 확대 등을 통한 양돈산업 안정을 추진하고 있다.

(1) 돼지고기 수급 및 가격안정 대책

돼지 사육두수는 2008년 9월 현재 928만두로 작년 동기 966만두에 비해 3.9% 감소하였으며, 양돈 농가수는 사료가격은 인상된 반면 산지가격 하락 등으로 전년 동기 10.2천 농가보다 23.5% 감소한 7.8천 농가로 소규모 폐업농가가 늘어났다.

산지가격은 돼지고기 소비 성수기(3~9월)와 비수기(10~12월)로 구분되어 가격등락을 반복하고 있으며, 2003년 미국산 쇠고기의 BSE 발생 및 국내 조류 인플루엔자 발생 등으로 인한 대체 수요 증가로 2004년 이후 산지가격이 높게 형성되었고, 2008년초에는 산지가격이 급락하여 농가가 어려움을 겪었으나, 4월이후 수입물량 감소와 국내 생산량 감소 등으로 산지가격이 생산비 수준으로 회복하였다.

수입개방(1997) 이전에는 수매를 통한 수급조절이 가능하였으나 수입개방 이후에는 정부의 직접적인 수매 추진이 어려워 민간 자율적인 수급조절 기능이 중요해지고 있다. 양돈자조금과 자율수급조절 사업을 통하여 돼지고기 소비홍보 확대, 조사 및 연구, 교육 및 정보제공 등을 추진하고 있다.

(2) 돼지고기 수출 추진

구제역(2000, 2002) 및 콜레라(2003, 2004) 발생으로 돼지고기 대일 수출이 중단됨에 따라 수출량이 급감한 이후, 러시아, 필리핀, 태국 등 새로운 시장을 개척하여 수출을 추진 중이다. 값이 저렴하고 동남아국가에서 선호하는 부산물(스킨, 지방, 간 등) 등을 태국과 필리핀 등에 수출하고 있다.

돼지고기 수출확대를 위해 해외 식품박람회 참가, 주요 수출대상국 검역관 및 수입업체 초청 시찰, 돼지고기 열처리가공품 수출을 위한 시설자금을 수출가공업체에 지원할 계획을 마련 중에 있다.

(농림수산식품부 축산경영팀 사무관 이연섭)

라. 양계산업

2008년 9월 양계 전업규모(3만수이상) 농가는 1,537호로 전체 사육농가 3,331호 대비 46% 수준이며 사육두수 점유율은 77%로 다른 축종에 비해 기업화·규모화가 상당히 진전되었다.

(1) 닭고기 수출입동향 및 수출촉진을 위한 홍보강화

2007년 닭고기 소비량은 약 43만톤이며 이중 수입량이 6만톤으로 자급율은 86%수준으로 2003년 76%보다 크게 상승하였다.

2007년 닭고기 수출량은 5,689톤으로 2007년 7월 일본의 한국산 가금육 수입 정지 해제조치 및 베트남으로의 수출증가 등으로 2006년 2,854톤보다 2배가량 크게 증가하였다.

2008년 4월에는 AI가 발생하여 양계산업에 막대한 피해를 가져왔으나, 신속한 방역조치로 2008년 8월 청정국 지위를 회복하는 등 양계산업의 조기 정상화를 이루었다.

수출확대를 위해 생산·도축·가공시설 지원, 컨설팅 지원, 해외 닭고기 시장조사, 가축질병 예방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것이다. 또한, 해외식품박람회 참가, 프로모션 행사 및 대미 닭고기 수출협상 등 해외시장 개척을 위해 다양한 방안을 마련하여 추진중에 있다.

(2) 양계산업 안정대책 추진

FTA/DDA 등 시장개방이 확대됨에 따라 국내 양계산업의 생존을 위한 경쟁력 강화는 필연적인 과제이다. 이를 위해 우선 계열업체를 중심으로 브랜드화를 추진하여 품질고급화를 도모하여 외국산과의 차별화를 실현하고자 한다. 아울러, 품질관리를 위해 등급판정 실시, 닭·오리고기 포장유통의무화, 사육·유통 단계 HACCP 적용 확대 등을 통해 유통선진화를 추진하고자 한다.

또한, 불량종축 유통방지를 위해 종계 병아리 분양 시 혈통인증서 발급과 검정 확대 유도 및 종계장·부화장 점검 등을 통해 우량 종축 공급체계를 확립할 것이다.

국내 양계산업 기반을 강화하기 위해 생산농가의 사육시설 현대화 필요성이 강하게 요구되었다. 이에 열악한 기존 사육시설 개선을 위해 축사시설현대화사업을 2008년부터 추진중에 있으며, 가축운반체계 개선을 위해 특장차량 구입을 지원하여 품질향상, 질병예방 등 양계산업의 경쟁력을 강화해 나가고자 한다.

시장개방 확대에 공격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수출 유망품목 발굴 및 수출기업 마케팅 지원 등을 통해 수출확대를 도모하고 있으며, 양계 의무자조금을 도입하여 소비촉진 홍보, 연구개발 사업 등 추진 및 종계 D/B 구축을 강화하여 농가경영안정 및 양계산업 발전을 도모할 계획이다.

(농림수산식품부 축산경영팀 행정사무관 김영만)

마. 축산물 유통구조 선진화

(1) 축산물종합처리장 건설 및 운영활성화

2001년 축산물 전면개방에 대비하여 낙후된 국내 축산물 유통체계를 선진국 수준의 유통체제로 발전시켜 나가고자 축산물종합처리장(Livestock Processing Center : LPC) 건설사업을 1994년부터 2001년까지 지원하여 7개소를 완공하였다.

※ LPC 건설비 : 총 156,550백만원(융자 89,612, 자부담 등 66,938)

LPC 가동에 따라 유통단계 축소, 냉장·부분육 유통 등 축산물 유통구조 개선이 급속하게 이루어져 일반도축장의 위생수준 향상과 HACCP 조기 정착을 유도하였다.

그러나, LPC 건설초기에는 막대한 시설투자에 따른 자금압박, 경영개선 미흡, 설비(Utility) 유지비용 과다 소요, IMF 사태(1997.12), 구제역 발생(2000.12)에 따른 수출중단 등으로 자금경색이 심화되어 큰 어려움을 겪었다. 이에 따라, 건설자금 금리인하(당초 5% → 2002년 4% → 2005년 0%), 지육반출금지 등 규제사항 폐지, 건설자금 상환기간 연장조치(당초 5년거치 10년상환 → 2003년 7년거치 10년상환) 등 가동율 상승을 위해 적극 지원하였다.

아울러 정부는 우수 도축장 육성을 위하여 도축장 HACCP 운용수준 평가결과에 따라 도축장 운영자금을 차등지원하고, HACCP 사후관리 강화 등을 추진중에 있다. 이에 따라 위생수준이 높은 LPC의 경우 전체 도축두수의 감소에도 불구하고 도축 가동율이 매년 상승하고 있다.

※ 전국 돼지 도축실적(천두) : (2004) 14,620 → (2006) 13,003 → (2007) 13,597

※ LPC 가동율(돼지, %) : (2004) 58 → (2006) 73 → (2007) 80

현재, 정부에서는 도축장 과잉에 따른 동반부실을 우려, 「도축장 구조조정 대책(2007.3)」을 수립하여 LPC를 포함한 우수한 도축장을 중점 육성하고 위생이 열악하거나 부실한 도축장은 도축장 통폐합자금 지원 등 제도적·경제적 측면의 지원 등으로 구조조정을 추진중에 있다.

※ 소·돼지 도축장(개소) : (1981) 315 → (1991) 171 → (2000) 113 → (2007) 106

※ 전국 도축장 가동율(돼지, %) : (2002) 53 → (2004) 47 → (2007) 47

아울러 도축장경영자 스스로 폐업지원금을 조성하여 도축장 구조조정을 촉진할 수 있도록 「도축장 구조조정법」을 제정(2008.6.13)하였다.

앞으로도 LPC 등 시설이 우수하고 위생수준이 높은 도축장에서 생산된 안전한 축산물이 유통되어 시장에서 우대받을 수 있도록 경영환경 개선, 재정지원, 제도적 보완 등 다양한 시책을 강구해 나갈 계획이다.

(농림수산식품부 축산물위생팀 수의사무관 김대균)

바. 조사료 생산기반 확충 및 부존자원 활용 확대

축산물 품질고급화 및 사료비 절감 등을 위해 양질의 조사료 생산과 국내 부존사료자원 활용을 극대화할 계획이다.

(1) 조사료생산기반 확충

양질의 조사료 생산 확대를 위해 청보리 등을 이용한 사일리지 제조비를 지원하여 남은 논·밭을 이용한 사료작물 재배확대를 유도하고 있으며, 초지의 관리·이용성을 증대시키기 위해 신규·기성 초지에 대해 초지 관리비 등을 지원하고 있다. 또한 용수원 개발, 목로개설 등을 지원하여 조사료 생산기반을 확충해 나가고 있다.

아울러 간척지 등을 활용한 대규모 조사료 생산단지 조성, 다수확 우량 청보리 종자 보급 확대, 생산실명제 도입 및 품질 평가체계 구축, 국산 조사료 우수성 교육·홍보 강화, 조사료 가공시설 지원 등을 통해 국내 조사료 생산·이용을 활성화시켜 나갈 계획이다.

(2) 부존사료자원의 활용 확대 등

들풀 등 부존사료자원 이용확대를 위해 지역별 풀베기 행사 개최 및 지역조합별 “들풀 이용지원센터” 설치·운영, 유희인력을 활용한 풀베기 시범사업, 하천부지의 풀 수거·공급 및 사료작물 재배 등을 추진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 자원순환팀 농업사무관 전익성)

사. 가축분뇨의 효율적 처리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저해요인을 최소화하여 친환경 축산을 구축하기 위하여 가축분뇨배출시설 설치농가 및 단체에 가축분뇨의 퇴·액비화 자원화시설과 정화처리시설에 대한 지원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1)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자금 지속 지원

환경에 대한 관심증대로 가축분뇨에 대한 규제가 강화되고 있고, 가축분뇨로 인한 환경오염 방지와 농가의 부담을 덜어주기 위하여 2006년말까지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대상농가의 98.1%가 설치하였으며, 가축분뇨처리시설자금을 2006년에 341억원에서 2007년 424억원으로 증액하여 지원하였다.

(2)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정

그동안 가축분뇨는 수질오염 방지에 주안점을 두고 정화하여 하천 등으로 방류하는 정화위주의 법제(오수·분뇨 및 축산폐수의 처리에 관한 법률)로 운영하여 왔다. 그러나, 가축분뇨를 오수와 분리하여 친환경 개념을 강화하고 가축분뇨를 퇴·액비 등으로 자원화 할 수 있는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가축분뇨의 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2006. 9)’ 및 ‘가축분뇨의 자원화 및 이용 촉진에 관한규칙(2007. 11)’을 제정하였다. 동 법령은 가축분뇨의 적정관리 및 자원화 방안을 강화하고, 지속가능한 축산업 및 자원순환형 농업의 발전과 환경보전을 실현하기 위한 내용을 담고 있다.

(3) 가축분뇨 자원화를 위한 인프라구축 지원

경종농가의 가축분뇨 퇴·액비 이용을 확대하고 환경오염 부하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경종농가에 액비저장조 설치를 지원하고 있으며, 가축분뇨의 유통활성화를 위해서 「액비유통센터」를 설치·운영하고 있다.

2007년에는 액비저장조를 716기 설치하였고, 저장된 액비가 영농에 용이하게 활용될 수 있도록 「액비유통센터」(10개소)에 액비의 운반·살포에 필요한 차량과 부대장비를 지원하였다.

이와 함께 경종농가와 연계한 자연순환형 농업기반 구축을 위하여 「자원순환팀」을 신설함으로써 가축분뇨 이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방안을 마련 중에 있다.

아울러, 앞으로 가축분뇨처리시설의 건설한 시공과 축산농가의 설계비 부담을 경감시켜 가축분뇨자원화시설 설치를 촉진시키고, 친환경축산 등 여건변화에 맞는 환경친화형 축사의 표준설계도를 설정·보급할 계획이다.

(4) 시험연구 및 기술개발

우리나라 축산업의 특수상황과 축산농가의 가축분뇨 처리경비 및 기술상의 취약점을 감안하여 가축분뇨의 발생량 기준과 가축단위 설정, 작물별·계절별로 퇴·액비 사용기준 및 살포경지면적 기준설정 등 우리 실정에 적합한 가축분뇨 자원화 처리 및 이용에 대한 연구개발을 지속 추진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 자원순환팀 농업사무관 하옥원)

아. 축산물 위생 및 가축방역체계의 강화

(1) 축산물 위생관리 강화를 통한 소비자 신뢰 확보

소비자에게 안전하고 위생적인 축산물을 공급하기 위해서 가축 사육단계부터 최종 판매단계에 이르는 축산물 생산·공급체계의 모든 과정에 각 단계별로 안전성을 체계적으로 확보하기 위한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가축사육단계에서는 농가가 동물용의약품을 안전하게 사용하도록 교육과 홍보를 강화해 나가고자, 전국 4개 권역별 순회교육을 상반기와 하반기 두차례에 걸쳐 실시하여 축산농가에서 항생제 휴약기간 준수요령, 안전사용규칙 등을 중점 교육하였다. 또한, 가축사육농장에 대한 위해요소중점관리(HACCP)제도를 도입하고, 2006년 돼지농장에 적용한 것에 이어 2007년에는 소농장에 적용토록 하였다.

도축·가공단계의 위생수준을 제고하기 위하여 식육에 대한 잔류물질과 미생물 검사를 지속실시해 나가고 있다. 식육중 잔류물질 검사는 검사의 실효성

을 높이기 위해 잔류위반 농가나 긴급도축, 주사자국, 화농자국이 있는 경우 등 잔류위반 가능성이 높은 가축을 대상으로 하는 규제검사를 강화해 나가고 있다. 또한, 2007. 4. 11일 그간 근육위주로만 시료를 채취하여 검사하던 것을 잔류가능성이 높은 신장 등 내장으로 확대하여 검사토록 ‘식육중잔류물질검사요령’을 개정함으로써 잔류물질 검사 체계를 한층 강화시켰다. 식육중미생물검사는 그간 도축장을 대상으로 일반세균과 대장균에 대한 권장기준을 설정하여 위생수준을 평가하는 척도로서 검사를 수행하였다. 2007년에는 식육중 미생물 검사 확대를 위해 도축장이외에 유통단계인 식육포장처리장과 식육판매장에 대하여도 권장기준을 설정하고 검사기관에서 검사를 수행하도록 ‘식육중미생물 검사요령’을 개정(2007. 9. 3일)하였다.

축산물 유통단계에 대해서도 안전성 확보를 위해 HACCP 도입을 추진하였다. 보관, 운반, 집유단계에 HACCP 도입을 위해 지침 및 모델을 개발하였고, 평가기준을 제정(2007. 11월)하여 HACCP 적용을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또한, 부정 불량 축산물 단속을 위해 수거검사와 위생감시를 지속적으로 시행해 나가고 있다. 한편, 닭·오리고기의 유통과정중 미생물의 재오염을 막고 수입산과 구별을 위한 포장유통 의무화 조치가 2007년부터 일일 8만수이상 닭, 오리를 도축하는 도축장에 대하여 우선 시행되었다.

우수 브랜드경영체를 중심으로 2004년부터 시범 실시하고 있는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사업은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의 제정(2007. 12. 22)으로 2009년 6월부터 소비자가 직접 판매장에서 쇠고기의 생산에서 판매에 이르는 전 단계를 확인할 수 있게 된다.

2008년도에도 가축 사육단계부터 최종 판매단계까지 각 단계별 위생·안전관리 대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사육단계 HACCP 제도 적용을 위해 돼지, 소에 이어 닭의 사육단계 HACCP 적용지침 및 모델을 개발하고 평가기준도 제정하여 사육단계 HACCP 적용을 단계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또한, 닭·오리고기의 포장유통 의무화 제도를 일일 8만수이상 닭, 오리를 도축하는 도축장에서 일일 5만수 이상 도축하는 도축장으로 확대 시행할 계획이며, 사전 위해요소 관리를 위해 도입한 HACCP 제도의 지정과 지정 작업장에 대한 관리 기반을 확고히 하기 위해 현재 HACCP 지정 및 사후관리를 담당하고 있는 HACCP 담당기관(사단법인 축산물HACCP기준원)을 축산물가공처리법 개정예 따라 법정법인으로 재탄생시킬 예정이다. 이로써 공공성이 강한 HACCP의 지정 및 사후관리 업무추진이 한층 공고해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 축산물위생팀 수의사무관 강대진)

(2) 구제역 등 가축질병 방역 대책

구제역 방역은 매년 재발 가능성이 높은 3월부터 5월까지 “구제역 특별방역 대책기간”으로 정하여 관계부처와의 공조체제하에 범정부적 차원의 국경 검역 및 국내방역을 추진하고 있다. 국경 검역은 공·항만 X-ray 검색, 구제역 발생국 여행객 휴대육류 집중검색·검역탐지견 배치강화 및 미신고자 범칙금 처분, 해외 여행객 신발소독, 수입건초 및 나포·피항어선 소독, 외국인 농업연수생 등 관리, 해외 여행객에 대한 홍보 강화 등을 실시하였으며, 국내 방역은 신속한 신고체계 확립, 구제역 예찰 모니터링 검사, 지역 예찰담당관 지정, 전국 일제소독의 날 운영, 축산농장 외국인 근로자 관리 및 방역교육 강화 공동방제단 운영 등을 강도 높게 추진하고 있다. 특별대책기간 이후에도 “평시방역 강화대책”을 수립하여 국경검역 및 국내방역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고 있으며 국내에서 구제역은 2002년 6월 이후 현재까지 발생하지 않고 있다.

돼지열병은 2001년 12월 1일에 전국적으로 돼지열병 예방접종을 전면 중단하고 청정화 선언 이후 5개월만인 2002년 4월 16일 강원도 철원군에서 2건의 돼지열병이 발생하였다. 이어서, 2002년 10월 7일 인천시 강화군에서 다시 발생한 것을 시발로 하여 2002년 12월 21일까지 인천 강화·서구, 경기 김포·이

천 등 4개 지역에서 총 11건이 발생하였다. 2003년에는 3월20일 전북 익산에서 발생하여 10월까지 7개 시·도, 26개 시·군에서 총 72건이 발생함에 따라, 돼지열병 발생양상이 전국적이고 동시 다발적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돼지열병 조기차단을 위하여 2003년 3월 19일 제주도를 제외하고 전국적인 예방접종을 실시하게 되었으며, 이러한 조치로 동 질병의 발생이 현저히 감소하여 2004년 9건, 2005년 5건, 2006년 2건, 2007년 5건이 발생하였다.

한편, BSE의 국내 유입 방지를 위해 사료업체의 제조라인을 구분하고 사료공장에 위해요소중점관리기준(HACCP)을 도입함으로써 반추동물유래 동물성 단백질을 반추동물의 사료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BSE 검사체계를 단순 검사두수에서 2007년부터 OIE 기준에 따라 BSE 위험소별 점수제로 개선하여 2008. 5월부터 도축되는 모든 기립불능소에 대하여 BSE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한편, 발생시 체계적인 대응을 위하여 도축되는 소 전두수를 검사하기 위한 시설 및 인력을 단계적으로 확충해 나가고, 머리·내장 등 특정위험물질(SRM) 제거시설도 확보해 나갈 계획이다.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HPAI)는 2003년 12월과 2006년 11월에 이어 2008년 4월1일 전북도 김제시 소재 산란계 농장에서 발생하였다. 2008년의 H5N1 바이러스는 예년과 달리 겨울 철새의 북상이 끝난 봄철에 발생하였는데, 이는 봄철에 동남아 국가에서 북쪽으로 이동하는 철새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과거 두 차례의 경우 전국적으로 각각 102일간 19건, 104일간 7건이 발생한 데 비하여 2008년에는 초기 방역조치 미흡으로 전북, 전남, 경기, 충남, 울산, 경북, 대구, 서울, 강원, 부산 등 전국으로 확산되어 33건이 발생하였으며, 또한 오리에서의 병원성이 매우 강하게 나타났고, 소규모 운반차량을 이용한 재래시장 및 소규모 중간상인의 이동 등으로 전국적인 확산 양상을 보인 것이 특징이었다.

그러나, 국가위기관리매뉴얼 및 가축전염병예방법 등에 근거한 강력한 방역 조치 시행으로 11개 시·도(19개 시·군·구)에서 발생한 전국 규모의 고병원성 AI를 단 42일만(2008.4.1~5.12)에 조기 종식시켜 세계를 놀라게 하였기에 UN에서는 우리나라를 철저한 방역조치로 AI 방역에 성공한 모범국가로 지목(2008.6.17)하기도 하였다.

H5NI 바이러스에 의한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가 전 세계적으로 연중 발생하고 있고, 우리나라 인근 및 동남아시아 국가에 토착화 되어 있으므로 철새와 교역 등에 의한 재유입 위험성이 상존하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정부에서는 상시방역체계로의 전환을 골자로 하는 「2008년도 AI 재발방지 대책(7. 22)」을 수립하는 등 정책 개선을 통해 강력한 예찰체계를 구축하여 재유입 즉시 검색과 조기 진단에 의한 조기경보시스템을 운용하여 AI 발생위험을 최대한 억제하고 있다

구제역, 고병원성 조류인플루엔자 등 악성 가축전염병의 국내 유입 및 확산 방지를 위해 “평시방역 강화대책”에 따라 국경검역 및 국내방역 조치를 지속적으로 추진하는 한편, 지방자치단체 및 축산농가의 가축 방역실태를 주기적으로 점검하여 보완이 필요한 사항을 발굴하여 개선하고 있으며, 가축방역대책의 추진 효과를 제고하기 위해 질병별 시기별 발생 양상을 과학적으로 분석하여 사전 예방위주의 가축방역 활동을 수행할 수 있도록 국내 방역시스템을 개선해 나가고 있다.

인수공통전염병 예방과 발생시 피해 최소화를 위하여 질병관리본부, 수의과학검역원 등이 합동으로 「인수공통전염병대책위원회」를 구성·운영하여 브루셀라, 광우병 등을 중점관리하고 입국자 소독, 해외 여행객에 대한 홍보 등에서 공조체제를 강화해 나가고 있으며, 인수공통전염병 발생시 국경검역, 국내 방역과정에서 공동 대응해 나가기로 하는 등 범정부적 대응체제를 구축하기로 하였다.

우선 가축사육업 등록, 친환경축산직불제사업 활성화 등을 통해 단위면적당 사육밀도를 완화해 나가는 한편, 중장기적으로 가축방역에 취약하거나 밀집사육으로 환경부하가 큰 지역에 대하여 가축사육밀도 완화, 축사 신·증축 억제 의무 부여 등 특별관리를 해 나갈 계획이다.

동북아 등 가축방역 여건이 열악한 국가들과 교류가 활발해짐에 따라 국경 검역도 강화해 나가기로 하고, 검역탐지견 투입을 늘려 공·항만 해외여행자 휴대품 검색을 강화하고 해외여행객을 대상으로 외국 방문시 축산농가 출입자제 등에 대한 홍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가축방역 및 축산물 위생관련 업무 증가 등으로 현장 방역인력이 부족해짐에 따라 일선 방역기관의 방역인력을 확충, 업무역량을 강화하고자 수의사가 3년간 가축방역기관에서 근무할 경우 병역복무를 대체해 주는 「공익수의사제도」를 2006년 도입하여 2007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현재 255명(2007년 123명, 2008년 132명)의 공익수의사가 시·군, 검역원, 시도 가축위생시험소 등 일선 방역기관에 배치되어 방역업무를 수행하고 있으며, 앞으로 매년 150명의 공익수의사를 배치하여 연간 최대 450명의 인력을 운영할 계획이다.

(농림수산식품부 동물방역팀 서기관 이지우)

(3) 축산물 등급판정 사업 확대 및 제도개선

국내산 축산물의 품질향상과 원활한 유통을 위해 국내에서 도축·거래되는 소와 돼지는 축산법에 의거 모두 등급판정을 받아야 한다. 반면 닭고기와 계란은 등급판정을 희망하는 경우에 한해 등급판정을 시행하고 있다.

2007년도에는 그동안 시범사업으로 추진되어 오다 2006년에 중단되었던 닭고기 등급판정사업을 재개하였고, 꾸준히 제기되어 오던 돼지도체 등급판정 기준의 문제점을 보완하여 기존의 규격등급 외에 육질등급기준을 마련 후 7월

1일부터 전국적으로 시행하였다.

2008년도에는 돼지 육질등급제의 정착과 소비자가 등급을 알고 구매할 수 있도록 소매단계에서 등급별 구분판매제도 시행을 준비하고 있다. 또한 학교단체급식용으로 납품되고 있는 축산물의 검수업무를 지원하기 위해 축산물등급판정소 홈페이지에 '축산물검수 서비스'를 보완하여 확대 운영하고 있으며 축산물등급판정 확인서 발급시스템도 개선하였다.

등급판정의 객관성을 높이기 위하여 소·돼지 육질등급판정 기계, 계란판정 자동화 기기 등을 농촌진흥청 공학연구소 등과 공동으로 개발 중에 있으며 2010년에 현장에 적용할 계획이다. 아울러 축산물의 안전과 품질에 대한 소비자의 불안심리를 해소하기 위하여 국내산 축산물의 우수성과 등급제의 활용방법 등을 중심으로 대 소비자 홍보·교육을 더욱 확대 추진하고 있다.

한우 1등급이상 출현율이 2008년에는 54%, 돼지 1+등급 출현율은 7%까지 증가할 것으로 전망되고 있으나 등급제가 축산물의 품질향상에 더욱 기여할 수 있도록 농가 컨설팅과 함께 등급판정결과와 관련된 정보를 신속히 제공하기 위한 제반 시스템을 보완하여 운영할 계획이다.

(농림수산식품부 축산물위생팀 행정사무관 윤영렬)

자. 쇠고기 이력추적제 추진

이력추적제는 소의 출생에서부터 도축·가공·판매단계에 이르는 전 과정의 이력정보를 기록 관리하여 위생·안전상 문제 발생시 신속한 원인규명과 조치를 가능하게 한다. 이로 인해 소비자 피해 및 경제적 손실을 최소화하고 둔갑 판매방지 등으로 국내산 쇠고기의 소비를 확대하고 종축 개량 등을 위한 정보 통합관리 등으로 한우산업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유럽, 일본 등의 광우병 발생 등에 따른 축산 관련 단체 등의 요구와 식품안전에 대한 소비자의 인식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이력추적제를 시행하는 방안을 추진하였다. 이 제도의 시행에 따른 시행착오를 줄이고 조기에 사업을 정착시키기 위해 2004년 10월부터 주요 브랜드와 일부 시·군을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실시하고 있다.

(1) 그동안의 추진실적

쇠고기 이력추적시제는 2004년 10월 황성한우 등 9개 우수 브랜드경영체를 선정, 시범사업에 착수하였으며, 2005년 8월에는 시범사업을 자체 평가하여 지역단위 추가, 소 귀표체계 개편, 유통단계 사업장 확대 등 개선방안을 마련하였다.

2005년 12월부터 2006년 시범사업 추진규모를 확대하여 브랜드경영체 5개소와 참여를 희망하는 3개 시·군을 추가 선정하였으며, 2006년 7월에 참여를 희망하는 브랜드경영체 6개소를 추가로 선정하여 실시하였다.

2007년 12월 현재 1개도(경기도)와 22개 축산물브랜드, 25개 시·군이 쇠고기 이력추적제 시범사업에 참여하고 있으며, 이들 78개 브랜드경영체와 시·군에서 한육우 73만두가 쇠고기 이력추적시스템에 등록되어 있다.

이와 더불어 도축장, 가공장, 판매장 등 쇠고기 이력추적제 연계 사업장으로 참여하는 사업체도 240개소로 확대하여 유통단계에서 소비자들이 원산지 확인 등 구입할 쇠고기의 이력확인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국내산 쇠고기에 대한 신뢰제고에 기여하고 있다.

이러한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국회 차원에서 의원입법을 통해 소 및 쇠고기 이력추적에 관한 법률이 2007년 11월 21일 제정하였고, 2007년 12월 21일 공포하여 제도적인 기반이 갖추어졌다.

동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마련하기 위해 2008년부터 농림수산

식품부, 농진청, 축산 관련 단체, 학계, 전문가 등으로 이력추적법 하위법령 제정 실무협의회를 구성·운영중이다.

(2) 본 사업에 대비한 사업 확대 및 제도 정비

2008년도는 12월 22일 법 시행에 대비하여 시범사업 참여대상을 대폭 확대하기 위해 지역별로 144개 대행기관을 지정하여 소의 소유자 등의 신고 접수와 귀표 부착, 정보 전산입력 등의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농협중앙회는 귀표를 구매하여 전국 대행기관에 직접 공급하고 있으며, 축산물등급판정소에서는 전산시스템 관리, 이력지원실 운영 등을 지원하여 사업이 원활히 추진하도록 운영체계를 정비하였다.

또한 전국 시·도 중에서 부산시를 제외하고는 이력추적제의 사육단계에 모두 참여하고 있으며, 도축장 등 연계 사업장은 472개소가 참여하고 있으며, 소 전체 사육두수 289만두 중 200만두를 이력추적시스템에 등록하도록 추진하고 있으며 법 시행시 귀표 부착 등에 대한 혼란이나 어려움이 최소화되도록 하였다.

아울러 2008년도에는 사업추진에 따른 각종 문제점 등을 발굴하여 개선하고, 지난 3년여 시범사업 기간동안 이력추적제 전반에 대한 정밀한 분석 및 평가를 통해 개선방안을 마련하여 본 사업이 차질없이 추진되도록 기초를 완벽히 다져야 한다.

이를 위하여 이력추적제 관련 기관·단체, 전문가 등으로 이력추적제 실무협의회를 구성하여 매주 회의를 통해 계획 검토, 기관별 역할 및 사육·가공·판매단계별 세부추진방안, 전산 프로그램 개선 보완, DNA 검사방안 등에 대해 구체적으로 분석, 협의해 오고 있다. 또한 실무협의회를 통해 시범사업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이나 오류, 제도 보완 등에 대해 현황 분석, 전문가 의견 수렴, 협의 등을 거쳐 개선·보완 작업을 해나가고 있다.

이와 병행하여 이력지원실을 축산물등급판정소에 설치하고 사육농가나 대행기관, 도축장, 식육포장처리업체, 식육판매장 등 이력제 참여자의 제도 설명, 전산 입력방법 및 절차, 운영상 문제점 해소, 건의사항 접수 등을 실시간으로 대응하고 있다.

금년도 시범사업을 원활히 운영하여 평가하여 12월 본 사업체 차질없도록 대응하기 위해 10월 1일부터 11월 30일 까지 시·도 평가 작업을 하고 있으며, 10월 15일부터 10월 30일까지 전국에 걸쳐 현장 점검 및 평가를 위해 대행기관과 사육농가 등을 방문하는 계획 등을 추진하고 있다.]

(3) 시범사업 마무리 및 사업 조기정착 추진

금년도, 5월부터 시행하는 시범사업에 사육농가를 최대한 참여시켜 이력추적제 등록 마리수를 현재 73만두에서 200만두로 확대해 나가고, 12월 22일 법 시행전에 하위법령 및 사업지침 등 제도적 틀을 11월말까지 마련하여 본 사업이 차질없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운영중인 이력추적시스템을 농림사업통합정보시스템(Agrix)와 연계하여 데이터 활용도를 높이고 운영 효율성 등을 제고하고, 농축산물안전관리시스템과 축산물가공처리법상 이행사항등과 연계하여 신고업무 등 부담 경감방안을 강구할 계획이다.

아울러 이력추적제 관계자 및 이력단계별 종사자를 대상으로 현장에서 바로 활용하도록 업무편람 등 제작, 교육홍보를 실시하여 제도에 이해를 높이고 신고 등 이행사항에 대하여 전문성을 갖추도록 하여 사업이 조기에 정착되도록 대비해 나갈 계획이다.

(농림수산식품부 축산물위생팀 사무관 운영렬)

차. 우수 축산물브랜드 육성

축산구조를 브랜드 경영체 중심으로 개편한다는 목표 하에 「축산물브랜드 육성대책」이 2004년 2월에 수립된 이래로 지금까지 축산물 브랜드의 개념, 육성 방향 등 기본체계 구축을 위해 꾸준히 노력하여 왔다.

2007년은 축산물브랜드발전 1단계 대책이 마무리 된 해로서 브랜드 사육비중이 2004년에 한우가 24.8%, 돼지가 45.0%이던 것이 2007년에는 각각 32.6%, 51.7%로 크게 높아졌다.

현재 축산물 브랜드는 1단계 브랜드 대책 추진을 통해 기반형성기를 지나 성장단계로 진입하고 있다. 그동안 브랜드 인증, 시설·운영자금 지원 등 전방위적 육성으로 브랜드 경영체의 가축 사육비중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소비자 인지도가 상승하고 있는 등 브랜드 활성화에 상당한 진전이 있었던 것은 사실이나, DDA/FTA 등으로 대외 개방이 가속화 되는 상황에서 경쟁력을 갖춘 브랜드 경영체를 육성하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브랜드 육성방안을 수립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이에 따라 2017년까지 브랜드 경영체 사육비중을 소 60%, 돼지 80% 이상 달성한다는 목표 하에 「축산물브랜드 2단계 발전대책」이 2007. 11월에 마련되었다.

2008년은 「축산물브랜드 2단계 발전대책」 시행 원년으로서 ① 소규모 브랜드 통합으로 규모화·광역화를 추진하고, ② 우수 브랜드를 고품격 브랜드로 발전시키고, ③ 차별화된 컨설팅·교육·홍보로 성장을 뒷받침 한다는 기본전략 하에 대책을 실효성 있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브랜드 경영체 운영자금(32개소, 1,454억원) 지원기준을 강화하여 대규모·우수 브랜드에 중점지원 하되, 출하두수 한우 300두, 돼지 20천두 이하 브랜드는 지원에서 제외하여 통합·규모화를 촉진할 계획이다.

또한 브랜드 우선순위에 따라 축사시설 현대화, 가축분뇨처리 사업 등 10개 사업(3,043억원)을 통합하여 패키지 방식으로 지원하여 브랜드 경영체의 편의도모는 물론 투자의 효율성이 제고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신뢰를 높이기 위해 소비자시민모임과 함께 우수 축산물 브랜드 인증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금년 3월부터 인증기준 마련, 신청, 서류심사, 현지실사 등을 실시하여, 심의위원회의 최종 심의를 거쳐 12월 중에 2008년 인증 브랜드를 발표할 계획이다. 이를 통해 유통업체에서 소비자들이 추천하는 우수축산물 브랜드를 찾아 판매토록 하여 시장에서의 차별화와 함께 유통업체와의 교섭력이 확보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브랜드 경영체의 재무·마케팅 등 컨설팅 지원(6개소 3억원), 소비자 단체와 연계한 우수 축산물 브랜드 인증 지원(210백만원), 축산물 브랜드 페스티벌(5억원), 브랜드경영체 연찬회 개최 등을 통한 차별화된 맞춤형 컨설팅 지원 및 교육·홍보를 강화할 계획이다.

한편 국내산 축산물에 대한 소비자 인식 제고 및 국내산 수요 증대를 위해 직거래 기반을 확충할 계획이다. 그 방안으로 소비자 접근성이 좋은 대도시 근교에 브랜드육 판매점·음식점·전시관 등 복합시설로서 브랜드육 타운을 조성(2009년도 2개소, 2013년까지 10개소)하여 산지 직거래를 통한 유통비용 절감과 합리적 가격형성을 유도해 나가고, 브랜드별 직영 판매시설 지원(14개소, 88억원)으로 브랜드육 판로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DDA/FTA 등 시장개방 확대, 대형유통업체 성장 등 소비지 유통환경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응하기 위해서는 생산에서 유통단계까지 일관된 품질관리, 안정적인 공급능력 확보, 마케팅시스템을 갖춘 우수 브랜드 경영체를 육성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를 위해 명품 브랜드 육성, 소규모 브랜드 통합, 차별화된 컨설팅·교육과

동시에 브랜드간 협력을 주요 전략 축으로 「축산물브랜드 2단계 발전대책」을 착실하게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농림수산식품부 축산물위생팀 사무관 송광현)

5. 임업

가. 아름답고 가치있는 산림 조성

(1) 산림용 우량 묘목생산을 위한 기반정비

가치 있는 산림자원을 조성하기 위해서는 우수종자를 개발·생산하여 우량묘목으로 생산 한 후 조림사업에 공급해야한다. 특히 임목은 농작물과 달리 생장기간이 길어 조림 후 수확기까지 장기간 소요되므로 열등한 품종으로 숲을 조성하면 성장감소가 수확까지 누적될 뿐 아니라, 형질 불량한 임목이 생산되어 국가적으로 많은 경영손실을 초래하므로 산지가 확실한 우수종자를 활용한 우량묘목생산과 기반정비사업은 매우 중요하다.

금년부터新品种 개발 촉진을 위한 품종보호제도와 『농업유전자원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산림분야 유전자원의 관리(이하 ‘산림유전자원관리’)를 시작하였으며, 국제적인 기준인 『산림용번식자원 인증규범(CFRM)』에 따른 산림용종자 국가관리, 종묘산업 생산성 향상 및 경쟁력 강화를 위한 기반조성사업 등을 지속 추진하였고, 또한 이러한 일을 체계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 전담기관을 신설하였다.

첫째, 품종보호제도의 도입

국제무역기구(WTO)의 지적재산권협정(Trips)에 따라 우리나라는 2002년 국제식물신품종보호동맹(UPOV)에 가입하여 품종보호제도를 시작하였으며, 산림

분야는 금년 3.1일부터 시작하였다. 품종보호제도는 육종가(개발자)의 권리보호를 통해 신품종 개발을 촉진하고 국내외 지적재산권 분쟁으로부터 재배자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국가산림유전자원의 불법 유통 및 외국품종의 무분별한 국내 유입 등을 차단하는 효과가 기대된다.

산림청이 주관하게 될 품종(임산물)은 2008년 새롭게 지정된 표고버섯, 밤나무 등 15개 품종과 농업분야에서 이관된 산딸기를 포함 16종이며, 2009년에는 전 품종으로 확대 될 예정이다.

2008년 3.1일부터 품종보호 출원신청 가능한 품종

구 분	산 립 분 야
산림수종	뽕은 감, (산딸기), 산수유, 천마, 표고, 밤, 느티, 벗, 단풍, 대추, 백운풀, 벌개미취, 돌단풍, 기린초, 대사초, 쑥

둘째, 산림유전자원 관리체계 구축

2008.8.5일부터 『농업유전자원 보존·관리 및 이용에 관한 법률』이 시행됨에 따라 산림유전자원의 수집·보존·관리 및 이용 활성화를 위한 책임기관과 관리기관을 지정하고, 통합된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며, 관련 규정의 제정 및 지침 등을 마련하였으며, 2009년부터는 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본격적으로 관리 할 계획이다.

셋째, 우량한 산림용 종자공급을 위한 채종원, 채종임분 확충·관리

검증된 산림용 종자를 생산·공급하여 우량한 산림자원을 조성하고자, 채종원 조성·관리 발전방안을 마련함과 동시에 채종원 수급이 어려운 수종에 대해서는 OECD에서 정하는 채종림 구비조건(OECD/CFRM)에 맞는 채종림을 확대 지정하여 국가에서 채취한 종자를 묘목대행생산자에게 공급함으로써 종자국가관리체계를 확립하였다.

종자공급원 조성실적

구 분	면적(ha)	개소수	비 고
채종원	713	215	
채종립	289	54	지정·변경

※ 2008. 10월 현재

넷째, 종묘산업의 생산성향상을 위한 기반조성사업의 지속 추진

2002년도부터 지역실정에 맞는 우량·건전묘목을 생산·공급하기 위해 묘목 생산기반조성사업(간이온실, 관정시설, 묘포지 토양개량사업, 종자저장고 시설)을 추진하고 있으며, 이는 묘목생산기반조성과 함께 지역산업으로서 발전시킴을 목표로 하고 있다.

묘목생산기반조성사업 실적

구 분	계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	2009 예정
관 정	97공	20	20	22	10	10	10	5	6
간이온실	82동	16	14	17	9	9	9	8	12
토양개량	358ha	-	96	98	62	51	17	34	42
양묘장비구입	57조	-	-	10	10	16	14	7	-
종자저장시설	3동	-	-	1	1	-	1		-

다섯째,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의 설립

새롭게 시작되는 품종보호제도와 산림유전자원관리와 기존 여러 기관에서 분산 관리하던 채종원 및 채종립 조성관리, 종자의 생산 및 검사, 유통 등을 일원화 하기 위해 기존의 국립산림과학원 종자연구소(채종원 관리 및 연구중심)를 확대·개편하여 『국립산림품종관리센터 4급, 33명』을 신설하였으며, 센터에는 품종심사과, 종묘관리과, 행정지원팀을 두었다.

(산림청 자원육성과 임업사무관 김윤병)

(2) 산림의 다양한 기능 증진을 위한 조림

국민들에게 산림의 가치와 소중함을 알리고 후손들에게 물려줄 아름답고 가치 있는 경제·환경자원을 조성하기 위하여 산지(山地)와 도시·마을 등 생활권 주변 나무심기 추진으로 아름답고 풍요로운 녹색나라 건설을 목표로 2008년에 경제수조림 12천ha 및 생활권 주변에 4천ha의 큰나무, 경관조림 등 21천ha 다양한 나무심기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산림을 활용한 지역발전과 산림투자 확대를 모색하고 숲의 특성에 따라 환경친화적이고 지속 가능한 산림소득·경영숲을 조성하여 다양한 산림경영모델숲을 조성코자 2005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산림경영모델숲·경제림육성단지에 산림자원육성과 병행하여 생산·가공·유통 등 연관사업을 집중하여 임업의 경쟁력을 높이고, 안정적인 산업발전을 도모하고자 2006년부터 산림특화시범사업, 2007년부터 유희토지조림, 2008년부터 바이오순환림조성을 신규사업으로 추진하고 그 성과에 따라 확대 추진할 계획이다.

금년도 조림사업은 생태적으로 건전한 유망 활엽수 등 용재·소득수종 조림과 생활권 공익조림을 추진하면서 대면적 단일 수종의 획일적 조림방법을 지양하고 조림대상지의 지형, 토질, 지세 등을 고려한 생태적으로 안정된 산림자원 조성과 조림사업의 특성을 감안하여 경제수조림, 큰나무조림, 바이오순환림 조성, 유희토지조림, 금강소나무 육성 등 기능과 목적에 맞는 다양한 조림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또한, 산림의 대면적 벌채를 지양하고 조림하는 방법 여건 등이 악화됨에 따라 자연 복원력(움씩)을 이용하는 생태조림을 확대 추진하고, 1960~1970년대 치산녹화사업으로 황폐된 산림을 성공적으로 녹화하였던 리기다소나무림이 벌기령이 지나 노쇠하고 푸사리움 가지마름병이 만연되어 자연경관을 해치고 있어, 이를 벌채하여 국산 원자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하고 리기다소나무림을 친환경적인 갱신방법으로 약용·특용수종 및 산주가 원하는 소득수종으로 다양한

갱신을 추진코자 리기다소나무림 벌채·갱신 사업을 지속적으로 확대추진 해 나갈 계획이다.

조림사업 추진

구 분	계	2006	2007	2008	2009(예정)
면적(ha)	84,352	20,660	20,775	21,653	21,264
본수(백만본)	175	47	44	42	42

(산림청 자원육성과 임업사무관 권영록)

(3) 경제림 단지 육성

우리나라는 세계가 인정할 만큼 짧은 기간에 산림녹화에 성공하였으나 산림 자원으로서의 가치는 아직 낮은 수준이다. 2006년 말 기준으로 우리 산림은 30년생 이하의 어린나무가 59%를 차지하는 청년기 산림으로 체계적이고 적극적인 숲가꾸기를 통해 우량 산림자원으로 가꾸어 주어야 할 상황이다. 이를 위해 성장이 불량한 산림은 수종갱신을 통해 경제성이 높은 새로운 수종으로 조림하고, 우량 천연림은 적극적으로 보육하는 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오고 있다. 2008년부터 2017년까지 제5차 산림기본계획 기간에는 우량 활엽수림, 소나무, 참나무 등의 천연림과 인공림 234만ha에 대한 숲가꾸기를 경제림육성단지에 중점적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경제림육성단지에 관한 법적 근거가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마련됨에 따라, 전국의 450개 단지 292만ha(국유림 : 105개 단지 58만ha, 민유림 : 345개 단지 234만ha)의 경제림육성단지(2005. 9. 26 확정)에 대한 산림자원의 조성·육성을 선택과 집중 전략을 적용하여 추진하기 위해, 경제림육성단지 관리계획을 연차별로 수립하고 있다.

민유림에 대한 경제림육성단지 관리계획은 2006년에 도별로 1개소를 선정하여 8개 시·군 25개 단지 242천ha를 시범적으로 수립하고, 2007년에는 45개 시·군 138개 단지 1,095천ha의 관리계획을 수립하였으며, 2008년에는 30개 시·군 119개 단지 715천ha에 대한 관리계획은 연말까지 수립 완료할 예정이다. 또한 경제림육성단지 정보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GIS 수치지도 구축을 완료하고 지자체, 지방산림청 등 경제림육성단지 관리기관의 관리 편의성 증진을 위해 관리기관별로 경제림육성단지 관리도면의 제작 및 배포를 완료하고, 적지적수 프로그램인 맞춤형 산림지도를 제작하여 일선 시·군과 국유림관리소까지 배포함으로써 기후와 토양 등 지역특성에 맞는 수종을 과학적으로 선정하여 경제림을 육성토록 하였다.

경제림육성단지현황

(단위 : ha)

구 분	계	국 유 립	민 유 립
단 지 수	450개소	105개소	345개소
면 적	292만ha	58만ha	234만ha

민유림 경제림육성단지 관리계획 수립계획

구 분	계	2006	2007	2008	2009
시·군 수	128	8	45	45	30
단지수(개소)	340	25	138	119	58
면 적(만ha)	234	24	109	72	29

※ 국유림(105단지, 58만ha는 기 수립된 산림경영계획에 따라 관리)

(산림청 자원육성과 행정사무관 박동희)

(4) 숲가꾸기로 산림의 경제적·환경적 가치증진

(가) 추진배경과 정책목표

산림청에서는 1998년부터 산림정책의 기초를 ‘심는 정책’에서 ‘가꾸는 정책’으로 전환하여 산림을 경제·사회·환경적으로 가치 있는 자원으로 육성함과 동시에 국민들의 다양한 공익적 수요에 부응하기 위한 숲가꾸기 사업의 기틀을 마련하여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

숲가꾸기 사업은 인공조림지 및 우량 천연림의 건전한 생육을 도모하기 위해 실시하는 사업으로 풀베기, 어린나무가꾸기, 간벌(숙아베기), 덩굴류제거, 천연림보육(天然林保育), 천연림개량(天然林改良), 산물수집 등으로 구분한다. 숲가꾸기 사업은 투자수익률이 낮고 국토자원 보전 등 산림의 공익적 가치를 고려하여 산주에게 사업비의 90%를 보조하고 있다.

(나) 추진실적

제4차 산림기본계획(1998~2007) 기간내에 추진한 숲가꾸기 사업은 총 2,713천ha로 계획(1,560천ha) 대비 174%를 실행하였다.

이 기간 동안 숲가꾸기 사업은 기능인영림단, 산림조합, 산림사업법인 등에 의해 실행되는 정책 숲가꾸기와 IMF 경제위기에 따른 실업대책사업으로 추진된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이 병행 추진되었다. 특히 1998년부터 2002년까지 5년간 추진된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을 통하여 연인원 1,554만명(상시 연평균 13천명)의 실업자를 고용하여 실업극복을 위한 고용창출에 크게 기여하였다.

2003년에는 경제여건이 호전됨에 따라 공공근로사업이 종료되고 전문 기능인에 의한 기술적 정책 숲가꾸기 사업이 대폭 확대되어 모두 346천ha의 산림을 가꾸어 주었다.

사 업 별	내 용	보조연도
풀 베 기	조림목의 피압방지 등 사후관리	1987
어린나무가꾸기	조림목의 초기생장 촉진	1986
덩 굴 제 거	인력으로 제거(1985년 이전) 글라신액제(1985) 및 디캄바액제(1995)를 이용한 약제제거 실시	1982
슈 아 베 기	생산 또는 수익추구 간벌 실시(1980년 이전) 임내정리 및 무육(撫育)차원의 간벌 실시(1980년 이후) 도태간벌, 열식간벌 실행(1985)	1988
천연림보육	한독산림경영사업기구에서 참나무림에 대해 최초 실시(1978) 천연림 우량목 무육 개념 도입(1982)	1985
천연림개량	목재생산 목적이 아닌 천연림의 형질 개선을 위한 작업 실시	2004
산 물 수 집	숲가꾸기 공공근로사업으로 산물수집 실시(1998~2002) ※ 2003년부터 재해발생 우려지에 대하여 별도 국고보조사업으로 산물수집사업 실시	1998

그동안 추진된 숲가꾸기 사업의 가장 큰 성과는 산림정책의 기초를 심는 정책에서 가꾸는 정책으로 전환하여 정착시켰다는 것이다. 또한 숲가꾸기 사업에 시민단체와 함께 숲가꾸기 모니터링, 시범림 조성사업 등을 연계 추진함으로써 시민단체와의 파트너십 강화뿐만이 아니라 산림청의 적극적인 홍보와 교육을 통해 숲에 대한 국민들의 인식을 전환하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또한 산림자원의 지속가능한 관리를 위하여 산림청 훈령으로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을 제정하여 시행함으로써 숲의 기능별, 목표생산재별로 차등화된 숲가꾸기 기술을 적용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다.

숲가꾸기 사업 추진실적(1998 ~ 2007)

(단위 : 천ha)

연 도	실 적		
	계	정책사업	공공근로사업
계	2,372	1,916	456
1998	257	214	43
1999	283	154	129
2000	276	159	117
2001	229	134	95
2002	296	244	52
2003	346	346	-
2004	337	337	-
2005	348	348	-
2006	337	337	-
2007	304	304	-

자료 : 산림청 산림자원국

2002년 공공근로사업이 종료됨에 따라 전문기능인에 의한 기술적인 정책 숲가꾸기 사업을 대폭 확대함으로써 공공근로사업이 중단된 이후에도 지속적으로 산림을 가꿀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였으며, 숲가꾸기 사업 확대에 따른 사업 부실 방지를 위해 각종 제도적·법적 개선이 이루어지고 2004년부터 2008년까지 5년동안 100만ha의 숲을 가꾸는 1단계 ‘숲가꾸기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공공근로사업에서 탈피하여 숲의 공익적·경제적 가치를 체계적으로 높여 나가는 전기를 마련하게 되었다.

숲가꾸기를 이용한 고용창출에 대한 과거의 성공적인 경험을 바탕으로 2005년에는 공공성이 강한 산림을 가꾸어 주는 사회적 일자리 창출 숲가꾸기를 신규 사업(사업명 : 공공산림가꾸기)으로 추진함으로써 2007년까지 상시 고용인원 7,171명(연인원 1,721천명)을 고용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사회적 일자리 창출 사업은 공공근로사업과 달리 참여 근로자의 100%를 2주 이상의 기술교육을 통해 임업분야의 전문노동력으로 창출하고자 하였다.

최근 3년간 일자리 제공 실적

사업명	2005년		2006년		2007년	
	인원(명)	금액(백만원)	인원(명)	금액(백만원)	인원(명)	금액(백만원)
계	8,651	147,385	10,198	157,970	9,489	155,000
정책숲가꾸기	6,904	124,973	7,675	124,516	6,588	114,799
공공산림가꾸기	1,747	22,412	2,523	33,454	2,901	40,201

자료 : 산림청 산림자원국 (일자리는 12개월 환산인원임)

특히, 실업자 대책으로서 공공근로사업이 아니라 여성에 대한 일자리 제공 (2001년 여성참여자 비율 4.3% → 2007년 5월 현재 여성참여자 비율 22%)과 산림분야의 대졸자의 일자리 제공의 차원으로 업무보조요원을 신설하였다.

(다) 2008년 향후계획

2003년도에 수립한 숲가꾸기 5개년 추진계획과 2004년에 제정된 지속가능한 산림자원 관리지침(산림청 훈령)에 따라 산림의 다양한 가치와 기능이 최대로 발휘될 수 있도록 산림을 기능별로 분류하고 그 기능에 맞는 기술적·생태적인 숲가꾸기를 추진해 나가고 있다. 2008년은 2,478억원(국고)의 예산으로 208천ha의 숲을 가꾸어 나갈 계획이다.

2008년 각 부문별 숲가꾸기 세부 추진계획

구 분	계 획(단위)	비 고
고속도로 주변 숲가꾸기	1,865km	경부고속도로 등 16개 고속도로
녹색댐 조성 사업		
- 5대강 유역 수원함양림 숲가꾸기	25,591ha	한국 수자원공사와 공동사업
- 기본설계 계획	5개댐	주암, 주암조절지, 합천, 남강, 운문
설계·감리제도 시행	전면시행	50ha이상의 숲아베기를 수반하는 사업
사회적 일자리 창출	3,800명	고용사업의 일환으로 추진

자료 : 산림청 산림자원국

○ 숲다운 숲 가꾸기

숲가꾸기 사업의 생산성 향상 및 품질 강화를 위해 외부 전문가 집단을 활용한 설계·감리 제도를 2003년도부터 시범사업을 통하여 추진한 결과를 바탕으로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에 반영하여 2006년 8월 5일부터 50ha이상의 사업에 대하여 전면 시행하였다. 금년에는 2단계 숲가꾸기 5개년 계획(2009~2013)을 수립하여 125만ha 숲가꾸기를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산림의 경제적 가치 제고를 위하여 기능별·경영목적별로 숲가꾸기 방법을 차별화하여 투자 효율성을 증대시키고, 소나무·참나무를 우리나라 대표 수종으로 육성해 나가며 간벌재 등의 수집비 지원으로 산림바이오매스 활용을 더욱 촉진해 나갈 것이다. 산림바이오매스 수집단을 신규 조직하여 숲가꾸기 이후 발생된 산물을 수집하여 활용도를 높이고 있다. 이는 일자리 창출에도 기여하여 1석2조의 효과를 창출하고 있다.

2008년 숲가꾸기 사업 추진계획

(단위 : 천ha, 억원)

구 분	사 업 량	예 산	비 고
계	208	2,478	예산은 국고기준
민 유 립	172	1,896	
국 유 립	36	582	

자료 : 산림청 산림자원국

○ 사회적 일자리 창출 숲가꾸기

금년은 542억원의 예산으로 도시·농산촌 지역 저소득계층 3,827명을 상시고 용하며, 사업 대상지는 공공적 성격이 강한 산림으로 경관관리가 필요한 주요 도로변 산림, 병해충 등 재해예방을 위해 긴급히 정비가 필요한 산림, 댐·호수 및 주요 강유역 등 수원함양을 위한 산림, 각종 규제로 방치된 도시주변 산림 등이다.

고용형태는 일일 고용형태로 주 40시간 근무제이며 주차, 월차를 시행하고 있으며 고용·건강·의료보험과 국민연금을 가입하도록 하고 일일 임금 외에 부대경비를 지급하고 있으며, 일정 자격조건을 가진 근로자에게는 기술수당도 지급하고 있다.

특히 본 사업에 참여하는 모든 근로자에게는 2주간의 기능교육을 실시하여 사업의 품질을 높이고 희망자에 한해 최대 6주까지의 교육을 유급으로 실시하고 있어 향후 숲가꾸기 분야에서 기능인으로서 직업을 가질 수 있는 기회를 부여하고 있다.

사회적 일자리 창출 숲가꾸기 추진계획

구 분	계	2006	2007	2008	2009
○ 고용인원(천명)	21.2	3	3.4	4.8	10
○ 사업비(억원)	2,281	336	435	542	968

자료 : 산림청 산림자원국

○ 고속도로변 숲가꾸기

2005년 경부고속도로 서울~대전 구간, 2006년에는 경부고속도로 잔여구간 및 영동, 중부, 호남고속도로 1,072km, 2007년 서해안 고속도로등 1,072km 주변 산림을 가꾸어 숲가꾸기를 통한 경관립 조성을 시행하여 많은 호응을 받았다. 금년에는 경부고속도로 등 16개 고속도로 1,865km를 숲아주어 경관적으로도 아름답고, 최종 수확시에 생산되는 목재의 경제적 가치도 함께 높여나갈 계획이다.

(산림청 자원육성과 임업사무관 이용권)

나. 산림재해방지와 건전한 산림생태계 보전 강화

(1) 산불예방 강화와 초동진화 체계 구축

(가) 2007년 이행실적

2007년에는 연간 418건의 산불로 230ha의 산림피해가 발생하여 5년 평균 대비 산불발생 건수와 피해면적이 각각 3%, 73% 감소하였다. 특히, 지구 온난화의 영향으로 겨울 가뭄이 지속되면서 1·2월에만 예년 평균의 2배 가까운 183건의 산불이 발생하는 등 산불발생 시기가 빨라져 3·4월에 집중하던 산불발생의 월별 편차가 완화되는 양상을 보였다.

기상여건의 불규칙한 변화, 산림내 지피물 등 연소물질 증가, 주5일 근무제 시행으로 인한 산행인구의 증가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산불피해가 예년에 비해 대폭 감소한 것은 일선 공무원들의 적극적인 산불방지 노력과 함께 산불관리센터를 1개소에서 3개소로 확대 운영하면서 유관기관 공조로 현장대응능력을 강화하고, 초대형헬기 2대 등 현대화된 진화장비 도입과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을 비롯한 산불예방·감시인력 28천명을 산불위험시기에 집중 배치하여 운영하면서 『산불현장 통합지휘지침』에 의한 산불현장 통합지휘체계 정착, 『산불재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에 따른 체계적 대처 등으로 산불대응 능력을 향상시킨 데 기인한 것으로 평가된다.

2007년도 산불현황

구 분	5년평균동기 (12. 31 까지)	2007년도 (2006.1.1~12.31)	5년평균대비 증(△)감
발 생 건 수 (건)	431	418	△3 %
피 해 면 적 (ha)	855	230	△73%
건 당 피 해 면 적 (ha)	1.98	0.55	△72%
건조일수당피해면적 (ha)	10.3	3.1	△70%

특히, 2007년에는 민간단체가 중심이 되어 430여 만 명의 국민이 참여한 “산불조심 100만명 시민 서명운동”을 추진하여 산불방지에 대한 국민적 정책 공감대를 형성하고 관 주도에서 NGO·시민 주도의 산불예방 활동을 활성화하는 계기를 마련하는 성과가 있었다.

(나) 2008년 추진계획

2008년에는 산불발생 시기별·원인별로 맞춤형 대책을 추진하고, 산림내 목조 건축물 주변 산불방지 숲가꾸기 사업을 신규로 추진할 계획이며, 인화물질 사전 제거, 산불방지임도 시설, 소화전 설치 등 산불취약지에 대한 관리를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대국민 영향력이 큰 중앙TV, 포털사이트 등을 통해 산불예방 공익광고를 확대하고, 산불방지 홍보요원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여 산불발생 및 진행상황을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파하여 국민공감대를 넓히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산불예방 및 감시인력 22천명을 조기에 산불위험시기에 취약지에 집중 배치하고 무인감시카메라 9개소를 신규로 시설하는 한편 기존 감시카메라에 낙뢰 보호장치를 보강하여 산불의 조기발견 및 대처가 가능하도록 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년보다 542명을 증원한 산불전문예방진화대원에 대한 교육을 강화하여 산불진화현장 대응력을 강화할 계획이다.

또한, 산불진화헬기 46대와 시·도 임차헬기 42대로 강력한 공중진화체계를 구축하고, 경남 함양에 격납고 1개소를 신규 설치하여 산불현장에 진화헬기가 30분 내에 도착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출 계획이다. 그리고 우리나라의 산악지형에 적합한 기계화 산불진화시스템을 확대 보급하여 산불현장에 진화용수를 효율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하고, 산불상황보고프로그램의 보급 등 산불방지 장비의 확충 및 현대화를 추진할 계획이며, 산불재난 위기대응 실무매뉴얼의 현장적용과 통합지휘역량 강화를 위해 산불진화 합동훈련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산림청 산불방지과 임업사무관 강성철)

(2) 산림병해충의 적극 방제로 산림자원 보호

(가) 산림병해충 현황

지구상의 약 150만여 종의 곤충 중 우리나라에서 확인된 산림병해충은 4,000여종이며, 그 중에서 비교적 피해를 많이 끼치고 있는 산림병해충은 소나무재선충병, 솔잎혹파리, 솔껍질깍지벌레, 참나무시들음병, 잣나무넓적잎벌, 솔나방, 흰불나방, 푸사리움가지마름병 등 20여종이다.

최근 크게 문제가 되고 있는 소나무재선충병은 1988년 부산 금정산에서 처음 발생하여 1997까지는 발생속도가 둔화 된 상태였으나 경남, 경북지역으로 확산 되면서부터 급속도로 퍼져 2006년 말에는 전국 62개 시·군·구에서 발생, 피해면적 7,871ha로 절정을 이루었다.

이에 따라 「소나무재선충병 방제특별법」을 공포(2005.9.1)하고, 소나무재선충병의 확산을 저지하기 위한 비상대책(2005.10.24)을 수립·시달하였으며, 2005년 11월부터 감염목 무단이동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국적으로 소나무류 이동단속을 실시하는 등 총력을 기울인 결과, 2007년 말에는 전국 57개 시·군·구에서 6,855ha가 발생하여 2006년보다 13% 감소하였다.

솔잎혹파리는 1988년 327천ha 발생면적을 정점으로 지속적으로 감소하여 2004년에는 73천ha까지 감소되었으나 2005년부터 증가하기 시작하여 2005년 149천ha, 2006년 196천ha로 증가하였다. 그러나 2007년 집중방제한 결과 다소 감소한 180천ha가 발생하였다.

솔껍질깍지벌레는 우리나라 남해안과 서해안의 우량한 해송림에 발생하고 있다. 1983년 솔껍질깍지벌레로 판명된 이래 1996년(16천ha 발생)을 정점으로 2004년까지 완만한 감소 추세를 유지하다가 2006년에는 발생량이 45천ha로 크게 증가하였고 2007년 47천ha가 발생하여 적극적인 방제가 요구된다.

참나무시들음병은 2008년 경기도 성남에서 처음 발견된 이후 계속 확산되어 2007년에는 전국 61개 시·군·구에서 3.5천ha가 발생하였다. 따라서 이를 방

제하기 위하여 벌채·훈증, 훈증약제주사, 지상약제살포, 모두베기 등 다각적인 방제방법을 사용하여 방제하고 있다. 일본에서도 발생하고 있는 참나무시들음 병은 아직까지 확실한 방제방법이 개발되지 않고 있으므로 이에 대한 연구가 더욱 필요하다.

돌발해충은 기후변화에 따라 발생 증감 폭의 변화가 있으며, 최근 들어 지구 온난화 및 고온다습한 기후영향 등으로 주홍날개꽃매미, 잣나무잎벌 등 새로운 병해충이 발생하고 있어 조기에 대응하지 못할 경우 피해지역 확산이 우려된다.

(나) 2007년 이행실적

산림병해충의 적기방제로 산림생태계의 건강성 유지와 산림자원 손실방지에 주력하기 위하여 2007년도에 소나무재선충병 29천ha, 솔잎혹파리 48천ha, 솔껍질각지벌레 10천ha, 밤나무 해충 등 기타 병해충 115천ha를 포함하여 총 202천ha의 산림병해충에 대한 방제를 실시하였다.

(다) 2008년 추진계획

2007년말 산림병해충 발생면적은 총 372천ha로서, 우리나라 전체 산림면적 6,389천ha의 약 6%에 해당되며, 산림생태계의 건강성 유지와 산림자원 손실방지를 위하여 소나무재선충병 20천ha, 솔잎혹파리 56천ha, 솔껍질각지벌레 22천ha, 밤나무 해충 기타 95천ha를 포함한 193천ha에 대한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을 실시하였다.

산림병해충 발생 및 방제현황

(단위 : ha, 백만원)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발 생 면 적	254,190	243,035	315,607	389,955	371,539
방 제 면 적	205,010	181,471	170,183	183,634	202,398
투 자 액	42,175	33,038	54,539	83,603	94,904

(산림청 산림병해충과 임업사무관 강성도)

(3) 산사태방지를 위한 사방사업 확대 및 제도개선

우리나라는 산림 모양의 대부분이 풍화침식이 쉬운 화강편마암으로 구성되어 있고 산지의 경사도가 급하며, 약 1,300~1,500mm가 되는 연평균 강수량의 60%가 여름철인 6~9월에 내리는 자연조건으로 인한 계속되는 자연재해와 과거 전쟁에 의한 피해와 남벌, 화전 등으로 인해 1950년대 우리나라 산림은 전체 산림면적의 10%인 68만ha가 황폐되었다. 이러한 황폐산지를 복구하여 치산녹화가 성공하게 된 이면에 ‘사방사업’이 있었다.

최근에는 엘니뇨(El Niño) 현상 등 기상이변으로 인한 게릴라성 집중호우 및 많은 비구름을 동반한 태풍도 빈발하고 있어 산사태 피해를 더욱 가중시키고 있는 실정으로 근래의 사방사업 시공은 재해방지에 가장 큰 목적을 두고 주요계곡과 경사면 등에 사방댐 및 계류보전 등 예방사업 위주로 시행하고 있으며, 산사태가 하류의 농경지와 주택, 도로 등에 심각한 피해를 가져오는 점을 감안하여 올해도 재해예방을 위한 사방댐 376개소, 산지보전 70ha, 산사태 예방 35ha, 계류보전 41km 등을 중점 추진하는 한편, 산림유역 전체를 대상으로 다단계 사방시설을 설치하고 산림의 녹색댐 기능을 증진시키는 새로운 개념의 재해예방사업인 산림유역관리사업을 2004년 시범실시 3개소에 이어 2007년까지 총 44개소를 시공하고 올해에도 10개소에 대하여 사업추진 중에 있으며 앞으로도 계속 확대 실시할 계획이다. 2008년도에 추진할 사방사업의 종류별 물량은 다음 표와 같다.

2007 실적 및 2008 계획

연도	산지보전	산사태예방	해안방재림 조성	계류보전	사 방 댐	사방댐 준설
2007	72ha	31ha	9ha	39km	369개소	225개소
2008	70ha	35ha	10ha	41km	376개소	213개소

※ 산림유역관리사업 (2007) 29개소, (2008) 10개소는 별도임

아울러 2004~2005년 동안 추진한 “GIS를 이용한 산사태위험지관리시스템 구축사업”이 완료되어 시스템이 구축됨에 따라 산사태위험지를 과학적으로 지정·관리할 수 있고 산사태위험예보 발령 및 사방댐 등 사방사업시행 예정지 선정시 기초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뿐 아니라, 기상청의 기상예보와 연계시킨 “산사태위험지관리시스템”은 재해에 대한 정보를 사전에 대국민 서비스함으로써 재해예방업무를 한층 발전시켜 국민의 생명과 재산보호를 강화시켰다는 점에서 획기적인 일로 평가된다.

(산림청 치산복원과 임업사무관 이한섭)

(4) 산림생물다양성 보전을 위한 생태계 관리강화

(가) 수목원조성 및 육성

생명공학(BT) 및 정보기술(IT)의 발달에 따라 21세기는 생물유전자원의 양적 및 질적인 확보가 국부의 척도로 평가될 것으로 전망되는 가운데 세계 각국은 생물유전자원의 보전·확보·이용 등을 둘러싼 경쟁을 가속화함에 따라 다양한 식물유전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우리나라도 식물자원에 대한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수집·보전·이용 및 자원화연구 활성화를 위한 수목원을 적극 진흥 및 조성·육성할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2001년 9월에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이 제정·시행되어 식물유전자원에 대한 국가관리체계가 확립되는 등 수목원조성과 지원이 본격적으로 이루어지게 되었으며, 2007년말 현재 국·공립 23개소, 사립 13개소, 학교수목원 6개소를 비롯하여 총 42개소를 조성·운영 중에 있다.

수목원조성 · 운영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2003	2004	2005	2006	2007
계	27	34	37	39	42
국립수목원	1	1	1	1	1
공립수목원	14	18	19	21	22
사립수목원	6	9	11	11	13
학교수목원	6	6	6	6	6

※ 사립수목원은 「수목원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라 등록된 수목원 통계임

또한 2008년에는 인천시 강화군과 강원도 강릉시에서 공립수목원을 조성할 계획이다.

그러나 아직 식물종 보유 등 규모나 수량 면에서 선진국에 비하면 매우 미흡한 실정이며, 앞으로 인구 50만명당 수목원 1개소를 목표로 총 90여개소의 수목원을 조성할 계획으로써 우리의 자생식물 뿐만 아니라 세계의 많은 식물 유전자원이 보다 체계적으로 수집 · 증식 · 보존 · 관리되고, 자원화를 위한 연구가 활성화하여 국가경쟁력을 강화함을 물론 국민의 자연체험 및 식물학습과 정서문화함양 등 국민의 삶의 질 향상에 수목원이 큰 몫을 차지할 것으로 전망된다.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 행정사무관 강변석)

(나) 산림박물관 건립

산림사료를 영구적으로 보존하여 전시 · 홍보를 통하여 산림에 대한 국민의 인식을 제고하고 산림사료에 대한 학술연구 활성화를 기하고자 전국 국 · 공립 수목원내에 산림박물관 건립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산림박물관에는 산림분야 역사서적 및 전통 산림문화 등과 관련된 각종 산림사료에 대한 전시시설과 식

물·곤충·수석·화석·석엽 등의 표본을 보존하는 표본실, 자라나는 청소년들의 정서함양과 체험교육을 위한 교육관, 각종 산림관련 기록물의 보존을 위한 영상자료실, 산림사료의 보존과 학술연구를 위한 연구실은 물론 관람객들을 위한 방문자 안내센터 등이 있다.

1987년부터 건립하기 시작한 산림박물관은 2007년말까지 광릉내의 국립산림박물관을 비롯하여 춘천, 공주, 순창, 안동, 진주, 대구, 청원, 오산, 완도, 아산 등 총 11개소에 산림박물관이 건립·개관하고 있다.

산림박물관건립 현황

(단위 : 개소)

년 도 별	2003	2004	2005	2006	2007
산림박물관 건립	5	9	10	10	11

앞으로 국·공립수목원과 연계하여 운영함으로써 산림사료의 연구뿐만 아니라 국민들에게 자연학습과 산림역사에 관한 볼거리제공 등 시너지 효과를 기대하고 있다.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 행정사무관 강변석)

(다) 생태숲 조성

지구온난화, 사막화, 산림파괴 등으로 매년 열대우림 생물의 0.5%상당이 멸종되고 있으며, 세계자원연구소(WRI)의 2002년 보고서에 따르면 2100년경에는 전체생물의 약 33%가 멸종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어 지구환경 변화에 따른 식물종 감소로 자국의 식물유전자원에 대한 유출방지 및 배타적 주권을 강화하고 있는 현실을 고려할 때 국가의 자생식물자원 보존은 단순히 소극적인 보호측면을 벗어나 자생지조사 및 보존·증식·복원 등 보다 능동적인 보전사업

을 더 이상 미룰 수 없게 되었다.

이에 따라 희귀·특산식물을 포함한 자생식물 위주로 생태적으로 안정된 경쟁력 있는 숲을 조성·운영함으로써 산림식물자원의 자생지내 보전기능을 강화함은 물론 각종 인위적·자연적 위해로부터 생태계의 교란과 훼손을 미연에 방지토록 하고, 나아가 지역적으로 특색 있는 숲복원 기법을 개발하는 등 산림 생태계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와 국민의 자연학습 및 산림문화 휴양공간으로 활용토록 하는 생태숲조성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00년 제주도의 한라생태숲을 시작으로 2007년말까지 26개소의 생태숲이 조성 중이며, 수목원조성 사업과 같이 생물종 다양성을 보존하고 희귀·특산 및 멸종위기 식물의 체계적인 관리 및 보존전략 수립과 멸종위기 식물을 환경 위협으로부터 안전하게 보호하여 멸종방지 및 감소속도 완화하여 국내 자생식물자원을 체계적·과학적으로 보전 관리함으로써 미래의 생물유전자원 확보경쟁에 대비하는 등 국가경쟁력을 제고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전망된다.

생태숲조성·운영 현황

(단위 : 개소)

년 도 별	2003	2004	2005	2006	2007
생태숲조성	8	11	16	21	26

2008년에는 제천, 완주, 나주, 구례, 고흥, 화순, 진주 등 7개 시·군에 지역·기후·생태계 특성 등을 고려하여 유용식물 및 희귀·특산식물을 현지내 보존·복원하는 특성화된 생태숲으로 신규 조성할 계획이다.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 행정사무관 강변석)

(5) 산림의 녹색댐 기능 제고

정부의 물관리종합대책에 따라 용수개발을 위한 수원함양림 조림과 숲가꾸기 사업을 전국의 댐 유역과 5대강 유역을 중심으로 추진하고 있다. 수원함양림 조림은 넓은 면적의 모두베기(개벌)를 지양하고 소구역 조림과 수하식재, 천연갱신 등으로 복층림 조성을 목표로 한다. 수자원 함양기능 및 수질 정화 기능을 높이도록 뿌리의 양이 많고 깊게 들어가는 상수리, 굴참 등 참나무류, 자작나무 등 심근성 수종을 조림하고 초본류, 관목류 등 하층식생의 생육을 촉진함으로써 녹색댐 기능 향상을 위한 건전한 생태계가 유지되도록 관리하고 있다.

지역특성에 맞는 적지적수 조림사업 추진과 5대강 및 동강 유역을 중심으로 수원함양 기능 제고를 위한 관리대상 산림을 지정하고, 이를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감으로써 수질오염과 수량부족에 근원적으로 대처하고 깨끗한 물의 지속적인 공급기반을 지속적으로 확충하고 있다.

수자원 함양기능 및 수질정화기능이 양호한 활엽수 중 상수리, 굴참나무 등 참나무류 조림은 ha당 5,000본을 식재하고, 상수리 파종조림은 ha당 5,000상을 파종하는 등 다양한 조림사업을 추진하였다.

전국 녹색댐 조성사업 추진 계획

구 분	실행연도 및 댐 이름			
	2005~2006	2007	2008	2008~2009 이후
설 계	2005~2006	2007	2008	2008~2009 이후
숲가꾸기	2006	2007	2008	2009 이후
38개댐	8개	8개	5개	17개
	안동,임하,소양강, 황성,달방,광동, 부안,보령댐	영천, 안계, 사연, 대암, 선암, 대청, 용담, 섬진강댐	밀양, 평림, 연초, 구천, 수어댐	주암,주암조절지, 합천,남강,운문, 기타 신규댐(12개)

자료 : 산림청 산림자원국

(산림청 자원육성과 임업사무관 권영록)

(6) 국유림 대부지 운영 및 사후관리 철저

국유림 대부·사용허가·분수림 설정 현황은 2005년 말 현재 14,469 건 77,001 ha이고, 2006년 말 현재 전년 말 대비 25 건, 9,363 ha가 감소한 14,444 건 67,638 ha이며, 2007년 말 현재 2006년 말 대비 2,296 건 3,305 ha가 감소한 12,148 건 64,333 ha로 감소추세에 있다, 이는 분수림(조림대부)을 국가에서 직영하기 위하여 분수림의 사유입목을 국가에서 매수하여 분수림을 돌려 받고 있기 때문이고, 2007년에는 임야가 아닌 토지 대부지를 기획재정부로 관리환하여 줌에 따라 크게 감소하였다

(단위 : ha)

구 분	합 계		대 부		사 용 허 가		분수림(조림대부포함)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05년	14,717	86,374	10,151	18,016	3,838	22,586	728	45,772
'06년	14,444	67,638	9,917	8,964	3,916	22,483	611	36,191
'07년	12,148	64,334	7,408	8,055	4,202	23,460	538	32,819

허가 및 사후관리는 다음과 같은 기준에 따라 운영되고 있다.

대규모 산림형질변경이 수반되는 광업·골프장·스키장 등의 용도에 대한 국유림대부·사용허가와, 백두대간보호지역 및 도서지역 등 산림생태·자연환경보전이 필요한 지역은 산지전용을 전제로 한 대부·사용허가를 엄격히 제한하고 있다.

한편 기존의 대부지 등은 그 이용실태를 조사하여 사업추진이 부실한 경우는 대부 등을 취소하고, 산림으로 복구하는 등의 방법으로 정리하고 있다. 2006년의 경우 대부지 실태조사 대상이었던 3,995건 중 88%에 해당하는 3,516건이 양호판정을 받았고 300건(7.5%)이 경고, 179건(4.5%)이 불량 판정을 받아

시정조치를 이행하거나 취소(13건)된 바 있고, 2007년의 경우는 대부지 실태조사 대상이었던 2,985건 중 90.6%에 해당하는 2,706건이 양호판정을 받았고 169건(5.7%)이 경고, 110건(3.7%)이 불량 판정을 받아 시정조치를 이행하거나 취소(8건)된 바 있다.

(단위 : ha)

구 분	합 계		양 호		경 고		불 량		비 고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건수	면적	
'06년	3,995	17,939	3,516	13,089	300	4,357	179	493	취소 : 13
'07년	2,985	34,307	2,706	28,489	169	4,562	110	1,255	취소 : 8

한편, 국유림을 자연친화적으로 이용하면서도 소득을 올릴 수 있는 용도의 사용허가는 적절한 수준에서 그 대상을 넓히고 있다. 예컨대 2006년 8월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이 제정되면서 농산촌주민이 산촌개발사업이나 약초·산채·버섯재배 등의 용도로 국유림을 사용할 경우에는 요존국유림에서도 가능하도록 그 대상지를 확대하는 제도 개선이 이루어진 바 있으며, 분수림 환지 및 기획재정부로 관리환 등으로 전체적 건수와 면적은 감소하고 있으나 지속적으로 사용허가의 규제를 완화하여 국유림을 농산촌주민의 소득증대에 활용하도록 개방함에 따라 지역주민의 소득임산물 관련 사용허가의 건수는 매년 완만하게 증가하는 추세이다.

(산림청 국유림관리과 행정사무관 진현무)

(7) 백두대간의 체계적인 보호 관리

백두대간은 백두산에서부터 지리산까지 1,400km(남한 684km)에 이르는 국토의 등줄기이다. 또한 생물종이 다양하고 풍부한 한반도의 핵심 생태축으로서 대륙의 야생 동식물이 우리나라로 들어오는 이동통로이자 서식지이기도 하다.

따라서 백두대간 지역의 생태계 건강성, 생물다양성 등 자연생태적 가치를 제고하여 소중한 미래유산으로 보전해 나가기 위하여 2003년 12월 31일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였으며, 2005년 9월에는 백두대간 마루금 주변의 토지 263,427ha를 백두대간 보호지역으로 지정·고시하여 무분별한 개발로부터 백두대간을 보호하기 위한 기반을 마련하였다.

백두대간 보호지역 지정면적

구 분	계	%	핵심구역	%	완충구역	%
면 적(ha)	263,427	100	169,950	65	93,477	35

또한,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에 의하여 백두대간의 산림자원, 자연환경, 문화자원의 계획적인 보호·관리·이용을 통해 생태계 건강성 증진 및 산림기능을 제고함으로써 효율적으로 백두대간을 보호하고자 2005년도에 백두대간보호기본계획(2006~2015)을 확정하고, 이를 근거로 매년 시행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추진실적을 평가하고 있다.

아울러, 백두대간 생태계 보전을 위해 다양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07년 백두대간 마루금 지역 보전방안을 수립하여 백두대간보호지역 지정 이전에 이미 훼손되어 경작하고 있는 고랭지밭에 대한 장기적인 생태복원 대책을 마련하여 시행하고 있다. 또한 지구온난화에 대비한 친환경 대체에너지 자원으로 풍력발전기 추가 설치에 따른 백두대간 마루금 지역의 훼손 최소화 대책을 마련하였다. 대부분 백두대간 마루금지역에 위치하여 자연경관 훼손과 유기질 화학비료의 과다 사용 및 농약 살포로 백두대간 지역의 토양과 수질오염뿐만 아니라 집중호우시 토사 유실 및 산사태의 주요 원인인 고랭지밭의 생태적 관리 방안으로 백두대간 경작지 중 매도희망가격과 공시지가의 가격차가 크지 않은 지역의 사유토지부터 매수를 확대하여 생태 복원을 추진하는 것이다. 2008년에 시범적으로 백두대간 고랭지밭 매수지에 대한 생태복원(3.1ha)을 추진하였다.

풍력발전기 설치 관리방안은 신규 훼손이 수반되는 곳은 개발행위 사전협의시 관련부처와 협의하여 설치를 불허하고, 백두대간 개발행위 사전협의 신청시 개별적 사안에 따라 개발행위 사전협의 세부기준에 따라 엄격한 사전검토 및 처리하는 것이다. 또한 독일의 경우처럼 백두대간 마루금 지역이 아닌 해안지역 등을 적극 검토하도록 유도하고 백두대간지역은 자연생태계의 핵심축과 산림자원의 보고로 보전하여 후손에게 물려줄 자산임을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

단절되고 훼손된 백두대간을 일시에 복원·복구하는 것은 시간적, 경제적, 기술적인 문제가 있을 뿐만 아니라 부실한 복원공사를 야기할 수도 있기 때문에 장기적인 계획을 마련하여 체계적으로 추진하고 있다. 백두대간 훼손지의 유형을 지형, 식생, 인공구조물 등으로 구분하고 유형에 따른 복원모델 개발을 추진중에 있다. 주요내용은 훼손지 복원방향 수립, 생태적 특성평가, 복원모델 개발 방안 수립 및 모니터링 등이다. 복원사업은 2006년도에 4개소, 2007년도에 4개소를 추진하였으며, 2008년도에 7개소의 복원·복구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현재의 백두대간보호지역은 법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으로 지정하였기 때문에 생태적으로 우수한 지역과 지역주민의 강한 반발로 인해 2015년까지 보호지역내와 보호지역 연접지 등의 사유지 60,000ha를 국가에서 매수하여 백두대간 본래의 기능이 회복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현재의 백두대간보호지역은 법 목적 달성에 필요한 최소한의 면적으로 지정하였기 때문에 생태적으로 우수한 지역과 지역주민의 강한 반발로 인해 2015년까지 60,000ha 보호지역내와 보호지역 연접지 등의 사유지를 국가에서 매수하여 백두대간 본래의 기능이 회복될 수 있도록 관리해 나갈 계획이다.

백두대간보호지역과 보호지역 연접지 및 보호지역이 통과하는 읍·면·동지역을 포함한 사유토지는 매년 6,000ha씩 매수할 계획이었으나 토지소유자의 매도희망가격이 감정평가금액보다 높아 매수 실적이 저조한 실정이다. 특히, 2007년도의 경우에는 전국적인 토지가격의 상승추세에 따른 토지가격 상승 기

대심리 때문에 토지 매도를 기피함으로써 매수 실적이 낮았다. 그러나 사유토지 매수 확대를 위해 백두대간보호 지역내의 사유토지에 대해서는 과수 등 정착물을 포함하여 매수할 수 있도록 「백두대간보호에 관한 법률」을 개정중에 있다. 또한 저당권 등 사권이 설정된 토지에 대해서도 매수를 추진할 수 있도록 관계 규정을 개정(2008. 9. 22)한 바 있어 사유지 매수가 확대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백두대간지역 사유토지 매수실적

(단위 : ha, 백만원)

연 도 별	합계	보호지역 내			연접 지역	보호지역 포함 읍·면·동	금 액
		계	핵 심	완 총			
계	7,128	1,108	352	756	878	5,142	33,113
2005년	2,393	364	123	241	208	1,821	10,660
2006년	3,397	566	162	404	576	2,255	14,189
2007년	1,292	164	54	110	94	1,034	7,742
2008년 상반기	46	14	1	13	-	32	522

백두대간이 통과하는 보호지역은 32개 시·군 108개 읍·면·동으로서 대부분 개발 낙후지역이라 할 수 있으며, 백두대간 보호지역 지정으로 인하여 개발 기회는 더욱 줄어들고 있는 실정이다. 따라서 백두대간 지역주민의 소득사업을 지원하고 있으나 사업추진과정에서 주민간의 갈등, 지원대상자 선정 등이 문제점이 대두되어 주민소득지원사업의 합리적 기준을 마련하기 위하여 백두대간 주민소득 실태조사 및 개선방안을 연구중에 있다.

주민소득사업은 2005년도에 72억원, 2006년도에 115억원, 2007년에 107억원을 지원하였으며, 2008년에는 96억원을 지원하여 주민소득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주민소득사업비 지원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05년	2006년	2007년	2008년
금 액	38,982	7,200	11,485	10,697	9,600

또한 2007년부터 백두대간 생태계·자연경관의 보전 또는 보호·육성을 위하여 백두대간보호지역내 벌기령이 지난 입목의 벌채를 유보한 산림소유자에 대하여는 소득감소분을 지원하고 있다. 소득감소분은 입목 벌채 예상수익금의 1년 이자액을 매년 지급하는 것으로 2007년 53백만원을 지원하였고, 2008년에 소득감소분 지원을 위해 87백만원의 예산을 확보하였다.

(산림청 산림환경보호과 서기관 황의식)

다. 산림사업의 경쟁력제고 대책 강구

(1) 환경친화적 녹색임도 구축 및 관리강화

임도는 조림·숲가꾸기 등 산림사업과 임업의 생산비용 절감 및 기계화를 위한 필수적인 산림경영관리기반시설로서 산불·병해충방제 등 산림재해에 신속히 대처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하고 산촌의 단기소득과 산촌마을을 연결하는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최근에는 탐방로·산악레포츠·산책로 등 국민의 보건·휴양목적으로 임도를 이용하는 국민들이 증가되고 있어 임도의 다목적 활용이 증가되고 있다.

우리나라의 임도는 1968년 국유림 내 입목 매각지 3개소에 15km를 설치한 것이 최초이며, 1984년부터는 공·사유림에 국고보조사업으로 민유임도를 개설하기 시작하였으며, 2007년 말까지 총 사업비 908,852백만원을 투자하여 임도 총 시설거리 16,267km, 임도밀도 2.55m/ha에 이르고 있다. 그러나 ha당 2.55m

의 임도밀도는 선진 임업국인 일본 5m/ha, 미국 12m/ha, 독일 44m/ha와 비교하면 아직도 매우 빈약한 실정이다.

산림녹화가 성공되면서 이를 관리하기 위해 부족한 임도망을 조기에 확충하고 임도밀도를 선진국 수준으로 빨리 끌어 올려야 한다는 정책 목표를 가지고 1998년까지는 “품질” 유지보다는 “물량” 확대에 치중한 결과 낮은 시공단비에 따른 안정구조물이 부족하여 장마철 집중호우시 일부 임도가 유실되고 토사가 유출되는 피해가 발생하는 등 문제점이 나타났다.

이에 따라 1999년부터는 산림상태, 토양특성 등 현지 산림여건에 따라 피해방지·경관유지 등 가능한 공종을 반영하여 설계·시공토록 하는 등 “환경친화적인 녹색임도”구축에 목표를 두고 “간선임도설치 5개년 계획”을 수립하여 국·민유림간의 연계는 물론, 지역간 연결될 수 있도록 계획하고 예정노선에 대한 철저한 타당성평가와 임도의 설계 및 시설기준에 부합된 지역에 한하여 임도시설을 추진하여 환경성과 안전성에 중점을 두고 있다.

또한, 2002년부터 임도로 인한 산림피해 예방을 위해 구조개량사업 계획을 세워 기존 낮은 단비로 시공되어 안전성과 경관성에 문제가 있는 임도에 대한 대대적인 구조개량사업을 실행하여 2007년말까지 9,015km를 완료하였으며 경관저해 및 피해발생 우려가 예상되는 임도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구조개량사업을 실시하고, 임도의 상시관리체계를 유지하여 임도의 효율성을 확보하고 있다.

아울러 최근 기상이변 등으로 집중호우가 빈번해 짐에 따라 임도의 설계, 시설기준과 설계심사·시공 감리제 도입·준공검사의 투명성 및 공정성 확보를 위해 기준을 마련·강화하는 등 제도정비를 위해 산림관련 법령·훈령을 개정하고, 우기전·후, 해빙기 등 취약시기에 임도를 집중 점검·보수하는 “임도관리원”을 배치하여 환경친화적인 녹색임도 설치와 재해로부터 튼튼하고 안전한 임도의 개설·관리를 위해 적극 노력해가고 있다.

(산림청 치산복원과 임업사무관 김은수)

(2) 임업기계화 촉진

(가) 임업기계화 여건과 추진 결과

산업화로 인한 농산촌 인력난 해소, 임업생산성 향상 및 벌채작업시 산지의 훼손을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임업기계화가 필수적이지만 임업기계가 고가이고, 험준한 지형조건, 영세한 경영규모, 낮은 임도밀도, 전문 기계운전원의 부족, 기계화 시업의 경험부족, 기계화 기술수준의 낙후 등으로 임업기계화가 부진한 실정이다.

그러나 임업노동인력의 노령화와 인건비 상승으로 인한 생산비용 증가, 인력에 의한 작업능력의 비능률성을 극복하고, 산림자원의 양적·질적 증가로 점차 늘어나는 산림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임업기계화는 중요한 산림정책 중 하나이다.

이에 따라 1995년에 임업기계화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해 왔으며, 제5차 산림기본계획과 더불어 장기적으로 임업기계화를 확대해 나가는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특히 우리 실정에 맞는 임업기계장비를 개발하고 이미 개발된 장비에 대한 문제점을 개량하여 보급하고 있으며, 임업기계화 촉진을 위한 기반조성과 기계를 조작하는 운영자(Operator) 양성 등 임업기계화 관리·운영체계와 생산시스템 개발 등을 추진하고 있다.

2007년말 현재 임업기계 보유실태는 총 27,880대로서 지방산림청이 4,314대(15%), 지방자치단체가 10,517대(38%), 산림조합이 13,049대(47%)를 보유하여 활용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제5차 산림기본계획에 의거 지속적으로 임업기계를 보급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중장기적으로 민간부분에 대하여는 산림조합을 중심으로 독립가, 협업체 등에 기계장비를 보급하고, 산림경영자들이 저렴한 가격으로 장비를 대여·수리할 수 있는 임업기계지원센터를 2006년까지 7개소(진안 임업기능인훈련원,

양산 임업기술훈련원, 강릉 임업기계훈련원, 순천시 산림조합, 평창군 산림조합, 청주·청원 산림조합, 산청군 산림조합)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다. 임업기계지원센터 운영을 활성화하기 위하여 기계운전원에 대한 교육훈련을 강화하여 숙련된 전문인력으로 양성하고 있고, 2007년 10월에는 임업기계 대여수수료를 평균 18% 인하하여 산주의 부담을 경감하면서 임업기계 가동률을 제고토록 하였으며, 보유 장비의 재배치 및 센터별 운영실적에 따른 운영비 차등 지원 등의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국유림을 관리하는 지방산림청에는 임업기계화 시범단지 5개소(12,370ha)를 지정·운영함으로써 민유림 임업기계화의 선도적 역할을 수행하고 있으며, 지방청별로 고성능 임목생산 대형장비를 구입하여 시범 운영하고 있다. 세제 지원에 있어서는 임업기자재 구입시 부가세 영세율 적용기종을 2001년도 6종에서 15종으로 확대하였으며, 임업용 기계·장비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적용대상 기종을 확대하기 위하여 관계기관과 지속적으로 협의해 나갈 계획이다.

2003년에는 조세특례제한법을 개정하여 임업용 임업기계장비 10종에 대한 면세 석유류 1,256kl를 공급하였으며, 2004년도 2,652kl, 2005년도 2,918kl, 2006년도 2,907kl, 2007년도에 2,812kl를 공급하였고, 2008년도에는 3,590kl를 목표로 공급을 추진하고 있다.

(나) 임업기계화 향후 계획

앞으로 임업기계를 조기에 정착시키기 위해서는 수요가 많고 실용성이 높은 임업기계가 개발되어야 한다. 트랙터 윈치, 굴삭기 윈치 등 기존의 트랙터나 굴삭기 등에 부착용으로 장비를 개발하여 개발에 소요되는 비용을 최소화하여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고, 기계톱·예불기 등 수요가 많고 저렴한 장비는 자체 개발 또는 기존 보급된 장비의 개선을 추진할 계획이다. 또한 국내 적용이 가능한 타워야더 등 외국의 고성능 임업기계를 선별하여 시범사업용으로 도입한 후 적용시험을 거쳐 실용성 높은 기종은 벤치마킹을 통해 국산화를 추진하고자 한다.

또한 현장에서 산림작업을 담당하는 임업기능인에 대한 교육훈련과정에 기계장비 교육을 강화하고 강릉, 양산, 진안 등 3개 임업훈련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실습림 경영사업을 활성화하여 현장실습 교육이 진행되도록 추진하고 있다. 그리고 국유림관리소별로 조직된 기계화영림단을 집중 육성하여 산림사업 물량을 우선적으로 배정토록 하였으며, 이와 더불어 각종 산림장비를 확충하는 한편 이들 기계·장비를 조작할 운영자를 지속적으로 양성하여 임업기계화를 앞당기도록 추진할 계획이다.

한국형 임업기계장비 개발 현황

구 분	기종수	기 계 장 비 명
계	35	
국립 산림과학원	19	2드럼원치, 자동수간주사기, 밤수집기, 동력식 가지치기톱, 원목자동천공기, 표고재배기, 다목적집재차, 소형원치, 농용운반차 탑재용 원치, 미니포워드, 원목조재기, 제초장비, 시비장치, 방제장치, 궤도식 소형임내차, 호두과피탈피기, 수실류채취기, 휴대형식혈기, 진동식 호두수확기
민 간	7	툽밥제조기, 목재과쇄기, 원목집계, 썰매형원치, 산불진화차, 농림방제차, 2드럼케이ابل원치
공 무 원	5	굴삭기소형원치, 세레스원치, 버켓교체형 굴삭기원치, 북부집재기, 춘천집재기,
임업기계 훈 련 원	1	HAM200
산·학·연	3	밤박피기, 타워·원목 집재기, 타워야더

자료 : 산림청 산림자원국

(산림청 산림고용팀 녹지사무관 이희경)

(3) 숙련된 전문 임업노동력의 안정적 확보

(가) 임업기능인 양성 현황 및 실적

우리나라의 산림은 수령 30년 미만의 나무가 전체의 59%를 차지하는 어린 나무 위주의 숲으로서 산림의 경제적·환경적 가치를 높이기 위해서는 숲 가꾸기에 많은 투자가 필요한 실정이다. 또한, 산업경제의 발전과 인구의 고령화로 농·산촌 인력이 계속 감소함에 따라 산림사업에 필요한 양질의 노동력을 확보하고, 산림작업의 질적 향상 및 낙후된 산촌지역 주민들의 고용창출을 통한 산촌 활성화 촉진을 위하여 임업기능인 영립단을 조직하여 운영하고 있다.

국유림에서는 1984년부터 기능인영립단을 조직하였고, 산림조합에서는 1990년부터 민유림영립단을 조직하여 운영해 오고 있으며, 2000년 5월부터는 산림사업 제도개선에 따라 산림사업법인도 영립단을 조직하여 산림사업에 참여하고 있다.

기능인영립단의 체계적이고 효율적인 양성을 위하여 1995년에 임업기능인 중·장기 양성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고 있으며, 2014년까지 10,000명을 양성할 목표로 추진하고 있다. 2007년말 현재 757개단 7,286명(국유림관리소 146개단 1,712명, 산림조합 376개단 4,164명, 산림사업법인 235개단 1,410명)을 조직하여 운영함으로써 산림사업에 많은 기여를 하고 있다. 특히 2000년도에 진입한 산림사업법인 중에서 조림·육림·벌채 및 산림병해충 방제사업을 영위하고자 하는 법인은 기능인영립단을 조직·운영함으로써 산림사업의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앞으로 산림사업과 임업경영을 둘러싼 임업노동력 수요와 양성 가능성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장기계획을 현실성 있게 조정할 계획이다. 임업기능인 육성을 위한 법적 근거는 1997년에 임업진흥촉진법을 제정하면서 기능인영립단 육성과 장비지원, 취업 촉진방안 등을 제도화하였으며, 2000년에 동 법을 개정

하여 기능인영립단의 자격기준, 교육기간, 훈련기관 등의 조항을 신설하여 기능인영립단 육성에 대한 세부 기준을 마련하였다.

임업기능인 영립단 양성계획

구 분	목 표	2007까지	연 차 별 양 성 계 획		
			계	2008	2009~2010
계	10,000명 (850단)	7,286명 (757단)	1,152명 (96단)	384명 (32단)	768명 (64단)
국유림 영립단	2,743명 (232단)	1,712명 (146단)	72명 (6단)	24명 (2단)	48명 (4단)
민유림 영립단	7,257명 (618단)	5,574명 (611단)	1,080명 (90단)	360명 (30단)	720명 (60단)

자료 : 산림청 산림자원국

임업기능인 영립단을 직업인으로서 장기 안정적으로 고용하기 위하여 작업 물량을 연중 균일하게 배분하여 소득이 안정적으로 보장되도록 하고, 산재보험 등 직업으로서 정착을 위한 제도 보강과 후생복지 등의 대책을 강구하여 임업 기능인들의 직업으로서의 안정성을 제고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종전에는 3주 이하의 단기 기능인력 양성에 치중함에 따라 현장의 작업을 감독·관리하고 산림경영을 주도적으로 추진할 현장 임업전문가가 부족한 실정이었으므로 이를 해소하기 위하여 1998년부터 3개월 교육과정인 산림 경영관리자반 교육과정을 운영하고 있으며 2007년까지 981명을 양성하였다.

현장 임업전문기술인력 양성 현황

구 분	목 표 (1998~2007)	2007까지 실 적	연 차 별 양 성 계 획		
			계	2008	2009
산림경영관리자 과정	940명	981명	200명	100명	100명

자료 : 산림청 산림자원국

(나) 향후계획

앞으로의 기능인 양성은 산촌주민을 중심으로 한 기능인을 선발·육성하여 산림사업의 원활한 수행과 산촌주민의 소득향상에 기여하고자 임업기능인 중·장기 양성계획에 따라 기능인영립단을 연차별로 조직하고 있으며, 2008년에는 신규로 32개단 384명을 조직할 계획이다. 또한 신규 조직된 영립단의 조기정착과 기 조직된 영립단의 운영 활성화를 위하여 산림조합에 장비지원비로 260백만원을 지원하였다.

한편 소득의 불안정과 안정적인 고용제도가 정착되지 않는 등 임업 노동력의 안정적 확보 및 산림작업의 질적 향상을 위한 제도가 미흡한 실정이므로 산림사업의 질 향상을 위하여 임업기능인의 지속적인 교육·훈련과 현장위주의 교육을 실시하고, 임업기계의 운전조작 기술 및 점검·정비 능력을 배양하는 데 역점을 두고 정책을 추진할 계획이다.

2001년부터 임업기능인의 기능향상 및 사기진작을 위하여 임업기능인 경진대회를 매년 개최하여 임업기능인의 축제의 장으로 확대하고, 다양한 종목을 개발하여 종합적인 산림작업 기술능력이 향상되도록 추진하여 임업기능인의 전문 직업의식을 고취하며, 당해 경진대회에서 임업기능왕으로 선발된 기능인에 대하여는 해외연수 등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여 임업기능인으로서의 자긍심을 높이고 있다.

또한 산림사업을 성공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임업노동력의 공급대책을 마련하고, 임업기능인들에 대한 지속적인 교육과 신기술 보급 등으로 기술 수준을 향상시키며, 임금을 체계화하고 복지후생 관련 대책을 마련하여 이들이 산촌에 정주하여 안정적인 생활을 영위할 수 있도록 노력할 계획이다.

(산림청 산림고용팀 녹지사무관 이희경)

(4) 다양한 단기소득원개발로 산림경영 장기성 보완

임업의 장기성(40~60년)을 보완하고 산주에게 실질적인 산림에서의 소득을 제공함으로써 산림자원화와 산림투자 유치를 촉진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단기소득원의 개발을 추진하고 있다. 이에 따라 2007년 말 임산물 총생산액 3조 5,581억원 중 단기임산물 생산액이 2조 90억원으로서 임산물 총생산액의 56%에 달하는 등 단기소득원개발의 성과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

단기임산물 생산액 현황

(단위 : 억원)

구 분	1999	2001	2003	2004	2005	2006	2007
단기임산물 생산액	10,471	15,467	17,081	18,328	19,267	19,849	20,090

임업을 소득이 높고 경쟁력 있는 산업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단기소득임산물 육성방안 및 고소득 품목인 밤, 표고 등 단기소득임산물에 대한 품목별 종합대책을 마련하여 추진 중이며, 한·미 FTA 및 중국 등 시장개방에 대비한 수실류의 경쟁력 강화 및 수실류의 재배구조개선을 위한 사업으로 수실류 작업로 지원, 노령목 갱신, 밤나무대체작목을 지원하고 있다. 아울러 무한 시장개방에 대비한 단기소득 임산물의 경쟁력 강화 및 친환경임산물 생산을 위하여 밤나무 토양개량, 조경수·분재토양개량, 산양삼이력제지원, 친환경 밤생산사업 등을 적극 지원하여 생산성 및 품질향상을 위해 노력하고 있다.

또한 다양한 임산물을 단기소득원으로 개발하여, 임업소득 향상에 기여하기 위하여 지역별 전략 특화품목을 선정하여 현재까지 밤, 표고, 산채류 등 60개의 지역특화품목 단지를 주산단지로 지정하고, 지정된 주산단지에 대해서는 각종 정책자금을 우선 지원하는 한편, 집단화·규모화 유도 및 저장·가공·유통 시설을 주산단지와 연계 시설하여 주산단지 운영의 활성화에 기여하고 있다.

단기임산물 품목별 주산단지 지정 현황

(단위 : 개소)

구 분	계	밤	대추	호도	잣	표고	송이	머루	산채	장뇌	수액
주산단지	60	7	4	1	1	22	10	3	10	1	1

한편 목재생산 중심의 한계성 및 장기성을 보완하고 산림 내 공간을 최대한 활용하여 목재생산과 단기소득사업을 복합적으로 경영함으로써 산주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고자 1999년부터 2007년까지 산림복합경영사업지 218개소에 대하여 지원하였고, 고품질 무공해 임산물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하고 있으므로 연차적으로 매년 30개소에 대한 산림복합경영사업을 계획하고 있다.

산림복합경영 지원 현황

(단위 : 백만원)

구 분	계		2006년까지		2007		2008	
	개 소	금 액	개 소	금 액	개 소	금 액	개 소	금 액
산림복합경영	248	13,661	188	10,391	30	1,635	30	1,635

청정임산물에 대한 국민의 관심과 수요가 증가함에 따라 대추·호도, 산채류, 송이 등의 주산지를 집단화·규모화하여 고소득 품목으로 육성하기 위해 2008년도에는 12개 단지에 대하여 산약초 등 임산물생산단지 조성사업을 추진하는 등 고소득 전략품목 육성에 주력하고 있으며, 아울러 상품성 제고로 부가가치를 높이기 위하여 저장·가공·포장시설 지원 및 임산물 가공분야의 연구개발을 확대하고 전문조합 육성, 생산자 협업체 육성, 출하조절 및 직거래 자금 지원도 꾸준히 확대해 나가고 있다.

또한 조경수, 분재, 자생란 등 산림관상자원과 최근 청정임산물로 수요가 증가하고 있는 산채류 및 산약초·약용수종, 건강음료로 각광받고 있는 수액 등을 새로운 고소득 전략품목으로 육성하기 위하여 재배기술 개발보급 및 상품화

를 추진하고 있으며, 분재·야생화·자생란 등 우리 자생식물 관상자원의 국제화를 촉진하고 수출경쟁력 확보를 위한 자금지원과 식물자원 수요·소비촉진을 위한 각종 전시회·박람회 지원을 지속 추진하여 산업화 기반을 마련하였다.

최근 농산물 수입개방이 가속화되는 현시점에서 안전한 먹거리 등 식품의 안전성에 대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이에 따라 우수농산물관리제도(GAP : Good Agricultural Practices)를 도입하여 임산물의 안전성을 확보하여 생산단계에서부터 수확후 포장단계 까지 토양, 수질 등 농업환경 및 임산물에 잔류할 수 있는 농약·중금속 또는 유해생물 등의 위해요소를 관리하도록 하고 대추 등 15개 품목에 대하여 임산물표준재배 지침서를 발간하였다.

GAP인증 대상품목

구 분	품 목
계	15개
수 실 류(6)	대추, 감, 밤, 잣, 참다래, 호도
버 섯 류(1)	표고버섯
산나물류(1)	도라지
약 초 류(3)	시호, 작약, 천마
약 용 류(4)	구기자, 산수유, 오갈피, 오미자

아울러 장뇌 등 다양하게 불리는 명칭을 산양삼으로 일원화 하고 청정 산양삼의 생산·유통기반을 마련하여 국민의 청정 먹거리를 보장하는 한편 중국산과의 차별화를 통한 신뢰확보로 임업인의 소득증대를 도모하기 위하여 「임업 및 산촌진흥촉진에 관한 법률」을 개정 중에 있다.

국내 생산 밤, 표고, 산채류 등 청정 임산물에 대한 안전성 확보를 위해 친환경 임산물 생산 임가를 중심으로 친환경생산 이력제 도입, 친환경토양개량

등 기반조성사업 지원을 확대하고, 청정 임산물의 지역특산품 유도를 위한 임산물 지리적표시 등록 제도를 추진하고, 임산물명품화를 위해 2008년 13품목 8억원을 지원하는 등 우리 임산물에 대한 안전성 강화대책을 수립하여 추진 중에 있다.

(산림청 목재소득과 행정사무관 민한기)

(5) 국산재 이용 및 폐목재 재활용 촉진기반 조성

(가) 국산재 이용촉진

우리나라 산림은 가꾸어 주어야 할 30년생 이하의 어린나무가 전체 산림의 59%를 차지하고 있으며 목재자급률은 2007년말 현재 9.8% 수준으로 국내 목재소요량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고 있으며, 산림내 임목축적은 2007년말 현재 624백만 m^3 로서 ha당 평균축적이 98 m^3 로서 증가하는 등 매년 임목축적이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나무는 주로 간벌 소경재로서 보드류용, 펄프·칩용, 표고자목용 등 대부분 저급용도로 이용되며, 낙엽송 원목 일부가 건축 내장재로 활용되고 있으나 임도·기계화 등 산림경영 기반시설이 미비하여 생산비용이 많이 들고 품질 및 가격면에서 수입재와 비교할 때 경쟁력이 떨어지고 있다.

이를 위해서 정부에서는 우선 국산목재를 안정적으로 공급할 수 있도록 2005년부터 산업용재 공급계획을 수립하여 목재업계에 공급하고 있으며, 임업 및 산촌진흥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국산재 우선구매 제도를 2002년도에 도입하였고, 국산재로 만든 책·결상을 초등학교에 보급하는 한편 공공기관, 자연휴양림 등 시설공사나 내장제품에 간벌재 등 국산재를 사용토록 하고 있다. 아울러 1993년도부터 국산원자재 구입자금, 목재이용가공시설 등의 지원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는데 국산재만을 사용하는 목재유통센터 여주 및 동해사업소를

1997년도와 2004년도에 각각 설치하여 국산재 이용 및 유통의 중심으로 육성하고 있다.

목재 자급률 향상과 국산재 이용을 촉진하기 위해서는 목재가 안정적으로 공급되어야 하고, 목재생산비용을 절감해야 하며, 품질과 가격면에서 수입재보다 경쟁력을 확보해야 하는 과제를 안고 있다.

(i) 2007년도 이행실적

국내 목재업계에 보드용, 펄프·칩용, 토목용으로 1,605천m³의 원목을 공급하는 등 산업용재 공급대책을 적극 추진하여 국내재 2,680천m³을 공급하여 목재 자급률을 2006년 9.2%에서 9.8%로 향상시켰다. 또한, 국산재 및 숲가꾸기 산물이용 촉진을 위해 국산재이용 가공센터 2개소(강원, 전남)를 신규로 시설하였으며, 국산재로 만든 책·결상을 225개 초등학교에 8,883조를 보급하였다.

또한 국산재 유통활성화를 위하여 산림조합중앙회 목재유통센터에 국산재 원료 12천m³의 구입비 및 목재분쇄기의 5종의 시설보완을 지원하였다.

2007년 목재수급 실적

구 분	목재수급 실적
용 도 별	펄프·칩용 41%, 제재용 24%, 합판·단판용 13%, 보드용 10%, 기타 12%
종 류 별	국내재 9.8%(2,680천m ³), 수입재 90.2%(24,667천m ³)

(ii) 2008년 추진계획

산업용재 공급계획에 의거 2008년에는 합판용, 보드용, 칩용, 토목용으로 1,669천m³을 원목을 목재업계에 공급할 수 있도록 추진 중에 있다. 사유림 별채여건 개선 및 목재생산 촉진을 위하여 간이 별채운재로 시설비를 2008년부터 신규 지원 추진하고 있다.

저급용으로 쓰이던 리기다소나무의 토목용재 활용기술을 개발코자 2008년 리기다소나무를 이용한 토목용재(옹벽 등)시설을 시범사업(629백만원)으로 추진하고 있다. 사회적일자리로 산물 수집단을 운영하여 국산재 이용률을 높이는 한편, 국산목재에 대한 새로운 수요를 개발 하고, 다양한 용도를 개발하기 위해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2008년 목재수급 계획

구 분	목재수급 계획
용 도 별	펄프·칩용 41%, 제재용 24%, 합판·단판용 13%, 보드용 10%, 기타 12%
종 류 별	국내재 10.0%(2,770천m ³), 수입재 90.0%(27,700천m ³)

(나) 폐목재재활용 촉진기반 조성

최근 유가상승, 기후변화협약에 따른 이산화탄소 감축 등을 위해 세계 각국은 신재생에너지 확보에 총력을 경주하고 있으나, 국내실정은 목재자급율이 절대 부족하여 91%를 수입에 의존함으로 폐목재로 재생산이 가능한 보드류 산업을 활성화 하여 부족한 목재자급율을 향상시킴과 아울러 이산화탄소 배출 감축 등에 기여할 수 있도록 폐목재재활용 촉진 기반조성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따라서 현행 제도상 폐목재는 대부분 분리선별 후 소각 또는 매립토록 규정하고 있어 목질자원의 순환이용을 위해 관련법령 등을 일제히 정비하여 국내 보드류 업계 등에서 폐목재를 재활용할 수 있도록 제도개선 등을 추진하고자 한다.

(1) 2007년도 이행실적

목질자원의 순환이용을 위해 폐목재 구입 및 보드류 산업 시설현대화를 위한 자금으로 40억원을 지원하였으며, 폐목재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관계부처 실무작업반 구성, 폐목재 재활용 심포지엄 및 자문회의 개최, 폐목재 유통

실태조사, 관계부처 협의회 개최 등을 통해 제도개선 방안 등을 추진하였다.

(2) 2008년도 추진계획

목질자원의 순환이용을 위한 폐목재구입 및 보드류 시설 현대화 자금을 45억원 규모로 지원하고, 폐목재 재활용을 활성화하기 위한 지속적인 관계부처 협의회 개최 등을 통해 관련법령을 개정하여 현행 제도의 운영상 나타난 일부 미비점을 개선·보완 하였으며, 또한 관련부처와 협조하여 폐목재 재활용 기술 개발 등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갈 계획이다.

(산림청 목재소득과 임업사무관 정병걸)

라. 살기좋은 산촌 육성 및 산림휴양·문화공간 확충

(1) 산촌을 산림경영과 녹색관광 거점지역으로 육성

1995년 농산어촌현대화시범사업의 일환으로 시작된 산촌개발사업은 강원도 춘천시 사북면 지암리를 대상으로 시범사업을 착수하고 3개 산촌마을에는 사전설계비를 지원하였다. 지암리의 경우 1년 사업으로 추진하여 산촌개발비(50억원), 연관사업비(31억) 등 총 81억원을 투자하였고, 충북 영동, 전북 장수, 경남 거창에 대해서는 2년 사업으로 추진(설계 1년, 조성 1년)하였다.

지암리 산촌마을 개발을 시작으로 1996년 3개 마을, 1997년 5개 마을이 설계되어 1997년까지 도별 1개 마을씩(전남 2개소) 9개 마을이 시범사업으로 추진되었고, 1998년 이후 본격적으로 추진한 결과 2007년까지 총 2,279억원을 투자(지방비, 용자포함)하여 153개 마을을 조성하였고, 2008년 현재 87개 마을에 대해 조성 중에 있으며 이후 산촌진흥 기본계획(2008~2012)에 의거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산촌생태마을 조성 실적 및 계획

(단위:백만원)

구분	계	'99 까지	'00	'01	'02	'03	'04	'05	'06	'07	'08~ '12
사전설계	360	59	17	17	15	10	20	15	18	33	156
마을조성	300	9	16	22	12	34	15	10	20	15	147
투자비	429,833	43,731	20,668	20,660	24,327	26,852	16,225	20,364	25,683	29,391	201,932

자료 : 산림청 산림이용국

그동안 산촌개발 추진과정에서 나타난 여러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서 산림청은 산촌주민의 소득을 높일 수 있는 다양한 소득원의 개발 보급과 산촌마을의 성공사례를 전파하기 위한 워크숍 및 산촌생태마을 조성 기본설계 경진대회 등을 개최하였고, 산촌을 자연생태적으로 쾌적하고도 아름다운 삶의 터전으로 조성하는 본 사업의 정책방향을 대표할 수 있도록 기존의 “산촌종합개발”에서 “산촌생태마을조성”으로 사업명칭을 변경하고, 사업의 탄력성 제고를 위해 기존의 세부사업별 배분기준을 폐지하였다.

여기에 더해 산촌에 대한 국가적, 국민적 관심과 수요에 부응하고 지속가능한 사회를 지향하는 변화의 패러다임에 대응하기 위해 각계 의견을 수렴하여 2007년 산촌진흥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산촌진흥기본계획은 상위계획인 국토종합개발 계획의 기본틀과 조화를 이루면서 정주권개발사업, 농촌마을종합개발, 정보화마을사업 등 타부처에서 실시하는 다양한 형태의 지역개발계획과 연계하여 수립하였고, 전국 산촌기초조사 결과를 기초로 산촌의 산림자원 조성·경영기반 확충 등 산림의 종합정비에 관한 사항, 농림수산물의 생산·가공·판매 및 산림휴양자원을 활용한 산촌주민의 소득증대에 관한 사항, 산촌의 도로·주택·상하수도 등 주거환경의 조성·정비에 관한 사항, 산촌의 고유한 문화와 전통의 계승·발전에 관한 사항, 도시와의 교류 촉진에 관한 사항, 산촌의 녹색관광 및 생태관광 육성에 관한

사항 등을 반영하였다. 이러한 산촌진흥기본계획의 수립은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의 중장기 계획을 구체화 시켜줌으로서 지속·종합적인 사업추진의 기반을 마련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산촌진흥기본계획 수립과 더불어 산림청은 산촌개발사업 추진 경험을 토대로 주민이 중심이 되는 상향식방식이 사업성공의 열쇠라는 것을 인식하고 시대의 변화에 능동적으로 대처해나가기 위해 기존의 사업체계를 개편하여 추진하고 있다.

그 첫번째로, 복합산림경영 등 지역특성에 맞는 다양한 소득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산림경영 마인드와 지역개발 역량 함양을 위하여 전문교육기관 교육 기회를 늘리고, 주민사업 이해도 제고를 위한 사업매뉴얼을 발행·배부하였으며, 현장자문을 지원하기 위해 요청 마을별 찾아가는 산촌지원센터를 운영하고, 각 도별 예비선정마을과 사전설계 마을을 대상으로 권역별 토론회를 개최하여 성공예감을 위한 사전교육을 강화하고 있다.

두 번째로, 사업적지 선정을 위해 2008년부터 예비선정제를 시행하여 외부전문가로 구성된 중앙심의회를 거쳐 2009년 사전설계 대상지 30개소를 예비선정하였다. 이 제도를 통해 마을주민의 사업추진능력을 강화하고 사업대상마을 주민들에 대한 사전 학습을 실시하여 원활한 사업진행이 가능하게 함으로써 지속적인 주민소득 증대와 삶의 질 향상에 기여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세 번째 사업조성부분에서는 설계비를 현실화함으로써 능력 있는 업체가 사업에 참여할 수 있도록 유도 하였고, 조성사업기간동안 S/W사업분야의 선 활성화, 운영매니저제도 도입을 통해 기존의 시설위주의 조성에서 벗어나 좀 더 효율적인 시설활용이 가능하도록 추진하고 있다. 이러한 선 S/W사업시행 후 H/W사업의 실행은 산촌생태마을 조성사업의 전반적인 품질향상이 가능하게 할 것이다.

마지막으로 사후관리 부분이다. 산촌개발사업이 완료된 마을이 본 궤도에 들어서기까지 사업완료 후 3~5년간은 지속적인 관심과 지도·컨설팅 등 사후관리를 지원하여야 한다. 그러나 재정여건이 열악한 산촌의 여건상 각종 사업시설의 유지·관리·운영 등을 산촌주민 자력으로 감당하는 것은 한계가 있으므로 기 투자된 시설물의 정상 운영을 통한 주민소득 제고를 위해서는 지속적인 사후관리가 필요하다. 이를 위하여 우수마을에 대한 인센티브를 지급하였으며, 산촌생태마을의 정체성을 확립하고 홍보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산촌생태마을 통합C.I 디자인을 개발하여 2008년부터 시행, 보급하였다.

산촌은 넉넉한 인심, 울창한 산림과 맑은 물, 조용함과 평화로움 등 다양한 유무형의 녹색 관광자원이 풍부하고, 조용하고 쾌적한 휴식처에 대한 동경과 산촌의 생활문화와 자연생태를 체험하고자 하는 도시민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어 그 발전 잠재력은 매우 높다. 실제로 프랑스, 영국, 독일, 일본의 산촌 지역에서는 지역활성화 전략의 일환으로 녹색관광이 추진되어 지역주민의 소득증대에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주 40시간 근무제 시행과 연중휴가제도 시행에 따라 관광패턴이 가족단위로 바뀌고, 또한 복잡한 유원지보다 자연환경이 잘 보존되고 산촌의 어메니티(Amenity)가 묻어나는 산촌의 고유 생활환경과 자연환경을 체험하고자 하는 도시민의 수요가 급증하고 있다.

도시와 산촌의 교류를 촉진하고 산촌체험사업을 육성하기 위하여 마을 및 지방자치단체와 도시민이 정보를 공유할 수 있도록 ‘숲에 On’ 인터넷 사이트의 개편과 네트워크 구축을 통해 산촌에 대한 정보제공과 홍보를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

도시민의 교류를 촉진하기 위하여 전형적인 산촌의 경관을 유지·증진시키고 생태적인 마을 가꾸기 마인드를 확산하여 쾌적한 산촌환경의 유지와 신선하고 안심하고 먹을 수 있는 농·임산물의 공급을 위하여 친환경농업을 권장하고, 또한 산촌의 어메니티(Amenity)에 부합되도록 돌담, 마을 숲 조성과 같

이 각종 시설물을 전통방식으로 시공하여 산촌을 자연친화적 정주공간으로 조성해 나갈 계획이다. 이와 함께 산촌의 이미지에 부합되도록 전통방식에 따라 시설 및 주택의 개량을 추진할 경우 지원방식에서 차별화할 수 있는 정책을 마련해 나갈 계획이다.

도·농교류의 촉진을 위하여 도시민들이 산촌에 오도록 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머무르게 하는 것도 중요하다. 도시민과의 교류를 확대하기 위해서 마을의 자연조건과 관광자원, 역량 등을 고려하여 교육과 문화적 교류를 위한 마을축제를 발굴하고, 산촌학교, 숲 속의 교실 등 산촌 체험 프로그램 개발과 운영에 대한 주민교육과 컨설팅을 지원할 계획이다.

(산림청 휴양등산과 행정사무관 이중락)

(2) 휴양공간 확충·서비스개선으로 휴양만족도 증진

1980년대 급속한 산업화·도시화와 국민경제의 발전으로 야외휴양수요가 급격히 증가하자 정부는 휴양수요를 산림에서 적극적으로 흡수하고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을 위해 다양한 산림휴양시책을 전개하였다. 산림경관과 임상이 좋은 산림지역에 국민의 보건휴양 및 정서함양을 위해 조성하는 자연휴양림, 도시지역의 산림에는 도시민이 쉽게 이용할 수 있는 산림욕장, 일반국민과 청소년들에 대한 산림교육시설로 숲속수련장 조성을 추진하였다.

자연휴양림의 경우 1988년 유명산, 대관령, 신불산폭포 자연휴양림 조성을 시작으로 2007년 말까지 전국적으로 총 112개소의 자연휴양림을 조성하여 운영하고 있다. 또한 주 5일 근무제 실시에 따른 휴양수요 증가에 대비하여 자연휴양림 조성을 촉진하기 위한 제도적 뒷받침을 위해 1990년도에 「산림법」을 개정하여 자연휴양림 조성에 대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2005. 8. 4부터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운영하고 있다.

최근 자연휴양림은 쾌적하게 여가를 즐길 수 있는 공간으로 국민들로부터 사랑을 받고 있으며 자연휴양림 이용자 수가 1995년 208만 명이던 것이 2007년에는 626만명으로 약 3배 이상 늘어났다. 2001년도 한국갤럽조사 결과 일반 국민은 자연휴양림조성사업이 치산녹화사업 이후 산림청에서 추진한 사업 중 가장 성공한 사업 중의 하나이며, 21세기 산림청이 가장 우선적으로 시행할 정책 중의 하나로 평가하였다. 자연휴양림에 대한 국민인지도는 1997년 52%에서 2001년에는 63%로 증가하였으며, 자연휴양림 재 방문 의사(88%), 이용만족도(91%)도 매우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자연휴양림 지정 및 조성운영 현황(2007년말)

(단위 : 개소)

구 분	지 정 현 황		운 영 현 황	
	개소 수	면적(ha)	개소 수	면적(ha)
계	234	183,433	112	123,280
국유 자연휴양림	85	154,996	35	105,249
공유 자연휴양림	94	21,144	60	16,185
사유 자연휴양림	55	7,293	17	1,586

자료 : 산림청 산림이용국

자연휴양림 이용자 추이

(단위 : 천명)

구 분	계	2002까지	2003	2004	2005	2006	2007
계	56,068	29,800	4,345	4,808	5,076	5,775	6,264
국유 자연휴양림	13,626	6,272	1,004	1,117	1,371	1,814	2,048
공유 자연휴양림	36,790	20,619	2,827	3,211	3,094	3,321	3,718
개인 자연휴양림	5,652	2,909	514	480	611	640	498

자료 : 산림청 산림이용국

산림욕장의 경우 도시근교에 위치하고 도시민들이 많이 이용하는 산림에 산책로, 자연관찰로, 간이 체육시설 등 산림욕에 필요한 기본시설을 조성하는 것

으로 2007 말까지 총 122개소가 조성 운영 중이며 2008년도에는 전국 14개소에서 조성 중에 있다.

숲속수련장은 대부분 국유 자연휴양림을 중심으로 2007년 말까지 총 25개소가 조성되었으며 주요시설로는 단체숙소와 실내강의실, 야외강의장 등이다.

2007년 말까지 조성한 자연휴양림, 산림욕장 등 산림휴양시설과 2008년도 조성계획, 2009이후 장기 조성계획은 다음과 같다.

〈 산림휴양시설 운영 및 계획 〉

(단위 : 개소)

구 분	계	2007년까지 운영	2008년 운영계획	2017년까지 조성
계	475	254	29	192
자연휴양림	180	112	10	58
산 립 욕 장	250	122	14	114
숲속수련장	45	20	5	20

자료 : 산림청 산림이용국

또한 주 5일 근무제 실시에 따른 여가시간의 증가와 보건·휴양에 대한 관심 증대에 따른 국민의 다양한 산림휴양수요에 적극적으로 대처하고 국민에게 질 높은 친환경적 산림문화·휴양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에 따라 수립하는 산림문화·휴양 기본계획의 방향을 설정하기 위해 외부 전문가가 전국을 대상으로 산림문화·휴양자원의 현황조사, 휴양패턴 및 수요예측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수립된 계획안에 대하여는 지방자치단체, 대학교수 및 관련단체 등을 대상으로 다양한 의견을 반영하고, 관계기관의 의견 수렴을 거쳐 「산림문화·휴양 기본계획」을 확정하고 2008년부터 시행하고 있다.

산림문화·휴양 기본계획은 첫째 산림휴양자원을 보전하고 지속가능한 이용체계를 확립, 둘째 자연휴양림 운영방식을 개방형으로 전환하고 농·산촌 등과 연계 강화, 셋째 다양한 투자주체를 통한 산림휴양시설 확충, 넷째 공·사유산

림휴양시설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여 운영활성화 도모, 다섯째 산림휴양시설 운영을 프로그램 중심으로 전환 등을 통해 이용객에게 품격 있는 맞춤형 산림문화·휴양서비스 제공을 기본방향으로 하고 있다.

이와 더불어 자연휴양림 타당성 평가제도, 자연휴양림 및 등산로 휴식년제의 내실 있는 운영과 ISO 9001/14001 시행 등 자연휴양림 운영절차를 표준화하여 자연휴양림 조성 및 운영으로 인한 산림훼손을 최소화하고 이용자의 안전을 도모하는 한편 국민의 다양한 산림휴양수요 충족과 고객 만족도 제고를 위해 산림휴양포털시스템 「숲에 On」과 자연휴양림 예약정보시스템 등을 통해 다양한 휴양정보, 마일지리 제공, 웹회원 마이페이지 제공 등 고객 중심의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함으로써 이용자 모두가 보다 질 높은 산림문화·휴양서비스를 제공 받을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였다.

(산림청 휴양등산과 행정사무관 이낙형)

(3) 다양한 산림교육 및 문화행사로 산림문화 진흥

국민 삶의 질 향상과 주5일 근무제의 정착 및 여가문화의 발달에 따른 산림에 대한 교육 및 문화적 수요가 대폭 확대되고 있다. 특히, 격주 5일제 수업의 정착은 학부모와 학생들에게 산림을 체험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였으며 지자체별로 유치하고 있는 산림관련 문화 행사는 국민이 보다 쉽게 산림 교육·문화 행사를 접할 수 있게 하였다.

과거 운영되었던 산림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은 일반적인 대중과 획일적 집단을 대상으로 운영되었다면 현재는 대상이 가족, 학생, 소외계층, 장애인 등 다양화되어 가고 있고 프로그램 역시 세분화되는 추세이다. 현재 산림청에서 운영중인 교육·문화 프로그램으로는 푸른숲선도원 선발육성, 청소년 백두대간 산림생태탐방 프로그램, 산림문화작품 공모전, 산악스키·오리엔티어링 등의 산악레포츠 대회, 숲해설 프로그램 운영, 산림학교 운영, 숲속음악회, 숲과 문학

의 만남 행사, 자연과 산림 관련 전시회 개최 등으로 다양한 프로그램을 운영함으로써 산림문화 진흥과 창달에 기여하고 있다.

또한 임업인의 결속과 화합의 장인 ‘산의 날’ 행사는 제7회를 이어오면서 지자체와의 연대 강화는 물론 산림에 대한 일반 국민의 관심과 공감대를 형성하였으며, 그 밖에도 산의 중요성과 가치를 알리기 위하여 전국 숲해설가 대회, 숲치유 국제 심포지엄, 숲 올림피아드, 우드락 페스티벌, 단풍 문화축제 등을 통해 국민과 보다 가까워지는 산림문화 행사를 개최·후원하였다.

산림청은 이러한 정보와 서비스의 질 향상과 양질의 산림 정보를 국민들에게 제공하기 위하여 산림휴양 시스템(www.foreston.go.kr)를 산림청의 대표브랜드로 선정하여 전면적으로 재편하였다. 산림휴양 시스템 ‘숲에On’은 국민에게 맞춤형 산림휴양 정보와 백두대간·100대명산 등의 산악정보, 산촌관광 및 산악레포츠 관련 정보 뿐 아니라, 초등학생을 대상으로 한 「e-산림생태학습방」, 노년층을 위한 실버 「숲에On」 등을 통해 눈높이에 산림정보 그리고 각 지역 및 테마별 각종 문화행사를 안내하는 산림문화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숲에On’은 국내 뿐 아니라 기 구축된 영문사이트와 PDA서비스 등을 기반으로 우리나라의 산림교육·문화 뿐 아니라 산림휴양 전반에 관한 세계화 전략을 수립하고 있다.

아울러 산림청은 2006년부터 시행되는 『산림문화 휴양에 관한 법률』 통해 푸른숲선도원, 숲해설가 육성 등 산림교육·문화에 대한 제도적인 기반을 마련하여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다양한 산림교육 및 문화 프로그램을 개발이 가능하게 됨으로써 산림은 단순한 휴양공간의 역할 뿐 아니라 교육·문화공간으로서의 기능까지 담당할 수 있게 되었다.

산림교육·문화의 원년이 될 2006년을 기반으로 청소년을 위한 숲교육 전문기관인 녹색교육센터를 운영, 숲해설 및 등산안내인에 대한 인증제 실행으로 산림교육·문화 전문가의 자질 향상과 전문가를 양성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

할 계획이며, 특히 초·중·고교 시절부터 산림에 대한 이해를 높일 수 있도록 하기 위해 초·중·고등학교 교과서 내 산림교육 강화를 위한 활동도 전개해 나가고 있다. 교육 전문가 등에게 의뢰해 현행 교과서를 정밀 분석하여 그 결과를 토대로 수정·보완 사항을 교육과학기술부에 제출하는 한편, 앞으로 개편될 교과서에 산림에 관한 내용이 보다 체계적으로 수록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교과서 집필 참고자료도 마련하여 제공할 계획이다.

앞으로도 산림청은 지자체 및 관련 단체 등과 협조를 통해 보다 많은 국민이 산림을 통하여 교육과 문화적인 혜택을 누릴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산림교육프로그램 및 문화행사를 개발 보급함으로써 산림의 교육·문화 활성화를 도모해 나갈 것이다.

(산림청 휴양등산과 행정사무관 염중호)

(4) 등산인을 위한 서비스 기반 구축

주5일 근무제의 확산에 따라 여가시간이 증가하고, 건강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등산은 우리 국민이 즐기는 가장 대중적인 여가활동으로 자리잡고 있다. 「산림에 대한 국민의식 조사 보고서」(한국갤럽, 2006) 따르면 우리 국민 성인의 40% 정도가 한달에 1회 이상 등산을 하고 있으며, 연인원 462백만명이 등산을 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 같은 사실은 생활체육 종목별 참여율 순위에서 등산이 최근 10년간 1~2위를 유지하고 있는 것에서도 확인할 수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등산의 인기에도 불구하고 등산관련 인프라는 매우 열악한 실정이다. 우리나라 대부분의 산에는 크고 작은 여러 가지 형태의 등산로가 오래 전부터 형성되어 있으나 대부분 무관심과 예산부족 등으로 적절하게 관리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더욱이 주5일 근무제의 시행으로 등산인구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주말이나 봄·가을철 등 등산 성수기를 중심으로 이용이 집중되면서 많은 등산로가 훼손이 심화되고 있다. 정확한 통계는 없으나 우리나라

라에는 1,735개의 산에 4,290개 노선, 17,598km의 등산로가 있고, 이중 약 28%인 4,894km의 등산로가 정비가 필요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일반적인 등산로 이용패턴을 보면 등산인구의 증가와 이로 인한 과다 이용은 등산로의 훼손을 초래하게 된다. 등산로의 상태가 보행에 불편을 주게 되면 등산객은 그 주변에 새로운 등산로를 만들게 되고 그에 따라 산림훼손이 주변 지역으로 급속히 확산되어 가는 형태를 보인다. 또한 등산로의 이용증가로 토양압압 등이 심화되면 자연적인 복원이 불가능한 상태에 이르러 인위적인 수단을 활용한 등산로의 관리가 필요하게 되는 것이다.

이에 따라 산림청에서는 쾌적하고 안전한 등산환경 조성을 위해 2003년도부터 백두대간과 같이 국가적으로 중요한 등산로를 대상으로 등산로 정비사업을 추진해오고 있다. 2003년부터 백두대간의 국유림지역 등산로를 시작으로 등산로 정비사업을 시작하였으며, 2007년에는 사업범위를 이용도가 높아 훼손이 심한 도시 근교 생활권 등산로 정비까지 확대하여 2007년까지 총 415km의 등산로를 정비하였다. 또한, 2008년도에는 사업물량을 대폭 확대하여 총 413km의 등산로 정비를 추진하고 있다.

이와 함께 친환경적인 등산로 정비를 위해 가급적 인공시설물 설치는 최소화하고 지형지물을 충분히 활용하며, 경관보전과 산림생태계의 안정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등산로 정비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금년도에는 등산로 정비 사례집을 발간하여 시설별 사진과 함께 전문가와 이용자의 평가 내용을 제공하여 업무담당자에게 우수사례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였으며, 등산로 정비과정에서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해 설계전 현장토론회 등을 개최하여 산악단체나 학계 전문가 등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하도록 하였다.

아울러, 등산로의 안내표지판, 유도표지판(이정표), 위치표지판 등 등산관련 시설물들이 관리주체별로 디자인, 재질, 규격이 다를 뿐 아니라 정보의 내용도 제각기 달라 이용자들의 혼란을 야기하는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등산관련

시설물의 표준디자인을 개발하여 보급하였다.

정확한 등산로 정보의 조사를 위해 사회서비스 일자리 창출사업의 하나로 숲길조사관리원 360명을 선발하여 전국 주요 산의 각종 등산로 정보를 체계적으로 조사·수집하였다. 숲길조사관리원들은 GPS(위성위치확인시스템, Global Positioning System) 장비를 이용하여 등산로 전체노선을 현지 측량하고 중요한 지점의 위치데이터를 취득하고 사진을 촬영하고, 등산로 분포현황 및 이용빈도, 훼손실태를 비롯하여 등산로 주변의 역사·문화·관광자원조사도 병행하였다.

조사된 자료는 국민들에게 등산로지도 등 다양한 정보를 제공하기 위한 각종 콘텐츠로 개발되어 산림청의 대국민사이트인 「숲에On」 (www.foreston.go.kr)를 통해 서비스하고 있으며, 등산로 정비 및 등산로관리계획 수립의 기초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자연친화적이고 건전한 등산문화의 정립과 확산을 위해 2003년부터 시작된 등산교육을 더욱 확대하여 일반, 전문, 청소년 등 6개 과정, 2,480명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하고 있으며, 특히 10개 구간으로 확대하여 실시된 청소년 백두대간 산림생태탐방은 각 구간별로 한국산악회 등산전문가, 산림청 산악구조대원 등의 인솔로 315명의 남녀 중·고등학생이 4박5일간 백두대간을 답사하며, 국토의 소중함을 일깨우는 소중한 경험을 하였다.

또한, 최근에 지역산악회 등 모집산악회가 주관하는 단체산행이 각광을 받고 있는 것에서 알 수 있듯, 등산에 관한 전문지식이 없는 초보자들은 적절한 안내를 받을 수 없어 적극적인 등산참여가 어려운 실정이다. 한편 늘어나는 등산 인구 만큼이나 산악사고도 증가하고 있어 등산객이 안전한 등산을 지원하는 등산안내 서비스 수요가 날로 높아지고 있다.

이를 위해 2006년부터는 30여명의 등산안내인을 주요 명산에 배치하여 안내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등산안내인은 등산학교의 등산안내인 교육과정을 이수한 자 등 등산관련 소양을 가진 자를 우선 선발하고 있으며, 등산로 안내와

안전관리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또한 등산교육 및 등산지원사업을 수행할 전문기관의 설립 필요성에 따라 2007년 12월 산림문화·휴양에 관한 법률을 개정하여 등산지원센터 설립을 위한 법적근거를 마련하고 준비작업을 거쳐 7월 정식 출범하였다. 한국등산지원센터는 청소년·장애인·일반인 등 다양한 계층을 대상으로 등산교육사업과 등산로 모니터링, 셋길등산로 실태조사, 등산시설의 표준화, 건전한 등산문화 홍보 및 캠페인 등 다양한 등산지원사업을 펼쳐, 국민들의 안전하고 건전한 등산활동을 돕고, 안전한 등산환경 기반을 마련해 나가게 된다.

(산림청 휴양등산과 임업사무관 조화택)

(5) 자연친화적인 수목장 제도 조기 정착

현재 국내의 묘지면적은 전국토의 1%인 998km²로 서울시 면적의 1.6배에 달하는 여의도 면적의 1.2배인 9km²의 묘지가 매년 새로 발생하고 있다. 매장 중심의 우리나라 장묘제도는 산림의 감소뿐만 아니라 자연경관을 훼손하는 원인으로 지속적으로 문제되어 왔다. 이러한 묘지문제의 해결을 위하여 국가에서 화장을 새로운 장묘방식으로 권장하여 화장율은 매년 증가하여 2005년 50%를 상회하고 있으나 묘지의 새로운 대안이었던 납골당이 대형화·고급화에 따른 폐해와 사치성으로 인해 최근 기존의 묘지 이상의 심각한 사회 문제가 됨에 따라 늘어나는 화장수요를 수용하고 자연친화적인 장묘제도의 정책적인 보급이 필요하게 되었다.

이러한 가운데 최근 스위스와 독일 등에서 시작하고 있는 장사문화의 한 형태로 산림경영을 하면서 기존 장묘문화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수목장은 2006년 KBS여론조사 결과 화장 희망자 72%중 62%가 수목장 이용 의사를 표명할 정도로 국민적 관심을 받고 있으며, 언론 및 민간단체에서도 수목장에 대한 관심이 점차 확산 되고 있다.

이러한 사회분위기와 기대에 부응하기 위해 산림청에서는 바람직한 장사문화인 수목장을 제도화하기 위하여 보건복지부와 협의하여 『장사 등에 관한 법률』을 2007년 5월 개정·공포하게 되었다. 이 개정 법률은 공포일로부터 1년 후인 2008.5.26부터 시행에 들어가게 되었는데 그동안 수목장의 난립 방지와 건전한 정착을 위하여 조성허가 면적, 설치 기준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마련하여 2008.5.26 개정 공포된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에 반영함으로써 법률적인 측면에서의 제도화를 마무리하게 되었다.

아울러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58조 제4항 제4호에 산림의 환경기능 증진을 위하여 녹색자금으로 수목장림의 조성·운영사업을 할 수 있도록 규정하였고, 산지관리법을 개정하여 2007. 7월부터는 임업 및 공익용 보전산지 안에서 수목장림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는 한편, 산지관리법시행령을 2008.7.24 개정하여 산지전용허가 대신 산지전용신고만으로 수목장림을 조성할 수 있도록 하는 등 관련 법령의 정비도 완료하였다.

또한,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및 묘지 관련 재단법인에서 수목장림에 대한 조성 기준 등이 정립되어 있지 않으나, 운영 경험이 없어 검증되지 않은 상태에서 수목장림을 성급히 시행하려는 움직임이 많은 실정이다. 이 경우 수목장림 본래의 목적과 다르게 나타나 오히려 산림의 파괴로 이어지는 부작용을 초래할 소지가 크므로 이에 따른 시행착오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산림청에서는 2008년까지 국유림내에 모델 수목장림 시범적으로 조성하고 있으며, 조성이 완료되면 교육·홍보의 장으로 활용하고 2009년 상반기부터는 일반 국민들이 사용할 수 있도록 개장할 계획이다.

아울러 수목장이 장사제도의 주류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기 위해서 국민의식 전환과 관심을 유도하고 제도 도입 초기의 시행착오를 최소화하면서 건전한 제도로 뿌리내리도록 지자체 및 관련 단체 등과 함께 지속적인 홍보·계도를 전개해 나가는 한편, 조성중인 모델 수목장림의 『국유 수목장림 운영관리 규

정』을 연내에 제정하여 운영 기반을 마련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 등이 수목장림 조성에 발 벗고 나설 수 있도록 모델을 제시하고 정부예산 지원 등의 방안도 다각적으로 모색해 나갈 방침이다.

(산림청 휴양등산과 행정사무관 염종호)

(6) 도시 생태계의 건강성 증진

(가) 도시림·산림공원 조성

1) 도시숲 현황

도시숲이 우리에게 주는 혜택은 다른 자연 요소들보다 크고 다양하다. 도시숲은 자연을 가까이서 접할 수 있게 해주어 교육적 효과는 물론 정서적 안정감을 제공한다. 도시에서 특히 부각될 수 있는 숲의 기능은 도시내 열섬현상 완화, 미기후 조절, 각종 공해와 오염물질 저감효과, 도시 녹색 환경 조성으로 인한 아름다운 경관 조성, 생물 서식공간으로서의 장소제공 등을 들 수 있다.

우리나라는 인구의 약 90%가 도시지역에 거주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도시민이 생활권내에서 접하며 다양한 숲의 혜택을 누릴 수 있는 도시숲은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특·광역시와 광역시의 경우는 시민 1인당 생활권 도시숲 면적이 평균 7㎡에 불과하여 런던(27㎡/인), 뉴욕(23㎡/인), 파리(13㎡/인) 등 선진국의 도시와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반면에 생활수준이 높아지고 삶의 질에 대한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도시민의 녹색공간에 대한 수요는 폭발적으로 증가하여 도시주변 산림을 찾는 방문객의 수는 나날이 증가하는 추세이다. 따라서 도시의 생활환경을 개선하고 도심생태계의 안정성을 높이기 위해서는 도시내 녹지공간을 대폭 확충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러나 도시지역은 신규로 도시숲과 가로수를 조성하기에는 많은 제한이 존

재하며 특히 높은 지가(地價) 등으로 도심내 숲을 조성하기에는 매우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산림청은 도심의 녹지공간을 확보하기 위해 산림서비스매수 사업을 확대하여 도심내 녹지공간 확보에 적극 나서고 있다.

시·도별 도시숲 현황(2007년말)

(단위 : h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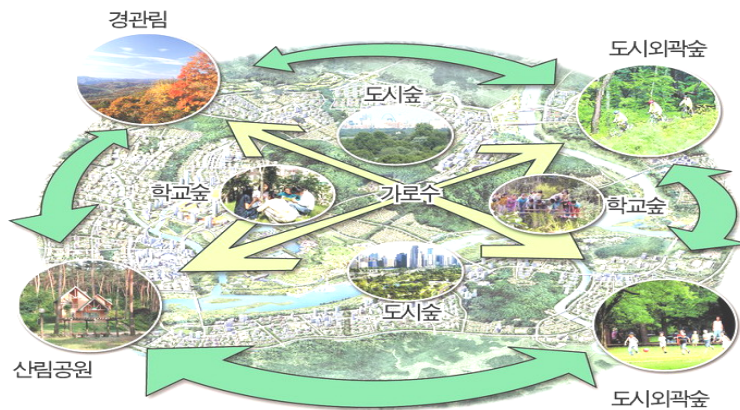
시 도	지역면적	도시지역 면 적	도시림 면 적	생활권 도시림 면 적	1인당도시림 면 적(m ² /인)	1인당생활권 도시림면적 (m ² /인)
합 계	10,003,274	2,462,468	1,326,788	30,697	302.48	7.00
서 울	60,525	60,525	17,973	4,207	17.63	4.13
부 산	76,564	63,773	15,865	4,138	44.46	11.60
대 구	88,410	56,533	24,056	1,166	98.24	4.76
인 천	100,747	45,213	10,304	853	39.57	3.27
광 주	50,128	50,128	23,622	974	167.12	6.89
대 전	53,964	53,964	29,445	930	199.54	6.30
울 산	105,726	54,788	34,527	633	333.64	6.11
경 기	1,018,389	380,228	156,821	4,971	152.67	4.84
강 원	1,687,361	406,331	284,377	1,293	2,416.79	10.99
충 북	743,150	135,915	84,515	1,077	728.81	9.29
충 남	860,015	150,366	62,867	881	508.26	7.12
전 북	806,297	134,943	50,484	1,904	360.68	13.60
전 남	1,212,144	216,901	182,417	1,085	1,489.34	8.86
경 북	1,902,571	331,687	198,020	1,894	1,145.96	10.96
경 남	1,052,440	169,648	67,923	3,633	282.57	15.11
체 주	184,843	151,525	83,573	1,058	1,590.82	20.15

2) 도시숲의 기능 및 구성요소

도시숲의 기능은 크게 네 가지로 구분할 수 있다. 자연체험·레크레이션·환경교육 등 산림교육·문화의 장소로 이용되는 공원림, 심리적 안정감을 주고 시각적으로 풍요로움을 주는 경관림, 바람·소음·대기오염 물질을 완화시켜 쾌적한 거주환경이 되도록 하는 방풍·방음림, 쾌적한 거주환경을 훼손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목재나 버섯 등의 임산물을 생산하는 생산림으로 구분한다.

그러나, 그동안 도시지역의 숲은 생육환경악화, 대기오염, 무분별한 사용·관리 등으로 생태적 건강성이 크게 저하되고 대다수 도시숲은 콘크리트 건물들 속에서 공원과 도시숲이 고립·단절된 채 섬처럼 존재하여 다양한 기능이 제대로 발휘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 도시숲의 녹색네트워크 〉



도시숲의 다양한 기능발휘를 위해서는 이처럼 분산된 도시숲을 연결하여 생태적 건강성을 증진하고 효과적으로 숲의 기능을 높이기 위해 도시내부와 도시외곽의 산림을 선적요소인 가로수나 하천녹지를 통해 연결하고, 도심지 내부에는 도시숲, 산림공원, 학교숲 등 자투리땅을 이용한 녹지공간 조성을 통해

생태계의 안정성과 유기적 상호연결성을 가지게 하여 순환형 도시로 조성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

3) 도시숲의 기능 및 구성요소

도시지역 내 녹지공간 확충을 위해 국유지 중 방치되어 있거나 임분 상태가 불량한 지역 혹은 시민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어 숲 조성 시 활용도가 높은 지역을 중심으로 2003년부터 도시숲 조성 사업을 하고 있다. 국·공유지 도시숲 조성사업은 독립적 지속 가능성이 유지될 수 있는 숲으로 조성하고 인위적인 시설물 설치를 지양하며 자연형태에 가까운 숲으로 조성하여 주변 경관과 조화되고 거점 녹지공간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또한, 도시내·외곽에 방치된 국유림을 생태적으로 건강한 산림으로 환원하기 위해 지자체와 주민이 직접 참여하고 애착을 가질 수 있도록 산림공원조성사업도 추진 중이며 산림공원은 자연적 조건과 사회적 여건을 고려하여 지역을 대표할 수 있고 시민들에게 깊은 인상을 심어 줄 수 있도록 테마형의 특색 있는 공원으로 조성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현재, 국유지 도시숲은 2003년 12개소를 시작으로 2007년까지 30개소를 조성하였고, 2008년도 9개소에 지역별 모델사업을 추진 중에 있다. 또한, 공유지 도시숲은 매년 사업량이 대폭 증가하여 2005년 70개소를 시작으로 2007년까지 422개소를 조성하였으며, 2008년도에는 지방자치단체와 국민의 관심도가 커져 276개소(615억원)를 조성 중에 있다. 도시민의 녹색공간에 대한 폭발적인 수요 증가로 국·공유지에 대한 도시숲 조성 사업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아울러, 도시숲을 지속적으로 확대하기 위해 지방자치단체에서는 산림서비스 립매수 제도를 적극 활용하고, 도시지역 내 녹지 공간을 지속적으로 확충할 수 있는 체계적인 기반을 마련하였다.

국·공유지 도시숲(산림공원) 조성 현황(2007)

○ 국유지

기관별		구분	개소	사업량 (ha)	사업비 (천원)
지방청	관리소				
계			9개소	554	3,663,350
북부	서울	산림공원	서울 남산모델림(중구, 용산구)	183	525,800
	서울	"	북악산모델림(종로, 서대문, 성북구)	258	525,800
동부	태백	"	강원 태백시 황지동 산1	6	417,701
남부	영덕	"	경북 포항시 남구 금광 산196	2.5	521,328
	양산	"	부산시 부산진구 가야동 산81-1	8	313,755
중부	보은	"	충북 청주 상당 용정 산34-1	12	417,701
	부여	"	충남 천안 청구 산5-3	2.9	313,755
서부	영암	"	전남 장흥 관산 부평 산109-1	73	313,755
	순천	"	전남 순천 용당 산52외2	8.6	313,755

○ 공유지

시도별	개소	면적 (ha)	사업비(천원)		
			계	국비	지방비
계	276	394.5	61,862,000	52,373,000	52,373,000
서울	22	43.3	8,640,000	4,320,000	4,320,000
부산	6	15.1	4,000,000	2,000,000	2,000,000
대구	18	25.6	11,366,000	5,683,000	5,683,000
인천	1	1.0	780,000	390,000	390,000
광주	11	30.9	15,500,000	7,750,000	7,750,000
대전	1	1.2	4,000,000	2,000,000	2,000,000
울산	7	9.8	4,200,000	2,100,000	2,100,000
경기	16	11.7	2,448,000	1,224,000	1,224,000
강원	19	28.1	3,108,000	1,554,000	1,554,000
충북	10	25.7	5,434,000	2,717,000	2,717,000
충남	5	18.5	6,072,000	3,036,000	3,036,000
전북	89	68.6	15,254,000	7,627,000	7,627,000
전남	45	45.0	9,464,000	4,732,000	4,732,000
경북	18	57.4	10,850,000	5,425,000	5,425,000
경남	6	9.6	2,350,000	1,175,000	1,175,000
제주	2	3.0	1,280,000	640,000	640,000

4) 도시숲 조성·관리 매뉴얼 제작 보급

산림청에서는 도시의 녹지를 체계적으로 조성·관리하기 위하여 『도시림조성·관리 매뉴얼』을 제작·배부하여 지방자치단체 담당자 실무용으로 활용토록 하였다.

(산림청 도시숲경관과 임업사무관 김경목)

(나) 가로수 조성·관리

1) 가로수 조성 및 관리

가로수는 도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녹지로서 도시내 녹색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가장 중요한 선형녹지이다. 가로수는 경관개선, 고립된 도시내 숲을 연결하여 동물이동통로 및 생물서식 공간으로서의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으며, 도심지내 높은 지가로 인한 녹지부족 문제를 해결하는 대안으로 평가받고 있다.

가로수 관리업무는 그동안 건설교통부에서 도로의 부속물로써 관할하였으나 2001년 가로수에 대한 제반지식과 경험이 풍부한 산림청에서 이관 받아 ‘가로수 조성 및 관리규정(2002.1.2. 산림청 예규499호)’에 의거 관리하였다. 그러나 도로관리청과 지자체 간의 업무 영역적 충돌이나 혼란으로 잦은 마찰과 민원이 발생하여 좀 더 체계적인 조성·관리를 위해 2006. 8월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21조에 법적 근거를 마련하였으며, ‘가로수 조성 및 관리규정’을 제정·고시(2006.8.8, 산림청 고시 제2006-58)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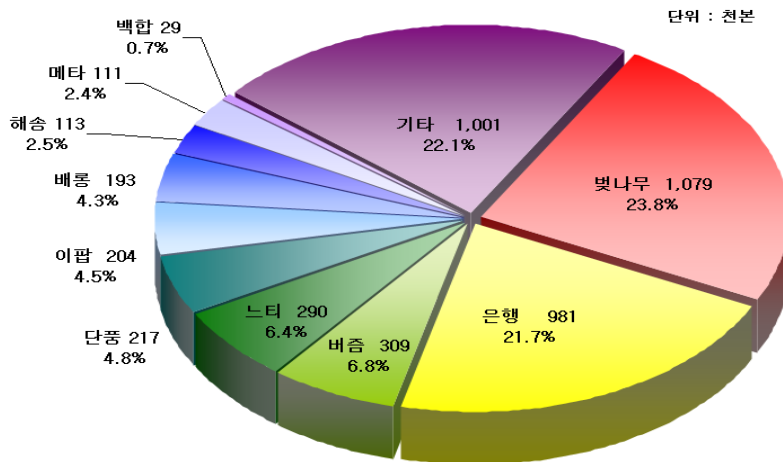
이에 따라 가로수관리청이 관할 지방자치단체로 일원화하였고, 5년 마다 가로수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시행하도록 되어 있어 시민들이 가장 빈번하게 접할 수 있는 도시의 선형녹지축으로써의 녹색공간을 더욱 아름답게 만들어갈 수 있을 것이다.

최근 4년간 가로수 조성 실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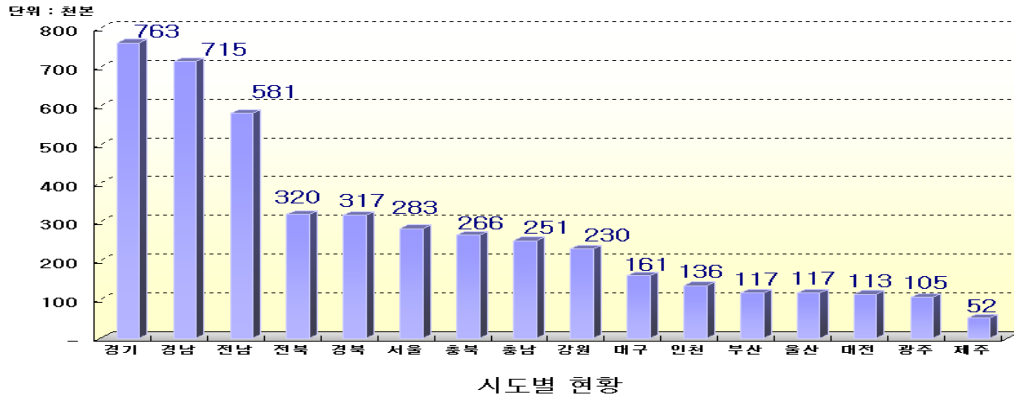
구 분	계	2004	2005	2006	2007
연장거리(km)	4,560	1,205	1,203	1,002	1,150
본수(천본)	815	166	190	253	206

전국의 가로수는 2007년말 현재 4,527천본(31,030km)으로서 2006년 대비 206천본(1,150km)이 증가하였으며, 수종별로는 벚나무 23.8%, 은행나무 21.7%, 버즘나무 6.8%, 느티나무 6.4% 등이며, 경기도가 전체의 16%를 차지하고 있으며 경기, 경남, 전남이 전체의 45%를 차지하고 있다. 신규조성은 2003년 이후 매년 약 1,000km씩 증가하는 추세며 최근 이팝나무와 배롱나무의 식재가 증가하고 있으며 지역별 특성에 맞게 수종이 다양화되는 추세이다.

가로수 수종별 현황(2007년말 현재)



가로수 시도별 현황(2007년말 현재)



산림청에서는 녹색네트워크의 중심축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는 가로수를 확대 조성하기 위하여 특색 있는 거리 조성 등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고 있다.

2)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 및 정보화

산림청에서는 그동안 병해충방제 등 소극적인 관리에 치중하였던 가로수 관리를 토양개량, 비료주기, 양분주사 등 적극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2007년부터 가로수 생육환경 개선사업으로 480백만원을 지원하고 있으며, 전국의 가로수 정보를 표준화, 통합화하여 계획적이고 효율적인 조성과 관리를 위하여 가로수관리시스템을 개발하여 지자체에 보급하였다.

(산림청 도시숲경관과 임업사무관 김영혁)

(다) 학교숲 조성

1) 학교숲의 역할

국민의 생활환경으로서 녹지공간을 확대하고 학생들의 정서함양 및 환경의식 배양 등 교육적 공간으로 적극 활용하기 위하여 초·중·고교에 학교숲을 조성하고 있다. 학교숲은 도시내 녹지조성 공간의 부족과 지가 상승으로 인한

녹지공간 조성의 재정적 부담을 덜면서 삭막한 운동장과 회색 콘크리트로 둘러친 환경을 푸른 숲으로 조성함으로써 도시내 녹색네트워크의 한 축으로 평가받고 있다. 또한, 학교숲은 학생들뿐만 아니라 지역주민이 쉽게 접하고 쓸 수 있는 공간으로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학교 숲 조성사업의 가장 큰 특징은 기존의 단순 조경공사적 개념을 벗어나 교육의 주체인 학생, 교사는 물론, 학부모, 지역주민이 설계단계부터 숲의 운영 관리까지 직접 참여한다는 점이며 특히 시민단체와 정부, 기업 등이 함께 추진하는 파트너십운동으로서 선진적인 사업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

학교숲 조성 현황

년도별	시범학교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특수학교
계	616	324	151	122	19
1999	10	6	3	1	-
2000	20	9	4	7	-
2001	24	11	7	4	2
2002	15	12	2	-	1
2003	127	66	31	27	3
2004	105	52	25	26	2
2005	79	45	18	14	2
2006	116	68	27	16	5
2007	120	55	34	27	4

2) 학교숲 조성절차

학교 숲 조성사업은 매년 공모를 통하여 신청접수하며, ‘학교숲위원회’에서 최종 선정된 시범학교는 연 1천만원씩 3년간 총 3천여만원의 학교숲 조성비와 함께 민간 전문가들의 학교숲 조성·관리 기술을 지원받게 된다. 산림청에서는

학교숲 지원예산의 투명한 집행과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학교숲 지원예산 운영지침」을 수립하여 시행하고 있다.

학교숲 조성 사업은 지역별로 시범학교를 선정하여 조성함으로써 주변 학교로 사례를 전파하고, 사업시행 초기부터 학생 및 교사, 학부모, 지역주민이 함께 참여하여 조성하고 사후관리를 하는 체계로 진행된다.

3) 시민참여

산림청에서는 시민참여의 일환으로 학교숲이 가지고 있는 공동의 가치 발견과 성과 공유를 통해 학교숲 운동에의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참여 유도 및 학교숲의 다양성 확보를 위하여 생명의 숲, 유한 김벌리와 공동으로 2003년부터 매년 학교숲의 날 행사를 추진하고 있다.

산림청에서는 앞으로도 학교숲 조성 및 보전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하고 학교숲 사업을 확대하기 위하여 시민참여를 확대해 나갈 예정이다.

(산림청 도시숲경관과 행정사무관 송준호)

마. 국제적 여건변화에 따른 대응체제 구축

(1) WTO/DDA 협상에 적극 대응

우루과이라운드(UR)에 이어 차기 국제 무역 및 통상질서를 결정하는 DDA(Doha Development Agenda)협상이 실질적인 시장개방으로 인한 무역자유화를 실현하여 회원국 각국의 이익을 증대한다는 목표로 2001년 11월 카타르 도하에서 출범하였다.

농업협상(단기임산물)은 UR협상 타결 당시 UR 이행종료 후 자동으로 재협상하기로 합의하여 2000년부터 협상을 시작하게 되었으며, 비농산물(목재류, 석재류 등)은 DDA선언에 의해 본격적으로 협상을 개시하게 되었다.

DDA 협상은 2004년 말까지 협상타결을 목표로 협상을 진행하였으나 각국의 이해관계 대립으로 합의에 실패하였다.

이에 2005년에는 2004년 8월에 합의한 협상 기본골격(framework)에 의거 분야별 쟁점을 중심으로 세부원칙(Modalties)을 도출하기 위하여 12월 제6차 홍콩각료회의 개최를 통한 타결을 시도했으나 농업협상은 농산물 수출·수입국간의 대립, 비농산물협상은 미국·캐나다 등 선진국과 인도·브라질 등 개도국(ABI)간의 입장차에 의해 합의에 실패하고 2006년말 협상시한을 넘겼다.

WTO 주요국은 2007.1월 개최된 각료회의에서 DDA협상을 본격 재개키로 합의하였으며, 지난 7월에서는 농업 및 비농산물(NAMA) 협상의장 초안이 회람되어 회원국간 활발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2008년도에는 2월 세부원칙 의장수정안이 배포되었으며 5월, 7월에는 세부원칙에 대한 2차, 3차 의장수정안이 각각 배포되어 쟁점사항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으나, 7월 소규모 각료회의에서 일부쟁점에 대한 선진국과 개도국간의 의견을 좁히지 못하여 협상이 최종 결렬되었다. 그러나, WTO 사무총장은 9. 26 개최된 그린룸 회의를 통해 협상 재개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농업협상그룹 의장은 10. 1, 비농산물협상(NAMA)그룹 의장은 10. 2 각각 협상재개를 발표, 협상재개를 공식화하였다.

임산물 협상은 HS 10단위로 354개 품목이며, 농업협상 대상품목은 5류~24류에 해당하는 단기소득임산물 108개 품목, 비농산물협상(NAMA) 대상품목은 25류~94류에 해당하는 목재류·석재류 246개 품목을 협상대상 품목으로 하고 있다.

WTO/DDA 협상에서 농업협상(단기소득임산물)에서는 관세감축 구간 폭, 관세상한 설정, 민감품목 인정, 국내보조 및 수출 보조분야 등이, 비농산물협상(목재·석재류)에서는 관세감축공식, 분야별 무세화 논의(임산물 무세화), 미양허 품목(합판·섬유판·PB 등) 처리문제, 비관세장벽(NTBs) 해소 문제 등이 주요 협상쟁점이다.

임산물 통상협상에서 산림청은 임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고 협상 이익의 최대화를 위해 임업인, 학계, 관련단체, 생산자 등 이해관계인의 폭넓은 의견수렴과 공감대를 기초로 대내적인 관계부처의 협조와 일본·대만 등 공조 국가 등과 긴밀히 협력으로 임산업의 발전을 위하여 적극적으로 협상에 임할 계획이다.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과 서기관 이치명)

(2) FTA 협상에 적극 대응

우리나라는 지역적 경제 블록화에 동참하고, 무역 활성화를 통한 국내 경제 활성화를 위해 FTA 협상을 확대하고 있으며 한-미FTA 협상이 2007년 4월 타결된 이후 아세안, 캐나다, 인도, 멕시코 등 주요 경제권 또는 주요 국가와 동시다발적인 협상이 진행되고 있다.

임산물 분야 협상대응을 위하여 협상영향을 전문연구기관에 의뢰하여 분석하고 생산자, 전문가, 학계, 임업단체 등 임업인의 의견을 적극 수렴하고 임산물 FTA협상 대책반을 구성 운영하고 있다. 국내 임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한 관세양허 협상과 수출장벽 해소 및 산업계의 해외투자 진출을 위한 투자 서비스 분야의 양허협상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과 서기관 이치명)

(3) 해외조림 확대

산림청은 장기·안정적인 목재 공급원 확보를 위해 2050년까지 100만ha의 해외조림을 목표로 1993년부터 해외조림 정책자금 융자지원을 통해 사업을 추진해오고 있으며, 2007년 말 현재 호주, 뉴질랜드, 베트남 등 7개국에 10개 업체가 진출하여 141천ha를 조림하였다.

해외조림 투자에 참가하는 국내 기업에게 조림 및 육림 사업비를 2007년까

지 577억원을 용자지원 하였고, 투자 활성화를 위한 해외조림 사전환경조사를 위하여 2006년 144백만원에서 2008년도에는 250백만원으로 사전 투자환경조사비를 확대하였으며, 1993년도부터 국내 기업이 해외에 조림한 지역에서 아카시아, 유칼리투스 등 속성수의 생산이 2000년부터 시작되어 2007년까지 펄프용 칩 302천BDT(690천m³)물량이 국내로 도입되었다.

해외조림투자 촉진은 2006년 8월 1일 「한·인도네시아 산림투자 및 CDM 협력에 관한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등 산림자원 부국이며 개발 잠재력이 높은 인도네시아와 임업협력 강화를 통해 50만ha의 조림대상지를 확보하는 성과를 거양하였으며, 해외조림 사전환경조사비 지원, 용자금리 인하(3%→1.5%) 등 해외조림 투자에 대한 지원정책을 한층 확대하는 등 해외조림 투자 여건을 양호하게 개선하였다.

또한, 「해외산림자원개발 기본계획(2008~2017)」을 수립하여 해외조림을 위한 지원체계 정비, 정책지원 확대 등 제도개선, 연구개발 및 전문가 양성 등 기반구축을 통하여 2017년까지 25만ha의 해외조림을 실시할 계획이며, 기존의 목재공급을 위한 산업조림 뿐만 아니라 대체에너지 확보를 위한 바이오에너지 조림, 기후변화협약에 대응한 탄소배출권 조림 등 기후변화 및 화석연료 고갈에 대비한 해외산림자원 확보를 위한 정책 확대 및 지원에 집중하고 있다. 이에 따라, 금년 들어 삼성물산 등 대기업의 사업 참여와 함께 해외산림자원개발에 대한 관심이 크게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 산림청은 목재자원의 안정적인 확보뿐만 아니라 바이오에너지 원료와 탄소배출권 확보 등 친환경 자원개발의 새로운 수요처로 부상한 해외조림을 체계적으로 확대 추진하여 『저탄소 녹색성장』의 실천 수단으로 해외조림 사업을 국가경제의 신 성장 동력으로 육성할 계획이다.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과 임업사무관 김종연)

(4) 양자 협력 및 국제기구와의 협력 강화

국제적으로 산림분야에서의 주된 의제는 「지속가능한 산림경영(Sustainable Forest Management, SFM)」이다. SFM의 효과적 이행을 위한 국제사회의 노력은 산림분야 뿐만 아니라 미래세대를 위한 지속가능한 사회 건설에 이바지하도록 각국의 특수성에 맞게 능력배양, 정책 개발 및 기술지원 등의 내용을 포함한다.

(가) 유엔산림포럼(UN Forum on Forests, UNFF)

유엔지속가능발전위원회(UNCSD) 산하 정부간 산림패널(IPF)과 정부간 산림포럼(IFF)에서 논의된 국제산림협약(IAF) 및 SFM 이행을 위한 IPF/IFF의 270여개 실행권고안의 이행 등을 종합하여 계속 논의하기 위해 유엔경제사회이사회(UNECOSOC)는 유엔산림포럼(UNFF)을 운영하기로 결정하였다.

2006년 2.13 ~ 24 동안 뉴욕 유엔본부에서 개최된 제6차 유엔산림포럼(UN Forum of Forests, UNFF)에서는 전 지구차원의 지속가능한 산림경영(Sustainable Forest Management, SFM)의 초석이 마련되었다.

그간 UNFF는 무분별한 산림전용과 산림황폐화의 심각성 및 산림이 주는 사회·경제적 혜택의 중요성을 인식하면서 지속가능한 산림경영(SFM)을 통한 보호림/경영림 증대 및 산림분야 발전을 통한 산림에 의존하는 빈곤계층 감소를 통하여 국제적으로 합의된 개발목표(새천년 개발 목표-MDGs 등) 달성에 기여를 목적으로 UN 체계 내에서의 산림분야를 총괄하는 공식기구 설립 논의를 위한 국제무대의 장으로서 많은 역할을 하여 왔다. 향후,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국제법적 규정(자발적 이행지침)에 맞추어 관련 국내법 정비, 정책개발 및 홍보 등을 통한 국내 SFM 이행노력 및 동남아시아에 우리의 우수산림복구 기술 전수 등을 통한 대외 SFM 이행노력을 통한 위상강화 필요성이 있다.

○ 2011년 ‘세계 산림의 해(International Year of Forests)’ 지정

유엔산림포럼은 제7차 전체회의에서 2011년을 세계 산림의 해(International Year of Forests)로 정하고 이에 대한 준비를 해나가기로 결정하였다. ‘세계 산림의 해’가 빈곤문제와 지속가능한 산림경영의 문제를 어떻게 조화롭게 해결할 것인가에 대한 정책결정자와 일반 대중의 관심을 환기하는 계기가 되어야 한다는 데 인식을 같이 하였다.

○ UNFF 비구속적 산림협정(NLBI) 채택

지속가능한 산림경영(SFM) 기준의 적용을 엄격히 하려는 미국, EU 등과 느슨한 적용을 주장하는 중국, 인도네시아 등 개도국간의 의견이 대립하였으나 비구속적 산림협정(Non-Legally Binding Instrument) 채택하였다. 지속가능한 산림경영(SFM) 등에 관해 비록 구속력이 없는 자발적 이행을 전제하고 있으나, 동 협정에 의한 자발적 국가보고서 제출과 2011년부터 다시 구속력있는 산림협정 논의의 재개가 예상된다. 따라서 SFM 적용 산림경영을 계속 확대해 나가야 하며, SFM 기준과 지표를 적용하여 산림의 지구적 목적 달성을 위한 목표를 염두에 두고 국가정책과 목표를 이행해 나가야 할 것이다.

(나) 국제열대목재협정(International Tropical Timber Agreement, ITTA)

우리나라는 1985년 6월 25일에 가입했으며, 1995년 6월에 1994년 국제열대목재협정(ITTA, 1994)을 비준하였다. 현재 세계 4위의 열대목재소비국으로 매년 약 23만\$ 규모의 의무분담금과 5만\$ 규모의 자발적 기여금을 부담하며 소비국 총 투표수 1000표 중 80표를 보유하고 있다. 첫 협정(ITTA-83)은 1983년 최초로 채택되어 1985년 4월부터 발효되었으며, 두 번째 협정(ITTA-94)은 1994년 채택되어 1997년 1월부터 발효되었다.

제42차 국제열대목재기구 이사회가 2007년 5월 7일 - 12일 (6일간) 파푸아 뉴기니에서 개최되었다.

이사회는 ITTA 1994의 후속협정에서 새롭게 도입한 Thematic Program의 운영방향과 방침에 관해 회기 간에 운영된 한 비공식 작업단(Inter-sessional Informal Working Group) 논의결과를 보고 받았다.

많은 회원국들은 Thematic Program의 성공적 운영을 위해 투명한 사업심사 및 평가절차가 담보되어야 하며 이와 관련된 상임위원회 역할과의 차별성 확보, 필요한 재원에 대한 기여금 확보 다양화 등 다양한 문제점들이 심층적으로 검토되어야 하기 때문에 다음 회기에 다시 논의하기로 하였다.

『국제열대목재기구(ITTO) 이사회-운영방식의 개정을 위한 회의』가 2008년 6월 9일 ~ 6월 12일 (4일간) 가나 아크라에서 개최되었다.

ITTA 2006의 효율적 이행을 위한 운영방식 및 새로운 활동계획(2008~2013)에 대한 회원국의 다양한 의견에 대한 논의과정을 가졌으나 Thematic Program의 운영방식, 4개 상임위원회의 임무, 새로운 활동계획(2008-2013), 이사회/상임위원회 개최 회기 등에 대해 국가간 의견이 분분하여, 금년 11월 요코하마에서 개최되는 제44차 이사회에서 재 논의하기로 하였다.

(다) 유엔사막화방지협약(UN Convention to Combat Desertification, UNCCD)

케냐 나이로비에서 2005년 10월 17일~28일 동안 개최된 제7차 당사국총회(COP-7)에서 특히 사무국 운영의 투명성을 강조하면서 예산의 효율성에 대하여 집중 논의하였고, 특히 EU 국가들은 금년 말로 임기가 만료되는 차기 사무국장 인선에 많은 관심을 보였다.

우리 대표단은 직원파견 관련 합의의향서(LoI)를 체결하여 동 국제기구의 아시아지역사무소에 직원을 파견하게 됨으로써 우리청의 위상을 높이고 국제무대에서 우리의 선진산림기술을 널리 홍보할 수 있는 계기를 마련하였다. 더불어 적극적인 활동으로 많은 아프리카 및 개도국으로부터 양자면담 요청을 받고 이를 통하여 우리의 사막화방지를 위한 우리의 노력 및 성과를 널리 홍보하는 성과를 거두었다. 또한 우리 대표단은 차기총회 유치의사를 표명하여 아프리카지역 및 아시아지역 국가들의 적극적인 지지를 얻었으나 마지막 날 스페인이 EU의 전폭적인 지지를 바탕으로 차기총회 개최지로 최종 확정됨으로써 아쉬움을 남겼다.

2007년 9년 3일~14일 스페인에서 제8차당사국총회가 개최되었다. 총회에서는 사막화와 기후변화 적응에 대한 고위급 회담을 포함한 사막화방지를 위한 국제적 노력에 대한 다양한 토의가 진행되었다. 산림청은 중국과 몽골에서의 사막화방지를 위한 민간차원의 지원을 실시하여 왔다. 아울러 금년부터 시작된 몽골그린벨트 조립사업은 2016년까지 130억원을 투입하는 대규모사업으로, 이에 대한 국제적 홍보활동도 병행할 계획이다. 아울러 한국, 중국, 일본, 몽골, UNCCD가 참여하는 동북아산림네트워크 운영을 통하여 역내 황사와 사막화방지 방안에 대한 국제적 노력을 병행해 나갈 계획이다.

금년 11월 제7차 사막화방지협약 이행검토위원회 회의(CRIC 7) 및 제1차 과학기술위원회 특별회의 (CST-S1)가 터키 이스탄불에서 개최되며, 사막화방지협약 10개년 전략계획의 전략목표 및 실천 계획 수립, 다년간 작업계획, 재정기구(GM : Global Mechanism), 협약이행(2008-2018) 강화를 위한 정부간 실무그룹(IIWG)의 10개년 전략계획 초안에 대한 과학기술위원회 활동의 재구성 등에 대하여 논의 할 계획이다.

(라) 유엔기후변화협약(UN Framework Convention on Climate Change, UNFCCC)

기후변화는 환경, 천연자원, 경제활동, 인간건강 등 사회 전반에 걸쳐 영향을 미치며 지속 가능한 발전에 가장 위협적인 요소라 할 수 있다. 대기상의 온실가스가 기후변화에 영향을 미친다는 사실은 이미 정부간 기후변화패널(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을 통해 관찰되어 왔으며 즉각적인 조치의 필요성이 인식되어 왔다. 189개 회원국이 가입한 당 협약(UNFCCC)은 1994년 3월 21일 발효되었고, 당사국총회는 연 1회 그리고 부속 회의는 연 2회 개최가 일반적이다.

산림청에서는 지진해일, 지진, 태풍 등 일련의 자연재해가 기후변화와 무관하지 않음을 인식하고 동북아 사막화방지사업, 개도국 양묘사업 지원 등 산림분야에서 지구환경 보전에 많은 기여하여 왔다. 특히, 2005년 11월 28일 ~ 12월 9일간 캐나다 몬트리올에서 개최된 제11차 기후변화협약 및 제1차 교토의정서 당사국총회에서는 교토의정서 발효이후 처음 열리는 회의로서 온실가스 감축의무 이행준수 및 향후 기후변화 체계(Post-2012)에 대하여 주로 논의하였으며, 산림분야에 대하여는 개도국 산림전용(Deforestation)이 주요 이슈로 떠올랐다.

향후 개도국의 산림전용 방지 논의와 관련하여 기후변화협약 사무국에 국가의견서를 제출하고 우리에게 유리한 산림악화 감축을 포함시키는 협상 전략을 추진하되 같은 입장인 인도, 인도네시아, 말레이시아 등과 공조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2008년도에는 향후 기후변화 체계(Post-2012)대응체제 구축을 위한 장기협력 행동 특별작업반(AWG-LCA) 회의가 출범하여 8월까지 3차에 걸쳐 회의가 개최되었으며, 개도국 산림전용 방지노력을 통한 온실가스 배출량 감축(REDD)에 대한 방법론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고, 선진국 추가감축위한 특별

작업그룹회의(AWG-KP)에서는 토지이용, 토지이용 변화 및 임업(LULUCF)관련 세부규정 개정에 대한 논의가 진행되었다. 2008년 12월 1일~12월 12일간 폴란드 포즈난시에서 기후변화협약 제14차 당사국 총회가 개최될 예정이며, 동 회의기간 동안 부속기구회의(SBSTA, SBI) 및 특별작업반회의(AWG-LCA, AWG-KP)가 함께 개최될 예정이다.

(산림청 국제산림협력과 임업사무관 임하수)

6. 수 산 업(해양수산부)

가. 연근해어업

(1) 연근해 어업구조조정사업 추진

연근해어업은 최근 들어 어업자원의 감소, 주변국가의 EEZ선포, 해양오염 심화 등 주변의 어업환경 변화와 고유가, 선원 인건비 상승 등으로 인한 어업 경비의 증가, 시장개방에 따른 저가 수산물의 수입확대로 인한 채산성 악화 등으로 경영상 큰 어려움을 겪고 있어 연근해어업의 경쟁력 강화를 통한 자생력 확보를 위해 구조조정사업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이와 관련, 1999년 9월 의원입법으로 제정된 “어업협정체결에따른어업인등의 지원및수산업발전특별법”에 따라 한·일 어업협정과 관련 직·간접적인 영향을 받는 업종에 대하여 1999~2002년까지 총 1,308척을 감척하였으며, 이와는 별도로 수산자원 보호와 과다한 어선세력을 줄이기 위해 “농어촌발전특별조치법”에 의거 일반감척사업으로 1994부터 2007년까지 근해어선 720척, 연안어선 6,428척을 감척하였으며, 2008년도에는 3,685억원을 투입 연안어선 3,500척, 근해어선 484척 총 3,984척 감척을 목표로 사업을 확대하여 추진하고 있다.

연안어선 감척사업은 당초목표치인 6,300척(2004~2008년까지)보다 3,100여척 초과한 9,400여척을 감척하고 2008년도에 사업 종료할 계획이며, 근해어선은 전체 어선세력의 35%인 1,280여척을 2007년부터 2010년까지 WTO/ FTA에 대비해 감척해 나갈 계획이다.

(농림수산식품부 어업정책과 이성수)

(2) 수산자원의 조성 및 자원관리형 어업생산기반 구축

UN해양법 발효와 우리나라를 비롯한 일본, 중국 등 주변국가가 EEZ을 선포함에 따라 우리 연안의 수산자원에 대한 관리 필요성이 더욱 높아졌다.

이에 따라, 연근해 수산자원조성을 위하여 2007년까지 7,662억원을 투자하여 인공어초 198천ha를 시설하였고 민간 배양장에서 생산한 종묘를 정부에서 매입하여 2007년까지 955백만마리를 방류하였다. 또한, 종묘생산 및 방류사업의 효과 제고를 위해 전국 15개 국·도립 배양장에서 신품종 종묘생산기술 및 방류기술을 개발하여 민간 배양장에 기술을 이전하고 있다.

특히, 수산자원의 회복을 위해 2006년부터 꽃게, 도루묵, 낙지, 오분자기에 대해 과학적인 자원조사·평가를 토대로 어업인 등과의 협의를 통해 동 어종에 적합한 자원회복 방안을 마련해 가고 있으며, 2008년에는 총10종의 회복대상어종에 대해 수산자원회복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자원관리형 어업생산기반 구축을 위해 2006년에 안강망, 통발, 자망어업에 대한 어구실명제 및 어구사용량 제한 제도를 도입하여 시행중에 있으며, 2007년에는 수산자원의 지속적인 이용·관리와 수산자원에 적합한 어선세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근해어업 허가정수를 현재 4,132건 보다 33.9%(1400건) 감소한 2,732건으로 조정하고 연안어업은 6만7855건에서 19.0%(1만2895건) 감소한 5만4960건으로 재조정하였다.

2008년에는 402억원을 투자하여 인공어초 4천ha를 시설하고, 국·도립 배양장에서 지역특산 종묘를 생산하여 방류할 계획이고 정부도 약 91천만마리를 매입하여 연안에 방류할 계획이다. 또한, 과도한 어획을 예방하고 적절한 어구 사용을 통한 지속가능한 어업을 실현시켜 나가기 위해 46개 연근해 어업의 어구와 어법에 대한 고시안을 마련하여 그동안 관행적, 전통적인 어업방식을 탈피하고 시대의 변화에 맞는 합리적 기준에 의한 어업방식으로 전환할 수 있도록 법제화 시켜나갈 계획이다.

한편, 자원의 남획 및 어업갈등을 조장하는 불법어업의 척결을 위해 2004년에 「소형기선저인망어선 정리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2005년부터 2006년까지 총 2,467척의 소형기선저인망 어선을 매입, 폐선조치 하였다. 앞으로는 소형기선저인망어업의 신규 진입을 최대한 차단하고 중대형기선저인망의 금지구역 침범 등 허가어선의 불법행위를 강력히 단속해 나갈 계획이다.

(농림수산식품부 자원회복과 강동양, 어업정책과 이세오)

(3) 어선기관 및 장비 개량

저효율·노후기관을 새로운 선박용 기관으로 대체하고 어선의 장비·설비 등을 현대화하여 해양사고예방 및 안정적 조업기반 조성을 위해 2007년에는 어선기관 및 장비개량사업에 11억원을 지원하였다.

2008년도에는 어선기관 및 장비개량사업에 6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농림수산식품부 어선인력과 권용철)

나. 해면양식어업

양식수산물이 전체 수산물 생산량의 42%를 차지하고, 수산물이 대표적 웰빙 식품으로 인식됨에 따라 수산물에 대한 국민들의 높은 안전성 요구에 부응하기 위해 환경친화적인 양식생산기반 구축을 위한 정책추진에 역점을 두었다

특히, 연안 내만의 양식장이 노후화 되고 육상오염물질의 해양유입 등에 따른 어장환경 악화 및 질병발생과 상습적인 재해피해 등으로 생산성이 저하됨에 따라 연안어장의 환경개선과 수산동물질병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게 되었다.

우선 친환경 양식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2007년에 26억원(국고기준)을 투자하여 질병예방 백신공급 및 양식장 폐사어에 대한 처리시설을 구축하였고, 2008년에는 우수한 종자 보급사업을 추가하여 양식어업인의 소득증대를 위해 노력할 계획이다.

수산동식물에 대한 검역 및 방역 등을 주요내용으로 하여 수산질병에 대한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수산동물질병관리법”을 2007.12월에 제정하여 수산동물질병에 대한 종합적인 관리제도가 마련되었고, 수산질병D/B를 구축중에 있으며, 이동병원을 운영하여 96개소 양식장에 278건의 수산질병 진료를 실시하였다.

지속가능한 양식수산물의 생산기반 조성을 위해 양식어장에 대한 지속적인 어장정화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2007년에는 83억원(국고기준)을 투입하여 16천ha를 정화하였고, 2008년에는 51억원(국고기준)을 투입하여 6천ha의 어장에 대한 정화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

생사료 사용으로 인한 수산자원 남획 및 어장 오염을 최소화 하기위해 2007년에 92억원(국고기준), 2008년에 64억원(국고기준)을 투입하여 환경 친화형 배합사료를 양식어가에 적극 지원하고 있다.

또한 국제 원자재값 상승으로 인한 양식어가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해

1,000억원의 배합사료 구매자금을 1%의 저금리로 2년내지 3년 상환조건으로 지원하여 양식어가의 경영안정을 도모할 계획이다.

아울러 양식산업의 경쟁력 확보 차원에서 고부가가치 어종의 생산기반 마련을 위한 외해수중가두리 개발 시범사업을 2007년까지 19억(국고기준)을 투입하여 제주, 경남, 전남지역에서 추진하였으며, 2008년도에는 9억원(국고기준)을 투입하여 강원지역까지 확대할 계획이며,

양식수산물에 대한 정부주도적 수산물 수급조절 정책에서 민간주도의 자율적 수급조절 정책으로 전환하기 위해 2007년도에 수산발전기금 35억원을 지원하여 유통협약사업 및 자조금 사업 대상품목을 기존 3개품목(김, 넙치, 송어)에서 4개품목(전복 추가)으로 확대하고, 수산물 관측사업 대상 품목도 4개품목(김, 넙치, 조피볼락, 전복)에서 7개품목(굴, 미역, 전어 추가)으로 확대 하였다.

재해 등에 따른 어업지원과 관련하여 어업재해발생시 피해대상 품목의 복구기준이 없거나 복구단가가 너무 낮아 피해복구에 어려움을 겪는 어업인들을 위해 관계기관과의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우렁챙이 종묘, 해삼 등 5개 품목에 대한 피해복구 단가를 신설하고 기존 26개 품목에 대한 단가를 인상하여 고시 하므로써 재해로 인한 피해발생시 어업인들이 현실적인 복구가 될 수 하였다.

(농림수산식품부 양식산업과 박선용)

다. 내수면양식어업

우리나라 내수면양식어업은 1980년대에 뱀장어, 송어, 향어 등 다양한 양식어종과 기술개발로 성장기를 맞았으나, 1990년도 중반이후 정부의 수질환경 보호정책으로 상수원 관련 수면에서 가두리양식어업 면허연장이 불허됨에 따라 점차적으로 생산량이 감소하였다. 최근에는 육상양식업을 중심으로 생산량이 회복추세에 있으나 아직까지 미흡한 수준이다.

또한, 현행 양식장 대부분이 재래식 양식방법인 지수식으로 시설대비 생산량이 낮고 중국으로부터 값싼 담수어류 수입이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그 품종도 다양화됨에 따라 국내산 동종 어류의 가격경쟁력이 저하되는 등 국내·외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에서는 이러한 내수면양식어업의 경쟁력을 강화하고 어업인 소득원 개발을 위해 1993년부터 환경친화적 양식시설사업을 지원하여 2007년까지 183개 양식장에 407억원을 지원하였다.

그리고 단순 활어 형태로 유통되어 소비시장이 한정되어 있는 것을 극복하기 위해 가공을 통해 고부가가치 상품을 개발함과 동시에 양식 수산물 가격안정화를 꾀하여 어업인 소득증대에 기여하고자 총 사업비 50억원을 투자하여 2007년부터 2년간 송어훈제가공공장 건립사업을 실시하였다.

2008년에도 7개 양어장에 37억원을 지원하여 양식장 현대화시설설치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할 예정이며, 내수면 수산물 소비확대를 위하여 2007년부터 실시한 송어훈제가공공장 건립사업을 차질 없이 마무리하고 ‘내수면 소비자 선호도 분석 및 소비시장 조사 연구’를 실시하여, 향후 내수면 수산물 소비증대를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식용분야 외에 비식용 분야 산업육성을 위하여 비단잉어 등 수출가능한 관상어 품종에 대한 지원을 계획하고 있다.

한편, 내수면어업의 체계적인 관리를 위해 ‘내수면잠재력조사 및 발전방안 연구용역(2004년~2007년)’ 결과를 토대로 기존의 ‘내수면발전종합대책(2006년 11월)’을 수정·보완한 ‘내수면어업기본계획(2008년~2012년)’을 수립할 예정이다.

(농림수산식품부 유어내수면과 최광규)

라. 원양어업

우리나라 원양어업은 주요 연안국들의 자원자국화 정책과 국제수산기구의 공해조업 규제조치로 조업어장이 축소되고, 연안국 EEZ내 어획쿼타 감축, 입어료 및 어로경비 상승 등으로 어업경영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이와 같은 대내외적인 어려움을 극복하고 국제경쟁력 제고를 위하여 정부에서는 원양정책자금을 2007년에 2,280억원(영어자금 800, 원양어업경영자금 1,480)을 지원하고 있으며, 정부간 어업협정을 통해 양자간 어업협력 관계를 유지해 오고 있는 연안국들과는 협력관계를 더욱 발전시켜 나가는 한편, 주요 수산자원을 보유한 페루, 브라질 등과도 새로운 어업협정 또는 수산협력약정의 체결 등을 통하여 해외어장을 확대 개발해 나갈 계획이다.

또한 외국어선의 단순입어를 허용하지 않는 주요 연안국가를 대상으로 현지 투자·협작 등 상호 호혜적 입어를 적극 추진하는 한편, 해외어장 자원조사를 통한 새로운 어장개발을 추진하여 해외자원을 안정적으로 확보해 나가고, 주요 국제수산기구 활동에 적극 참여하여 어장의 지속적인 확보는 물론 어업규제 움직임에도 책임있는 조업국으로서 능동적으로 대응해 나갈 계획이다.

아울러 연안국의 배타적 경제수역 선포에 따른 어업여건의 변화로 인하여 우리 어선의 조업이 불가능한 어업에 대하여는 원양어업 구조조정을 통한 감척사업을 추진하여, 1998년~1999년에는 북해도 트롤어선 6척, 2000년~2003년에는 꽁치 봉수망 10척, 오징어채낚기어선은 2002년~2004년 기간중 24척을 감척하였다.

또한 노후원양어선의 대체지원사업을 추진하여 수산발전기금을 재원으로 2007년까지 참치선망어선 2척을 건조하고 참치연승어선 중고선 1척을 도입 완료하였으며, 2008년도에도 노후된 원양어선대체를 위하여 중고선 도입 3척, 자금 24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농림수산식품부 원양산업과 사무관 박희수)

• V. 농어촌 생활환경개선 및
복지증진 시책

1. 농어촌의 기초생활환경 개선 303
2. 교육여건 개선 320
3. 농어업인 연금제도 지원 322
4. 농어촌 의료여건 개선 324

V. 농어촌 생활환경개선 및 복지증진 시책

1. 농어촌의 기초생활환경 개선

가.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 추진

(1) 2007년 이행실적

최근 들어 소득증가, 주5일근무제 시행 등 여건 변화로 농촌을 단순 식량생산공간이 아닌 전원주거·휴양·전통문화 등 기능을 갖춘 쾌적하고 농촌다움을 지닌 미래형 복합 생활공간으로 정비해야 한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아울러 새로운 농촌개발수요에 대응하여 농촌어메니티 자원과 지역개발을 연계시켜 농촌다움을 유지하면서 농가소득 증대 등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도움이 되는 종합개발사업 도입의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또한 지방화·분권화시대에 맞게 주민·지자체가 스스로 지역발전 문제를 고민하고 해결할 수 있는 역량강화 차원에서 실천을 통한 학습형 지역개발 추진방식의 도입이 절실히 필요하다. 이러한 시대적 배경에 따라 2004년부터 상향식의 주민참여형 농촌마을 종합개발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생활권이 같은 소권역(1개 이상 법정리)을 대상으로 지역특성에 맞게 『권역발전5개년기본계획』을 수립하여 기초생활환경정비, 경관개선, 소득기반시설확충, 주민 역량강화를 위한 소프트웨어사업 등을 종합적으로 추진함을 목적으로 한다. 사업대상지 선정시부터 지역주민이 스스로 해당 지역의 발전계획을 수립하고, 지역주민, 공무원, 지역내 전문가 등이 파트너쉽을 형성하여 지역발전을 주도하는 사업으로서 소권역별 잠재자원을 발굴·활용하여 지역특성에 맞도록 다양한 유형의 농촌공간을 정비하는 사업이다. 지원금액은 권역당 3~5년간 총 40~70억원(국고 80%, 지방비 20%) 범위내에서 권역의 크기, 가구수 등 권역의 규모에 따라 차등 지원하고 있다.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 계획수립 시 단계별로 전문가의 평가·자문을 통하여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추진하고 있다.

2007년까지 총 2,310억원(국고 1,887, 지방비 423)을 투입하여 96개 권역에 대하여는 사업을 추진하고, 40개 권역은 2008년도 사업착수를 위해 기본계획을 수립하였다.

기본계획 수립시 지역별로 잠재자원을 발굴하여 다양하고 특색있는 지역개발을 유도하기 위하여 한국농촌공사가 민간전문가 또는 민간기관과 컨소시엄 및 위탁방식으로 해당 지방자치단체와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최대한 수렴하면서 계획을 수립하였다.

또한, 권역개발 및 사업추진 방향 등에 대한 자문을 위해 지역주민의 참여하에 각 분야의 전문가들로 자문위원회를 구성하여 권역별로 현장에서 자문회를 개최하였으며,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에 참여하고 있는 전문가 의견을 수렴하여 농촌마을개발 발전방향을 재정립하고, 사업 활성화방안을 도출하기 위하여 전문가 토론회, 사업참여자 연찬회 등을 통해 사업의 발전방안을 계획에 반영하였다.

2007년도는 2005년도에 착수하여 1단계(1-3년차) 사업이 마무리되는 36개 권역에 대하여 중간평가를 실시하였다.

중간평가결과 상향식 사업을 통해 지역을 위해 봉사하는 열정적인 마을리더 등장과 쇠퇴하였던 지역공동체가 부활하고, 새로운 스타권역 등장과 소규모 상향식 사업 추진 경험을 인근 마을로 확산하는 분위기 조성과 지역을 아름답게 가꾸어 방문객 및 인구증가로 권역 활성화되는 등 긍정적인 변화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있다.

그러나 일부에서는 주민 참여형 상향식 사업에 대한 지역주민과 지방자치단체 담당자의 이해부족과 경험부족 등으로 성과가 미흡한 지역도 다수 있어 사

업참여주체의 지속적인 역량강화가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앞으로 사업이 안정적으로 정착될 때까지 중간평가를 통하여 인센티브와 패널티를 부여하여 지역간 경쟁력을 유도하여 사업시행주체의 적극적인 참여를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2) 2008년 향후 계획

농촌마을종합개발사업은 2004년 신규사업으로 지역주민, 지자체 및 전문가의 참여를 통해 상향식 추진 등 새로운 방식의 지역개발모델을 창출하기 위하여 관계자간 능동적인 참여와 긴밀한 협조체계가 필요하다.

계획수립 시 다양한 형태의 농촌지역 활성화 모델이 나올 수 있도록 지역이 가지고 있는 특성과 잠재자원을 최대한 살려서 기본계획을 수립토록 유도하고, 사업권역별 지자체와 전문가, 지역주민들을 중심으로 ‘마을개발협의회’를 구성하여 사업 추진방향 점검 등을 통해 농촌지역개발사업 추진의 효율성을 제고하고 지역개발을 이끌어 나갈 리더 등 주체역량 강화를 위해 중장기적으로 마을지도자 등을 체계적으로 육성할 수 있는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여 지역주민이 주도적으로 지역을 활성화시킬 수 있도록 유도해 나갈 계획이다.

2008년에는 총 1,639억원(국고 1,323, 지방비 316)을 투자하여 96개 권역의 계속시행과 2007년도에 기본계획수립을 완료한 40개 권역에 대한 세부설계를 수립한 후 착공하고, 2009년 사업착수를 위하여 40개 권역에 대해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또한, 농어촌지역의 거점공간인 면소재지의 기능을 강화하여 국토의 균형발전 및 서비스 기능의 향상을 도모하고 도시 및 소도읍과 농어촌마을을 연계할 수 있는 중간 거점공간으로서의 면소재지의 역할을 강화하기 위해 거점면소재지 마을종합개발계획을 수립하여 2017년까지 200개면을 개발할 계획이며, 우선 2008년부터 시범사업으로 4개 권역은 사업착수하고, 2009년 착수를 위해 4개

지역에 대해 기본계획을 수립할 계획이다.

그리고, 2006에 착공하여 1단계(1~3년차) 사업이 마무리되는 20개 권역에 대한 중간평가를 실시하여 평가결과 우수권역에 대하여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등 사업추진에 대한 동기부여를 통하여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도모할 계획이다.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지역개발과 시설사무관 이행우)

나. 농어촌생활환경 정비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은 도시나 읍지역 등에 비하여 생활환경이 상대적으로 낙후된 면지역을 종합적이고 체계적으로 개발하여 면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것으로 크게 마을기반정비(마을내·마을간 도로정비, 상·하수도 시설, 교량, 주차장 등)부문, 농촌경관(세천정비, 수변공원화, 소공원, 담장정비(식생담 조성 등), 문화·복지(복지회관, 마을회관, 체육 시설 등)부문, 환경보전(쓰레기처리시설, 마을하수처리시설 등)부문으로 크게 구분하여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농촌정주기반확충사업은 농어촌지역의 기초생활환경, 문화·복지시설 등을 종합적으로 정비·확충하여 농어촌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균형발전을 도모하기 위한 사업으로 타 분야 지역개발사업과의 중복지원을 방지하기 위하여 전국 1,205개 면지역중 오지개발촉진법에 의한 361개 오지면, 도서개발촉진법에 의한 도서개발면 53개면 및 무인/무면사무소면 10개면을 제외한 781개면과 광역시 15개 준농어촌 자치구를 대상으로 사업을 시행하고 있다. 사업추진기간 및 지원액은 2005년부터 2013년까지 9년간 23,910억원을 투자하여 796개면(15개 준농어촌 자치구 포함)에 면당 30억원을 지원할 계획이다.

오지종합개발사업은 상대적으로 낙후된 지역의 종합개발을 통하여 지역격차를 해소하고 국토균형발전을 촉진하고자 행정자치부에서 1990년부터 오지개발

촉진법에 따라 추진하여 왔으며, 제1차 10개년계획(1990년~1999년), 제2차 5개년 계획(2000년~2004년)을 거쳐 낙후지역 주민의 삶의 질 향상과 더불어 정주여건을 개선하였다. 2005년부터 361개 오지면을 대상으로 제3차 오지종합개발 5개년(2005~2009)계획을 수립하여 추진하였다. 국가균형발전위원회 주관으로 각 부처간 유사·중복사업의 통폐합 및 구조개편 방안을 검토한 결과, 농촌지역개발사업의 종합적이고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동 사업을 추진하는 것이 바람직한 것으로 결론지었으며, 2006년도 8월 관계장관의 업무이관에 합의함에 따라 2007년부터는 농림수산식품부에서 동 사업을 추진하면서 2008년 3월 「농어촌정비법」 개정을 통하여 「오지개발촉진법」을 폐지하고 오지종합개발사업 추진에 필요한 사항을 농어촌정비법에 반영하여 농촌정주기반확충사업과 유사한 오지종합개발사업을 농어촌생활환경정비사업으로 통합하였으며, 2009년 제3차 오지종합개발 5개년(2005~2009)계획을 완료하고 2010년부터 사업내용, 대상지역 등을 새로이 정립해 추진체계를 정비할 계획이다.

(1) 2007년 이행실적

농촌정주기반확충사업은 2007년도에 300개면(15개 준농어촌 자치구 포함) 2,400억원(국고 1,921, 지방비 479)의 예산을 투자하여 도로 729km, 상·하수도 119개소, 주차장 등 교통시설 9개소, 교량 68개소, 마을회관, 공원 및 휴게소 등 문화·복지시설 114개소 등의 시설을 설치하여 상대적으로 낙후된 면지역 주민의 생활편의를 증진시켰다.

오지종합개발사업을 통해 2007년도에 219개오지면 1,620억원(국고 1,134, 지방비 486)을 투자하여 소득 및 생산기반조성 245건, 생활환경개선 및 지역교통 인프라 199건, 문화복지시설 44건 등 총 488건을 추진하였다.

(2) 2008년 추진계획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을 통해 2008년도 551개면(15개 준농어촌 자치구 포함)

에 4,474억원(국고 3,132, 지방비 1,342)의 예산을 투자하여 마을간 및 마을내 도로, 상·하수도, 주차장 등 교통시설, 하천정비, 마을회관 등 복지회관, 공원 및 휴게소 등의 시설을 설치하여 면지역 주민의 생활편의를 증진시킬 계획이다.

아울러, 사업성과 평가를 통해 인센티브 및 패널티를 부여하여 지자체의 경쟁을 유발함으로써 사업추진에 따른 효과를 제고하도록 사업의 평가·환류 시스템을 도입 할 계획이다.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지역개발과 시설사무관 김동권)

(3) 어촌분야

우리나라는 그동안 수출주도형 경제개발정책 기조에 따라 수산정책도 증산지향 정책 위주로 추진되어 어촌개발은 우선순위에서 밀려날 수 밖에 없었다.

그 결과 어가수는 총인구대비 1990년 1.2%에서 2006년 0.4%로 줄어들었고 어가소득은 도시가계소득대비 1997년 74%수준에서 2006년 72.6%로 떨어지고 어촌인구의 고령화 현상도 점차 심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그동안 생산기반시설위주로 지원되어오던 어촌종합개발사업을 어촌의 정주생활환경개선시설과 어촌의 어업의 소득증대 제고를 위해 관광기반시설에도 점차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어촌의 다양한 관광 잠재자원 중 특성화가 가능한 개발유형을 설정하여 도시민과 지역민이 교류하는 생산·여가지역으로 조성하고자 경관·휴양형, 민속·문화형, 해양스포츠형, 특산물생산형, 바다생태형, 유통가공형 등으로 유형화하여 2008년부터 2013년까지 연차적으로 70개 권역에 3,250억원을 투입하여 집중개발해 나가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 어항과 사무관 전성래)

다. 전원마을조성사업

(1) 2007 이행실적

1990년 이후 농촌생활환경정비사업에 대한 투자가 지속적으로 이루어져 왔으나, 농촌의 정주여건은 도시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악함에 따라 농촌인구 감소와 고령화 현상이 지속되고 있다. 농촌인구는 1990년 25.6%에서 2000년에는 20%, 2005년에는 18.5%로 감소하였다. 2005년도의 농촌지역의 노령인구 비율은 도시지역의 7.2%를 크게 상회하는 18.7%를 나타내고 있으며, 86개 군 중에서 57개 군은 65세 이상 인구가 20% 이상인 초고령화 사회로 분류되고 있다. 이러한 농촌의 인구감소와 고령화 현상은 앞으로도 계속될 것으로 보여진다.

한편, 국민소득이 높아지고, 농촌의 생태적·환경적 가치에 대한 관심과 삶의 질이 중시되는 경향이 나타나면서 도시민의 전원생활에 대한 수요도 높아지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는 이러한 도시민의 농촌이주 수요와 농촌의 도시민 유치수요를 연결하기 위해 다양한 시책을 추진하고 있으며, 전원마을조성사업은 그 중 핵심 시책으로 자리잡고 있다. 전원마을조성사업은 2013년까지 총 300지구를 조성할 목표로 추진 중이다. 2004년도에 2지구 시범착수 후 2006년도까지 총 49지구를 착수한 바 있으며, 2007년도에는 총 288억원의 예산을 투입(국고 231억원, 지방비 57억원)하여 신규로 착수한 13지구를 포함하여 62지구에 대한 사업을 추진하였다. 전원마을조성사업은 20호 이상의 가구가 농촌지역에 전원마을을 조성하고자 할 경우에 도로, 상하수도, 오폐수 처리시설 등 마을기반시설을 정부가 보조 지원하는 사업으로 사업지원 대상지역은 상대적으로 인구밀집지역인 수도권과 광역시 지역을 제외한 면지역을 대상으로 하고 있다. 마을의 규모에 따라 정부에서 10~20억원(국고 80%, 지방비 20%)을 보조지원하고 있는데, 2007년부터는 지원한도를 30억원까지 확대하였다. 주택건축비에 대해

서는 호당 4,000만원 한도 내에서 5년거치 15년 상환 조건으로 저리(농업인 3%, 비농업인 4%) 융자지원도 하고 있다.

2007년 3월에는 농림수산식품부와 한국농촌공사, 지방자치단체 등이 합동으로 사업추진 실태를 점검하여 제도개선 과제를 도출하였다. 2007년 6월에는 농림수산식품부 자체적으로 운용하던 「농림정책 리모델링 위원회」가 전원마을조성 제도개선 방안에 대해 심의하였으며, 전원마을조성사업 시행시 기반조성에서 주택 건축까지 책임지고 일괄 추진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하고, 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사업시행자에 민간을 추가하는 등의 제도개선을 추진하기로 하였다. 2007년 8월부터 12월까지 농림수산식품부 및 한국농촌공사 합동으로 “전원마을조성 제도개선 작업반”을 구성·운용하여 「농어촌정비법 개정을 중심으로 한 전원마을 조성 제도개선방안」을 마련하였고, 2008년에 농어촌정비법 개정을 추진하고 있는 등 사업의 효율적인 추진을 위해 제도개선 방안을 적극적으로 강구하였다.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지역개발과 시설사무관 김동권)

(2) 2008 추진계획

2008년도에는 총 129억원(국고 103억원, 지방비 26억원)의 예산으로 신규착수 35지구를 포함하여 71지구에 대한 전원마을조성사업을 지원할 계획이다.

아울러 전원마을조성과 관련된 제도개선을 적극 추진할 계획이다. 사업지원대상을 면지역에서 신활력 사업대상으로 선정된 읍지역까지 확대하며 전원마을 조성 사업을 내실있게 추진하기 위해 일정수준이상의 토지확보(조성면적의 2/3이상) 및 입주자 모집을 의무화하는 등 사업 신청요건을 강화하고 사업계획에 대한 체크리스트를 제시하여 사업에 대하여 사전준비를 철저히 하도록 할 계획이다.

또한 전원마을 택지조성 후 주택지가 나대지로 방치되는 것을 방지하고 주택건축의 이행을 신속히 하기 위해 사업계획 수립은 마을기반시설부터 주택건

축까지 일괄하여 수립토록 할 계획이다. 농촌의 전원마을은 부동산 투기우려는 적으나 부동산 투자를 최소화하기 위해 전원마을 조성전에 농촌거주 입주자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입주자 추진위원회에서 입주희망자를 모집하고 입주예정자가 토지를 전매한 경우에는 전원마을조성 취소와 보조금 지원 중단 등 사전 대처 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지역개발과 시설사무관 김동권)

라. 농촌 농업·생활용수 개발사업

(1) 2007 이행실적

농림부에서는 면단위 농어촌지역 자연마을에 암반지하수를 개발하여 생활용수를 공급하면서 가뭄 시 농업용수와 농산물세척용수까지 병행하여 공급하는 농촌 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을 1994년부터 추진하고 있으며, 2007년도에는 427억원(국고 341, 지방비 86)을 지원하여 252개소를 개발함으로써, 2007년까지 5,616개소를 완공, 1,140천명에게 생활, 농업용수 등 다목적 용수를 공급하고 있다.

(2) 2008 추진계획

2004년까지 50호 이상의 자연마을을 중심으로 제1단계(1994~2004)사업으로 4,751개소를 추진한 바 있으며, 2005년부터는 1단계 사업에서 소외된 20호 이상의 소규모 자연마을을 중심으로 2012년까지 2,309개소를 추가로 개발하는 제2단계(2005~2012) 사업계획을 수립·추진 중이다. 이를 통해, 농촌지역 자연마을 총 7,060개소의 농촌 농업·생활용수개발사업 지원을 목표로 하고 있으며, 2008년도에는 388억원(국고 309, 지방비 79)을 투자하여 226개소를 개발할 계획이다.

농촌농업·생활용수개발계획

구 분	추진목표	2007까지	2008계획	2009이후
사업량(개소)	7,060	5,616	226	1,218
사업비(억원)	12,269	9,308	388	2,573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지역개발과 시설사무관 이행우)

마. 농어촌 상하수도 보급·확충

농어촌 면지역 상수도 보급률은 2007년말 45.2% 수준으로 도시지역에 비하여 상당히 열악한 형편이며, 특히 면단위 이하 산재된 자연마을은 마을상수도 및 소규모 급수시설에서 생활용수를 공급받고 있으나, 시설이 노후되고 먹는물 수질기준을 초과하는 시설이 다수 있어 농어촌에 안전하고 깨끗한 먹는물 공급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

상수도 보급현황

구 분		총대상인구	급수인구	보 급 율(%)	
전 국		50,034천명	46,057천명	92.1	
도시	대도시(광역시)	23,284	23,081	99.1	98.5
	중소도시(시)	17,672	17,256	97.6	
농촌	읍부지역	3,938	3,395	86.2	63.0
	면부지역	5,140	2,325	45.2	

자료 : 환경부 상수도 통계(2007)

또한 국민에게 안전하고 깨끗한 수돗물을 안정적으로 공급하기 위하여 농어촌 지역에 15,161억원, 도서지역에 3,930억원, 총 1조 9,091억원을 투자하여 상

수도 보급률을 75%까지 향상시키기 위한 2단계 사업(2005~2014) 계획을 수립하여 현재 추진 중이다.

(환경부 수도정책과 사무관 최문규)

바. 읍지역을 경제·사회·문화적 거점기능을 갖춘 중추소도시 육성

행정안전부에서는 읍지역을 경제·사회·문화적 자족적 생산능력을 갖춘 중추소도시로 육성하고 생활편익과 문화기반, 소득이 구비된 이상적인 전원도시로 조성해 나가고자 소도읍육성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2003년부터 10년간 전국 194개 소도읍에 총 12조원(국비 2조, 지방비 2조, 타부처 국비와 민자 8조)을 투자할 계획이며, 사업원년인 2003년에는 인천 강화읍 등 14개읍에 962억원(국비 300억, 지방비 453억, 민자등 209억)을, 2004년에는 울산 온양읍 등 36개읍에 2,976억원(국비 600억, 지방비 1,237억, 민자등 1,139억), 2005년에는 부산 장안읍 등 43개읍에 3,245억(국비 874억, 지방비 1,330억, 민자등 1,068억), 2006년에는 경기 장호원읍 등 66개읍에 4,012억원(국비1,234억, 지방비 1,709억, 민자등 1,069억), 2007년에는 경기 여주읍 등 58개읍에 3,932억원(국비 1,584억, 지방비 1,791억, 민자 등 55억), 2008년에 울산 온양읍 등 78개읍에 2,461억원(국비 1,158억, 지방비 1,220억, 민자 등 183억) 등 총 1조 7,688억원을 투자하여 지역특화산업, 유통시설 현대화, 도시인프라 확충, 중심상점가 현대화, 관광활성화 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다.

2006년도에는 2003년 선정된 인천 강화읍 등 14개 소도읍이 완공되었으며, 2008년도에는 2004년 선정된 울산 온양읍 등 22개 소도읍과 2005년 선정된 부산 장안읍 등 7읍이 완공되며 국가균형위원회와 농림부 삶의 질 향상위원회 평가결과 4년 연속 최우수 사업으로 선정되었고, 2007년 4월 한국지역경제연구

원이 완료소도읍주민 700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전체 84%가 사업추진에 만족하고 있는 등 당초목적대로 잘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소도읍육성사업은 읍을 경제, 사회, 문화 등 자족적 생산능력을 갖춘 거점도시로 육성하기 위한 사업으로서 2001년 지정된 194개읍중 지금까지 92개읍을 선정 추진중에 있으나, 그동안 신규지구 선정이 미흡하여 미 선정된 102개 읍에서는 조기 선정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으며 정부에 대한 불신감 또한 팽배해 있다. 따라서 목표연도인 2012년까지 나머지 122개읍의 마무리를 위해서는 매년 25의 신규지구 선정이 절실한 실정이다.

사. 농어촌 노후·불량주택 개량 촉진

(1) 2007 이행실적

행정안전부에서는 1976년부터 새마을 사업의 일환으로 낡고 불량한 농어촌 주택의 개량을 촉진함으로써 농어촌 지역의 낙후된 주거문화를 향상시키고 정주욕을 고취시키기 위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추진한 바 있다. 2007년까지 총 395,282동(사업비 4,518,029백만원)의 농어촌 주택 개량 자금을 용자 지원하였다.

2007년부터는 농촌지역개발사업의 부처간 업무조정예 의해 당초 행정안전부의 사업으로 추진되던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이 농림수산물식품부 사업으로 이관되어 추진되었다. 농림수산물식품부는 기존에 추진하고 있던 「농촌주택정비사업」과 이관된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을 통합한 「농어촌주택개량사업」을 운영하여 2007년 당해에는 총 5,660동(사업비 2,240억원)의 주택개량을 지원하였다.

(2) 2008 추진계획

2008년에는 총 6,000동(사업비 2,400억원)의 농어촌 주택에 대해 개량 자금을 용자 지원할 계획이다. 신·개축시에는 4,000만원 이내, 부분 개량·증축시에는 2,000만원 이내의 자금을 5년 거치 15년 상환 조건, 3~4%의 금리로 용자할 계획이다. 향후 지원 물량을 순차적으로 확대하고 용자 금리 인하를 추진하는 등 지속적인 제도 개선을 통해 농촌 주민의 주거환경 개선 및 부담완화를 추진할 계획이다.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지역개발과 행정사무관 정아름)

아. 환경친화형 농촌마을 조성

농촌주택의 전통성을 유지·보전하면서 현대적인 생활공간으로서의 기능을 확보하여 농촌주민의 주거수준을 향상시키고 농촌체류형 관광객의 민박활용을 높여 농가소득을 증가시키기 위한 추진하고 있는 농촌전통테마마을을 중심으로 환경친화형 농촌주거모델 시범사업을 추진하였다.

2007년도에 10개 마을의 농가 55호와 체험관 1동을 리모델링 완료하였으며 총사업비 350백만원으로 마을당 35백만원 지원하였다. 건축전문가에 의한 마을 및 농가환경 진단을 통한 리모델링을 추진하였고 환경친화적인 구성요소를 적용한 주거환경을 개선하였다. 또한 시범사업의 효과적인 성과거양을 위해서 마을별 현장교육 및 개별농가 컨설팅을 추진하여 환경친화형 농촌주택 리모델링의 개념, 시공시 유의사항, 리모델링 사례 등을 교육하였다.

이와 함께 리모델링 계획·결과, 환경친화성, 에너지 효율성, 농가참여도 및 건축행정처리의 원활성 등을 기준으로 리모델링 우수 6농가를 선정하여 시상하였다.

사업농가를 대상으로 만족도를 조사한 결과 매우 만족 34.5%, 만족 50.9%,

보통 5.5%로 2006년 만족도 83.3%를 초과 달성하였고 사업 전 대비 마을당 민박소득 증가율이 304%로 나타나 민박으로 인한 농가소득 증대와 더불어 환경친화적이고 전통성을 살린 형태로 리모델링함으로써 자연과 조화를 이루면서 농촌다운 마을환경 조성에 기여하였다.

2008년부터는 농산어촌체험마을 및 일반마을의 민박가능 농가까지 사업대상에 포함하여 사업량을 10개소에서 16개소로 증가시키고, 국비지원을 350백만원에서 800백만원으로 늘려 마을당 100백만원의 사업비를 지원하게 된다. 또한 사업목적 및 추진방향을 제대로 전달하고 보급하기 위한 현장교육 및 컨설팅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계획이다.

(농촌진흥청 농촌자원과 박수선)

자. 하수처리 등 환경개선사업

(1)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사업 추진

농산어촌의 기초마을 단위에서 배출되는 생활 오·폐수를 초기단계에서 처리하여 상수원 등의 오염을 방지하고 쾌적한 마을환경을 조성하기 위하여 행정자치부에서는 농어촌주거환경개선사업의 일환으로 1991~2004년까지 2,092개소 마을에 4,000억원을 지원하여 하수관로 부설 및 처리시설 등을 확충하였고, 2005년에도 1,858억원을 지원하여 205개 마을에 하수도정비사업을 추진중에 있다. 앞으로도 환경보전과 상수원의 오염방지를 위하여 2014년까지 하수시설이 불량한 1,827개 마을에 마을당 10억원을 투입하여 하수도정비사업을 지속적으로 추진해 나아갈 계획이다.

환경부에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재정부족, 지역이기주의에 의한 주민반대 등으로 광역매립지 조성이 곤란한 농어촌지역에 매립, 재활용 등을 연계해 폐기물을 종합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설치사업(1995~

2014)을 추진하고 있다.

2008년에는 14개 사업을 지원하는 등 2014년까지 총 2,722억원을 투자하여 83개 지역에 농어촌폐기물종합처리시설 162개소를 설치할 계획이다.

(환경부 생활폐기물과 주무관 최용준)

(2)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사업 추진

농어촌지역 소하천 등 공공수역의 수질오염을 방지하기 위하여 농공단지 입주업체가 배출하는 각종 오·폐수를 BOD 30mg/L, COD 40mg/L, SS 30mg/L, T-N 60mg/L, T-P 8mg/L이하로 처리(2013년부터는 BOD 10mg/L, COD 40mg/L, SS 10mg/L, T-N 20mg/L, T-P 2mg/L, 대장균군수 3000개/mL이하)하여 배출할 수 있도록 환경부에서는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1988년부터 2007년까지 982억원을 투자하여 124개 처리시설의 설치를 완료(시설개선 포함)한 바 있고, 2008년에는 94억원을 투자하여 7개소를 추진 중이며, 공공수역 수질보전 및 농어촌지역 소득 증대를 위하여 농공단지 폐수종말처리시설 설치사업을 계속사업으로 추진할 계획이다.

(환경부 산업수질관리과 주무관 박원영)

(3) 가축분뇨공공처리사업 추진

주요상수원 및 하천주변에 밀집한 소규모 축산농가의 가축분뇨를 직접처리하기 위하여 환경부에서는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설치를 추진하고 있다. 1991년부터 국고지원사업으로 추진(1997년부터는 지방양여금사업으로 추진하다가 2005년부터 국고보조사업으로 추진)하기 시작하여 2007년까지 5,793억원을 투자하여 60개소의 시설을 설치하여 가동 중에 있고, 26개소의 시설은 설치하고 있다. 또한 환경부와 농림수산식품부 합동으로 가축분뇨 이용·관리대책을 수립하여 2004년부터 2013년까지 가축분뇨처리시설 설치, 자원화시설 설치, 친환경

경축사시설 지원, 친환경농산물이용촉진 등의 사업에 2조 1,035억원을 투자하여 친환경농업을 통한 환경보전을 도모하고 있다.

그 외에도 가축분뇨공공처리시설 운영과정에서 나타나는 처리율의 저하 및 오염물질 제거효율이 낮은 문제점에 대하여는 질소·인 제거설치, 공법개선, 축분의 분리·저장시설 설치 등 시설 및 운영방안을 개선하여 시설이 적정 운영되도록 할 계획이다.

(환경부 수생태보전과 주무관 강진훈)

차.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농업인 건강관리실 설치 사업은 농촌지역의 농업인들이 겪고 있는 과중한 노동부담과 열악한 환경으로 인한 누적된 피로를 풀 수 있도록 시설과 장비를 지원하는 것으로 2007년에 사업비 96억원으로 192개소를 설치하고 2008년부터는 지방자치단체 자율사업으로 전환하여 추진하고 있다.

마을단위별로 추진위원회를 구성하여 건강관리실을 설치하기 전에 사전교육을 한 후 우수지역 현지견학, 전문가 자문, 마을주민 의견수렴 등을 통해 효율적으로 사업을 추진하였으며, 마을회관 설치사업 및 건강장수마을 조성 등 여타사업과도 긴밀하게 연계하여 추진하였다.

의료복지 혜택이 적은 농촌주민들에게 건강관리실을 설치함으로써 농촌주민들의 농작업 피로해소 및 건강한 농업인력 유지는 물론 마을민의 참여의식 및 이웃교류 등 지역사회 활력 증진효과가 86.7%로 높게 나타났다.

건강생활실천 프로그램 개발을 위해 건강생활실천증진 경진을 통하여 프로그램 10점을 발굴, 농업인 건강·안전사업 평가회(2007. 12. 3)시 시상하였으며, 건강생활 실천 활성화를 위해 농작업 체조 3종을 CD·DVD로 800장 및 건강 포스터 10,000만부를 제작하여 시군농업기술센터에 보급하였으며, 마을단위 자

연치유법을 전국의 49마을 1,050명에게 지원하는 등 농업인 건강관리실천 프로그램을 지속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또한 지역의 관련 단체와의 유기적 업무 협력으로 마을단위별 생활체육지도자 배치하여 생활체조를 운영토록 하였으며, 건강법 교육, 건강검진 등 농업인이 보다 나은 건강생활 실천을 할 수 있도록 유관기관과 긴밀하게 연계하여 추진되고 있어 농촌지역의 농업인 건강을 책임지는 센터역할을 수행하고 있다.

(농촌진흥청 농촌자원과 박정화)

카. 농촌건강장수마을 육성

농촌건강장수마을 사업은 농촌의 급격한 고령화에 대응하여 농촌사회에 활력을 불어넣고 노인들 자신의 삶을 당당하고 건강하게 독립적인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사업이다. 2005년부터 2008년까지 총 434개소를 육성하였으며, 노인들의 생활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 추진하는 본 사업은 마을별 사업기간을 매년 42~50백만원씩 3년간 국비·지방비 각 50% 지원하고 있다. 연도별 지원 마을수는 2005년 100개소, 42억원(개소당 42백만원)을 시작으로 2006년은 300개소, 150억원(기존 100개소, 신규 200개소, 개소당 50백만원), 2007년은 350개소, 160억원(기존 300개소, 신규 50개소, 개소당 45~50백만원), 2008년은 334개소, 166.6억원(기존 250개소, 신규 84개소)을 지원하였다.

사업대상은 65세 이상의 노인과 55세~64세의 예비노인에게 경제, 건강, 학습·사회활동, 환경 등 4영역을 중심으로 생산적 여가활동을 촉진하여 농촌노인의 생활의 질을 향상하고 건강 장수하는 문화를 조성하고자 연중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다.

2005부터 2007년까지 매년 농촌건강장수마을을 대상으로 생활만족도 조사결과 농촌노인의 생활만족도가 2005년 55.4%에서 2007년 64.2%로 이 사업을 통

하여 마을 노인들의 생활만족도가 향상되었음을 뚜렷하게 볼 수 있었고, 사업 참여 노인들이 프로그램에 참여함으로써 삶의 희망과 비전을 갖게 되었으며 노년층, 젊은층 등이 같이 참여함으로써 마을주민이 단합하고 협력하는 분위기를 조성하고 있다. 특히 도시노인과 농촌노인과의 교류, 노인과 어린이가 함께하는 원예 프로그램 등의 개발, 운영을 통하여 세대간 통합의 계기를 조성하는 등 농촌사회에서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우리나라가 쌀 문화 국가라는 점에 착안하여 짚풀을 활용한 노인들의 전통 솜씨와 기술 연마를 위한 일환으로 짚풀·소공예품 공모전을 실시하고 있는데 노인들의 잠재력과 기술의 향상이 놀라울 정도로 향상되고 있으며, 전통의 계승발전에도 기여하고 농촌지역 활성화와 삶의 질을 높여 주는 등 자연친화적인 생활소품을 개발함으로써 소비자에게도 한층 더 가까이 가고 있는 등 소득 화에도 기여하고 있다.

(농촌진흥청 농촌자원과 김영아)

2. 교육여건 개선

가. 농어촌 고교생 대학특별전형 확대

도시학생에 비해 상대적으로 교육여건이 열악한 농어촌 학생들의 교육기회를 확대하고, 농어촌 주민의 고등학생 교육문제로 인한 이농현상을 방지하기 위해 1996년부터 농어촌학생 대학입학 특별전형 제도를 실시하고 있다.

농어촌학생 특별전형 비율은 2007년도부터 현행 입학정원의 4%이고(2006년 3%에서 4%로 확대), 학생선발 여부 및 자격요건은 대학이 자율적으로 정하는 사항이나 기본적으로 농어촌지역에 거주하고 농어촌지역 소재 고등학교에 재학하는 학생(졸업생 포함)을 대상으로 한다.

- 2007학년도 : 193개교에서 13,303명 모집, 11,857명 선발

- 2008학년도 : 186개교에서 13,270 모집, 11,363명 선발
- 2009학년도 : 191개교에서 13,159명 모집

(교육과학기술부 대학자율화팀 행정사무관 이지현)

나. 농업인자녀 교육비 부담경감

농업인의 교육비 부담경감을 위해 농업인 고교생자녀 학자금 지원대상을 경지소유규모 1.5ha이하 농가에서 전 농가로 확대하고, 자영농과생 급식비 지원사업과 함께 지방의 재정운영 자율성 확보와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위해 2005년부터는 지방으로 이양하였다.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사회여성팀 행정사무관 이은정)

다. 농어촌출신 대학생 학자금 융자

경제적으로 어려운 농어업인의 교육비부담 경감과 농어촌출신 대학생에 대해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을 위해 1994년 2학기부터 등록금을 융자지원하고 있으며, 이를 위해 정부는 매년 융자재원의 일부를 사업을 위탁한 한국학술진흥재단에 출연하고 있다.

학자금은 등록금범위내에서 신청액 전액을 무이자로 융자하고 졸업후 1년후부터 1학기 융자금을 1년이내에 상환토록 하고 있으며, 농어촌에 거주하면서 농어업에 종사하고 있는 학부모 자녀를 우선적으로 지원하고 있다.

2008년도에는 정부가 413억원을 출연하여 26,721명을 대상으로 837억원을 융자 지원하였다.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사회여성팀 행정사무관 장동욱)

라. 농어촌지역 공공도서관 건립 지원

문화체육관광부는 농어촌지역 주민들의 문화향수권 신장을 위하여 각종 문화 및 정보를 제공하고, 지역간 문화격차에 따른 위화감을 해소하고자 1995년부터 2006년까지 102개관(587억원)의 농어촌 공공도서관 건립을 지원하였다.

2007년에는 11개 농어촌 공공도서관건립지원에 56억원을 국가균형발전특별회계로 지원하였으며, 2008년에는 14개관에 97억원의 예산을 편성했다.

농어촌공공도서관 도서 구입비 지원사업은 2005년부터 지방 이양사업으로 분류하여 행정자치부의 분권교부세 재원으로 운영하고 있다.

(문화체육관광부 도서관정보정책기획단 행정사무관 김희년)

3. 농어업인 연금제도 지원

가. 농어업인 등의 노후소득 보장을 위한 제도 마련

농어촌 인구의 노령화 현상, 농수산물 개방 등으로 인한 소득감소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업인의 노후 생계보장을 위하여 노후소득보장 제도로써 연금제도 도입의 필요성이 대두되었다.

이에 따라 1995년 7월 1일부터 농어촌지역 주민에 대하여 국민연금제도가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사회여성팀 행정사무관 이태용)

나. 농어업인 연금제도 시행 성과

1995년 7월에 전국 농어민과 군지역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실시한 농어업인에 대한 국민연금제도는 2008년 10월말 현재 농어촌지역 가입자수는 1,950천명

(농어업인 278, 비농어업인 1,672천명)에 달하고 있다.

이와 함께, 농어업인의 연금보험료 부담 경감을 위해 1995년 7월부터 본격적으로 최저등급 보험료의 1/3을 매월 지원하였으며, 2003년부터는 이를 확대하여 최저등급 보험료의 1/2을, 2004년 7월부터는 기준등급 이하는 본인 보험료의 1/2 금액을 정률, 기준등급 초과는 해당 기준등급의 1/2 금액을 정액으로 지원하고 있다.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기준 및 금액

구 분	1995.7~2002.12	2003.1~2004.6	2004.7~2005.12	2006	2007	2008
기준등급 (기준소득월액)	최저등급의 1/3	최저등급의 1/2	12등급 (440천원)	13등급 (480천원)	14등급 (520천원)	620천원
지원금액(원)	2,200~4,400	4,400~7,700	8,800~19,800	9,900~21,600	9,900~23,400	9,900~27,900

* 1995. 7월부터 2005. 7월까지의 지역가입자 단계별 보험료 확대에 따라 지원금액이 달라짐

* 2008년부터 지원기준 변경 : (2007년까지) 기준등급 → (2008년부터) 기준소득월액

농어업인 연금보험료 지원실적 및 계획

(단위 : 억원)

1999	2000	2001	2002	2003	2004	2005	2006	2007	2008계획
212	221	293	271	399	502	605	673	731	884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사회여성팀 행정사무관 이태용)

다. 농어업인 연금제도 내실화

농어업인의 연금보험료 부담 경감 및 복리 증진 등 농어업인에 대한 실질적인 지원과 연금보험료 부과의 형평성 제고를 위하여 2008년부터는 현행 등급 체계로 되어 있는 표준소득월액을 폐지하고 가입자의 실제 소득을 반영하는

기준소득월액으로 변경하여 지원함에 따라 기존 지원기준인 등급체계가 가지고 있던 소득월액 구간이 주던 보험료 산정상 문제점을 해결하여 지원대상자의 민원을 해소함에 따라 연금제도의 내실화를 제고하였다.

그리고 협업농업인 부부중 소득원이 분명한 상대 배우자나, 부부중 한쪽이 연금수급으로 국고지원을 받지 않는 경우 그 상대방에게 농어업인 연금보험료를 지원하여 농어업인 연금가입자를 확대해 나가고 있다.

앞으로 농어업인의 자발적인 참여를 유도하기 위하여 유족·장애연금 등의 연금수급 사례 등을 지속적으로 홍보하며, 국민연금 보험료의 자동이체제도 및 선납·분기납제도 등 납부편의제도를 최대한 활용하여 징수율을 제고함으로써 연금제도가 농어업인의 실질적인 노후소득 보장제도로서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연금제도의 내실화를 기해 나갈 계획이다.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사회여성팀 행정사무관 이태용)

4. 농어촌 의료여건 개선

가. 건강보험제도의 개선

(1) 농어촌지역 건강보험료 경감 확대

(가) 농어촌지역 건강보험료 경감을 확대

농어촌 거주 농어민에 대한 보험료 경감은 1988년 농어촌 의료보험이 시작될 때부터 추진되어왔던 사항으로 2000년 12월부터는 농어촌 지역의 의료서비스 이용상의 어려움, 경제능력 취약성 등을 고려하여 보험료 경감율을 22%로 확대(중전 : 15%)하였고, 2004년 1월에는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을 제정하여 WTO- DDA 체제에서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농어민에 대한 지원을 강화하였다.

농어민 건강보험료 경감율을 연도별로 단계적으로 확대하여 2004년에는 30%, 2005년에는 40%, 2006년에는 건강보험료 경감율 목표치인 50%까지 확대하였다. 또한, 휴폐경지 등에 대한 보험료를 경감, 재해 시 보험료 납부유예, 소득이 없는 경우 결손처분 등 각종 혜택을 부여하고 있으며, 도서·벽지 지역 등 요양기관과의 거리가 멀어 요양급여를 받을 수 있는 기회가 상대적으로 적은 가입자에 대해서는 보험료의 50%를 경감해주고 있다.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사회여성팀 행정사무관 이태용)

(나) 농어촌지역 범위 확대

농어민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 지역은 농어촌과 준농어촌이며, 준농어촌은 농어촌 외의 지역 중 농업진흥지역과 개발제한구역에 한정되었다. 그러나 2006년 7월과 2008년 4월에 「농어촌주민의 보건복지 증진을 위한 특별법」 개정시행을 통해 취약지구 중 개발제한구역에서 해제된 지역까지 준농어촌 범위가 확대됨으로써 농어촌 건강보험료 경감 대상이 확대되었다.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사회여성팀 행정사무관 이태용)

(2) 농어촌지역 건강보험료 경감지원 제도개선 추진

농어민 건강보험료는 2006년 이후 지속적으로 50%를 경감지원하고 있다. 다만, 소득 및 재산이 많은 농어민에 대해 일률적으로 건강보험료를 50% 경감지원하는 것은 형평성 및 합리성에 어긋난다는 감사원 및 국회 등의 지적이 있어 소득 및 재산 수준에 따라 경감지원율을 차등하는 방안을 마련 중이다.

(농림수산식품부 농촌사회여성팀 행정사무관 이태용)

나. 농어촌의료서비스 개선

(1) 농어촌 의료공급기반 확충

농어촌지역의 의료기반 확충을 위해 농어촌특별세를 재원으로 보건소 및 보건지소 등에 2006년 12월 말 현재 3,457개소에 대하여 3,640억원을 지원, 2006년 572억원을 확보하여 209개소의 시설개선과 115개소의 장비 지원을 하였으며, 2007년에는 620억원을 확보하여 250개소의 농어촌지역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 지원, 2008년에는 675억원의 예산을 226개소의 농어촌지역 보건소, 보건지소, 보건진료소에 대하여 시설개선을 지원하였다.

(보건복지가족부 건강정책과 사무관 손덕수)

(2) 의료취약지역의 일차보건의료서비스 확대

1981년부터 농어촌, 도서지역 등 보건의료서비스 공급이 곤란한 지역에 1,905여개의 보건진료소 설치 및 보건진료원을 배치하여 경미한 수준의 진료와 가정방문보건사업을 통해 의료취약지역 주민에 대한 일차보건의료서비스를 제공하여 왔으며, 앞으로도 교통수단 및 의료시설 등이 미흡한 의료취약지역 주민의 건강수준 향상을 위하여 지속적으로 보건의료서비스를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가족부 건강정책과 행정사무관 손덕수)

(3) 공중보건의사 농어촌 우선배치

1979년 공중보건의사제도가 시행된 이래, 공중보건의사는 2008년 총 5,030명으로 의과 3,213명, 치과 915명, 한의과 902명이 배치되어 있고, 농어촌 보건소 및 보건지소에 3,597명(71.5%), 국공립병원에 442명(8.8%)이 근무하는 등 농어촌 등 보건의료취약지역에서 진료서비스등의 큰 역할을 담당하고 있다. 앞으로도 농어촌 의료서비스 개선을 위하여 농어촌 등 보건의료취약지역에 공중보건의사를 우선적으로 배치해 나갈 계획이다.

(보건복지가족부 건강정책과 행정사무관 주수영)

세계무역기구협정의 이행에 대응한
2008년도 농림수산업 구조조정사업 시행내용보고서

2008년 12월 일 인쇄

2008년 12월 일 발행

발행 · 대한민국 농림수산식품부

편집 · 농림수산식품부 농업정책과

인쇄 · 한 라 인 쇄

☎ (02) 503-3011

<비매품>